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202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1. 3.

법무부

2021년도 법무부 성과관리시행계획, 2021. 3.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302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706호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121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25
1. 법무부 일반현황	127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132
III. 세부 추진계획	157
○전략목표 I.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	159
○전략목표 II.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	194
○전략목표 III.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	236
○전략목표 IV.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289
○전략목표 V. 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	380
IV. 환류 등 관련계획	539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541
2.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544
3. 변화관리 계획	548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553
별첨	571
1. 성과지표 현황	573
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602

세부추진계획 관리과제별 목차

I.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159
1.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적폐청산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163
①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I-1-①)	166
②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I-1-②)	167
③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I-1-③)	170
2.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173
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I-2-①)	180
②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한 부정축재사범 엄단 등 법집행 공정성 강화(I-2-②)	183
③ 감찰·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근절 및 예방(I-2-③)	188
II.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	194
1.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실현에 기여한다	201
①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II-1-①)	208
② 토착세력과 결탁한 비위 행위 등 지역 토착비리 척결(II-1-②)	210
③ 공익법인의 투명성 지원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II-1-③)	214
④ 부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방지(II-1-④)	216
⑤ 국가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감독 제도 마련(II-1-⑤)	219
2.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한다	222
① 금융·증권·조세 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II-2-①)	227
②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II-2-②)	231

Ⅲ.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236

1.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 수준을 향상한다 241

-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Ⅲ-1-①) 246
- ② 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Ⅲ-1-②) 250
- ③ 통신 및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Ⅲ-1-③) 253
- ④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Ⅲ-1-④) 255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법률복지를 강화한다 260

- ①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Ⅲ-2-①) 267
- ② 여성·아동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Ⅲ-2-②) 273
- ③ 코로나19에 따른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Ⅲ-2-③) 277
- ④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Ⅲ-2-④) 280
- ⑤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률 개정(Ⅲ-2-⑤) 283
- ⑥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Ⅲ-2-⑥) 286

Ⅳ.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289

1. 범죄예방활동 및 준법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구현한다 ... 298

- ①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Ⅳ-1-①) 305
- ②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Ⅳ-1-②) 309
- ③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Ⅳ-1-③) 314
- ④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Ⅳ-1-④) 319
- ⑤ 참여형·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Ⅳ-1-⑤) 323

2. 실질적인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329

- ①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IV-2-①) 342
- ②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IV-2-②) 347
- ③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가석방 내실화(IV-2-③) 352
- ④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IV-2-④) 355
- ⑤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 내실화(IV-2-⑤) 359
- ⑥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IV-2-⑥) 364
- ⑦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IV-2-⑦) 367
- ⑧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IV-2-⑧) 372
- ⑨ 출소자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한 따뜻한 사회구현(IV-2-⑨) 375

V. 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380

1.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392

-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V-1-①) 401
- ②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V-1-②) 406
- ③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V-1-③) 411
- ④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V-1-④) 417
- ⑤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V-1-⑤) 423
- ⑥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V-1-⑥) 428
- ⑦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V-1-⑦) 432
- ⑧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V-1-⑧) 435

2.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439

- ① 법률시장 개방 대비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V-2-①) 449
- ②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V-2-②) 455

[3]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V-2-③)	460
[4] 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V-2-④)	464
[5]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선(V-2-⑤)	468
[6]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제고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V-2-⑥)	473
[7]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예방 역량 강화(V-2-⑦)	482
3. 국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민생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487
[1]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V-3-①)	496
[2]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V-3-②)	500
[3]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V-3-③)	507
[4]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V-3-④)	511
[5]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 강화(V-3-⑤)	515
4. 법무행정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521
[1]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V-4-①)	526
[2]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V-4-②)	535

I .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1)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국정원 특활비 불법상납사건	· 박근혜(前 대통령) 징역 20년, 이재만(前 총무비서관) 징역 1년 6월, 안봉근(前 부속비서관) 징역 2년 6월, 정호성(前 부속비서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최경환(국회의원, 前 경제부총리) 징역 5년 각 확정 · 남재준(前 국정원장) 징역 1년 6월, 이병기(前 국정원장) 징역 3년, 이병호(前 국정원장)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각 파기환송심 선고, 재상고심 진행 중
보수단체 불법지원사건 (화이트리스트)	· 김기춘(前 비서실장) 징역 1년, 박준우(前 정무수석)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조운선(前 정무수석)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현기환(前 정무수석) 징역 1년 6월 각 확정
국정농단사건 (검찰 특수본 기소)	· 박근혜(前 대통령) 징역 20년, 정호성(前 부속비서관) 징역 1년 6월, 조원동(前 청와대 경제수석)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중(前 문체부차관) 징역 2년, 장시호(前 한국동계 영재스포츠센터 사무국장) 징역 1년 5월, 최서원(개명 前 최순실) 징역 18년, 안중범(前 정책조정수석) 징역 4년, 신동빈(롯데 회장)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각 확정 · 우병우(前 민정수석) 징역 1년 2심 선고, 상고심 진행 중
국정농단사건 (특검 기소)	· 최서원(개명 前 최순실) 징역 3년, 최경희(前 이대총장) 징역 2년,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 6월 각 확정 · 김기춘(前 비서실장), 조운선(前 문체부장관) 각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진행 중 · 문형표(前 복지부장관) 징역 2년 6월 2심 선고, 상고심 진행 중

□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통한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

- 법사위·사개특위 등 대국회 설명('18. 2.~12.), 당정청회의 상정('18. 9.), 법무부안 조문화('18. 9.) 등 신속하고 원활한 국회 논의를 위한 지원활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원 입법 발의('18. 11.)
- '공수처 설립추진단' 법무부 인력 파견 지원('20. 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2개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19. 4.), '19.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9. 12.), 공포('20. 1.)
-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20. 12.)
-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21. 1.)

○ 검찰·경찰 간 견제와 균형 달성

- 법무·행안부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18. 6.),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의원 입법 발의('18. 11.),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19. 1.), 공포('20.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권개혁 관련 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0. 9.),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및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령 공포·발령('21. 1.)
-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18. 7.)하고 울산·창원지검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18. 7.)하였으며, 지청의 마약류범죄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제한('18. 1.)하는 등 검찰 인지수사 체계 개편

○ 검찰기능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구축 및 검찰 내부 조직문화 개선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 대검에 인권부를 설치하고 5개 지검에서 운영 중이던 인권감독관을 7개 지검에 추가 배치('18. 7.)하였으며, 이의제기권 행사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에 관한 지침을 제정('18. 1.)하고 그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부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18. 4.)

-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신설 및 기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검찰권 행사 구현('18. 9.)
- 「검사윤리강령」을 개정('18. 2.)하여 사적 지시를 금지하는 한편, 검찰 내 성 비위 사건 초기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검에 양성평등담당관실을 신설
-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시행('19. 10.), 특별수사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19. 10.)
- 형사사건 관련 내용의 원칙적 공개 금지, 공개소환 및 촬영 전면 금지 등 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19. 10.),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 제한 등 수사 방식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19. 10.)
-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부에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운영('19. 11.)
-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법무부 비공개 6개 중 4개 공개 전환 또는 폐지, 대검찰청 비공개 79개 중 31개 공개 전환, '20. 6~11.)

□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관련 규정 등 제·개정 및 시행

- '18. 5.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
- '18. 12.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및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제정·공포
 - 인사시기, 전보 원칙, 필수보직기간, 외부기관 파견 등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경향교류원칙 강화(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 엄격 적용),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만 허용, 일·가정의 양립지원* 등 규정 신설

* 일반검사 인사 시기 규정, 출산·육아목적 장기 근속제 확대, 동일 고검 제한적 장기 근속제 도입(최대 8년간 희망한 동일 고검 권역 내 근무 보장)

- '18. 11.~'20. 2.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개정안 공포·시행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복무평정 특례 확대(평정시점에 육아·질병휴직 중인 검사를 평정대상에서 제외)
 - 복무평정 요지 고지 제도 도입 및 다면평가 근거 규정 신설
 - 실질평정 강화(평정회의, 평정 전 면담제도)
 - 복무평정 항목에 인권옹호, 합리성 및 균형감 추가
 - 복무평정 방법에 '근무자세'(국민에 대한 겸손·경철·친절·배려하는 태도, 미담사례 등)' 추가
- '19. 10. 「검사 파견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제정·시행
 - 검찰 내외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공정하게 심사하여 불필요한 파견을 줄임으로써 일선 검찰청의 형사·공판부 인력 확충 도모

- ※ '19. 10. 24.~'20. 12. 29.까지 총 23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0개 기관 10명 파견 감축 의결
-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법연수원, 통일부,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駐 제네바 대표부, UNODC 비엔나 본부, UN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파견 감축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인원 최소화**
 -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 직무대리의 **최장 기한은 3개월**로 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직무대리 발령은 해당 직무의 내용, 검찰청별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심의사항**
 - ① 외부기관 파견의 필요성, ② 3개월을 초과하는 직무대리, ③ 3개월을 초과하는 직무대리 승인이후 2개월 경과 시 직무대리 발령 승인, ④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 '19. 12.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개정·시행

- 형사·공판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검찰청·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의 형사·공판 관련 주요 부서장의 근무요건을 추가

- ▶ 일선청 형사·공판부장 근무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에 보임
- ▶ 신규 보임되는 부장검사는 검사 재직 기간의 1/3 이상을 형사·공판부에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
- ▶ '22년부터는 재직기간의 2/5 이상 형사·공판부에 근무한 경우만 부장검사로 보임하는 등 근무요건 단계적 강화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검사가 주요 보직에 보임 될 수 있도록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에 대한 인사·재산 검증 근거규정 신설

- 형사부 및 공판부에서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 우수 인권감독관·인권검사 등 인권보호에 충실한 검사 등 적극 발탁하여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

- '20. 8.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

※ 이종근 서울남부 1차장(1급 공인인증검사, 유사수신·다단계 분야), 이철희 순천지청장(2급 공인인증검사, 부정의약품 분야)

- '20. 하반기 검사 인사

- 일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우수 고검·중경단 검사 등을 적극 발탁
- 매년 상·하반기(2회) 선정하는 '우수형사부장'들 중 대검 과장급 이상 3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5명, 지검 차장 3명, 지청장 3명을 발탁
- 특히,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맡도록 하기 위해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일부 재정·수도권 지검의 차장검사 및 일부 고검 부장에 형사·공판 우수검사를 우선적으로 보임하였음

※ 제18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 반영

○ 검사 징계 실효성 등 확보

- 「검사징계법」 개정(법률 제16312호, '19. 4. 16. 시행)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하고, 검사 징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피·회피제도 도입 등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 주요 개정 내용 》

○ 검사징계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 징계부가금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징계부가금 사유와 동일시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범위 확대(前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회령 및 유용)
- 징계부가금 징수·집행 등 국가공무원법 준용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공정성 및 집행의 효율성 강화 등

○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상 강화

-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제도 도입, 의결 방식 및 절차 개선을 통한 검사징계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

- 의원 입법으로 「검사징계법」이 추가 개정(법률 제17500호, '21. 1. 21. 시행)됨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외부위원 추천 권한을 외부기관에 부여하는 등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주요 개정 내용 》

○ 검사징계위원회 확대

- 현행 7명 ⇒ 9명으로 확대, 그 중 과반수(5명)를 외부위원으로 구성

○ 외부위원 추천 권한을 외부기관으로 확대

기존 (7명)		개정안 (9명)
법무부장관(위원장)	⇒	동일
법무부차관	⇒	동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	동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각 1명(총 3명) 위촉	⇒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각 1명(2명)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변호사 2명 (1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

□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이 이권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사회 지도층 비리 사범을 단속하여 국민 신뢰 회복 기반 마련

- 사회지도층 비리 사범 19명 단속('20년)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선거사범 단속·예방의 효율성 증대

- 전국 검찰청 관할 선관위·경찰서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여 수사정보 공유, 단속 공조 방안 논의

-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사전선거운동, 임원 등의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사범 집중 수사, 엄정 처리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1,303명 입건, 기소(756명) 그 중 42명 구속

○ 선거사범 처리의 전문성·객관성 제고

- 선거사범 양형기준 및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서 개정판 발간·배포
- 선거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거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금품선거,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주요 선거사범 집중단속·엄정 처리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총 2,891명 입건(구속 38명), 당선자 27명 등 총 1,170명 기소

□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송무 제도 시행

○ 국가송무 지휘체계 개선

- 전국 검찰청에 분산·위임된 법무부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수행 및 지휘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고, 기존 법무실 1개과(국가송무과)를 1관 2과(송무심의관국가소송과행정소송과)로 확대·개편('20. 12.)

○ 낭비적 소송을 지양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국가송무제도 변화

- 전국 6개 고검에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국가의 관행적 상소방지, 소송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국가재정 낭비방지 도모

※ '16년 항소율 44.4%, 상고율 42.3% → '20년 항소율 27.9%, 상고율 23.5%

- 특히 과거 국가의 인권침해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경우 '18.1.부터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을 시행하여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고 조기종결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통한 인권보장에 기여
-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소권 행사 및 구상권 청구의 내실화 기대
- 협의체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하여 적정하고 통일된 소권이 행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의 수정·보완 및 정부법무공단 코로나19 전담팀 운영으로 지자체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률지원

□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한 부정축재사범 엄단 등 법집행 공정성 강화

-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여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범죄인 또는 주요 부정축재 국외도피사범 집중 송환
- 주요 추진 내역(국외도피사범 소환 및 조약 체결 등)
 - '18. 1. 뉴질랜드로부터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송환
 - '18. 4. 중국으로 밀항한 금융 사기범 19년 만에 송환
 - '18. 10.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피의자 스리랑카인을 공소시효 완료 4일 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스리랑카 검찰에 기소
 -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국내 주요 언론 보도
 - '18. 11.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FX 마진거래* 명목 약 1만명의 투자자들에게 약 1조원 상당 피해를 가한 피의자 송환
 - * FX마진거래 : 외국의 통화(외환)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맡긴 (증거금)의 최고 50배까지 인터넷(HTS)를 통해 외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장외 소매외환거래를 말함
 - '18. 11. 키르기스 공화국과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수형자 이송조약 체결

- '19. 6. 해외 도피 후 21년 만에 한보그룹 정태수 넷째아들 정한근 송환
 - '19. 9.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국내로 강제소환
 - '19. 9. 임금체불 등 혐의로 해외 도피 중이던 前 성원건설 회장 전윤수 송환
 - '19. 10. 마카오와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 '19. 11. 캄보디아와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 '20. 4. 미국에서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마약 도매상을 검거 후 3년 6개월 만에 국내 송환
 - '20. 5. 수백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해외에서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마약 판매상을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
 - '20. 7. 한국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린 영국 남성을 덴마크에서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
 - '20. 7.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본인을 스페인에서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
 - '20. 8. 무허가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천억 원을 입금받은 범죄인 2명을 중국에서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
 - '20. 10. 인력사무실에 침입하여 강도상해를 가한 카자흐스탄 국적자를 조지아에서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
 - '20. 12. 카드복제기를 ATM기기에 설치하고 카드 8장을 위조한 루마니아 국적자를 독일에서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
 - '20. 12. UEA로 출국하여 브라질로 도피한 사기범을 브라질에서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
- 국정농단(박이 前 대통령 사건) 관련자에 대한 범죄수익 추정보전 완료
- 1심 선고 추징금(약 258억원) 초과한 추정보전(약 295억원) 달성

※ 국정농단 세력 관련 보전금액 및 추징금 선고 금액

연번	대상자	추정보전 금액 (단위 : 원)	추징금 선고금액 (1심 기준, 단위 : 원)	추정보전 재산
1	최순실	7,797,350,000	7,294,270,000	신사동 미승빌딩 등
2	이명박	11,141,317,383	8,270,703,643	논현동 사저, 부천 공장부지
3	박근혜	3,650,000,000	3,300,000,000	내곡동 사저, 예금채권
4	신동빈	7,000,000,000	7,000,000,000	한남동 주택, 가회동 주택 등
총 계		29,588,667,383	25,864,973,643	

- 前 국정원장 원세훈 재산 추정보전 완료(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부동산 등 약 55억 원 보전조치)

○ 최순실 부정축재 국외재산 환수 철저

- 최순실이 관리한 독일 계좌에 대한 추정보전 청구 인용
- 최순실 국외재산 환수를 위한 사법공조 계속 및 독일 측과 실무협의 계속 진행

○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및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신설('18. 2.)

-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수익 은닉의 전문화·지능화 추세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설

○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 출범('18. 6.)

- 대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이 3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합동조사단 출범(총 17명 구성)

- 향후 국외재산도피, 역외탈세 행위, 해외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배임행위 등 분석·조사 예정

○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 개정

- 해외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 4.)
-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다단계판매사기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범죄자가 빼돌린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 돌려줄 수 있도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19. 8.)

□ 감찰·감사 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근절 및 예방

- 엄정하고 실효적인 감찰권 행사, 효과적인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 공직자 비위 사항에 대한 지속적 감찰활동 등을 통한 공직 기강 확립
 - ※ 법무연수원 직원 갑질사건,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국적필기시험 문제지 유출 사건 등 비위관련 사건 직접조사
 - ※ 법무부 소속 비위직원, 차장검사 승진대상자, 검사적격심사 대상자, 검찰직 5급 이상 승진대상자의 인사 참고자료 등을 수집하여 감찰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법무부 소속·산하기관의 갑질행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감사 활동을 통해 조직 내 인권 증진 및 복무 기강 확립
 - ※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직장 내 갑질 비위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감찰조사 후 엄정조치
 - ※ 법무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Help line(익명)과 법무샘에 개설된 부당처우 신고 센터(익명)를 통한 직장내 성 관련 비위신고 활성화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부패방지시책 평가 연속 1등급 달성
 -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이후 우리 부 연속 1등급 달성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3등급	3등급
부패방지시책 평가	2등급	1등급	1등급

- 장관 주재 반부패 정책 협의체를 발족('20. 5.)하여 고위직의 반부패 청렴활동 참여 기반 마련(총2회)

※ 반부패 추진 전략 수립 및 검증 등 협의체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 이행률 (66.7%→100%) 및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73.0%→91.5%)을 제고

- 청렴뉴스레터(청렴알림e)를 발간하여 반부패·청렴추진 활동과 성과를 대내·외에 적극 홍보('20. 8월 창간호 발간)

- '청렴의 날' 활성화를 위한 장관 격려 방안을 마련, 참여자가 대폭 증가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 제고

※ 전년대비 17.9배(1,062→19,007명), 부서장 이상 11.3배(56→633명) 증가

- 장·차관 및 고위공무원 대상 '100분 청렴 라이브(LIVE)' 개최 및 직원 대상 실시간 중계로 청렴가치의 확산·공유

※ 코로나19 확산 소수인원 현장 참석(152명), 중앙행정기관 최초 실시간 중계

-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갑질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반부패·청렴 추진 역량 강화

※ 조직문화 개선 대국민 콘텐츠(웹툰, UCC영상) 공모전 개최, 청렴의 날 끈대력 체크리스트 및 청렴 화면보호기 제작·배포, 갑질 등 근절 청렴워크숍 추진

청렴뉴스레터(청렴알림e)	청렴라이브(Live)개최	조직문화개선포스터	청렴화면보호기제작
			
('20. 8.)	('20. 7.)	('20. 10. ~ 12.)	('20. 11.)

- 민·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 추진
 - '20.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시 청렴시민감사관 세부과제 선정 참여, 청렴시민감사 암행감찰제도 도입으로 정책감시기능 강화 등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법무행정의 공정성·신뢰도 제고 노력
 - ※ 산하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참여 법무행정 민·관협의회 발족으로 법무부 청렴시책을 민간부문으로 확산
- 국민관심 분야 실태조사 및 취약 분야 점검 등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
 - '20. 7. ~ 8. 중 '노역수형자 사망 및 교정시설 의료처우 실태'와 '재외공관 사증발급업무 실태'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 수용자 인권 중심의 개선방안 마련 및 재외공관 정기 감사체계 시스템 개선
 - ※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 발족·운영 중('20.10.~), 재외공관 감사주기 단축
- 조사팀 신설('20. 5.)하여 감찰관실 제보사건 비위 직접조사 확대
 - ※ 익명신고(Help-Line)신고 건수 전년대비 47.6% 증(63 → 93건)
-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적극적인 공직문화 환경 조성
 - 자체감사규정을 개정하여 '재심의(면책) 심의회' 설치('20. 8.), 자체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사례 적극 발굴 등 적극행정 활성화 유도
 - ※ 제1회 적극행정면책심의회 개최('20. 10.), 우수직원 발굴 인센티브 지급(16명)
- 자체감사활동 실태점검을 통한 감사관의 전문성 등 감사품질 제고
 - 상·하반기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관의 전문성 등 설문조사 및 방문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환류로 감사품질 제고

(2)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

□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 등을 반영하여 국가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5대 중대 부패범죄 :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범 421명 기소, 74명 구속('20년)

□ 토착 세력과 결탁한 비위 행위 등 지역 토착비리 척결

- 방위사업 비리, 공기업·공무원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엄단

- 방위사업수사부를 중심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사업 분야의 고질적·구조적 적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상시 수사체계 확립

※ 방위사업 비리, 부품 납품비리, 군납 브로커 알선수재 사건 등 방위사업비리 사범 6명 단속('20년)

- 공기업 등 비리 단속을 통해 공공기관 비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 개선에 주력

※ 공기업·공공기관 비리 사범 15명 단속('20년)

- 국가보조금 허위·과다청구 등 보조금 부정수급과 서민을 위한 각종 기금·정부보증 제도 부당이용 단속

※ 보조금비리 사범 23명 단속, 2명 구속, 부정수급액 약 85억 원 적발('20년)

- 법조비리, 사이버언론, 교육비리 척결

- 변호사의 탈세·수임 관련 비리, 브로커 관련 비리, 공무원의 사건 청탁 관련 비리 등 법조비리 전반에 대한 상시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적 불신 해소 및 법조계의 자정능력 회복에 기여

※ 법조비리 사범 398명 단속, 20명 구속('20년)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약점을 이용한 금품갈취, 각종 이권·청탁 개입행위 등 지역토착세력과 결합한 사이버 언론사범 집중 단속

※ 사이버 언론 및 지역토착비리 사범 290명 단속, 52명 구속('20년)

- 교육 인프라의 부실과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여 국가의 지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교육관련 비리를 근절하여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

※ 교육비리 사범 16명 단속, 5명 구속('20년)

□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 공익위원회 설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

- 공익법인의 관리·감독에 관한 일본 및 프랑스 법제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의뢰('17. 9.), 공익법인 통계 등 현황 파악('17. 10.~11.), 공익법인 등 총괄기구 설치 관련 해외 입법례 분석('17. 11.), 공익법인 등 총괄기구 설치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17. 12. ~ '18. 2.), TF 운영('18. 3. ~'18. 7.),

○ 정부안으로 입법절차 추진

-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하는 안으로 최초 입안보고('18. 11.), 공익법인 업무 담당 52개 중앙부처 의견수렴 및 다 부처 회의를 통한 이견 해소 노력('18. 12. ~ 11.)
- 법무부 소속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는 안으로 재입안보고('19. 12., '20. 9.) 및 '20. 10. 21. 입법예고, '20. 11. 25. 공청회 개최, '20. 12.~'21. 1. 규제심사, '20. 10.~'21. 3. 행안부 조직 관련 협의*

* 법무부 소속 행정위원회로 추진 확정

○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 국회 제출 및 통과 추진

□ 부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 방지 및 국민의 감시·감독제도 마련

- 국가 상대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막대한 국고 손실에 대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15. 9. 출범)을 중심으로 선제적·체계적 대응
 -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서울고검 국가3팀 및 수행청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부패·비리,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을 철저히 환수
-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손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 도입 추진
- ‘21. 1.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에 대한 법무부 검토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함
-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통과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부처들과 주기적으로 유선 협의 진행 중임

□ 금융·증권·조세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 상장회사 경영진,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관련 범죄, 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입찰담합, 불공정 하도급,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수사하여 재정·경제 분야의 고질적 비리를 척결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범죄 철저 단속
 - ※ 입찰비리 등 불공정거래 사범 29명 단속, 3명 구속(‘20년)
 -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 기업사냥꾼 등 정상적 기업 활동 저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
 - ※ 금융 관련 비리 사범 162명 단속, 26명 구속(‘20년)

○ 조세포탈 범죄 집중 단속

- 자료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행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 역외탈세 등에 대해 효율적·지속적 단속
 - ※ 자료상 비리 사범 135명 단속, 3명 구속('20년)
- 무역기반 경제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부유출·역외탈세 범죄에 대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

-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산업기술보호 중점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및 전담부서와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업을 통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적극적 수사 및 수사검사 직접 공소유지 제도 계속 시행
 - ※ '20년 전국청 기술유출 사범 26명 구속기소, 153명 불구속기소
-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로 경제 활성화 지원
 - 전국 28개 검찰청에 설치된 지재권 전담 검사실을 중심으로 문체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실시
 - 지식재산권침해사범에 대하여 유관기관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지식재산권 수사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내 산업기술 보호와 문화산업 발전 토대 마련

(3)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국제인권기준과 국내인권정책의 연계성 제고

- 국가인권정책협의회('20.7.) 및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20.5.) 등을 통하여 우리 정부 인권정책에 대한 유엔의 우려 및 질의를 파악하고, 국제기준에 비추어 현행 정책을 검토하여 5차 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제출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쟁점목록(LoIPR) 채택함에 따라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착수('20. 5.~)
 - * 인권조약 이행 필요성에 대한 정부 내 인식(awareness)을 높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권정책 개선의 기틀 마련
- 강제실종방지협약 등 미가입 국제인권협약 가입 추진을 통한 국내 인권문제 발굴·해결 노력
 - *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 출범('20.11.24.) 및 회의 실시('20.12.7.)
- 기업의 공급망이 해외로 확장되면서 기업의 인권경영이 국제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20.5.)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 주최('20.12.4.), 기업과 인권 관련 자료* 번역 및 발간 추진 등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
 - *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해설서(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An Interpretive Guide)」 및 「성인지 관점에서의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가칭) (Gender Dimensions of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국제사회 및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 국제적 인권상황 질의 대응
 - *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면담('20.5.): 국제인도법, 강제실종협약 비준 관련 업무협업 방안 논의
 - * 주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 회의에 장관님 참석하여 '1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원회 권고 및 기타 인권문제 의견 교환('20.7.)
 - * 주한 스위스대사관의 정부 인권정책 관련 질의 대응 면담('20.11.)

○ 인권옹호 정책 총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근거 및 인권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1차 장관님 입안보고(‘20. 5.) 및 장관님 보완 검토 지시에 따라 보완·검토 후 2차 입안보고 완료(‘20. 11.)
-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필요성’ 국무회의 구두보고(‘20. 11. 17.)
- * 의견수렴 위해 국가인권위 등 관계부처 업무협의 실시(‘20. 12.~)

-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유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 법무부안에 기반하여 인재근의원 고문방지법 제정안 발의(‘20. 7.), 동 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20. 9.)

- 주요 인권정책 사안에 대한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적극적 의견개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점검 체계 강화 추진 등

-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8년도 이행상황 점검 완료(총 272개 과제중 완료 13, 정상추진 251, 지연 3, 기타 5)
-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점검을 위한 제1차 및 제2차 시범과제 이행 가이드라인 및 평가지표 개발’ (제1차 17개, 제2차 13개) 및 관계부처 송부

-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난 성착취 범죄와 혐오·차별·비하 등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인간존엄성 존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추진

- * ‘인권교육 개선 추진단’ 운영(‘20. 6.~11.) : 법무부 소관 교육 중 아동·청소년, 검사·검찰수사관 대상 교육프로그램 대상으로 인권 관련 포괄적 인성교육 및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회의체 운영[추진단회의(6회), 민관실무회의(3회)]를 통한 구체적 이행 계획 발굴

○ 정책 소통 강화

- 제5차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 및 온라인 공청회 개최(‘20.5.)*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유기적 인권정책 추진 체계 강화

- * 총 64건의 접수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수용 검토 후 결과 전자우편 회신, 시각 장애인·외국인 등 의견개선 가능하도록 시스템 마련 등 기존 공청회 방식의 한계 혁신

- 주한미국대사관 주최 장애인 노동인신매매 전문가 간담회 참석하여 피해자 식별 및 지원 방안, 관련 법·제도 공유('20.8.)
-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및 실제 차별 피해 사례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NGO 연대 간담회 개최('20.9.28.)
- 국제인권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국제기구 결의, 외국의 모범적 인권 정책 사례 등을 국내 부처·지자체 담당자 및 일반 국민에 안내(총31회)

□ 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화상조사 활성화, 현장조사반 편성, 인권 교육 동영상 제작,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교육 지속 실시
 - 화상조사실 증설(1→2실), 교정기관 화상조사시스템 8개 추가 설치, 조사관별 화상조사실 조사시간표를 작성·공유하여 조사실을 공백 시간 없이 최대한 가동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면조사 중단·자제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
 - ※ 화상조사시스템 '20년까지 55개 기관에 설치 완료
 - 한편, 신속한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비한 인권침해사건 현장조사반 편성 운용
 - ※ 2인 1팀으로 총 4팀 운영
 -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센터에서 인용·구제한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동영상 제작 및 교육 실시
 - ※ 제작 : '20. 7. 13.~'20. 8. 31.(20분 분량)
 - 인권교육예산 전액(2.19억) 삭감 및 코로나 상황에서도 찾아가는 인권 교육 적극 추진
- 노역수형자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 가동('20. 10. ~)

- 노역수형자 사망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인권국장을 팀장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 개선과제 검토

○ 검찰·교정·출입국·소년(보호)·보호관찰 195개 기관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평가를 반기별 실시하고, 각 직렬별 우수인권공무원 표창 및 격려를 통하여 인권존중 문화 확산

- ※ '10. 7. 감찰담당관실로부터 검찰청 57개 기관에 대한 인권보호상황평가 업무 인수
- ※ '11년 하반기 교정·출입국·소년, '13년 보호관찰로 인권보호 상황평가 확대
- ※ '13. 6.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제정
- ※ '16년 상반기 '인권보호상황평가 T/F'를 기존 검찰 분야에서 교정 등 전직렬로 확대
- ※ '20년 연구용역 실시 - 법무부 위상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 개발 등을 통한 제도 재정비 위함

○ '07년 실태조사 시작 이후 시설별 체크리스트 마련('11년), 현장 맞춤형 실태조사를 위한 예비설문조사 도입('14년), 인권교육을 연계한 찾아 가는 인권교육 실시('14년), 설문조사 및 면담 강화, 여성·소년·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실태 및 처우 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점검 실시, 비방문 실태조사 신설('19년), 비방문 실태조사 강화 및 중점실태조사 신설('20년),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신설 도입 추진('21년) 등을 통해 전국 143개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

□ 통신 및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 통신비밀보호법 정비

-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및 기지국 수사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적 요소 제거
 - ※ 현재는 총 연장기간 제한 없는 통신제한조치,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 및 기지국 수사 시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한 점, 기소중지·수사장기화 시 통지규정 미비 등이 대상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시

- 통신제한조치 총연장기간 신설(기한 없음 → 원칙적 1년), 위치정보 추적자료·기지국 수사 시 요건 강화(보충성요건 없음 → 신설),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 범위 확대(기소중지·수사 중 미통지 → 통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유 통지 신청권 부여(사유 미통지 → 통지)

※ 국회 제출('19. 3.) → 국회 본회의 통과('19. 12.) → 공포('19. 12. 31.)

-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패킷 감청)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적 요소 제거

※ 국회 제출('20. 2.) → 국회 본회의 통과('20. 3.) → 공포('20. 3. 24.)

- 사경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 검사승인청구·기각서, 폐기 결과보고서 등 법 개정에 따른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서식 정비

※ 대검, 경찰, 국정원 의견 취합('20. 4.~6.) → 국정원 인터넷 회선 감청장비 시연 참관 및 서식 마련('20. 11.) →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21. 1. 1.)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 교정시설 신설, 노후 교정시설 이관신축을 통해 과밀수용 해소 지속 추진

<교정시설 이전·신축 현황>

기관명	착공	준공	시설규모(평)		정원 (명)	사업비 (백만원)	'21예산 (백만원)	진행상황
			부지	건물				
대구교도소 (공사 완료)	'16년	'20년	285,418 (84,873)	61,123 (18,380)	1,980	188,381	-	'16. 11. 1.~'20. 10. 21. (공사 완료)
강원북부교도소 (공사 완료)	'16년	'20년	141,543 (42,816)	19,492 (5,896)	483	66,030	-	'16. 7. 11.~'20. 4. 12 (공사 완료)
거창구치소 (공정률 18%)	'15년	'22년	160,818 (48,647)	19,844 (6,003)	400	83,928	20,595 (공사비 등)	'15. 11. 16.~'22. 6. 19. (공사 중)

※ 교정기관 신설·이전 : 강원북부(교) 등 2개 기관 730명 수용공간 확충

※ 수용동 증축 및 리모델링 : 경북북부제3(교) 등 3개 기관 311명 수용공간 확충



대구교도소(10.21.공사완료)



강원북부교도소(11.20.개청)



거창구치소(공정율:18%)

- 수용거실 내 선풍기 추가 설치, 장애 수용자용 승강기 설치 등 수용자 인권보장 및 처우 향상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 지속 추진
 - 수용자의 혹서기 무더위 완화를 위해 거실 면적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42개 교정기관에 혼거실 내 선풍기 추가 설치
 - 수용거실 화장실 양변기 설치 공사 : 재래식 화변기를 현대식 양변기로 개선

수용거실 선풍기 추가 설치



기 존



개 선

수용거실 양변기 설치



기 존



개 선

- 교정시설 내 장애수용자 접견 및 교육 등 각종 처우 시 안전한 이동을 위한 승강기 추가 설치 추진

※ '20년 서울(구), 청주(교) 설치 완료, 향후 안양(교), 군산(교), 여주(교), 포항(교), 광주(교), 목포(교) 추가 설치 예정

- 수용자에 적합한 개인용 식판을 지급함으로써 위생적인 급식 및 감염병 사전 예방

※ '20년까지 교정기관 45개 기관 보급 완료, 미보급 8개 기관 순차적 보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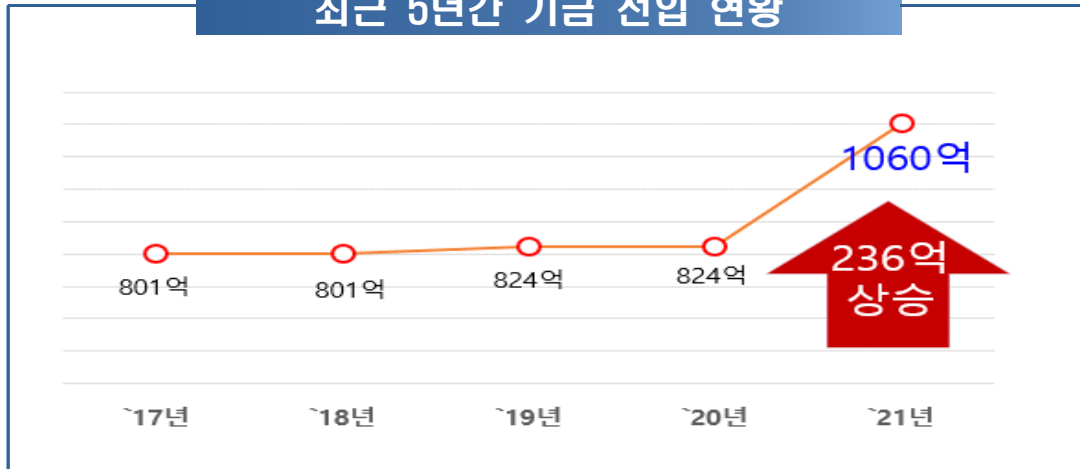
- 교정기관 내 노후 취사장 바닥 미끄럼방지 시공, 배수로 설치, 식품 보관실 설치, 각종 취사장비 교체 등 현대화 사업 추진
- 수용거실 난방개선 공사 : 복도 라디에이터 등 간접난방 운영 방식을 수용거실 직접 난방(온돌)으로 개선
- 노후된 수용동에 외단열 공사를 통해 단열 보강 등의 수용환경 개선 및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하여 화재 시 신속한 초동진압으로 인명피해의 최소화



□ 범죄피해자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범죄피해자지원 기금 확충
 - 기금의 재원인 벌금 전입 비율이 최근 6년간 6%(824억)로 정체되어 있어 경제적 지원확대가 어려웠던 상황
 - 유관부처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시행령 개정으로 '21년부터는 벌금 수납액의 8%를 전입 받게 되어, 기금 전입금 확충(824억→1060억)을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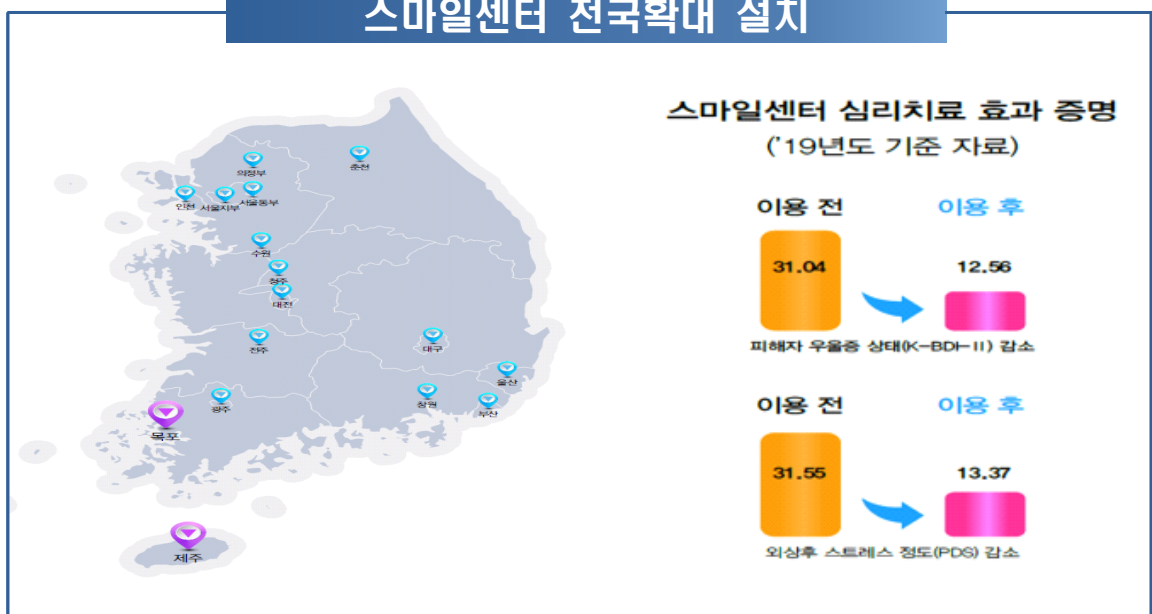
최근 5년간 기금 전입 현황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스마일센터 전국 확대 설치
 - 스마일센터 심리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우울증 상태나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가 정상범위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 효과 증명
 -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목포 지역에 스마일센터를 신규 개소하여 전국 16개 광역단위 서비스망 구축

※ 최근 3년간 스마일센터 개소 현황 : '17년 의정부 → '18년 청주, 울산 → '19년 창원

스마일센터 전국확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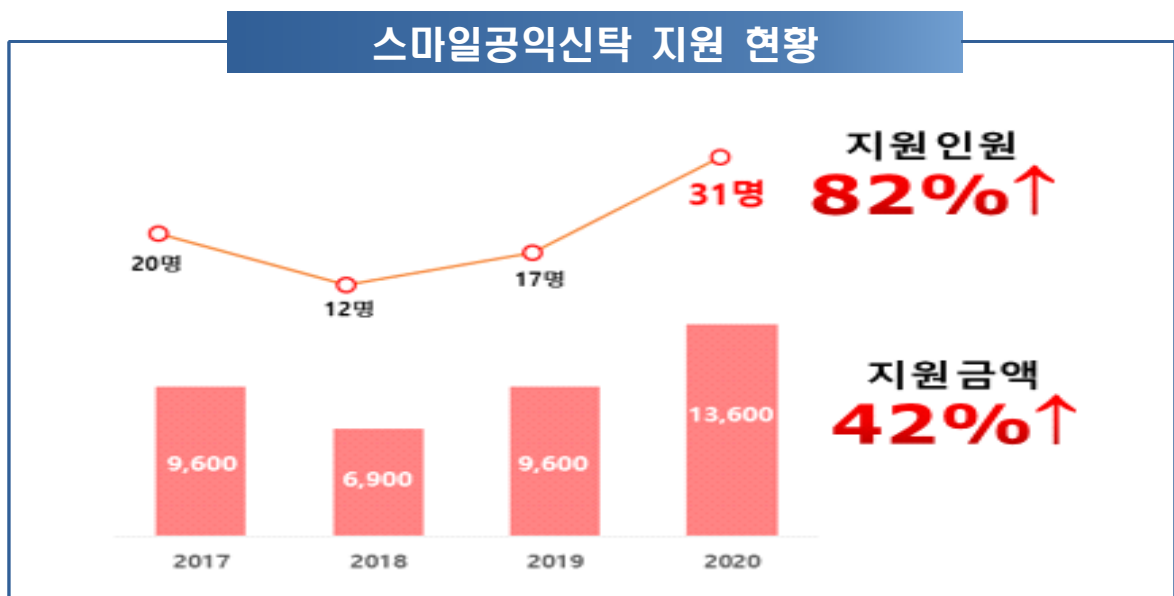
○ 공고문을 개정을 통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부서 내 TF를 구성,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추진
-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주거지원 가능한 범죄대상에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하도록 공고문을 개정하고, LH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 등 영구적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20. 5.)

○ 스마일공익신탁*을 활용한 사각지대 범죄피해자 추가지원 확대

- 성폭력 피해 장애인, 아동 학대 피해자 등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의 정도가 커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한 추가 지원 실시
- 전년도 대비 지원 인원(17→31명) 82%, 지원금액(96→136백만원) 42% 상승하는 등 역대 최대 인원·금액 지원

*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를 찾아내 법무부 직원 등이 별도의 기금을 모아 지원하는 제도('19년 기준 824백만 원 모금)



○ 취약계층 법률지원 서비스 다양화 및 지원 확대

- 법률홈닥터를 활용한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으로, 법률 사각 지대 최소화 및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

※ 법률홈닥터 법률서비스 제공 건수 : 47,172건

【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사례】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해 포기상태이던 미성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가해자 법정최고형 선고 받아..

- 미성년자인 A양(당시 만 13세)은 '18. 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유학 고교생 B군과 온라인상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 이후 B군은 '18. 9.부터 대화방 내에서 A양에게 자신의 수술비를 마련한다며 성착취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때부터 약 1년여 간 지속적으로 가학적인 음란물을 제작·배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A양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성착취동영상까지도 강요하였다.
- A양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하기 힘들다. 협박죄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은 A양의 가족은 포기하려는 마음으로 관련 증거영상을 지워나가던 중, 우연히 복지관을 통해 법률홈닥터를 알게 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다.
- 이때부터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검토하면서 직접 범죄사실을 정리하여 A양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B군은 구속 기소되어 '20. 6.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 이후에도 법률홈닥터는 '20. 7.현재까지 총 35회의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A양을 조력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A양을 돕고 있다.
-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전이라 수사기관조차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피해자가 포기하려던 상황에서, 법률홈닥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해자가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았고,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도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수도권 지역에 한정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사법무 상담 중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에는 전국 65개 지역에 설치된 법률홈닥터에 연계하여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20. 7.)
- 이천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법률구조공단 및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파견하여 피해 배상, 상속 등 총 27건 법률상담 지원('20. 5.)
-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 환자를 대상으로 피해신고법률지원반을 구성·운영하여 총 14건 법률상담 지원('20. 8.)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법률상담 감소를 감안하여 취약계층이 PC·모바일을 통해 주거지 내에서도 쉽게 실시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상담* 시스템 도입 및 확대 시행('20. 11.)

*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이 신청할 경우 PC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주거지내에서 실시간 법률상담 및 문서공유 서비스를 받도록 개발한 시스템

** 화상상담 실시 건수 : 2,568건

○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

-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혹한 채무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불법사금융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개시 및 적극적 법률구조 실시

※ 채무자 대리인 선임 건수 : 813건('20.12.23.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채무증대 등 법률분쟁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구조 대상요건에 '연 매출액 2억원 이하'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

○ 범죄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를 위해 결혼이민자 구조금 지급, 장해·중상해구조금 유족 지급 확대 및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마련을 주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20. 11.)

※ 추진상황 : 입법예고 완료('20. 10.) → 차관·국무회의('20. 11.) → 국회제출('20. 11.)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 ▶ 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 체류자격이 있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가 장해·중상해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경우 지급되지 않던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개선
- ▶ 일시금으로만 지급되는 구조금(최대 1억 4천여만원)을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분할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조금 관리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 피해 회복
- ▶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이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근거규정을 마련해 구상권 행사 실효성 확보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개선 및 지원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완료('20. 4.)
-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범죄피해자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표준 평가 프로토콜 및 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추진('20. 9.)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책자 증보판 발간('20. 11.)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한 '구조금 업무편람' 발간 및 지침 개정('20. 11.)

- 범죄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및 집행지침’ 개정(’20. 12.)

○ 사법지원일원화 TF 구성·추진

- 공적 영역의 법률지원 사업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 법원에 의한 소송구조·국선변호 등으로 산재되어 있어,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지고 관리비용은 중복되는 비효율 초래
- 법무부 내 TF를 구성,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사법지원일원화 방안을 도출하고,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신속·편리하게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 효율성과 공공성을 갖춘 통합모델 구성 및 법안 마련 추진

※ 추진상황 : 유관기관 협의(2월,6월)→TF구성(9월)→정책연구용역 완료(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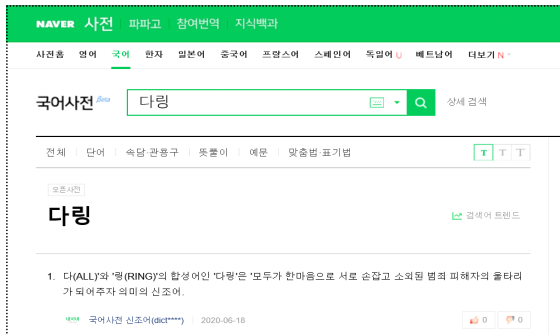
○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

- 인스타그램, 웹·모바일 페이지를 활용한 ‘다링안심캠페인’ 전개

다링안심 온라인 캠페인

- 「방구석 다링, 방구석에서 힐링」이라는 부제로,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자’는 구호를 웹·모바일 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전파하는 캠페인
- 웹·모바일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구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상시 온라인 접근 시스템 구축
- * 인스타그램(소셜네트워크서비스) : 팔로우를 통해 다른 사용자와 피드백을 주고받고, 리그램을 통한 링크 및 자동알림 기능으로 자생적·지속적 홍보확산 가능
-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전년도 대비, 예산은 약 55% 감소 (1억8천만원→8천만원)하였으나, 참가인원은 약 266% 증가(2,014명→7,380명)하여 비용대비 효과 극대화

- ‘다링’ 신조어 네이버 국어사전 등재(‘20. 6.) 및 서울경제 등 **6개 언론사 보도(‘20. 7.)**로 행사효과 증명



네이버 국어사전(‘20. 6.)



서울경제(‘20.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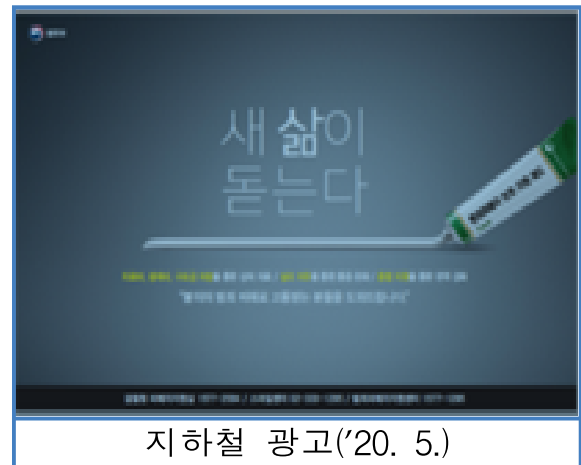
- 법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검색 및 상담신청 편의성 향상을 위한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개편(‘20. 11.)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접근성 향상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마이크로 사이트 구축(‘20. 1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마이크로사이트>

○ 범죄피해자 인식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언론사 인터뷰를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확대의 필요성 강조(‘20. 4.)
 - ※ (서울경제)법무행정 현장을 가다, “스마일센터 존재 몰라서 지원 못 받는 피해자 많길”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환기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도권 3,4,5,7호선 지하철 액자광고 게시(‘20. 5.)



-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포스터 및 슬로건 공모전('20. 7. ~8.)
 -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공유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범죄피해 극복 희망수기 공모전 및 범죄피해자 작품 전시회 개최('20. 9.~11.)
 -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종사자를 격려 및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인권대회 개최('20. 11.)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브랜드 검색 광고('20. 10. ~ 12.)
- ※ 네이버·다음에서 '범죄피해' 등 키워드(약 300여개) 검색 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사이트(<http://www.moj.go.kr/cvs/index.do>) 검색 상위 노출
- 범죄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법무부 장관 육성녹음 및 CBS, TBS 라디오 광고('20. 12.)

○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전문성 강화

- 코로나19를 감안, 비대면 교육기법(ZOOM)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해 교육 효율성 향상 및 불특정 상황에서 종사자 업무처리 능력 개선('20. 9.)
- 구조금 지급업무 담당자 전문성 향상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금 실무운용지침 개정 및 업무편람 개정본 발간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스마일센터 학술 심포지엄 개최('20. 11.)

※ 주제 : 트라우마 치료와 다미주이론, 트라우마 치유의 소매틱 기법과 실제

□ 여성·아동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피해자 지원의 신속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13. 7.)하고 배치지역을 지속 확대(11명→23명),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확대(9명→14명)로 피해자 지원 접근성 제고
- 인기 유튜브 '허팝'(구독자 340만명) 계정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진술조력인 제도를 홍보하는 영상을 게재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활용도 제고('19. 8.)

<유튜브 '허팝' 진술조력인 제도 홍보>



-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중대성 및 특수성을 고려,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적극 지원('20. 3.)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보도자료	
발행일시	2020. 3. 24.(화) 15:00부터 보도
배부일시	2020. 3. 24.(화)
발행처	법무부
담당자	차장 권유근 02) 2110-3269
대변인	02) 2110-3717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 'N번방 사건' 그릇된 진술·증거 수사 등 대담 지시·조작 강행 법 개정 등 추진 -

1. 그간의 사법적인 대응이 미흡적이었음을 반성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근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SNS 대화방의 다수 회원에게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 국민들께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지원현황 >

(단위 : 건)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13,363	16,106	19,336	19,903	22,755	25,487	26,007
진술조력인	386	727	1,203	1,381	1,722	2,226	2,684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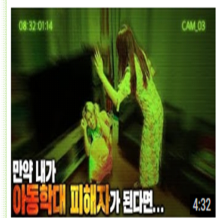
- 초·중·고 및 특수학교용('16. 10.), 신고의무자용('17. 7.)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아동인권강화 및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안내자료 제작·배포('17. 2.)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17. 12.)을 통한 신고의무 홍보 강화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법교육’ 실시하여 현장 대응역량 제고 및 지역별 아동보호시스템 강화('17. 6. ~ '20. 12.)

※ 아동학대 사건 경찰 실무, 수사 및 공판절차 등 형사사법절차,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 사회변화에 따라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강의 실시(총 504명)

○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20. 2. ~)

- 3~14세를 타겟으로 하는 인기 유튜버 ‘허팝’ (구독자 수 340만 명 이상)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어렵지 않고 쉽게 아동학대 신고제도 안내 동영상을 케이블TV(TVN, OCN, Tooniverse) 광고를 통한 방송 송출
- 법무부 페이스북에 편집영상을 게시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11. 19.)에 허팝이 안내하는 아동학대 예방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학대아동 지원제도를 친숙한 캐릭터로 홍보 강화

【 아동학대 홍보 동영상 송출 】

 만약 내가 아동학대 피해자가 된다면? (아동학대 예방하자!!!!!!) 허팝Heopop 2개월 전 · 조회수 680,404회 모든 아동학대 피해자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구들 화이팅! #아동학대예방 #법무부 #허팝 #진술조력인 #피해자지원 #피해자 ... 4:32 저작	 facebook 대한민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11월 2일 오전 6:50 · 공공 [법무부 X 허팝]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30초 Ver.) “흔치않은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지금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꼭 아동학대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국가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법무부 #허팝 #아동학대예방캠페인 #피해자지원 #진술조력인 법무부와 허팝이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좋아요 149개 · 댓글 16개
---	--

<유튜브 동영상>
<법무부 페이스북>

- 아동학대처벌법 및 하위 법령 개정('20. 3.)을 통한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
 -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이관하여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공성 강화

- 재학대 발생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토록 하는 등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 상가·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동 시행령 개정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상가임차인이 쌓아온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가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
-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 연체차임에 대한 불이익 규정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 요건에 제1급감염병을 추가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놓인 임차인을 보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을 증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던 임차인 보호를 강화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채권추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20. 12. 31.)

-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채권추심법 의원안의 대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시('20. 1.), 전문위원실 방문 및 설명('20. 2.)
- 21대 국회에서 제시된 대안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비,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제출('21. 12. 31.)

※ 국무회의 통과 시 보도자료 배포 완료 ('21.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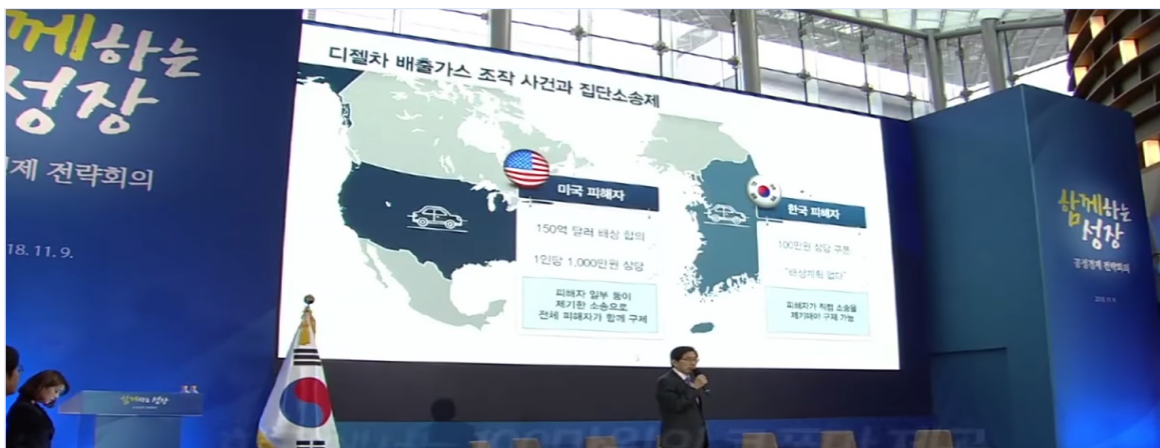
□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

○ 제20대 국회 임기만료·제21대 국회 개원('20. 6.)에 따른 새로운 입법방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제20대 국회 당시 '18. 9.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안)* 발의 지원

* (주요 내용) 제조물책임, 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식품안전, 금융투자상품 분야 확대 도입

< '18. 11. 9. 법무부장관의 집단소송 도입 추진방안 발표(공정경제 전략회의) >



- 그러나 구제·예방의 형평과 제도 도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 분야 확대 및 증거개시제 도입에 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18. ~ '19. 제20대 국회 당시 법무부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 (첫번째 왼쪽부터 시계방향 순)

- ❶ '18. 9. 17. 법무부장관 · 집단적 사고 피해자 및 전문가와의 현장정책간담회
- ❷ '18. 10. 31. 백혜련 의원 등 주최, 법무부 집단소송법안 입법평가 토론회
- ❸ '18. 12. 13.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 전문가 토론회(선진법제포럼)
- ❹ '19. 5. 17. 박주민 의원 주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토론회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19. 9. 18. 당정협의 통해 「확대 · 개선 도입방안」 마련 · 발표

확대 · 개선 도입방안

- 도입 분야 제한 없는 전면적인 집단소송법 전환
-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 등 실효성 확보수단 반영
- 시행당시 경과사건에도 적용

- 제21대 국회 개원('20. 6.) 후 새로운 입법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실효성*과 입법 동력을 개선한 정부안 추진 계획 수립

* 집단적 피해구제 · 예방 및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 확보 위하여 절차법적 수단인 집단소송제와 실체법적 수단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함께 도입

- '20. 9.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위한 「상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 '18. 9. 제20대 국회 당시 추진방안 및 '20. 9. 입법예고안 개선사항 비교 >

	제20대 국회 법무부방안	'20. 9. 법무부 입법예고안	개선
입법방식	의원안	정부안(제정안)	법안 입법동력 제고
집단소송 적용분야	일부 한정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 부당 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 식품안전, 금융투자상품)	전 분야	· 분야별 도입 여부 형평 논란 개선 및 실효성 확보
집단소송 소송허가 요건	① 증권보유요건 삭제(1만분의 1) ② 대표당사자요건 개선("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예시 삭제) ③ 피고 변호사 선임의무 삭제 ④ 원고측 소송대리인 경력 제한 삭제 ⑤ 상장회사 발행 증권 손해 한정 삭제 ⑥ 전속관할 개선(피고 다수인 경우)	· 추가 개선 ⑦ 소송허가결정 불복 제한 ⑧ 원고측 소송대리인 경력요건 삭제 ⑨ 전속관할 추가 개선(특별재판적)	· 실질적 6심제 개선 등 소송허가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한 제도 활성화 도모
집단소송 증거개시제	없음	· 소송 전 증거조사 · 자료등 제출명령 등 증거조사 특례	입증부담 완화
집단소송 참여재판	없음	1심 사건에 참여재판 적용	사회적 상당성 갖춘 분쟁 해결 기회 확보
집단소송 시간적 적용범위	없음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	기존 손해배상 활용 제한 문제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해당 사항 없음 (각 개별 법률 도입)	전면 도입	실효성 제고 (효율적 구제)

- '20. 9월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및 법안 발의 후,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계기 조성

<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 (좌) 9. 23. KBS, (중) 9. 23. MBC, (우) 9. 24. 조간

< 경제계 언론계 주최 토론회 >



※ '20. 10. 22. 경총 주최 토론회 및 '20. 10. 27. 한국신문협회 등 주최 토론회

< '20. 12. 1. 법무부 집단소송 · 징벌적 손해배상 현장 · 온라인 공청회 >



< '20년 ~ '21년 주요 의견수렴 및 논의 내용 >

- '20. 8. 28. 국회 정무위 오기형의원 간담회
- '20. 9. 24. 국회 법사위 백혜련의원실 · 정무위 오기형의원실 등 주요 의원실 및 법사위 입법조사관 입법예고안 유선설명
- '20. 10. 5. 법원행정처 간담회
- '20. 10. 14. 국회 법사위 김종민의원 간담회
- '20. 11월 중,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발간, "월간 소비자 11월호", 상사법무 과장 기고문 게재
- '20. 11. 12. 김종민의원 · 박주민의원 · 백혜련의원 · 오기형의원 · 이학영의원 공동 주최, 집단소송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 · 증거개시제 입법 토론회
- '20. 11. 27. 국회 법사위,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위한 공청회
- '20. 12. 1. 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 · 상법 개정안 공청회
- '21. 1. 21.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간담회
- '21. 2. 8.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간담회

- '20. 9. 입법예고안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입법추진할 예정

(4)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수사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한 여성·아동 대상 범죄 엄정 대처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11개 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운영하여 성폭력 등 여성·아동범죄에 대하여 수사전문성 제고 및 범죄 대응체계 강화
- 여성·아동대상 범죄 전담 대응체계 점검,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등 전문 수사역량 강화(상·하반기)
- 불법촬영·유포 사범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성착취 범죄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서 엄정 대응 지시('20. 4.)
-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정비 및 강화를 위한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T/F」 구성 및 운영('20. 10.~)

※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개정·시행 예정('21년 상반기)

○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협업 활동을 통해 여성·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입체적 대응 강화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20. 5.)
-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 피해아동의 보호지원과 피해회복 방안 검토 등 실효적 대응 강화('20년 연중)

□ 마약범죄 및 강력범죄 대응역량 강화

○ 국제공조수사 및 협력체계 강화

- 아태지역 약물대책회의(ADEC) 및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20. 2.~3.),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및 유엔마약위원회(UNCND) 속개회의('20. 12.) 참석을 통해 세계 마약 동향 및 대응 등 논의·정보공유 함으로써 국제공조 및 협력체계 강화
-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국제우편 등으로 유입되는 마약류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검찰 마약수사관을 태국 마약청에 파견하여 공조수사 효율성 강화('20. 11.)
- 국정원 및 태국 마약청과 긴밀히 공조, 캄보디아·태국 등지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대량 밀수입한 해외도피 중대 마약사범 검거·송환
 - ※ 시가 2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8.3kg을 국내로 밀수한 '아시아 마약왕' 등 중대 마약사범 3명 검거·송환('20. 4.~5.)
 - ※ '19. 4.경부터 캄보디아 등지에서 필로폰 수 킬로그램을 밀수입한 중대 마약사범 2명 검거·필로폰 1.4kg 압수('20. 7.)

○ 중대·조직적 마약류 범죄 수사역량 집중

- 인터넷·SNS 등의 발달로 다크웹(Dark Web),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유통 증가에 따라 서울중앙지검('19. 8.)에 이어 부산지검에 「다크웹 전문수사팀」 신설·운용('20. 2.)
 - ※ '20년 다크웹 전문수사팀 실적 : 44명 인지, 11명 구속
-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력 강화 위해 '다크웹 전문수사팀'에서 축적한 수사 노하우 및 사례를 집대성한 「다크웹 마약수사 실무」, 「사이버 마약범죄 수사실무」 2권 발간·배포('20. 8.)
- 검찰의 마약류 밀수 및 유통 등 중대·조직적 공급범죄 수사역량 집중 위해 관세청과 협의, 경미마약류 세관 자체 처리 범위 확대('20. 11.)

○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활성화 방안 추진

-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중독판별검사' 도입·시행('20. 2.)

※ 중독판별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의 중독 정도에 따른 맞춤형 조건(교육조건부·선도조건부·치료조건부) 부여로 치료·재활 내실화

※ '중독판별검사'의 원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개정

※ '21년 예산증액 : ('20년) 2억 원 → ('21년) 4.57억 원

○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홍보 활동

- 통일부(하나원)와 협의하여, '21년도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과정에 마약 예방교육 신설 합의('20. 4)

- 교육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의하여, 청소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시스템(edu.drugfree.or.kr)을 활용한 교육·홍보 적극 추진('20. 4)

※ 연도별 청소년 마약류사범 : ('17)119명 → ('18)143명 → ('19)239명 → ('20)313명

※ '20년 청소년 마약류사범 현황 : 313명(대마 78명, 마약 39명, 향정 196명), 전년 동기(239명) 대비 30.9% 증가

○ 펜타닐계, 대마류 등 신종마약류 선제적인 통제방안 마련 위한 정책연구 추진('20. 4.~12.)

※ 가천대 산학협력단(펜타닐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대마류)에서 각 정책연구 진행

○ 강력 범죄 적극 대처

-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나 데이트 폭력 범죄에 연중 적극 엄정 대응
- 지속적인 강·폭력사범 처리 기준 강화 등으로 살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 사례 증가 및 폭력사범 발생 인원 점차 감소

○ 강력 범죄 수사 역량 강화

- 형사부 검사 우대 강화를 위해 송치강력 전담검사 총장표창 신설('21. 1.)
- 살인 등 강력 사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재범 사례를 분석하고 살인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현황을 분석, 우수 인용 사례 전국청 전파('20. 6. 12.)
- 정신질환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의료자문 활성화 지시('20. 7. 23.)
 - ※ 각 청의 의료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신속·간이'하게 '정신질환자의 심신장애 여부, 치료감호 필요성' 등에 대한 객관적·전문적인 감정 절차 기반 마련
- 제2기 법의학 자문위원회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제3기 법의학 자문위원회 구성('20. 12.)

□ 서민생활안전·대형안전사고·교통안전 관련 범죄 엄단

- 전국 검찰청의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서 및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지속 단속
 - 불법사금융사범 총 4,407명 단속, 56명 구속('20. 1.~12.)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해킹·스미싱, 불법 개인정보 유통 등 개인정보 침해사범 지속 단속
 - 5,893명 단속, 14명 구속('20. 1.~12.)
- 한·중 사범공조 강화
 - '14. 4. 한·중수사협의회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 체결 후 매년 상·하반기 실무회의를 개최, 중국 측과 협력방안 논의 중
 -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중
- '음주·난폭·보복운전 사범' 지속 단속
 - 음주운전 사범 직구속 266명('20. 1.~12.)
- 대형안전사고 범죄수사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유관 기관 워크숍 및 회의 23회 개최('20. 1.~12.)

□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고위험 아동 성폭력법에 대한 1:1 전자감독 확대

-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 중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에 대해 1:1 전자감독 확대 실시

※ '19. 4.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후 33명 지정('20년 말 기준)

○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확대 및 경찰 공조 등 긴급 대응체계 강화

- 전자감독 범죄예방팀을 기존 50팀에서 56팀으로 확대('20. 4.)
- 경찰과 전자감독협의회 및 장치 훼손자 검거 합동훈련 실시

※ 전국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가 참여, '전자감독협의회'(연2회), '합동훈련'(연1회) 실시

○ 전자감독 장치 및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재범억제력 강화

- 기존 휴대장치 위치추적 기능을 전자발찌에 통합하고 훼손 방지 기능을 강화한 '일체형 전자발찌' 보급('19. 7.)
- '일체형 전자발찌'를 더욱 소형·경량화하고, 전자식 탈부착으로 운영효율성을 높인 '2020년형 전자발찌' 보급('20. 10.)
- 범죄수법, 이동패턴 등 재범요인을 종합 분석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범죄징후예측시스템 본격 운영('19. 3.)

- 지자체 CCTV와 위치추적시스템을 연계, 준수사항 위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CCTV를 실시간 열람하여 신속한 상황파악 및 대처

※ '20년 대전, 광주, 서울(마포구 등 7개구), 강원, 울산, 경기 부천·안산, 충북 등 연계·활용 중

- 기존 주거지·직장에 한정된 접근금지 관리 방식을 개선, 이동 중인 피해자도 보호 가능한 전자장치(스마트워치 등)를 개발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20. 2.)

○ '신상정보제도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등 등록정보 관리 강화

- 경찰청·여가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소재 불명, 공개·고지 등 특정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 협의체 운영주기 : 연 3회(2월, 5월, 9월), 각 부처 순회하여 주관, 긴급한 현안 발생 시 긴급협의회 개최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16년 21만 명에서 '19년 말 39만 명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 간의 한계를 보완하여 '19. 12. 11.부터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을 시행하여 '19. 12. 11.부터 '20. 6. 30.까지 자진출국 유도(재입국기회부여), '20. 3. 1. 이후 단속된 외국인과 '20. 7. 1. 이후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였음

- 선순환 대책 시행일('19. 12. 11) 이후 '21. 12. 31.까지 총 60,698명 자진출국 사전 신고, 범칙금 21.6억 원 징수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항공편 결항, 보호실 과밀화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출국이 제한되어 불법체류 외국인 수 감소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16년 21만 명에서 '19년 말 39만명 선으로 가파르게 급증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20년 말 현재 39만 명 선 유지

※ '19년 말 390,281명 ⇒ 20년 말 392,196명

-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확산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새로운 감염 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하였으며, 방역 사각지대 예방 노력
-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 시행(3. 11.~ 6. 30. 12. 16.~)
-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4. 20.)
- 코로나19 외국인 특별검진 및 자진출국신고 독려 계도활동(5. 14. ~ 6. 30.)
- 외국인 밀집시설(벌집촌), 인력사무소 방역 강화 방안 (7월~)

- 헬러윈 데이 대비 특별 방역·순찰(10.29.~10.31.)
- 추석 방역 점검 및 이동 자제 홍보 활동(9.21.~10.4)
-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부처 주관 점검(12.24.~'21.1.3.) 등

○ 법무부장관,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명령 시행(4. 1.)

- 입국심사 시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교부하여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준수를 유도하고 위반 시 범칙금 부과, 강제추방 등 엄정 대처

※ 외국인의 격리이탈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 범칙금 상향(1회 50만원 ⇒ 300만원) 시행(5. 29.)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 및 위반 시 강제퇴거 관련 언론보도 사례

○ 허위초청을 통한 불법입국 및 취업알선 브로커, 유홍·마사지 업종 기획조사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20년 알선 브로커 관련 외국인 등 2,338명(595건) 적발, 이 중 44명 구속, 183명 불구속 송치, 1,418명 강제퇴거 조치

○ 격리 이탈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20. 12. 31. 기준 총 66명 출국조치)

- 자가격리 위반한 외국인 41명 출국 조치(강제퇴거 19, 출국명령 22명)
-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 25명 출국 조치(강제퇴거 10명 출국명령 15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80명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천안·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및 교육운영 개시('20. 9.)

- 천안·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을 통한 충남 및 경기북부지역 비행예방교육 수요 충족 및 지역 간 교육편차 완화, 교육생의 교육 대기기간 축소 등의 기반 마련



- 대안교육 의뢰기관 및 교육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별 중점 교과·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가정의 보호기능 및 보호자의 자녀 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가족교실’ 등 보호자 교육 운영(연중)
- 초·중·고 학생 및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등 대상 법·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 대상 직무연수 등 실시(연중)
- 학교·검찰·법원 등 교육의뢰 기관별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20. 4.), 이론적 기반 및 최신 교육기법 등을 반영한 「청소년 절도예방 통합 프로그램」 개발(‘20. 3.~9.), ‘사이버 비행예방’ 및 ‘청소년 폭력예방’ 분야 프로그램 고도화 추진(‘20. 4.~10.)

□ 참여형·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

- 전 생애를 아우르는 법교육 콘텐츠 구성 및 시행체계 마련
 - 전국 보육원 및 국·공립유치원 등 유아 대상, 법과 규칙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독후 활동 중심의 법교육 프로그램 구성·실시(‘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72개 기관, 2,312명), 유아의 눈높이

이에 맞도록 기존 워크북 개선 및 신규 주제 개발, 배포

- 지역아동센터 초등생 대상, 쉽고 친근하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중심의 어린이 로스쿨 프로그램 운영(81개 기관, 1,114명)



‘아이가행복해지는법’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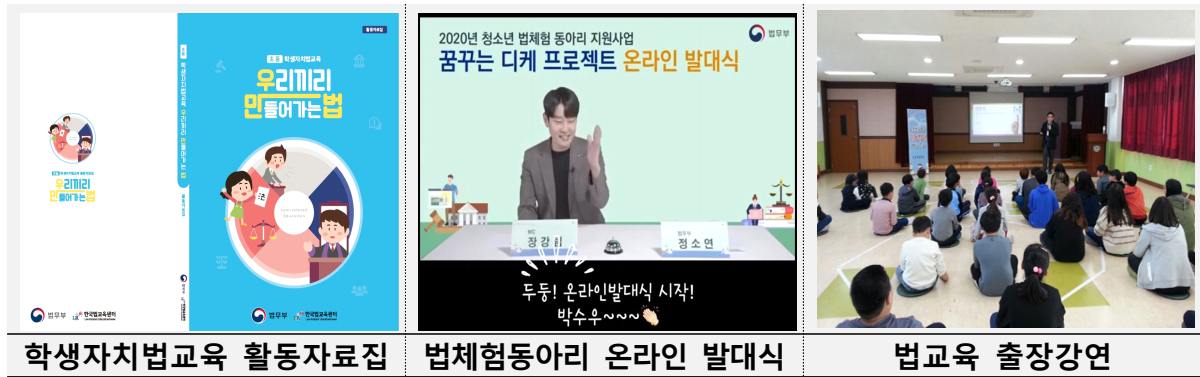


어린이 로스쿨 실시



신규 주제 워크북 개발

- 학교폭력예방·인성교육·법교육 등 주제를 선택하여 초·중등 학교 교과 과정, 창의적 체험학습 등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교실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178개교, 1,527명), 교육부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통과 및 법·인권 주제 신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프로그램 활용 저변 확대 추진
-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를 인권친화적·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자치규약 제·개정, 자치법정 구성, 자치토론 활동을 지원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방법을 전수하는 학생자치법교육 프로그램 실시(755개교), 모의법정 시나리오 등 활동자료집 신규 개발·보급
-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스로 법과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활동을 기획·체험할 수 있는 ‘법체험 동아리 지원 사업’ 구상, 기본계획 수립·시행
- 법교육 전문강사가 학교 및 청소년시설 등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필요한 주제에 대한 맞춤형 법교육 실시(‘법교육 출장강연’, 243,129명)
-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주제로 법교육 전문강사·변호사가 온·오프라인 법률강연 실시(‘시민법교육’, 지자체 등 26개 기관)



○ 도서지역 및 소외계층 등 대상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및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한국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하고 일일 법체험 캠프 제공('우리법 바로알기', 6개 학교 1,741명)
- 다문화 사회를 반영한 기초 생활 법률을 주제로 결혼·취업 이민자 등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이민자법교육', 25개 기관, 439명)하고, 교육부와 협업하여 교육부 지정 다문화교육정책학교 등에 '모두가 행복한 교실'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 '19년 현장 제안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책자 제작 계획 수립, 중국어·베트남어 등 4개 국어, 3개 생활법률 주제로 소책자 제작완료(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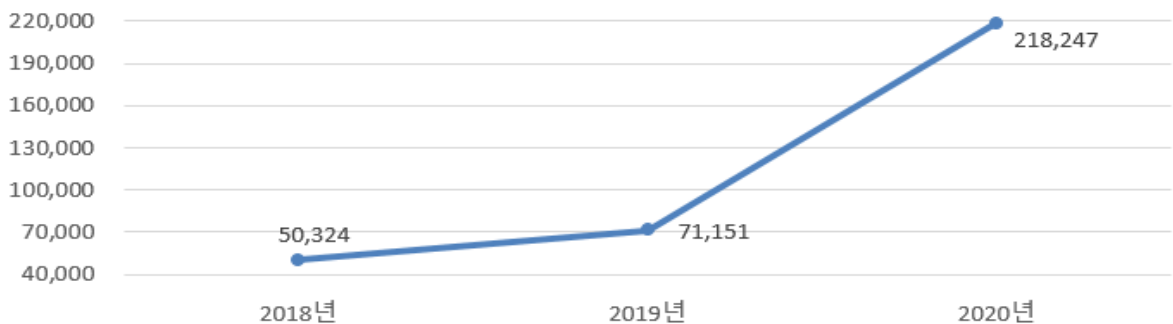
- 도서·산간지역 등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곳을 법교육 버스가 전문 강사와 함께 직접 찾아가 솔로몬로파크 콘텐츠, 법교육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찾아가는 로파크', 668회 12,165명)

※ '찾아가는 로파크' 신규 버스 구입 및 법교육 버스로 개조 완료·현장 배치



○ 법체험 테마파크 및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인프라 확대 추진

- 어린이·청소년 및 시민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법놀이터, 모의법정, 과학수사체험 등 전시관을 운영하고 모의법정 VR체험, 교사직무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현(대전·부산)
- 호남권 법교육 수요에 대응하며 (舊)광주교도소 부지에 솔로몬로파크 건립 추진, '20. 2. 착공하여 '22. 2. 완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
- 코로나19 상황에서 법사랑사이버랜드 온라인 콘텐츠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 개시



<보호정책과 법사랑사이버랜드 홈페이지 이용자수 현황(명)>

□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내실화

○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인성 변화를 위한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대책 수립('13년) 및 시행

- 여주(교) 등 6개 기관에 대한 시범운영('14년) 및 전 교정기관 확대 실시('15년)

※ 집중인성교육 실적 : '17년 10,525명, '18년 9,909명, '19년 11,566명, '20년 4,917명

- 집중인성교육 과정에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도입('17. 6.)

*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 인류보편적 가치인 세계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의 이해 및 실천

- 교육 수요자 중심의 형기 주기 별 교육 체계 구축('18. 11.)

- 집중인성교육에 대한 객관적 효과성 분석('19. 10.~11.) 및 내실 있는 집중인성교육을 위해 기본·심화 과정을 기본교육으로 통합('19. 11.)
- 코로나19로 중단된 집중인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전문 강사의 실제 강의를 비대면 영상강의로 제작('20. 8.), 전국 교정기관에 배포('20. 9.)

※ 5개 분야 13개 주제 총 44시간 제작

연번	분야	주제	연번	분야	주제
1	친사회성	긍정심리Ⅰ	8	준법정신	헌법가치
2		긍정심리Ⅱ	9		양성평등교육
3		행복소통	10		세계시민교육
4	대인관계	음악치유	11	자기통제	태도변화
5		마음다스림	12		버킷리스트
6	가족관계	힐링아트	13		
7		세움아트	-		

○ 수형자 교정교화에 초점을 맞춘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시행

- '가족사랑캠프', '가족접견실' 참여 대상자를 사실혼 배우자까지 확대('17. 1.)
- 가족관계회복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기준의 '모범적인 수형생활(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조건 삭제('18. 1.)
- 여성 수용자와 자녀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동화책을 녹음하여 자녀(6세 이하)에게 전달하는 '엄마의 목소리' 제도 시행('19. 8.)

※ 여성 수용자 54명이 참여, 자녀에게 170회 전달('20.12)

- 가족관계 유지·회복을 통한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여건 마련의 일환으로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구축('17년부터 지속 추진)

※ 전국 53개 기관 중 44개 기관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구축 완료('20. 12.)



(기존)홍성교도소
가족접견실 대용시설



(개선)김천소년교도소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 수용자 자녀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수용환경 조성
 - 부모의 수용으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미성년 자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 운영(‘20. 6.), T/F에서 도출된 결과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수립(‘20. 10.)
 -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현황 조사방법 개선 및 정례적 실태조사를 위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 계획’ 수립(‘20. 11.)
-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한 처우의 활성화 방안 마련
 - 가족 사망 관련 특별귀휴의 요건 완화, 장기형 수형자의 일반 귀휴의 확대 및 귀휴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귀휴 조건 부분 완화(‘20. 2)
 - 중·장기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천안개방교도소 활성화를 위한 T/F’ 운영(‘20. 11.)
- 중간처우시설 증설을 통한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추진
 - ‘밀양희망센터’(‘13. 9.) 및 ‘아산희망센터’(‘17. 3.) 개관

□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작업장 기반 확충을 통한 교도작업 활성화
 - 천안(교) 등 4개 기관 작업장 신축 등 교도작업 기반을 확충하고, 직원 근무화 및 A4 용지 등 품질개선 작업으로 생산실적을 높여 수형자 정역집행률을 높이는데 일조함

※ 최근 3년간 정역집행률 : ‘18년 92.5%, → ‘19년 93.2% → ‘20년 93.5%

○ 제49회 교정작품전시회 최초 온라인 전시회 병행 전시

- 교도작품 온라인 VR, 전자도록 도입으로 포털사이트에서 누구든지 접속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강화하여 전년 대비 많은 인원이 전시회를 관람함

※ 방문인원 : ('19년) 오프라인 약 3,000명 → ('20년) 온라인 19,787명

○ 수형자 작업장려금 인상 추진

- 작업장려금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 재정 범위 내에서 인상 추진
- 위탁일반작업 현행 단가 지급에서 세입액 기준 비율방식으로 변경
- 직영일반생산·운영지원·취사원 작업장려금 기준단가 인상
- 시간 과정 취업수형자 휴일 작업시간 계산율 2배 상향
- 개방지역작업 수형자의 작업장려금 인상

○ 산업수요를 반영한 유망직종 직업훈련 발굴·양성

- 외부출장 중장비운전 직업훈련 신설

※ 대상 : 천안개방(교) 4명, 군산(교)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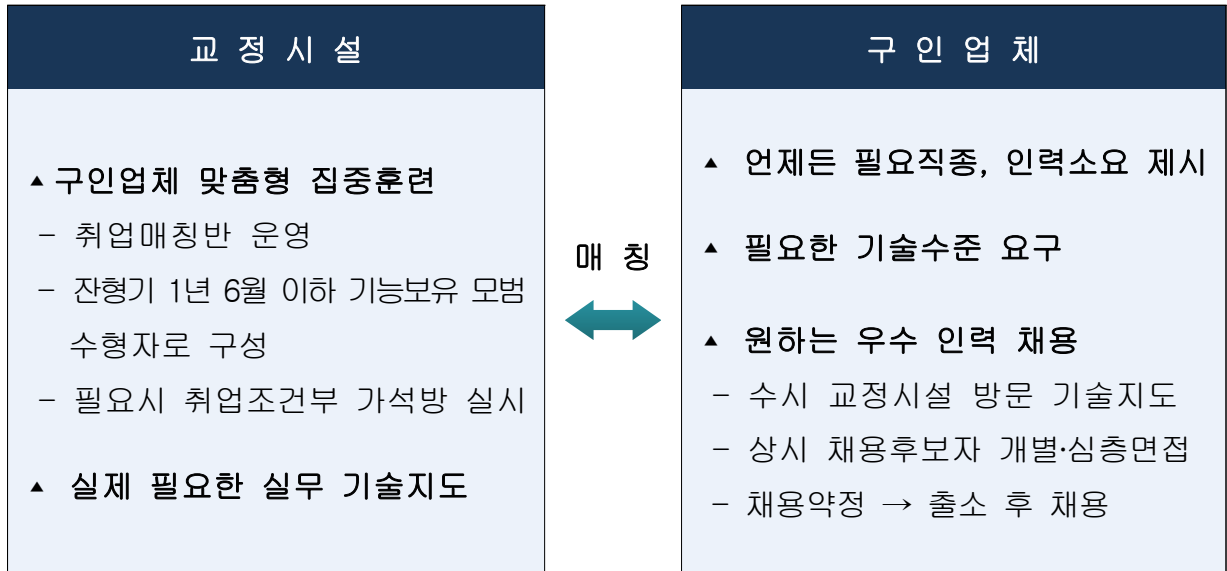
※ 장소 : 천안 중장비 운전학원, 군산 삼영 종합 중장비학원

- 떡 제조, 애견미용, 바리스타 등 취업유망 훈련과정 신설
- 향상·숙련과정 신설 등 직업훈련개편을 통한 전문기술인 양성

※ 전국·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94명(금24, 은23, 동15, 우수19, 장려9)

○ 수형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 취업매칭반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 개설 및 시범운영



- ※ 화성직훈(교) 등 3개 기관 시범 실시, 용접·제빵 등 6개 직종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393회 3,952명 교육 이수
- 취업조건부 가석방 18명 시행
- 창업진흥원과 협업으로 수형자 실전창업교육 실시
- ※ 청주(교) 등 3개 기관, 조리·전기 등 4개 분야

□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가석방 내실화

○ 범죄유발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가석방 제도 도입 및 활성화

- 치료조건부 가석방제도 지속 추진 및 활성화('19. 11. 도입)

※ '20. 39명 신청 ⇨ 34명 출소

-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조건부 가석방 제도 도입('20. 12. 도입)

※ 입원조건부 가석방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급여신청 특례 개정 등 협의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수형자 가석방 확대

- '20. 3월 정기,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시 환자 등 면역력 취약자에 대해 추가 신청하도록 하고, 이후 지속적 심사기준 완화

※ '20. 3. 이후 12.까지 총 347명 허가(월 평균 34.7명, '20. 1·2월 평균 25명)

○ 가석방 내실화를 위한 제도 정비

- 「가석방 업무지침」 전면 개정('20. 12.)
-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 유연한 대처를 위해 가석방 기준
일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가석방업무지침」 제3조(정기 가석방), 제4조(기념일 가석방) 단서조항을 신설

<최근 5년간 가석방 출소 인원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가석방인원	7,157명	8,275명	8,693명	8,174명	7,911명
출소율	25.1%	26.2%	28.5%	28.0%	28.7%

※ 모범수형자, 사회적 약자(환자·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 확대 지속(가석방 출소율
증가 '19년 28.0% → '20년 28.7%)

□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 강화

○ 전문적·체계적 심리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실효성 제고

- 소속기관 심리치료과 '과' 신설('20. 2.)
- 수용자 심리치료 전문상담 강화 계획 수립('20. 2.)
- 디지털 성범죄자 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자문회의('20. 9.)
-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방안 자문을 위한 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회 개최('20. 10.)

○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운영('20. 1.)
- 수용자 대상 외부전문가 화상상담 실시('20. 4.)
-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유지과정 운영('20. 8.)
-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우울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20. 12.)

○ 효과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성 강화

- 심리치료 담당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임상심리사 자격증 취득 지원('20. 2.)
- 소속기관 심리치료과장, 센터장 회의 개최('20. 6.)
- 심리치료 업무 소통 활성화를 위한 영상회의 개최('20. 7.)
-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상담 사례회의(수퍼비전) 운영('20. 8.)
- 심리치료 전문상담 공개사례 발표회 개최('20. 11.)

□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 내실화

○ IT 기술을 활용한 교정시설 비대면 의료체계(원격의료시스템) 활성화

- '20년 원격의료시스템 5개 기관 신규구축을 통한 원격의료센터 및 협력병원과의 전문의 진료 확대

※ 기존 42개 → 47개 기관 원격의료시스템으로 확대 운영

〈원격의료 과목별 현황〉

구분 년도	계	정신과	신경과	소화· 호흡기내과	피부과	정형 외과	내분비 내과	심장 내과	비뇨 기과	기타
2020년	24,088	18,659	425	574	2,213	465	442	311	120	879
2019년	22,554	16,626	436	519	2,383	355	371	219	29	1,616

- 원격의료시스템을 활용한 원격당직의사 제도 마련

※ 휴일·야간 원격의료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 교정기관 경증 정신질환 등 투약 처방

- 서울동부(구) 원격의료센터 진료환경 개선을 통한 진료권 보장

※ 기존 동부(구) 구내에서 구외 청사로 이전 및 진료실 리모델링 확장 공사로 의료진 진료 몰입도 향상을 통한 수용자 진료권 보장



○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

-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코로나19 비상대책반 24시간 운영
- 신속한 진단 검사를 위한 교정시설 자체 선별진료소* 설치

* 서울구치소 확진자 발생(20.5.15.) 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방식 도입을 통한 2차 전파 차단



-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교정기관 의료인력 지원

※ 교정기관 공중보건 의사 21명, 대구광역시 및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지원

- 코로나19 상황별 대응지침·방안 마련

※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자 처우 조정표, 교정시설 격리치료시설 운영지침, 교정본부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상황별 대응지침 및 방안 마련·시행

- 코로나19 수용자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특별절차 마련

※ 수용자 16,451명 온누리상품권 수령(수령액 63억 2,229만 4,000원)

○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

- 법무부 긴급 대책본부 구성, 수용자 긴급 이송 등 수용밀도 조절, 신입자 신속항원검사 도입 및 격리기간 연장,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실시

※ 교정시설 종사자 15,150명, 수용자 50,738명 전수검사 실시

- '교정본부 생활방역대책반'과'법무부 대책본부'를 통합하여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팀」으로 확대 재편
- 신속한 접촉자 분리대책 및 대규모 감염 대비 전국단위 분산계획 수립·마련

○ 교정공무원 응급처치 역량 강화

- 교정현장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관심 제고 및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 도모
-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개최

※ 최우수상 : 청주여자교도소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 사용법 등 평가

- 응급구조사 인력 양성을 통한 역량 강화

※ 2020년 국방부 국군의무학교 응급구조사 위탁교육(2급 응급구조사 9명 양성)

○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한 의료처우 향상

-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 접종 확대(만 65세→만 62세)

※ 만 62세 이상 노인 수용자 등 15,710명 접종

- 교정시설 외부전문소독업체 방역소독 실시
- 장마철 및 혹서기 방역 등 예방활동 강화 지시

○ 수용자 외부기관 건강검진 항목 추가

- 기존의 31개 항목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표지자 검사 항목 추가

○ 교정시설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수용자 건강권 증진

- 공중보건 의사 편입 인원 감소 추세에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0년도 공중보건 의사 배치 인원 증원
- 2020년도 배정 인원 91명(전년 대비 20명 증가)

○ 의료장비 현대화 및 의료환경 개선

-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수용자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권 증진
- 2020년 디지털 X선 7대, 자동약품포장기 13대, 초음파기기 1대 등 첨단 의료장비 도입

□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교정교육의 기반 마련

-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규정’(법무부 훈령) 제정, 소년보호 혁신위원회 출범('20. 4.)

※ '20. 4. 23.(목) ‘소년보호혁신위원회’ 발족

- 서보학(경희대 교수) 위원장 등 총 22명 외부위원 위촉
- ‘소년원 급식비 현실화’* 등 6차례에 걸쳐 권고 발표

* '21년 정부예산에 수용학생 1일 6,242원으로 전년대비 9.9%인상하여 반영

(단위 : 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소년원	4,997	5,097	5,199	5,303	5,409	5,680	6,242
소년교도소	4,997	5,097	5,199	5,303	5,409	5,680	6,242
6호시설(평균)	6,549	7,026	7,044	7,125	7,275	7,488	7,688
군대	7,150	7,334	7,481	7,855	8,012	8,493	8,790
중학교(서울)	8,835	9,750	9,864	10,314	10,887	11,349	(미정)

- 교육과 수용을 분리·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 확대 시행

※ '18년 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현재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 중 9개 기관에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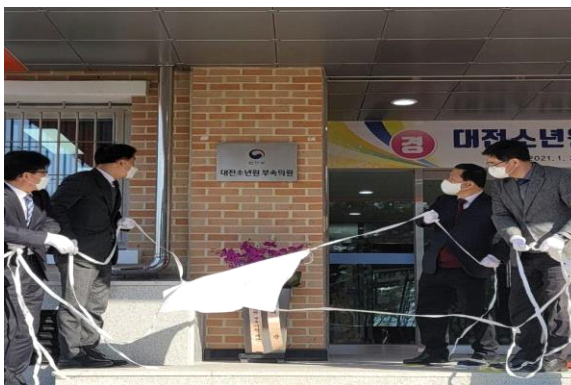
- 미래취업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학생 선호도를 반영하여 직업훈련 과정을 개편, '에너지설비반' 및 '그래픽디자인반', '디저트반'을 개설

○ 시설 소규모화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한 인권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 4인 이하 소규모 생활실로 개선하기 위한 부산소년원 위탁생활관 기본설계 및 춘천소년원 청사·체육관·식당 등 재건축 기본설계 완료, 의료재활소년원 신설을 위한 대전소년원 별관(구 의료동) 리모델링 완료, 서울소년원 리모델링,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축을 위한 '21년 정부 예산 확보

※ '21년 정부예산 : 서울원 설계비(3.55 억원),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설계비(14.17억원) 반영

- 정신질환이 있는 소년원 출원생(7호 처분 경력자)이 출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료재활소년원 및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년원생이 1인 생활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대전소년원 의료동 준공식>



<소년원 1인 생활실 내부>

□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의료인력 처우개선 통한 의료인력 확보

- '20. 1.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수당 가산금) 신설·지급

※ 국립정신병원 의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의료업무수당 가산금을 치료감호소 의사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

- 의사의 민간대비 낮은 보수 수준(40%)의 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적극 협의, '20년 일반임기제 의사 2명 등 연봉 인상
- 격오지 근무에 따른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해 노후 비상대기소(관사) 리모델링 추진(설계비 2억4천8백만원 확보, 3년 총예산 61억)

○ 의료인력 충원을 통한 치료환경 개선

- '20. 정신과 전문의 2명, 약사 2명, 간호사 16명 채용
※ 의료인력 결원율 24.1%(목표 24.5%)
- '20. 정신과 전공의 1년차 2명 임용 및 '21. 1년차 전공의 2명 확보
- '20. 공중보건의사 2명 확보 및 배치(치과, 한의과)
- '20. 2. 병동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23명 증원
※ '20. 7.부터 약물병동 4부제 근무 시행 및 유희병동 1개 운영 재개

○ 치료시설 개선을 통한 치료 효과 제고

- 노후 대형병실을 6인 이하 소규모·현대화 병실로 리모델링 및 중증 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병동 신축 착공(400병상 규모, '23. 10. 완공 예정)
-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도입 예산 확보(54,800만원 '21. 7. 배치 예정)

○ 치료감호소 치료환경 개선, 출소자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

※ 치료감호소 재입소율 : '20년 목표 5.9% → 실적 2.5%로 목표 초과 달성

○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직업교육 및 정신재활치료과정 도입

※ 실내건축 공과 개설, 바리스타 및 데코레이션 직업훈련과정 확대, 수족관 치료 및 천연염색 등 정신재활치료(작업치료)과정 신설

○ 코로나19 감염 완벽 차단

- 면회 및 외부교육 중단, 외부호송 최소화로 외부 감염원 유입을 원천차단

- 전 직원 코로나 진단검사 매주 실시 및 환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자 미발생

□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

-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문처우 프로그램의 정비를 통해 보호관찰 전문성·효과성 제고
 - 사범별 매뉴얼 확대 실시로 대상자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도감독 확대 실시('18. 3.)
 - 보호관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감소 및 자존감,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실시('19. 4. ~ '19. 12.)
 - (주)에듀윌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검정고시 사이버 수강권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지원('20. 3.)
- 과학적 재범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호관찰 업무 능률성 향상 및 실효적인 재범억제력 확보
 - 수형자의 사회내처우 적합성 등 특성 및 동적요인을 반영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대상자 맞춤형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19. 11.)
 - 가정폭력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19. 12.)
 - 보호관찰 분류등급을 간소화(5단계→3단계)하고 보호관찰 초기 6개월 간 출장지도 강화('20. 00.)

□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 추진

- 수혜자 확대 및 취업을 통한 안정적 사회정착 기반 마련
 - '20년 취업지원사업 계획인원 6,500명 대비 6,605명이 참여(102%)하였고, 수료인원 2,288명 중 1,905명이 취업(취업률 83.3%)하는 성과 달성

- 취업자 1,905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1,038명(54.5%)으로 수료자 2명 중 1명 이상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19. 9., 정책주간지 공감)

“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 수 대비 50.1%에 이르렀다. 고용보험 가입률 50% 돌파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뒤 24년 만의 일이다. ”

【 '20년 12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지원사업 통계 】

(‘20. 12 기준, 단위 : 명/%)

구분	참여자	진행자	수료자	수료자 중 취업자	수료자 취업률	고용보험 취업자	고용보험 취업률
인원	6,605	3,501	2,288	1,905	83.3	1,038	54.5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별 일자리 정보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일자리 이음 서비스’운영을 통하여 ‘20년 12월말 기준, 구인정보 116건, 이력서 제출 185건, 동행면접 174회 지원 ⇨ 출소자 109명 취업성공

※ (일자리 이음 서비스) 전국 기관 구인정보 상시 공유를 통해 보호대상자에게 다양한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 제출 및 찾아가는 동행면접 대행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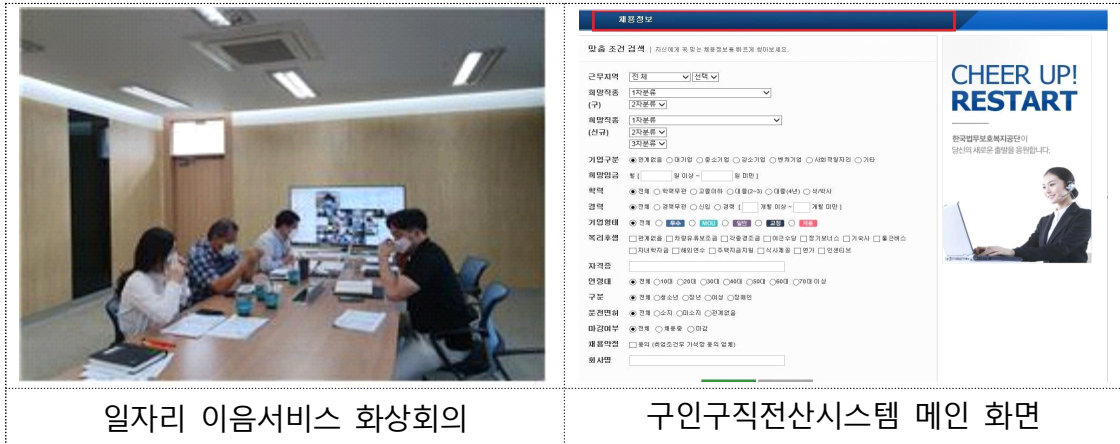
- 취업지원사업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편 T/F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프로그램 고도화 추진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시간(16시간→12시간) 조정, 최신 직업정보 반영 등을 통해 취업지원 사업 실효성 제고

- 구인·구직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취업알선 활력 제고

※ 실시간 구인정보 공유 체계 구축, 구인정보 유효기간 설정·관리 등

※ (구인구직전산시스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종합 구인·구직 정보망으로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일자리 이음서비스 화상회의

구인구직전산시스템 메인 화면

○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 및 대외 신뢰도 제고 노력

- '20년도 상·하반기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태 전수 조사」 실시로 참여자 사후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

전수조사 개요	확인 사례	조치 사항
-(시기) '20. 1. 1. ~ 1. 15. -(대상) 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진행자 6,066명 -(점검사항) 상담 입력, 전산처리, 수당 지급 등	- 참여자 사후관리 상담 미실시 등 - 수당 지급 등 행정처리 지연	- 프로그램 종료자 전산 미처리 사항 등에 대한 알림 기능 구축 등 구조적 개선 완료
-(시기) '20. 7. 16. ~ 7. 24. -(대상) 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진행자 9,997명 -(점검사항) 상담 입력, 구직 인증번호 관리 등	- 참여자 워크넷 구직인증번호 미등록 - 상담 내용 입력 1개월 경과 등 전산 관리 미흡	- 출소자 채용 기업의 고용 촉진장려금 수혜 확대를 위해 참여자 구직등록 등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른 실무자들의 업무의욕 제고 및 사업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한 취업전담직원 「복무 관련 우대조치」 시행

- '20. 12. 기준, 직원 90명 우대혜택 적용, 취업알선은 4,659명(목표 인원 대비 103.8%), 전년 동기 3,864명 대비 795명(20.6%)증가

※ (우대조치) 월별 취업알선 실적에 따라 포상휴가 부여(알선취업 2명 이상 달성 시 반일 휴가 등 부여)

- 취업지원 전담직원 성과평가제도 개편을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1년 이상 장기근속 및 직업훈련 연계취업 관련 평가지표 신설

- 취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격 대상자 선정 단계별 심사 제도화

【 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절차 】

구분	1단계 : 사전심사	2단계 : 서류심사	3단계 : 보호심사
확인 사항	출소예정자 개별상담 등을 통해 취업의지 여부 등 확인	고용보험 가입자 등 원칙적 참여제한 대상자 선별	사회적응도 및 자립계획 등 확인 후 참여자 확정 ⇒ 대상자 통보
기관	교정 · 보호관찰소 등	공 단	공 단

○ 현장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기반 마련으로 취업지원 효과성 극대화 도모

- 참여자 및 취업지원 실무자의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매뉴얼 개정

※ (의견수렴) '20년도 매뉴얼 개정을 위한 실무자 화상회의('20.1.) 개최 등

구 분	시기별 업무 매뉴얼 주요 개정 사항
1차('20. 3.)	- 취업성공수당 금액 확대(180만 → 200만) - 각종 수당 신청서 통합, 수기결재 폐지 등 행정업무 대폭 간소화 등
2차('20. 5.)	-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급 수당(취업 근속 장려금) 신설 - 면접참여수당 개선(이동거리를 고려한 차등 지급) 등
3차('20. 7.)	- 취업 확인 경로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확대 · (취업확인) 급여이체,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 취업인정 서류 확대 · (지급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미가입자도 포함

○ 취업지원 실무직원 스킬업(Skill-up) 교육을 통한 업무수행 역량 강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매뉴얼 변경사항 및 실무 유의사항 교육 등 취업지원 전담 인력(120명)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화상 교육 실시('20. 09.)

○ 강원영동지역 취업지원 전문센터 건립을 통한 효율적 사업 수행 기반 구축

- 강원 영동권 지역 접근성 제고(시간·거리적 제약 해소)로 구직 희망 출소자에 대한 역동적인 취업지원 및 밀착관리 가능 여건 제고
- 직업훈련의 취업실효성 제고 및 출소자의 조기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교정기관 직업훈련과 협업 추진
- 상호(공단·교정)의 특징점을 살린 「출소 전·후 연계형 중장비 직업훈련 프로그램」 합동 추진('2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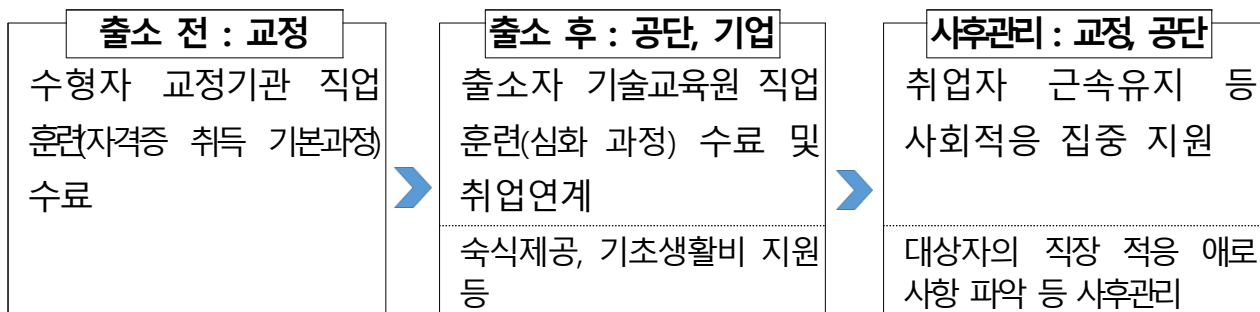
【 출소 전·후 중장비 직업훈련 연계 프로그램 개요 】

구 분	교정기관(출소 전)	공단(출소 후)
지게차운전	자격증 취득 (이론 교육 + 실기 교육)	일자리우수기업 등 고용협력기업 취업알선
굴삭기운전	이론 교육	실기 교육
기타 중장비 운전	이론 교육	이론 교육 + 실기 교육
취업연계	교정 채용면접 행사 (구인·구직만남의날 등)	일자리우수기업 등 고용협력기업 취업알선

- 교정(모범 수형자 선발 및 자격 취득 교육)·공단(현장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기업(안정적 일자리 제공)의 실질적 협업을 통해 '재소 중 교육 ⇨ 출소 ⇨ 취업연계' 절차 구조화

※ 공단 충남기술교육원-광주교도소 직업훈련 시범 연계 추진을 위한 현장 견학 및 공단·교정·기업 3자 협의회 실시('20. 11.)

【 기술교육원 및 교정 직업훈련 연계 개념도 】





- 법무부 교정본부 보라미방송과 협업을 통해 교정 직업훈련 신청자 등 출소예정자 대상 공단 취업지원사업 영상 송출 빈도 확대 협의

※ 기술교육원 홍보영상 보라미 방송 송출 주4회 ⇨ 주 7회 이상 확대

공단 · 교정 · 기업 3자 협의회	기술교육원 현장 견학	단체 기념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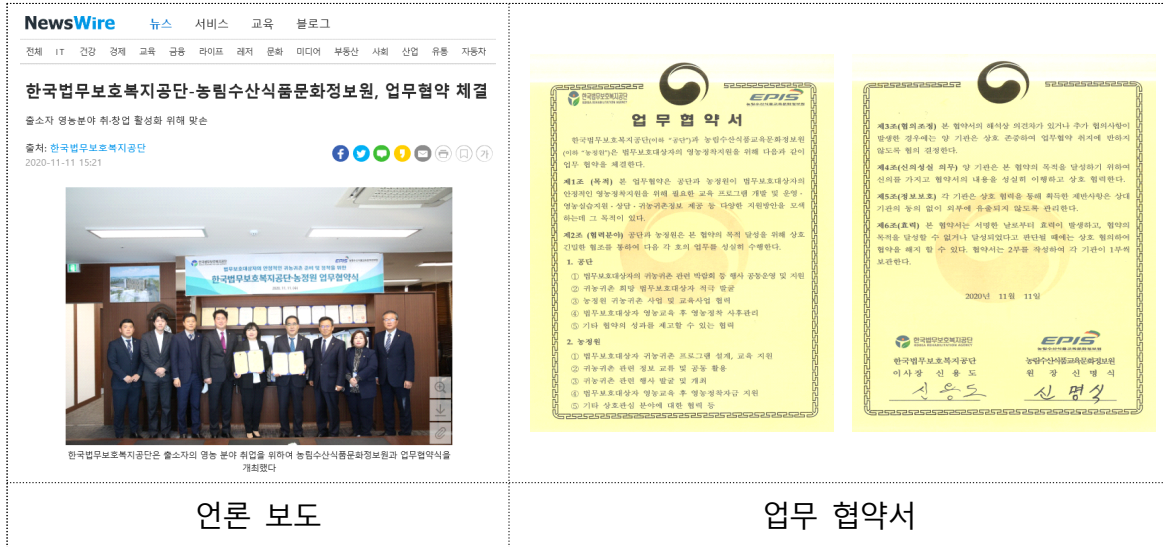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림부 산하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출소자의 영농 분야 취·창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농정원 협업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수료자 대상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20. 4.)

* 농업창업자금(세대당 3억원 한도), 주택자금(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지원

- 출소자의 영농분야 취·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공단·농정원 MOU체결('20. 11.)



○ 출소자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개편

-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 및 직업훈련 교육 병행이 가능하도록 교육 운영시간 오전시간대 배치 및 평일 야간반 훈련과정 개설('20. 6.)
 - ※ 3D 프린터 교육 과정, 용접배관 실무과정
- 교육대상자 확대(취업자 포함) 및 시험응시료 등 자격증 취득경비 지원 강화(1개 자격증⇨2개 자격증) 등 기술교육원 운영 개선('20. 9.)
- 신산업 분야 진입장벽 해소 및 인력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20. 6.)
 - ※ 3D 프린터 교육 과정 정규과정으로 편성('20. 6.),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선정에 따른 신규 훈련과정('20. 8., 김제시청) 개설('2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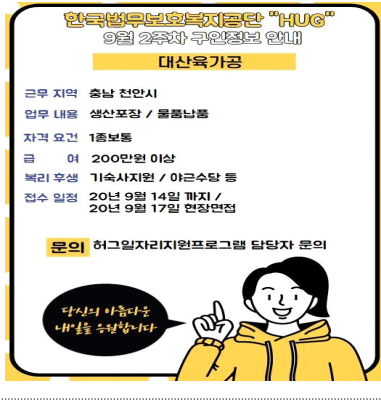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선정 공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과정(지게차)

○ SNS 소통 활성화 등 시대상을 반영한 능동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카카오톡 채널 활용, 취업지원사업 관련 실시간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참여자 개별 취업정보 신속 제공 및 민원 등 해소

※ '20. 4. ~ 12. 매주 2회 실시간 채용정보 제공(채널 친구 660명, 구인정보 116건 공유 및 89명 취업 연계)

 카카오톡 채널 "HUG"	 실시간 채용 정보
--	---

○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제도 및 공단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연계로 고용주의 기술교육원 수료자 채용 유인기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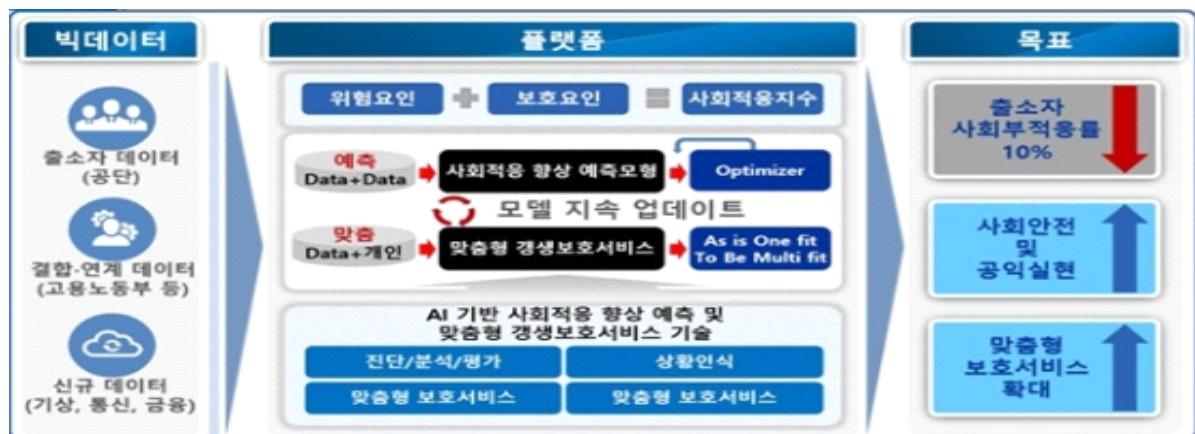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 협의를 통해 '20년 1월부터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공단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포함

※ 사업주가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이수자 고용 시 고용촉진장려금 수혜 가능 (대상자 1년 근속 시 최대 720만원까지 수령 가능)

 공문(고용촉진장려금 관련 규정 개정 알림)	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파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귀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규정 제11조(지원요건)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 추진
- 출소자의 인적·환경적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응 예측모형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출소자 개별 특성에 맞는 법무 보호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20. 6.~)

【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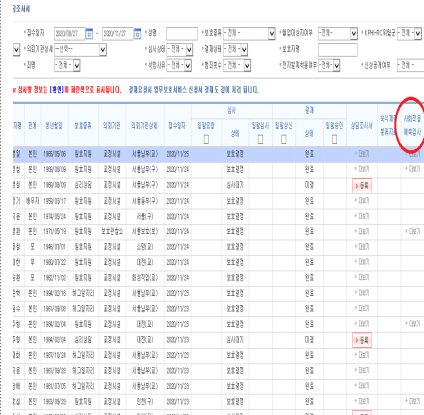


사업 개요

□ 2020년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 (정의) 빅데이터 ·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 시범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추진 과제)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
- (주요 내용) 출소자의 사회적응 요소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특성에 맞는 법무 보호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추진 경과)
 - '20. 1.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사업추진단 구성 (공단·경기대학교·시스템 전문기업)
 - '20. 5. 사업 공모 신청 (과제 제안서 제출 등)
 - '20. 6.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 '20. 8. 공단 전산시스템(보호마)에 AI 플랫폼 구축
 - '20. 9.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범죄예방 세미나 등 개최
 - '20. 11. **사업 수행 우수 기관으로 선정** (10개 수행기관 중 3곳 선정)

【 AI 플랫폼 보호미(공단 전산) 구축 화면 및 활용 절차 】



① 사회적응 예측검사 클릭



② 사회적응 예측지표 응답지 입력



③ 사회적응 예측지표 결과 출력

○ 실효성 있는 고용협력기업 풀(pool) 운영·관리를 위해, 고용협력 기업을 재정비, 출소자의 안정적 일자리 실질화('20. 3.)

- 재정비(폐업 및 출소자 미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협약 해지) 결과, 고용협력기업 1,370개 ⇨ 799개로 정예화

○ 출소자 일자리 기반 마련 및 사회적 포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선정 고용우수기업 인증식 개최 ('20. 6., 8., 11.)

- '09년부터 '20년까지 총 50개 업체 선정



출소자 취업지원 업무협약식(고용협력기업)



법무부·공단 선정 고용우수기업 인증식

【인증 기업 관련 개요】

인증호수	기업체명(소속지부)	본인 사업장 누적 고용인원	타사업장 알선
43	다함(인천지부)	25	-
44	에코리빙(인천지부)	4	8
45	대산토탈(충남지부)	8	3
46	(주)진성D&P(경기지부)	29	16
47	우진방화문(부산지부)	10	-
48	대한어망(광주전남지부)	9	3
49	에스앤씨케어(서울지부)	16	13
50	(주)대교에이스(대전지부)	8	2
계	8호	109명	45명

○ 출소자 지원 정책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출소자 포용 분위기 확산 등)에 따른 취업자 근속률 증가

- 출소자 고용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 확대 등 출소자의 장기 근속 기반 마련

※ '20. 12. 기준, 3개월 이상 근속인원 985명(전년 동기 대비 97명, 10.9% 증가),
6개월 이상 근속인원 269명(전년 동기 대비 19명, 7.6% 증가)

【취업지원사업 참여 취업자 근속 현황】

(연도별 12월 기준 / 단위 : 명, %)

구 분	취업자 수	3개월 근속자수	6개월 근속자수
2020	1,905	985	269
2019	1,727	888	250
전년 동기 비교	178	97	19

- 출소자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지지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 등 추진
 - 취업지원 등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공감 확산을 위하여 취업지원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2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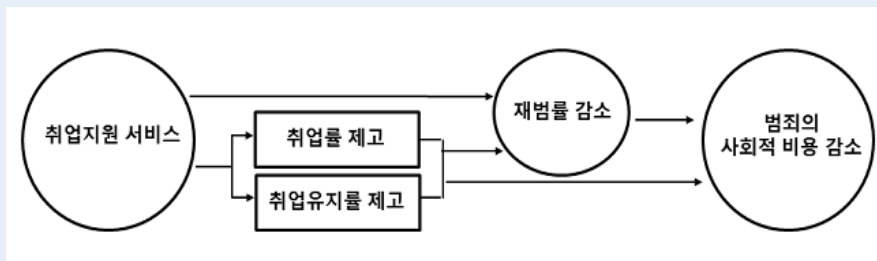
연구용역 개요

□ 취업지원사업이 재범률 감소 및 범죄의 사회적 비용절감에 미치는 효과

- (연구 기간) '20. 6. 12. ~ 10. 31.
- (연구 기관)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 (주요 내용) 일반 출소자 대비 취업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재범률이 7% 감소하는 효과** 발생, 취업지원사업의 재범방지효과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 존재

* 2.26으로 1보다 큼에 따라 비용 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취업지원사업과 재범률 및 범죄의 사회적 비용과의 관계 】



- (외국의 출소자 취업지원제도 연구) 일본 및 캐나다 사례
 - <일본 사례> 무직자와 유직자의 출소 후 재범률 차이 현저 ⇒ '02년부터 '11년까지의 누계조사에서 무직자의 재범률은 36.3%로 유직자의 재범률 7.4%의 5배임
 - <캐나다 사례> 출소자가 취업한 경우 재범할 확률은 미취업 상태일 때보다 약 2.8배 낮음

□ 2020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국민 인식조사

- (연구 기간) '20. 9. 9. ~ 10. 30.
- (대상·방법)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 전화면접조사
- (주요 내용) 취업지원사업 중요도 평가 : 10명 중 7명 정도는 취업지원에 대한 사업이 중요하다고 응답 ➔ 대부분의 국민들이 출소자 취업지원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

○ 취업지원 등 법무보호사업 이론적 기반 강화 및 제도적 발전을 위해 학술대회 개최(온라인, '20. 11.)

- 출소자의 취업성공을 위한 상담키워드 분석 연구, 출소자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실시



○ 취업지원 등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홈페이지, SNS, 모바일 뉴스레터, 소식지 발간 등 홍보활동 전개

- '20년 모바일 뉴스레터 12회, 공단 소식지(아름다운 동행) 4회 6,000부 발간, 법무보호사업 홍보용 브로슈어 4,000부 제작 및 사업 수행기관 등 28곳 배포



(5) 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 사증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미리 받아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자여행허가제(ETA)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 마련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이하 '사전여행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 ②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③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해외 감염병의 확산으로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제한하는 코로나19 대응 입국제한 조치 시행

- 중국 후베이성 발급여권 소지자 및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후베이성 관할 공관(주우한총영사관) 발급 유효사증 효력정지, 제주 무사증 입국허가 일시정지, 일본 및 세계 90개국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중심 관계부처 협의 후 조치

- 17세 이상 주민등록한 국민은 단수여권으로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비대면 출입국행정 서비스 확대
- 생체정보를 활용한 출입국심사 간소화 근거법률 마련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심사 지원 가능

- 생체정보를 활용한 출입국심사 구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지속

제2조(정의)

1. ~ 14. (현행과 같음)

15. “생체정보”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 출국금지 온라인 조회 제도 시행으로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출입국기관을 방문해야 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구제 편의 지원



The collage consists of four panels. The top-left panel shows the '하이코리아' (HiKorea) website with a blue header and a search bar. The top-right panel shows the same website with a search bar and a '출국금지' (Exit Ban) button. The bottom-left panel is a news article with a blue background and white text, titled '출국금지 여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Check exit ban status online without face-to-face). The bottom-right panel is a news article with a white background and blue text, titled '출국금지 여부, 내달부터 온라인서 24시간 확인가능' (Exit ban status, 24-hour online check from next month).

□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개선('19. 12.)

- 농·어촌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 현행 단기취업(C-4)자격 외 장기체류자격(E-8) 신설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농·어가당 허용인원 확대(5명→8명), 불법체류 없는 우수 지자체와 8세 미만 자녀 양육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명씩 추가 고용)

《연도별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운영인원	1,085명	2,824명	3,497명	223명

- 세금, 건강보험료 체납 등 공적의무 불이행 외국인에 대한 각종 체류허가 제한을 실시하여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18. 1~)

※ '20. 12월 기준 국세, 지방세 등 세금 2,115억원, 건강보험료 330억원 감소

시행 전	⇒	시행 후
외국인의 경우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워 체납액 환수가 불가		건강보험체납과 비자연장을 연계한 실효적 수단 마련을 통해 체납액 환수

<담당사무관, 연합뉴스 인터뷰('19.8.1.)>



- 비자스티커 폐지 및 전자검증시스템 도입('20. 7.)

- 기존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하는 방식 대신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비자발급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 방식 전면 개선
- 비자스티커 인쇄 등에 소요되는 연간 약 22억 원의 예산절감 및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비자발급 확인서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



○ 코로나19 감염 해외 유입 최소화를 위한 「재입국허가제」 시행('20. 6.)

-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 ↔ 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 시행
- 외신기자 간담회, EU회원국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취지 등을 적극 홍보하여 정책 순응 유도



<외신기자간담회(6.16. 프레스센터)>



<주한 EU 회원국 대사 회의 >

○ 재외동포 제도개선 및 포용정책 추진

- 동포 관련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화('19. 9.)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동포' '건설업종 자격증 취득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변경 허용('19. 9.)
- 방역강화대상국가 비자발급 제한에 따라 최근 출국 후 입국을 못하는 고려인 동포가 국내 재학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한시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도록 구제조치 시행('20. 10.)

○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비자간소화 방안 등 시행

- 중국 대도시 복수비자 발급 대상지역 확대('19. 9.)

※ (기존) 베이징, 톈진, 상하이 → (확대) 충칭시 9개구(위중구, 장베이구 등)

- 외국 관광객 유치에 위한 비자수수료 한시적 면제

※ 아세안국가 국민에 대한 단기방문(C-3) 비자('19.10), 중국유학생에 대한 유학(D-2)비자('19.12), 단체관광비자('20.1)

- 재외공관의 비자업무 적체 해소, 신청인 편의향상을 위해 몽골('20. 3), 독일 베를린('20. 6) 지역에 비자신청센터 증설

※ 출입국관리법(제92조의 3), 시행령(제96조의2) 개정, 비자신청센터 설립근거 마련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관련 특별금융상품' 출시('20. 1.)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치된 재원 70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1,3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저리*로 지원, 특별 금융상품 출시

* 기존 산업은행 중소기업 지원 출시상품보다 0.6% 인하

○ 참전국 우수인재를 비롯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 기반 조성

- 6.25 70주년을 맞아 정부초청 장학프로그램 등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및 참전국 국민 총68명에게 거주(F-2)비자 부여('20. 2.)
- 상장법인 전문가·우수대학 졸업자 등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점수제 거주(F-2) 심사요건을 개선한 '우수인재 비자 고시' 마련('20. 4)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 대포폰 악용방지를 위한 외국인 출국자 정보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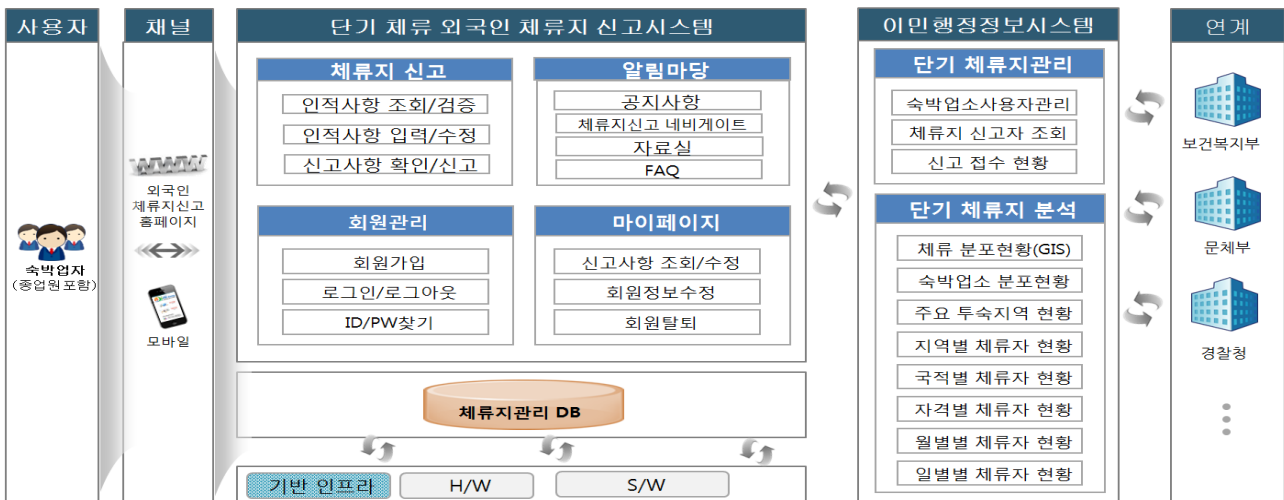
- 출국 외국인의 기존 사용 휴대폰을 불법 매입하여 각종 범죄행위를 위한 대포폰으로 악용하는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담당 부처 간 정보공유 강화방안 마련

- 법무부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에 '전일 외국인 출국자 명단'을 매일 1회 제공, KAIT에서는 완전출국자(해지) 및 단기 체류외국인 출국자(정지) 휴대폰 차단조치 수행

○ 단기체류 숙박신고제 시스템 구축

- 감염병, 테러 등 국가적 위기 상황발생 시, 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신속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추진
- 숙박업소 중별 회원가입 및 신고 조회·접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숙박업소 여건에 따라 전자여권판독기(MRP), OCR판독, QR코드, 조회, 직접입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입력 처리 기능 구현

[그림] 목표시스템 개념도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도입목적 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신고시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의 신고의무**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숙박업자*의 신고의무**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등록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방법 숙박업자는 2021년 상반기 중 별도 숙박신고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별지 서식에 발문, 주소, 외국인 정보를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

* 관심: "관심"·"주의"·"경계"·"심각"
** 관광, 방문 등 체류기간이 90일 이하 기간 동안 머무는 체류 외국인
*** 관광진흥사업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공공숙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한민족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자 중 자택을 사업장 위치로 관리(www.ktourism.go.kr)에서 확인 가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Lodging Registration of Short-term-stay Non-nationals required from 10 December 2020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his scheme will be introduced to minimise economic damage and ensure public safety by having short-term-stay non-nationals' address information up to date should an infectious disease or terrorist attack occur.

Our Immigration Act Article #1 (3) supports the implementation of this scheme and accommodation facility owners should report short-term-stay non-nationals' lodging information when

- a) the crisis alert level issued in line with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s raised to "cautious" level, or
- b) the crisis alert issued in line with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is raised to "caution" level.

Alert levels are classified into four levels: attention - caution - alert and serious

If either of the abovementioned situation becomes a reality, short-term-stay non-nationals should present his/her passport or a travel document to the owner of the lodging facility where he/she is staying. Short-term-stay non-nationals are defined as those temporarily residing in ROK for a period not exceeding 90 days for tourism and short-term visit.

Lodging facility owners are also entailed with a responsibility to report short-term-stay non-national guest(s) informat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12 hours of an raise in crisis level as described above. Lodging facility owners are defined as those who registered their business as a) lodging business in line with Public Health Control Act, b) Tourist accommodation business, c) home-stay services for foreign tourists or Traditional Korean housing experience business in line with Tourism Promotion Act.

They should report their short-term-stay non-national guest(s) information to an immigration office in his/her jurisdiction of business operation by using the attached format sheet via email, telephone or FAX, until a dedicated system to report this information is set up, which is expected during the first half of 2021.

This requirement will come into force on 10 December 202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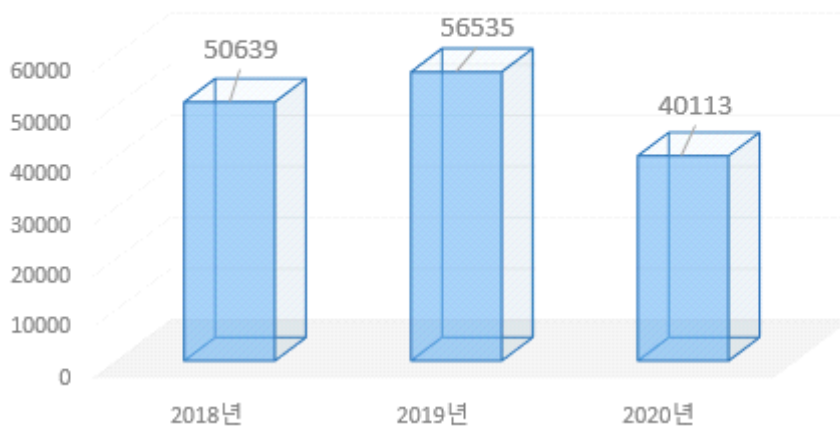
○ 내·외국인 공존의 사회통합정책을 위한 교육, 지원정책 추진

- 선·후배 이민자 간 정착 노하우와 경험 공유를 통한 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구성('20. 5.)

※ 국적, 체류유형, 지역별 이민자 35명으로 멘토단 구성하여 멘토교육, 상호문화 이해 제고, 사회통합정책 자문 등 참여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민자 한국사회 기본소양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면 화상교육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20. 4.)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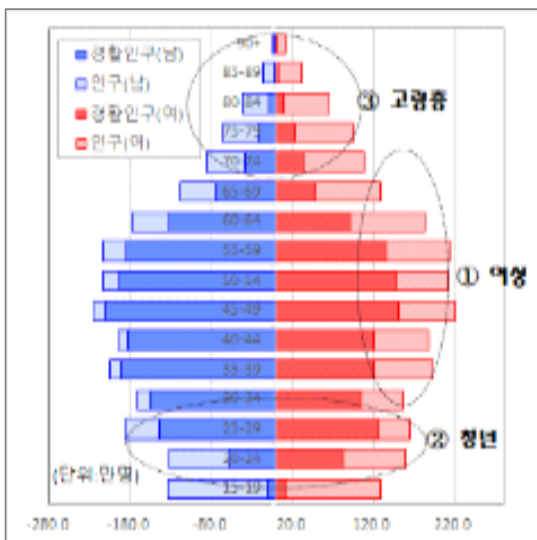


- 이민자의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분야에 대해 특강방식의 '시민 교육'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실시, '20년에는 소방청과 협업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처음으로 개설·운영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을 위촉하여 이민자 사회적응을 지원

※ 법률·의료·교육·복지·홍보 등 각 분야 254명의 전문가 활동

□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외국인정책 추진) 저출산·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경제활력,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정부의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제2기 인구정책TF에 외국인정책반으로 참여('20. 1.)
 - 우수인재 유입·활용 등 외국인력의 도입·활용 방안,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안정적 정착 등 외국인정책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활용('20. 8.)



❖ 향후 10년 간('20년 → '30년) 생산연령인구는 341.1만명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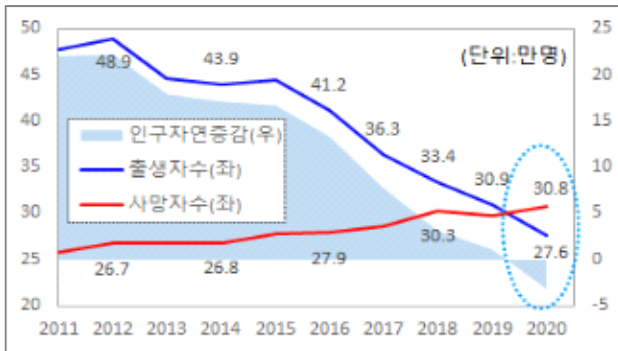
☞ 여성, 청년, 고령층의 경찰률이 각각 10%p 상승할 경우 300.5만명 확보 가능

구분	인구(만명)	경찰률(%)	경찰 개선효과
① 여성 (35-64세)	1,213.4	63.2	+121.3
② 청년 (19-34세)	1,021.8	67.1	+102.1
③ 고령층 (65세+)	771.2	34.0	+77.1
계	-	-	+300.5

구분	2017년	2019년	2020년(추계)	2030년(추계)	2040(추계)
이주배경인구 (총인구 대비 비율)	181만명 (3.5%)	212만명 (4.1%)	222만명 (4.3%)	300만명 (5.8%)	352만명 (6.9%)
외국인	1,420천명	1,660천명	1,730천명	2,125천명	2,280천명
귀화자	166천명	192천명	207천명	374천명	540천명
이민2세	227천명	265천명	283천명	496천명	697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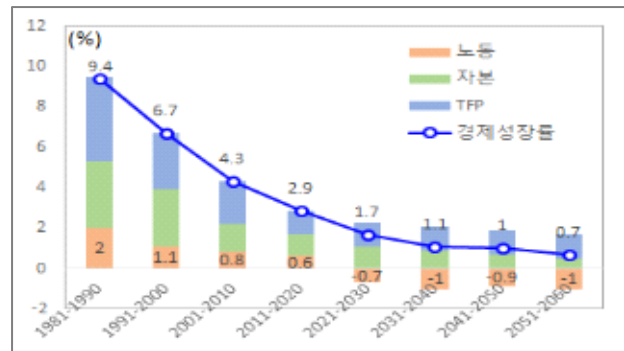
※ 출처 :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를 통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

<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



* 자료: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잠재성장률 전망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AI를 활용한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출입국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대
 - 출입국시스템의 선진화와 국내 인공지능 기술(안면인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으로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 공동 추진(‘19.~’22., 4개년 사업)
 - 다수의 기업이 법무부가 보유한 출입국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안면인식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실증랩 개소(‘20. 7.)
 - 인공지능(AI) 활용 안면인식 고도화를 통해 인공지능 기업들은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출입국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 개척 가능성 기대
- (‘20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외국인정책은 그 특성상 관련 분야가 많고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소관부처의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필요
 - 대한민국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지침서인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출한 안을 토대로 「’20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20. 7.)

(단위 : 개, 백만원)

정책목표 \ '20년	합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과제수	예 산	과제수	예 산	과제수	예 산
합 계	1,221	528,101	176	286,548	1,045	241,553
1. 【개 방】	120	218,104	43	165,491	77	52,613
2. 【통 합】	701	164,588	39	24,814	662	139,774
3. 【안 전】	42	18,918	25	18,344	17	574
4. 【인 권】	287	50,224	44	17,179	243	33,045
5. 【협 력】	71	76,267	25	60,720	46	15,547

○ (출입국관리법 등 소관 법령 정비) 체류외국인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

- 사증 면제 외국인 등에 대하여 입국 전 허가를 받도록하는 '사전 여행허가' 제도 근거 마련 등('20. 2.)
- △나이와 환경, 법 위반 동기, 과태료 부담 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 하는 경우 처벌 근거 마련 등('20. 3.)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기 시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20. 5.)
- △출국명령 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용카드 등에 의한 “범칙금 납부” 근거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20. 10.)

□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개선

-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 및 「국적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개정('20. 6.)하여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의 기반을 마련

※ 우수인재 대상을 확대(4개분야→10개 분야)하고, 경력 및 소득요건을 현실화하여 총 38명의 우수인재 특별귀화 및 국적회복자를 유치('10년~'19년 우수인재 연평균 유치 수 15.6명)

- 민원인의 편의성 및 국적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국적 포기증명서 등을 재외공관장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민원 창구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귀화신청서의 서식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20. 12.)

- 그 밖에 비대면 방식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를 도입('20. 2.)함으로써 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였고 민원인의 사무소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적 업무 방문예약제를 실시('20. 7.)함으로써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

○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20. 8.)을 개최하였고, 탄광촌 주민들의 권익 보호 등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평생 노력한 안광훈 신부의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20. 9.)을 통하여 귀화자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20. 8.)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20. 9.)

□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

○ 제도적·인적 기반 보완을 통한 선진적 난민제도 운영

- 난민 법령 및 지침 등 개정, 관계기관 지속적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현행 난민제도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 난민전담 인력 증원,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관련 서적 발간 등 난민업무 담당자 전문성 제고 노력 지속

○ 난민인정자 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 난민인정자 멘토링 제도 지속 및 국내체류 정보 제공 강화 등 난민인정자 등의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체계 강화

○ 이의신청 심의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 분과위원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이의신청 심의 대기 건 전수조사 등을 통해 2020년도에 이의신청 3,793건을 심의하여 2019년도 3,434건 대비 10% 증가하는 등 신속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이의신청	5,277	3,722	3,113	4,068	5,956
심사결정	4,276	4,415	2,584	3,434	3,793

- 국가정황, 특정집단(여성인권, 아동 등), 종교 등 난민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난민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난민 위원회 자문위원단」 발족을 통한 전문성 강화

* 대학교수 19, 연구기관 11, 변호사 2, 진술분석 전문가 1, NGO단체 1, 컨설팅업체 1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난민 이의신청 절차 비대면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 영상회의 방식의 난민위원회 개최 및 영상회의로 참석한 위원의 출석 인정, 의결서 개별 제출 근거 규정 신설
- 이의신청인이 회의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 방식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근거 규정 신설

※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위원회 운영세칙(법무부 훈령) 개정

○ 민간 난민전문가 풀 구축 및 자문 확대

- 국가정황, 특정집단(여성인권, 아동 등), 종교 등 난민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난민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발족

* 대학교수 19, 연구기관 11, 변호사 2, 진술분석 전문가 1, NGO단체 1, 컨설팅업체 1

○ 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 분과위원회(3개→4개)를 확대하고, 아시아분과에 속해 있는 파키스탄을 중동분과로 조정함으로써 분과별 업무 불균형 해소 및 전문성 강화
- 4개 분과위원장 전원을 위촉직(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촉위원 역할 및 독립성 강화

□ 법률시장 개방 대비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조정으로부터 도출된 국제적 화해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싱가포르 협약)에 서명하고, 후속 세미나·간담회에 주도적 참석 및 연구용역 실시하여 싱가포르협약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국제조정 활성화에 기여
- 관계부처, 자문위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의견 수렴 및 국회 간담회를 거쳐 ISDS 제도개선에 관한 정부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UNCITRAL 제3실무작업반에 제출
-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여러 통상조약 체결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투자, 지식재산권,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통상법적 자문 제공
- 해외진출 중소기업 대상 무료 법률자문 건수가 '19. 12. 기준 약 400건으로 자문 건수 및 만족도 모두 지속 증가

※ 자문단 자문 건수 : '13년 64건 → '14년 133건 → '15년 231건 → '16년 214건 → '17년 276건
→ '18년 432건 → '19년 약 400건 예상

※ 법률자문 만족도 : '19년 상반기 84점 → '19년 하반기 88.75점

- 국내 또는 해외 현지에서 중소기업 대상 국제적 법적 분쟁 예방을 주제로 한 설명회를 총 7회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세계한인법률가회와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청년법조인 인턴 파견 건수 유지하고, 말레이시아 청년 변호사단 초청, 호주-뉴질랜드 법률시장 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 및 청년법조인 파견 확대 도모
- 전년도에 계속하여 라오스,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의 지속적 시행 및 지원 대상 국가 확대(미얀마)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법률과 제도를 적극 전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제도적 난관을 줄여 나가는데 기여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

- 남북교류협력 법적 지원
 - 남북교류협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적 자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남북관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검토 및 지원
 -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등 남북교류협력 법제에 관한 선제적 정비
- 북한 법제 및 통일 대비 법적 쟁점 연구
 - 법학교수·변호사 등 통일법제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운영
 - ※ '21년 「통일법무 자문」,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남북가족특별법 개정」 등 3개 소위원회 구성·운영 예정
 - 통일법제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및 관련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통일 대비 연구 활동 강화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연 4회)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을 통해 남북교류협력·통일 과정상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비

○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생·공직자 등에 대한 통일법제 교육 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 '14.~'20. 총 9기 운영(변호사 등 총 407명 이수)

-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www.unilaw.go.kr>)를 운영하여 통일법제 연구 결과 등 공유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법률서비스

-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전담 법무담당관 도입 및 탈북민 전용 모바일 법률상담 시스템 구축,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교재 제작·배포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수시 방문하여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실시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상시 무료 온라인·전화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생활 밀착형 법률지원 제공
- 통일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단 하나센터 담당 변호사 위촉

※ 하나센터 담당 변호사는 국내 입국 후 5년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법률 재교육 및 법률상담 업무 수행

-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변호인 제도' 도입('20. 7.)

○ 남북주민 가족관계·상속재산 관리

- 북한주민의 국내 상속재산 등 관리를 위해 선정된 재산관리인 및 상속재산 보존·관리 등 감독(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안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 진행 중('21. 2.~)

□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18. 2.), 5회에 걸친 스토킹 처벌법 제정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완료(‘18. 5.)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관계부처 현안점검 조정회의(‘19. 1.), 추진실적 점검회의(‘19. 5.), 관계부처(경찰청) 실무자 협의회 개최(‘19. 8.)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제처 심사 의뢰(‘19. 9.)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제출(‘20. 12.)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 정부합동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18. 3.),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원 입법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시행(‘18. 10.)

○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 국회 통과

-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심신미약자의 형량을 의무적으로 줄이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18. 11.)
-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간음·추행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19. 8.)

- 딥페이크, 불법촬영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 10.)

○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 가해자의 신속한 격리를 위한 응급조치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가정폭력 사건의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며, 가해자 보호처분 성행교정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18. 11. 26. 보도자료 배포)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마련('19. 7.) 및 의원입법절차 진행중('19. 11.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내용에 현행범체포 명시, 임시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신설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 10)

○ 불법사찰 처벌 관련 법령 제·개정 마련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법무부·대검찰청이 참여하는 불법사찰 처벌 관련 법령 제·개정을 위한 TF를 구성('18. 5.)하고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사찰 범죄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 불법사찰 행위 유형, 법률 규정 방식 등 논의('18. 6. ~ 11.)
- 불법사찰 방지를 위하여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의원 입법 추진[김성원 의원('17. 1.), 박광온 의원('17. 7.), 진선미 의원('17. 12.)]
-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심급별 선고형, 개정안 법정형, 해외입법례 등 분석('19. 3. ~ 7.)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형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의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임신기간을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국회제출('20. 11.)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 미만으로 상향, 강간 등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20. 5.)
- 알기 쉬운 「형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20. 12.)

□ 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

- 화상공증제도 적극 홍보에 따른 이용건수 증가
 - 코로나19로 대면공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홍보타겟 정밀 구분·홍보채널 다각화 등을 통한 화상공증제도 적극적 홍보로 화상공증 건수 '19년 191건에서 '20년 1,7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9배 증가
- 미래를 대비하는 관계법령 제·개정안 마련
 - 「공증서류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등을 제·개정하고, 「공증인법」 개정안 마련함('20년)
- 부실공증에 대한 엄중징계
 - '20.1.~ 12. 까지 정기·수시 감사를 통해 총 104개 공증사무소 적발 및 시정조치하고,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하여 총 30명의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결정

□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선

- '17년 사법시험의 폐지로 법조인 선발방식이 일원화됨에 따라 높아진 정책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변호사시험 운영을 통해 '11.~'20. 총 14,343명의 법조인을 선발

- '20년 제9회 변호사 시험에 전주 시험장을 추가하여 전국 6대 권역 9개 대학으로 확대 실시한 데 이어 '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법전원 소재 전국 25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실시
-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을 바탕으로 제작된 한글 법전을 응시자에게 제공하고 전 과목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

□ 국민권익 향상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변호사 제도 개선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운영(~'20. 2.) 및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발표 후('20. 3.),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학계·법원·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4기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20. 5.~10.)
 -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기간 연장, 몰래변론·본인취급사건 수임 행위 제재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20. 11.), 관계부처 협의, 사전영향평가 등 정부입법절차 착수
- 법치행정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등 법률사무종사 제도 개선
 - 법률사무종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법무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하고('20. 6.), '21년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약 70명 규모)을 위한 예산 협의 및 반영('20. 2. ~ 11.)
 - 총 2,382개 법률사무종사기관 대상 서면 실태조사 실시하였고

(‘20. 1.), 법률사무총사기관 및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법률사무총사기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함(‘20. 5.)

○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한 비위 변호사 엄중 징계

- 지속적인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비위 변호사를 엄중 징계하여 법률시장의 투명성 제고

※ ‘20년의 경우 징계위원회 2회 개최(6월·12월), 약 25건 징계 심의·의결

○ (마을변호사 제도)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및 제도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전국·지역 단위 홍보 강화

- 대한변협·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전국 1,491개 읍·면·동 마을에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 신규 위촉하여 2년 연속 무변촌 제로(ZERO) 달성

※ 마을변호사 위촉 읍면동 지역 : 1,413개(‘17년)→ 1,442개(‘19년)→ 1,491개(‘20년)

-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마을변호사 제도 및 정보를 안내해주는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제도 도입

※ ‘20. 7. 마을변호사 위촉된 시·군·구 및 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 지정

- 다양한 홍보 콘텐츠 새롭게 개발하여,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마을 단위 오프라인 홍보 강화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실천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한 전략적·체계적 홍보 및 대국민 소통업무 추진

○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무정책을 효과적으로 전파

- 법무·검찰개혁, 디지털 성폭력, 코로나19 출입국 대응 등 국민의

주요 관심 대상이거나 잘 모르는 법무정책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제작

- 팟캐스트 ‘법팟’ 채널 운영 및 기관장의 동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라이스투미추’, 국민께 직접 드리는 법무정책 브리핑 ‘국민 브리핑’ 등 국민께 법무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운영 및 신설
- 국민의 관심이 큰 ‘디지털 성범죄’, ‘조두순 출소 관련 재범 방지 대책’, ‘코로나19 대응 정책’ 등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 제작·확산

※ 정통법캐스트 ‘법팟’ 개설 : 2020. 6. 5.

※ 디지털 성폭력 관련 동영상 콘텐츠 총 4회 제작 : [기관장 출연] 국민을 분노케 한 ‘N번방 사건’ 법무부의 대응 방안, 지금 알려드립니다(2020.3.25.) / 딥페이크 음란물, 최고징역 7년(2020.3.27.) / [법팟]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명쾌하게 풀어드림(2020.6.5.) /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 되지 마세요”(2020.6.1.)

-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행사 축소와 방역지침 강화로 현장 촬영 등 콘텐츠 제작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작량 목표를 달성하였고 트위터 도달율도 목표치 이상 달성
- 최근 유튜브 채널 경쟁이 치열해지고, 페이스북은 채널 자체 영향력이 축소되는 등 온라인 홍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기에 상황에 알맞은 홍보 전략 수립 및 향후 성과지표 수정·변경 고려 필요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

- 형사사법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민원서비스 확대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정안 공포·시행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이 공소장, 판결문 등 형사사법업무 관련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업무 서비스 실시('10. 7.)

-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형사사건, 벌과금, 각종 통지서 등을 조회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13. 6.)
- 법무부·검찰·경찰 협업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중 '공소권 없음' 사건을 종이기록 없이 전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 불기소 전국 시행('17. 8.)
- 형사사법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공동활용 가능 정보 확대 발굴을 위해 경찰과 주전산기 연계,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과 KICS 연계, 출입국 이민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19. 1.~12.)
-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사업 완료('20. 12.)
- 형사사법포털의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개선하여 사용자 만족도 향상
 - 해킹, 악성코드 감염 위험 등의 보안 취약점 차단을 위한 Active-X 제거 실시('18. 12.)
 - 교정기관 방문 없이 민원인이 PC로 수용(출소)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수용(출소)증명서 발급 서비스' 실시('19. 1.)
 - 비밀번호 찾기 방법에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 추가하여 보안성을 확보하면서 사용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제공('19.11.)
 -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불상인 경우도 '나의 사건' 등록 가능('20.2.)
 - 변호사 사건조회 서비스 기능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20.5.)
- 첨단 지능정보기술의 형사사법업무 적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법무부·검찰·경찰·해양경찰이 공동으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 구축사업 추진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BPR/ISP(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수행('18. 12.)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 7.)

※ (B/C: 1.39, AHP: 0.654)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 추진('21.~'24년)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21~'24년)

- (총사업비) 3,526억(구축비 2,105억원, 예타기준)
- ('21) 설계·분석191억, ('22) 1차 개발 900억, ('23)2차 개발 730억, ('24) 시험 215억

- 종이 기반의 수사 및 소송자료 작성·유통을 탈피하여 전자화된 형태로 수사 및 소송자료를 작성·유통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추진을 위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

□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 전국 교정기관별 스마트접견 관련 담당자 T/F팀 구성('20. 3.)

- 전국 교정기관 접견시스템 재구축 등 대규모 사업의 위험요소 최소화를 위하여 각 기관별 T/F팀 구성 (기관별 4~5명)

※ 교정본부 전담 T/F팀 포함 총 285명 선정

○ 스마트접견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20. 3.)

-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스마트접견 안내문 최신화

※ 90일 이상 국내체류자, 단기 입국자 등 외국국적 민원인들에 대한 스마트접견 안내문 최신화

○ 스마트접견 단말기 사업자 선정 및 구입('20. 4.)

- 접견호실의 노후 단말기 교체를 위한 사업자 선정 및 태블릿형 단말기 1,850대 구입

※ 하울링 제거를 위한 지향성 마이크, 에코캔슬 기능 등 제공(카메라, 스피커 일체형)

○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대민 홍보('20. 5.)

- 전국 교정기관 민원실 내 모니터를 활용한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등 홍보를 통해 대민 접근성 제고

※ 2020년 5월 전국 52개 교정기관에서 집중 홍보 실시

○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통합 접견시스템 구축('20. 5.)

- 대용량 서버 구축 및 태블릿형 단말기 도입 등으로 스마트접견 대상자 확대 등 비대면 접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접견시스템 구축 완료('21. 3월 예정) 및 시범 실시 후 전국 교정기관 전면시행 예정

○ 스마트접견 및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등 담당자 간담회 및 운영실태 점검 실시('20. 10.)

-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교정민원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을 통해 민원 만족도 제고 방안 모색

※ 서울지방교정청(의정부교, 서울남부교), 대구지방교정청(안동교, 상주교), 대전 지방교정청(대전교, 공주교), 광주지방교정청(광주교, 순천교)

- 운영상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의견 청취

□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교정민원 안내 채팅봇 개발('20. 5.)

- 카카오톡과 연계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의 교정민원 안내 채팅봇을 개발하여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교정정책 홍보 강화
- 교정행정 관련 질의내용을 학습·분석 후 답변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기능 강화
- 교정본부 페이스북, 유튜브, 월간 교정 웹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채팅봇에 연계하여 교정정책 홍보 강화



○ 교정의 날 기념 대국민 공모전 실시('20. 8.)

- 교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호송차량을 활용한 홍보강화를 위해 호송차량 랩핑 디자인 공모전 실시
- 출품작 78건에 대한 심사 후 우수작 등 4점을 시상하였으며, 우수작은 '21. 호송차량 랩핑 시 활용 예정



○ 언론인 대상 교정본부 업무 설명회 개최('20. 11.)

- 서울고검에 설치된 의정관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교정본부 주요정책 및 부서별 업무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성범죄자 심리치료, 수형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총 5회 실시



○ 2020년 교정행정 브로슈어 발간('20. 12.)

- 교정본부의 조직, 기능, 주요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요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 브로슈어 발간

※ 참관, 공직박람회, 국제회의, 국외시찰 등 각종 행사 시 홍보자료로 활용(2년 주기로 제작)

○ 정책홍보 영상 자체 제작 및 SNS 활용 홍보 강화(연중)

- 교정본부 내 교화방송센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
- 교정시설 코로나 대응 성과, 교도관 이야기, 대체복무제 등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 다양한 소재를 적극 발굴하여 콘텐츠 제작



□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 강화

○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출입국 정책 홍보

- 외교부, 질병관리청,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제4차 코로나 19에 대한 정책과 기술 공유를 위한 웹세미나」를 개최

※ 4개 국어(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송출되었으며 국제기구, 37개국 정부 기관 등 유관단체 중심으로 시청

-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관리 정책과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 검역·방역 지원을 위한 입국심사 절차 등을 소개
-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여 K-방역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

○ 코로나19 장기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특화 정보 공유 코너 신설

- 각 부처 및 게시판별로 분산되어 있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내·외국인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본부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코로나19 종합정보」 메인메뉴 신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온라인민원 코로나19 종합정보 보도(실명)자료 도움되는 정보 참제 이력제출 코로나19 해외소식 코로나19 해외소식 유익한 출입국제도 안내 코로나19 발생상황 고객참여 신청한사 현장투어 정책참여 출입국사법심고 신고센터 실문조사 정보공개 뉴스·공식 세소식 입국공지 재출발정보 안전보도 백트체크 포토뉴스 희망나눔 출발지식 자료실 정책해설서비스 신청 이민정책 해외 이민정책 종합 이민정책 주요제도 지체·고체 확인 정책고지·제안 게시판	코로나19 해외소식 총 100건의 뉴스가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00 2020.12.30. 코로나19 해외 소식 2020.12.30 105 99 2020.12.29. 코로나19 해외 소식 2020.12.29 79 98 2020.12.28. 코로나19 해외 소식 2020.12.28 56 97 2020.12.24. 코로나19 해외 소식 2020.12.24 86 96 2020.12.23. 코로나19 해외 소식 2020.12.23 87 95 2020.12.22. 코로나19 해외 소식 2020.12.22 86 94 2020.12.21. 코로나19 해외 소식 2020.12.21 95 93 2020.12.18. 코로나19 해외 소식 2020.12.18 108 92 2020.12.17. 코로나19 해외 소식 2020.12.17 97	도움되는 정보 총 45건의 뉴스가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45 코로나19 방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서울 방역 2020.12.22 185 44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방역지원센터 정보 공유 2020.12.25 397 43 재입국자가 제도 변경 안내 2020.12.25 606 42 [보안특사] (해외) 방역하는 코로나19 방역특사(독자 특기) 2020.12.30 158 41 11월 13일부터 다음달까지 서울에서 마스크 착용률 조사 결과 2020.11.30 265 40 서울에 거주 외국인 단체를 위한 방역 지침 2020.11.25 524 39 출입국 검사소 시설 2020.11.22 463 38 코로나19 예방 안전관리 방안 마련 2020.11.20 157
외국인본부 「코로나19 종합정보」 메인메뉴 신설 화면	코로나19 해외소식을 매일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코로나 19 해외 동향을 전달	‘도움되는 정보’ 메뉴를 통하여 내·외국인에게 유익한 코로나19 대응 정보를 전달

○ 다국어 정책 홍보 확대로 정책 수요층 만족도 제고

- 주 정책수요층인 외국인을 위해 정책을 다국어로 번역, 공지함으로써 공식 SNS(페이스북) 인기도(‘팔로워’ 수) 41% 증가, 영향력(게시물 ‘좋아요’ 수) 37% 증가 등 정책수요층 만족도 및 홍보 효과 제고

※ 팔로워 수: '19년 27,029명 → '20년 38,141명
 좋아요 수: '19년 25,891건 → '20년 35,599건

○ 언론을 통해 출입국, 체류 등 출입국정책 전반을 적극 홍보

- 정책 고객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기고 등 언론사를 활용한 홍보 강화

※ 보도자료 190회 배포, 인터뷰·기고 163회

-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론 보도, 가짜뉴스 등에 대해 설명 자료 배포 및 정정보도 요청, 대응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도록 함

※ 설명자료 20회 배포, 팩트체크 카드뉴스 2건 제작

□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행정효율 제고

-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이용방법에 대한 동영상 제작·배포 및 업무시스템 이용 지원, 영상회의·화상교육 실시 등을 통해 비대면 업무 적극 대응 및 활성화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법무 행정 공백 발생 방지

※ '20년 GVPN 이용직원 4,975명·접속 305,653건, 영상회의 4,031건 개최

- 법무부 보유 데이터 16종을 추가 개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하였고, 기 개방 링크데이터(25개) 오류 조치 및 목록(505개) 정비 등 재정비·개선 활동으로 공공 데이터 활용성 제고

- 법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업무 계획 수립 및 법무 빅데이터 연구팀 구성 등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실시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 하였으며,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화 제고

※ '20. 11.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에서 만점(10점 만점) 획득

	측정년도 : 2020년 측정명 : 2020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중앙/광역) 측정기간 : 2020/08/03 - 2020/10/13 전자정부 성과관리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준진단 영역</th><th>행정관리 역량평가 환산점수</th></tr> </thead> <tbody> <tr> <td>정보자원 관리수준</td><td>3.0</td></tr> <tr> <td>정보화사업 성과관리</td><td>5.0</td></tr> <tr> <td>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td><td></td></tr> <tr> <td>공공투자 예방</td><td>2.0</td></tr> </tbody> </table>	수준진단 영역	행정관리 역량평가 환산점수	정보자원 관리수준	3.0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5.0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공공투자 예방	2.0
수준진단 영역	행정관리 역량평가 환산점수										
정보자원 관리수준	3.0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5.0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공공투자 예방	2.0										
공공데이터 개방 홍보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에서 10점 만점 획득										

○ 온라인 서비스 및 소통 강화 등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 향상

- 홈페이지의 법무 정책정보 중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직접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설하여 대국민 법무행정 이용 만족도 향상
- 열린장관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정책 추진 홍보 강화와 의견 접수 개선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
-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접근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웹 접근성 개선 및 온라인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법무부 운영 웹사이트 7곳에 대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 '20. 12.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에서 웹 접근성 부문 99.9점(100점 만점) 획득



웹 접근성 품질인증서

국립기관: 법무부
 자치도청: 법무부 제1청
 사이트주소: http://www.mof.go.kr
 인증기간: 2020.3.6 ~ 2021.3.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위 사이트의 웹접근성 점검을 인증합니다.

2020년 3월 6일

인증기관: 웹와치 주식회사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결과(안) 송부 및 이의 신청 안내

웹 접근성 진단 보고서

□ 진단결과 요약

총점	합계 평균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가점	
						인증	다중자막
득점	99.9	22.4	35.7	28.0	4.0	2	0
준수율	99.9%	93.3%	99.2%	100%	100%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에서
 웹 접근성 부문 99.9점 획득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에서
 웹 접근성 부문 99.9점 획득

○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원격지(서울 목동)에 위치한 법무사이버안전센터를 과천 청사로 확장(290㎡→507㎡) 이전하여 원격지 분산 근무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정보보호 업무의 효율성 향상
- 분산된 정보보호(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보안관제·침해대응) 인력 통합 및 역량 집중을 통해 사이버안전 총괄 조직으로서의 기능 확대
-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접속 기록 월별 점검 및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여부 일일 점검 등의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 '20.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94.37점(100점 만점) 획득

- 365일 24시간 법무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법무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 훈련을 통해 보안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법무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등의 예방 활동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도 안정적인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운영 환경 마련

※ '20. 12.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행정관리역량평가 디지털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평가」에서 98점(100점 만점) 획득

「2020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평가」
디지털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평가결과 안내

□ 평가 결과

부처명	부처 평가값	W7개분야 평균수준	정보보호역 전문직위 지정비율	사이버보안 교육실적	별 취약점 개선·조치율	가용자체 국정자료	공공SW 특수위드 관리수준	대민서비스 접근 관리수준	접근관리 실시기록
법무부	98	20	8	10	20	20	10	5	5

※ 12.14(월)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위 값을 2020년 최종 평가값으로 확정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통보

최종평가 결과조회

회차	2020년 수준진단	기관유형	중앙부처
평가단계	최종평가	기관명	법무부 (총합/가중치/최저점/최고점/가감점: 1) ※ 총점은 가감점에 포함된 점수입니다.

「디지털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평가」에서 98점 획득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94.37점 획득

○ 안전한 법무행정 환경 구축

- 법무정보통신망 사업자 이원화 구성, 기관 간 회선 다중화(3~6중화) 구성, 회선 대역폭 증속(2~10배), 보안솔루션(DDos대응, AggTAP 등) 추가 등을 통해 통신재난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통신환경 구현
- 윈도우10 노후장비(PC·노트북 약 8,680대) 및 운영체제(S/W)의 신속한 교체·보급으로 윈도우7 기술종료에 따른 보안 문제점을 사전에 조치하여 현장 보안성 확보

□ 국가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 법무부 코로나19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본부 코로나19 대응 및 긴급상황 관리를 위한 실·국·본부 근무자 비상대비체제 유지
- 본부 및 소속기관의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지침 마련
 - 「본부 방역 관리방안」 수립 및 배포('20.8.27.)
 - 「소속기관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재개안」 수립 및 운영('20.11.13.~)
 - 「수용시설 확진자 발생시 대응매뉴얼」 수립('21.2.) 등

- 소관시설 중 콜센터, 공단 등 고위험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 실시 및 매주‘상황관리지표’를 통해 전 기관 방역관리수준 모니터링
- 기존 교정시설에 한정되어 있던 우리 부 재난대응매뉴얼에 범죄 예방기관 및 출입국기관을 추가하여 법무시설 전체를 망라하는 「법무시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신규 제정('21.1.)
- 법무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안전점검, 그리고 일일재난안전 결산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태세 확립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초기 대응 능력제고, 기관 간 통합연계훈련으로 재난대응체계 확립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법무부의 주요 정책흐름 >

'16년

행 정 환 경

- ▶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동기 없는 범죄 등 강력범죄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심리 기증
- ▶ 고질적 부정부패, 반복적 법조비리 사건 등으로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 확대
- ▶ 고령화 사회, 소득 양극화 등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요구 및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제활성화 요구 증대
- ▶ 사회적 약자 구제·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주요 법무정책 흐름

- ▶ 여성안전, 서민안전, 교통안전 관련 범죄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및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계 완비
- ▶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현장대응력 제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강화, 위치추적시스템 고도화 등 강력범죄 대책 강화
- ▶ 법조비리, 교육·학원비리, 언론비리, 공직비리, 공기업 비리 등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대한 적극 대응
-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법률복지제도의 발전적 정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확대를 통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 ▶ 법률홈닥터 및 법률구조법인을 통한 취약계층 법률지원 강화
- ▶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법률지원 및 진술 조력 강화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기대치가 증대된 반면 소극행정·복지부동이 발생할 우려 증가

▶ ‘16년 말 체류외국인은 ‘07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205만명으로, 이민자 급증에 따른 사회 갈등 및 외국인 범죄 증가, 국민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긴요한 대처 필요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경제둔화 전망에 따라 우수 외국인력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정책 수립의 중요성 부각

▶ 청탁금지법 정착 노력 지속

▶ 우리 부 청렴도 및 청렴문화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정책 개발·추진

▶ 암행감찰·복무점검 및 취약분야 기획점검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국경보안 강화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등 실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범죄 예방 등 국민불안 요인 해소

▶ 재한외국인이 국민과의 조화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및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 등 적응지원 강화

▶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활용하여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이민정책 발굴·수립

▶ 미래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비자제도 및 이민자 체류환경 개선 등 우수 인재 유치 기반 마련

행 정 환 경

- ▶ 적폐청산과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
- ▶ 중대 부패범죄 증가와 각종 비리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 확대
- ▶ 인권 수준 향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보호 체계 등 구축 필요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요구 증가
- ▶ 폭력 사건 등 청소년 비행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요구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 강화 필요



주요 법무정책 흐름

- ▶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사건 등 주요 적폐청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공소유지 및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 하는데 노력
- ▶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각종 비리 및 금융·증권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
- ▶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도모
- ▶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 상담터, 진술조력인 등 제도활성화로 법률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력
- ▶ 마을변호사 활동범위 확대,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집합건물법 등 개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 범위 확대
- ▶ 청소년 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

행 정 환 경
▶ 보호관찰 영역확대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 실시를 위해 효과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 ▶ 소년원생의 재범억제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사회 정착지원, 인권적 환경조성 요구 증대 ▶ 「과밀수용행위」위헌 결정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필요 ▶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편승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 ▶ 국내 체류외국인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데 국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행 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추진 필요



주요 법무정책 흐름
▶ 효과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해 사범별 매뉴얼 확대, 개선된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적용, 고위험군 전담직원제, 명예 보호관찰제 도입 등을 통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체계 구축 ▶ 소년원생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로 체계적인 교정교육 실시, 소년원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인권적 처우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지원으로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기반 강화 ▶ 교정시설 확충,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등을 통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방안 적극 추진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강화 및 기획조사 활성화를 통해 실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내국인 일자리 보호 및 국민의 치안불안감 해소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존중과 배려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행 정 환 경

- ▶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정 사회 기틀 마련 요구 증가
- ▶ 법무부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주요선거 실시
- ▶ 전반적으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는 추세이나, 집회 중 일부 불법 집단행동이 발생
- ▶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범죄예방교육 및 소외지역 대상 찾아가는 법교육 요구 증대



주요 법무정책 흐름

- ▶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방안 마련, 경제 민주화 기반구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법 및 집단소송법 개정 추진
-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 운동 등 주요 선거사범 집중 적발·엄정 처리
- ▶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원칙 있게 대응함으로써 법질서 존중문화 형성에 기여
- ▶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예방 콘텐츠 개발, 수요처 발굴 등 법교육 인프라 강화

행 정 환 경

- ▶ 보호관찰 영역확대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 실시를 위해 효과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
- ▶ 인권존중 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 확산
- ▶ 「과밀수용행위」 위헌 결정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및 재범방지 역량 강화 필요
- ▶ 전통적 이민국가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우수인재 유치 및 경제활동 주체 확보 차원에서 이민문화 개방 추진

주요 법무정책 흐름

- ▶ 효과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해 사범별 매뉴얼 확대, 개선된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적용, 고위험군 전담직원제, 보호관찰 위원제 도입 등을 통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체계 구축
- ▶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새정부 인권존중기조와 국정과제를 담은 국가인권정책방향 제시
- ▶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소외 계층 법률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인권침해사건의 적정 처리 및 법무·검찰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노력
- ▶ 교정시설 확충,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등을 통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방안 적극 추진 및 재범방지 전담기구·인력 지속 강화
- ▶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높은 청년 실업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에 따른 적극적인 국민 일자리 보호 장치 필요

행 정 환 경

- ▶ 민생 중심의 법제개선과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국제사회 정세 변화 등에 따른 선진적 법률서비스 제공 필요
- ▶ 생활 속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 및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부패 범죄 엄단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
-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 국회통과, 공포
- ▶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 요구 증가



주요 법무정책 흐름

- ▶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영업제도 및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및 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등을 통한 공정사회 기틀 마련, ISDS 분쟁 예방 및 대응, 통일법제 마련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법무행정 추진
- ▶ 생활 속 적폐,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한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공정한 법집행으로 사회 정의 실현
-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임원 등의 선거개입, 사전선거운동 등 주요 선거사범 집중 단속·엄정 처리
- ▶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통해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
- ▶ 1:1 전자감독제도 시행, 범죄예방팀 확대, 경찰과 공조 강화, 전자감독 장치 및 시스템 개선 등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억제 강화

행 정 환 경

- ▶ 보호관찰 영역확대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 실시를 위해 효과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
- ▶ 사회적 약자 구제·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인권존중 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 확산
- ▶ 「과밀수용행위」 위헌 결정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및 재범방지 역량 강화 필요
-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범부처 인구정책과 연계한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주요 법무정책 흐름

- ▶ 사범별 매뉴얼 확대, 개선된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적용, 분류처우 회의 상설화 등을 통한 효과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체계 구축 및 재범 방지
- ▶ 인권정책 수립 입안·집행·환류 전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확대 필요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대 하며, 인권침해사건의 적정처리 필요
- ▶ 교정시설 조성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적극 홍보 하여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통해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 전담 기구 확대에 대한 공감 형성
- ▶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외국인 적정 유입규모를 추산하고, 비용 편익을 분석하여 외국인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핵심적·구조적인 과제를 선별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행 정 환 경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 ▶ 인권 옹호·증진, 침해 구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수요 증가
- ▶ 보호관찰 영역확대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범죄유발요인을 개선하고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
- ▶ 교정시설 내 과밀로 인한 수용자 건강권 등 인권 침해 방지 및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 조치 한계



주요 법무정책 흐름

-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개입 등 주요 선거 사범 집중 단속·엄정 처리
- ▶ 인권침해 상황의 개선을 넘어 '인권의 주된 옹호자'로서의 적극적 역할 확대 필요
- ▶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을 활용한 보호관찰 대상자별 범죄유발요인에 따른 전문처우 프로그램 실시, 보호관찰 개시 초기 주취·정신 질환 대상자를 조기 선별하여 적극적 치료 개입 실시 효과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체계 구축 및 재범 방지
- ▶ 과밀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조성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사용자 중심의 교정시설 건축 등 적극 추진 필요

행 정 환 경

- ▶ 코로나19 해외 유입 억제를 위한 국경안전 보장과 함께 필수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필요

- ▶ 조두순 출소 등을 앞두고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 등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 요구 증가

주요 법무정책 흐름

- ▶ 감염 위험지역 출발하는 외국인 및 무비자 입국이 정지된 국가 국민을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을 이용하여 탑승 차단, 재입국허가제와 비자 발급요건 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입출국은 제한하면서도 기업 필수 인력 등에 대한 신속한 비자발급은 지원하는 등 탄력적 비자정책 추진

- ▶ 1:1 전자감독제도 및 범죄예방팀 확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전자감독 장치 및 시스템 고도화 등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억제 강화

2.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 '21. 4. 7. 재·보궐선거 대비 엄정 대응체계 구축

- '21. 4. 7. 서울·부산시장 등 총 21개 선거구에 대한 재·보궐선거 대비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중점 수사대상 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21. 4. 7. 재·보궐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사범 철저 대응 지시 공문을 시행하고, 해당 선거구 관할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설치하여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가동('21. 1. 4.)
- 해당 선거구 관할 검찰청별로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선거범죄 발생 및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상호 협력 강화

□ 긴급통신제한조치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마련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후 단시간(36시간) 내에 이를 중지할 경우 법원의 사후 허가가 불필요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공백 발생 우려
- 수사기관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 및 이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한 모든 경우에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

※ 부처협의('20. 11. 13.~12. 24.), 입법예고('20. 11. 16.~12. 25.), 법제처 심사('21. 2. 5. ~ 2. 15.), 차관회의('21. 3. 4.)

□ 존중과 포용의 인권사회 실현

-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권의 주된 옹호자로서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 추진 강화

- 소외된 계층과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정책 추진

□ 정의로운 법치사회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자 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 및 비행예방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와 전문성 강화

○ 생애주기별 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

- 연령 및 특성, 성장단계에 따라 생애주기별 법교육 프로그램 재편 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합, 콘텐츠를 강화하여 대국민 접근성 강화
- 북한이탈청소년, 이민자,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방과후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법교육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체험 교육 기회 제공

○ 출소자 취업지원 강화

- 코로나 19 확산 지속 등으로 변화하는 사업 수행 및 취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 하는 등 출소자의 일자리 기반 확대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 여건 마련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출소자 취업 지원 강화

○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 수용자의 환경개선 및 교정시설 이전·신축 등을 통해 과밀수용을 해소하여 수용자 인권보장 및 처우 향상

□ 수형자 재범방지 기능 강화로 안전한 사회 구현

- 성폭력·중독 범죄 수형자에 대한 수준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범인성 개선 및 재범 방지
 - 성폭력·중독사범·아동학대 수형자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특정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라 기본·집중·심화 과정 등을 운영하고 수형자 상태에 따라 단계별 심리치료 실시
- 교정시설 내 취업매칭 직업훈련, 창업 지원 등을 강화하여 수형자 사회적응력 향상 및 재범 방지

□ Post-코로나 시대 대비 교정시설 방역체계 강화

- 교정시설 내 코로나19와 같은 치명적인 감염병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IT 기술과 교정의료자원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 인프라 확충
- 교정시설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고위험군 수형자 및 모범수형자 등에 대해 가석방 확대하고, 교정시설 조성사업 지속 추진
-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의 교정교화프로그램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민생을 우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법무행정을 통한 국민권의 향상

-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임대차법제 개선 및 취약금융 계층을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 등을 통해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 실현
- ISDS 분쟁 예방 및 대응, 통일법제 연구, 법조인 양성 등 미래를 대비하는 선진 법률서비스 제공하고 국민소송제도와 집단적 피해 구제 및 예방과 악의적 위법행위 억지력 확보 위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공정사회 기반 마련하여 국민 권익 향상 도모

□ 2021년 정치·경제·사회 상황을 아우르는 법무정책 추진

- 적정 외국인력 공급을 통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 지원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해외 우수인재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추진
- 외국인을 경제활동 등의 新주체로 인식하고, 유입부터 정착까지
계획성 있게 관리하는 단계로 개편하여 경제활동인구 부족을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 사전정보 분석으로 위험 외국인 입국 차단
 -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반
외국인에 대한 장시간 인터뷰 및 입국거부 등 부작용과 입국심사
단계에서 행정력 소모 방지를 위해 국경관리 효율성 도모 필요
 -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정보를 사전에 분석하여 위험
외국인의 입국은 차단하되 일반 외국인에게는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는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시행 예정

Ⅱ .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법무부 일반현황

(1)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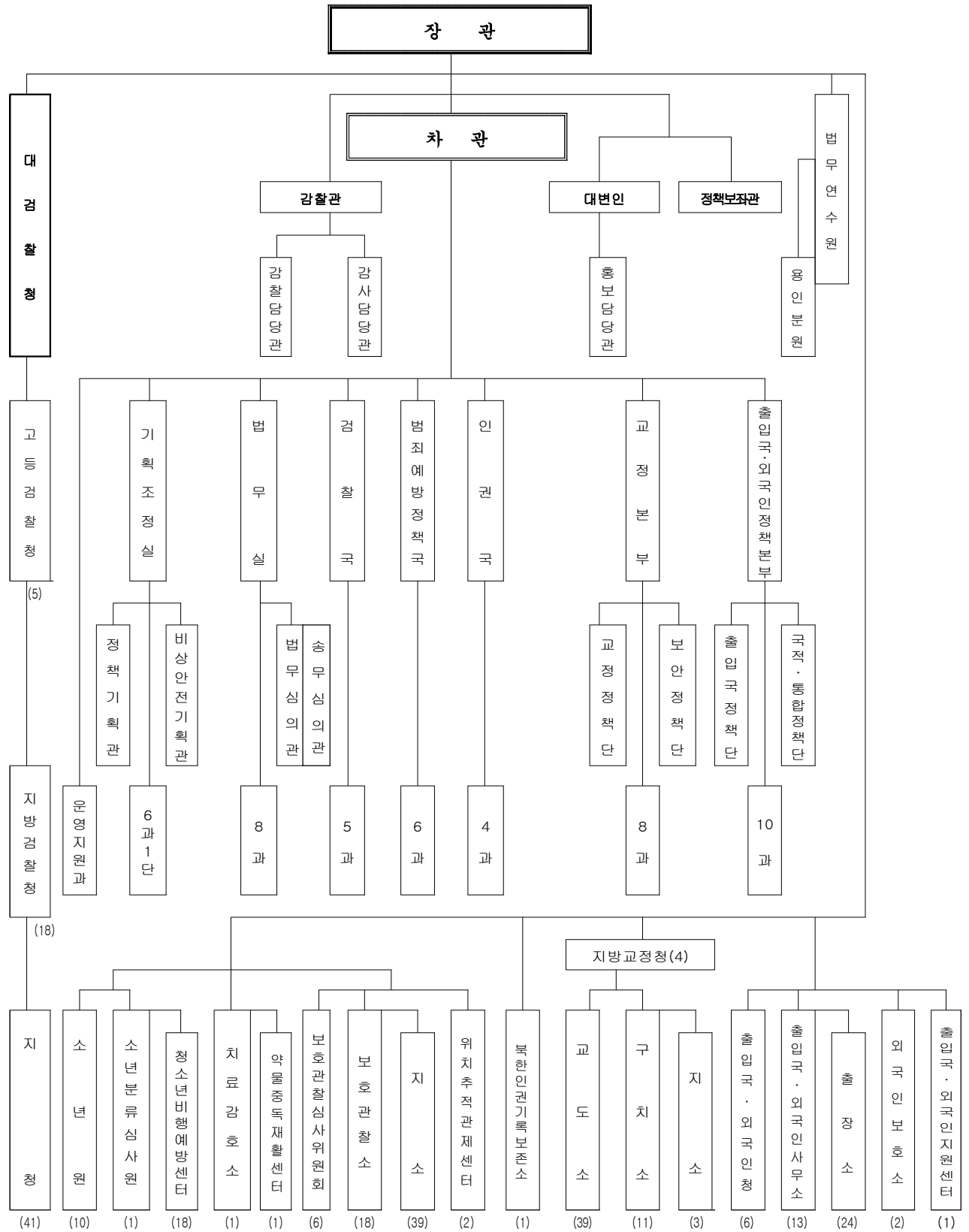
○ 본부 : 2실 3국 2본부 10관 1단 52과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 소속기관

구 분	조 직	기관수
검찰청	● 대검찰청 1 ● 고등검찰청 6 ● 지방검찰청 18, 지청 41	66
범죄예방 정책국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6, 보호관찰(지)소 57 ●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비행예방센터 18 ● 치료감호소 1, 약물중독재활센터 1, 위치 추적관제센터 2	96
인권국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1
교정본부	● 지방교정청 4 ● 교도소 39 ● 구치소 11, 지소 3	57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 출입국·외국인청 6,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 출장소 24 ● 외국인보호소 2 ●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1	46
법무연수원	● 법무연수원 1, 용인분원 1	2
계		268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소속 특수법인 3개



(2) 인 원

(2021. 2. 28.)

구 분	총계	정무직	검사	고위 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가급)	6급	7급 (나급)	8급	9급 (다급)
총계	34,066	2	2,332	72	52	374	221	1,481	4,317	5,820	8,565	10,830
정무·행정직	183	2		1	4	6	12	44	46	21	34	13
검사	2,332		2,332									
검찰직	6,445			27	17	119	83	514	1,597	1,993	1,178	917
보호직	2,516			5	7	55	23	257	421	609	594	545
교정직	15,361			19	7	64	37	356	1,471	1,805	5,565	6,037
출입국관리직	2,546			5	4	28	9	143	456	712	682	507
의무직	163			2	5	83	29	44	0	0	0	0
간호직	279			0	0	1	0	3	52	108	115	0
시설직	189			0	0	1	4	13	50	37	53	31
전산직	342			0	0	2	4	21	74	94	89	58
기술직 기타	1,701			7	4	12	18	43	142	151	156	1,168
관리운영직	1,501			0	0	0	0	0	0	12	22	1,467
별정직	4			1	1	0	0	0	1	0	0	1
전문경력관	179			0	0	0	0	13	0	161	0	5
기타	325			5	3	3	2	30	7	117	77	81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38,972	40,582	42,925	44,923	46,551
(전년대비증가율, %)	0.44	4.13	5.77	4.65	3.62
○ 총계	40,386	42,377	44,822	46,775	48,407
(전년대비증가율, %)	0.36	4.93	5.77	4.36	3.49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23,693	24,508	26,223	28,059	30,023
(전년대비증가율, %)	2.50	3.44	7.00	7.00	7.00
○ 기본경비	1,510	1,532	1,578	1,625	1,674
(전년대비증가율, %)	2.86	1.46	3.00	2.98	3.02
○ 주요사업비	13,769	14,543	15,124	15,239	14,854
(전년대비증가율, %)	△3.14	5.62	4.00	0.76	△2.53
□ 예산					
○ 총지출	37,960	39,529	41,830	43,797	45,400
(전년대비증가율, %)	0.31	4.13	5.82	4.70	3.66
○ 총계	39,351	41,277	43,665	45,601	47,209
(전년대비증가율, %)	0.31	4.89	5.79	4.43	3.53
【일반회계】					
· 총지출	37,254	38,833	41,164	43,072	44,644
(전년대비증가율, %)	0.31	4.24	6.00	4.64	3.65
· 총계	38,079	39,893	42,282	44,207	45,803
(전년대비증가율, %)	0.31	4.76	5.99	4.55	3.61
【교도작업특별회계】					
· 총지출	705	696	666	725	756
(전년대비증가율, %)	0.14	△1.28	△4.31	8.86	4.28
· 총계	1,272	1,384	1,383	1,394	1,406
(전년대비증가율, %)	0.32	8.81	△0.07	0.80	0.86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 기금					
○ 총지출	1,012	954	963	974	1,150
(전년대비증가율, %)	5.9	△5.7	0.9	1.1	18.07
○ 총계	1,035	980	963	974	1,198
(전년대비증가율, %)	2.4	-5.3	△1.7	1.1	23.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총지출	1,012	954	963	974	1,150
(전년대비증가율, %)	5.9	△5.7	0.9	1.1	18.07
· 총계	1,035	980	963	974	1,198
(전년대비증가율, %)	2.4	-5.3	△1.7	1.1	23.00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1)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주요 특성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핵심내용)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 서비스 제공이라는 3대 임무와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2개 성과목표와 59개 관리과제를 설정
-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검찰기능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구축과 지속적인 검찰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제고
 -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감찰·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 근절 및 예방 등 공정한 법집행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사회 구현) 5대 중대 부패범죄를 엄단하고 법조비리 등 각종 비리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며, 부패·비리 등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철저히 환수 하는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
 -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증권·조세범죄 및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고 기술유출·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는 등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하여 투명한 공정사회 구현

- **(인권의 가치 중시 및 약자를 보호·지원)**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범정부적·통합적 인권정책체계를 수립하여 국제인권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고 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을 강화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인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 여성·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향상된 법률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법무행정의 인권 수준 향상에 기여
-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활동 및 준법 문화 조성에 노력
 - 실질적인 교화 프로그램 내실화와 보호관찰 대상자 및 비행소년 등에 대한 재범방지교육 강화,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갱생보호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
- **(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 추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생체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출입국심사 간소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탄력적 무비자 확대 등 심사 품질을 지속 개선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극복 및 경제 회복을 위해 외래관광객에 대한 비자 간소화 등 방한관광객 유치를 지원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사회통합 기반 조성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등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하고 법무정책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국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민생중심의 서비스를 강화

□ '21년 정책 여건 분석

◇ 정치상황

-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법령 검토 및 개정
- 재·보궐 선거에 대비하여 해당 선거구 관할 검찰청에 선거전담 수사반을 설치
- 신남방정책 및 확대되는 무역·인적 교류 등에 맞추어 아세안(ASEAN)과 추가적인 양자회담 개최 등 더욱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경제상황

- 기업의 건전한 경영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확립 필요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신규 외국인력의 도입이 지연되면서 제조·농어업 등 각종 산업분야의 인력부족이 심화되어 대응책 마련 필요

◇ 사회상황

- 공정사회 구축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토착비리·생활적폐·갑질행위 처벌 강화
-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친화적 행정 필요
- 코로나19의 팬데믹 지속으로 출입국 인원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감염병 위험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 검역 관련 행정지원 상황 고려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출입국심사 정책 마련 필요

- 지속적인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의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 등 우리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 및 대응 필요성 증대
 - 조두순 출소('20. 12.)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 대책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성폭력사범, 마약·알코올 등 중독사범, 정신질환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 강화 등 사회 안전을 위한 재범방지 방안 요구 증가
- ⇒ 그 간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와 반성, '21년 정책여건 분석 등을 통해 각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12개 성과목표와 59개 관리과제를 시행계획에 설정

□ 계획의 수립 주안점

-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등 국정기조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관리과제에 충실히 반영
- 계획 수립 시 실·국·본부 조직 구성원, 외부전문가 및 자체평가위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
 - 성과관리계획 합동실무 수립팀(TF)을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자체평가위원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과제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외부와 내부조직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 강화
 - 수립과정에서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실·국·본부별 구성) 과제 설명회는 대면 혹은 영상회의로 개최하여 외부위원과 자체평가위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시행
- 성과관리계획 목표체계상 최상위 개념인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상위목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목표와 하위관리과제 간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리과제를 설정
- 성과지표 설정 시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는 목표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의 대표성을 강화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는 법집행 관련 정책특성상 지표 및 목표 설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체감 성과 제고를 위해 목표치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대표성 있는 결과지향적 지표와 더불어 과제 추진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 보완하여 반영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적폐청산 추진

-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합리적인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등을 통한 검찰 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 회복

- '21. 4. 7. 재·보궐선거에 대비하여 해당 선거구 관할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도모
-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한 부정축재사범 엄단 등 법집행 공정성 강화
-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찰 활동 전개 및 감찰일원화 구현
- 감찰·감사를 통한 비위 근절 및 인권 증진 도모
-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감사 활동 전개
-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한 사회 구현

■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에 기여

-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을 강화하되, 근본적 부패원인 발본 색원에 주력

- 토착 세력과 결탁한 비위 행위 등 지역 토착비리 척결
- 공익법인의 투명성 지원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국고손실을 철저히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고 투명한 사회 구현
-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손해의 예방이나 그 시정 및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 도입

■ 경제질서 저해사범 단속

- 금융·증권·조세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 기술유출사범 범죄 엄단 및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로 경제 활성화 지원

인권의 가치 증시 및 약자 보호·지원

■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 향상

-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법무행정 인권 모니터링 실시, 국제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이행 추진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제도 운영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 등을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한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 집단감염에 취약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처우 향상 및 인권보장, 일반국민의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법률복지 강화

- 범죄피해자의 건강한 사회생활로의 복귀 지원 및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법의 문턱을 낮추는 법률복지 실현
-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로 여성·아동 등 인권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 교육 실시, 유관기관 안내, 대국민 홍보 및 제도 정비
- ※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대상 확대(‘21. 6. 시행), 학대피해 아동 필요적 선정(‘21. 3. 시행)
- 상가임대차 관련 철거·재건축시 임차인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에 대하여 해지권 인정 등을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
- 특정 채권추심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 등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채권을 양수받아 변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추심법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 채무자들을 보호
-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하여 대량생산·대량 소비·대량정보처리 사회 구조변화에 따라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예방을 도모하고 악의적 위법행위 억지력 확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 범죄예방활동 및 준법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구현

- 전문 수사역량 강화 교육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활동 등을 통한 젠더폭력·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입체적 대응 강화
-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고 범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규정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 추진
- 출소 예정 고위험 성범죄자 선별 및 선제적 관리, 1:1 전자감독 확대 및 야간시간대 귀가지도 등 밀착 지도감독, 맞춤형 심리치료, 전자감독 장치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범죄 재범방지 대책 강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보호처분 대상자 등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비행유형별 비행예방전문교육, 체험교육, 비행진단 등을 통해 비행성향을 개선하고, 지도방침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
- 누구나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다양한 구성원간 상호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쳐 체험과 참여 중심의 법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 및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체험·법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긍정적인 준법문화 조성에 기여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19. 12. 시행)」을 마련,

'20. 6. 30.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단기방문(C-3) 비자로 재입국 허용등으로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한편, '20. 3. 1.이후 단속되거나 '20. 7. 1. 이후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하여 체류질서 확립 및 신규 불법체류 유입을 억제

-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제도 등 불법체류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적 활동 강화, 경찰 등 관계기관 참여 정부합동단속 및 불법체류 유발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 중요 출입국사범에 대한 기획조사 활성화를 통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

■ 실질적인 처우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친사회성·대인관계·준법정신 등의 분야로 구성된 비대면 영상강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수형자 내면의 변화 유도를 위한 집중인성 교육 강화, 수용자 인성 함양을 위해 성별·연령 등에 따라 교양·역사·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수요맞춤별로 제공하여 수용자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는 등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로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
-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유망 직종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교도작업을 통해 실무중심의 기술숙련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맞춤형 취업알선으로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모범수형자, 사회적 약자(환자, 고령자 등) 등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이수, 기피작업장 작업 등 교정처우 성과 우수자에 대한 형집행을 완화를 통해 가석방 제도의 내실화 도모

- 성폭력사범, 마약·알코올 등 중독사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동기 없는 범죄 수형자, 정신질환 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범방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차단, 의료인력 확보 및 첨단 의료장비 도입·교체로 수용자 건강권을 증진하고, 수용자 건강 검진 시 대장암 표지자 검사 대상을 확대, 코로나19 백신 및 4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 예방접종 사업 강화 등 적극적 행정을 통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 소년원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를 통해 내실있는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알선, 정신과 무료 외래진료 등을 통한 출원생에 대한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강화,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 도모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시스템 구축 및 출소자 무상외래진료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재범예방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충원, 간호인력 충원 등 의료인력 확보 추진
- 피치료감호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운영
- 보호관찰 대상자별 범죄유발요인에 따른 맞춤형 전문처우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생계지원 및 일자리 기반 마련 등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범죄예방에 기여

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정책 추진

- 입국 전 외국인의 사전 정보를 분석하여 감염병력, 국익위해 등 위험 외국인의 입국차단, 일반 외국인에게 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생체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출입국심사 간소화 정책 마련,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을 통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 등 심사 품질 개선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출입국심사 기반 마련
-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외국인 비자·체류 관련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 이민행정정보의 대·내외 기관 간 연계 및 공유 기능 강화를 통한 과학적·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
- 사회통합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운영기관 확대 및 평가 추가실시 등 운영인프라 내실화 및 참여자 실생활 정보 수요를 반영한 교육콘텐츠 확대 등 추진
- 외국인정책은 그 특성상 관련 분야가 복잡·다양하고 정책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므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 외국인정책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수요자 요구를 고려하여 국적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귀화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국민 정체성 함양 교육을 실시

- 난민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난민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한 난민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
- 관계기관 등 협업을 통한 난민인정자 등의 안정적 국내 정착 및 자립 지원
- 난민 이의신청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진정한 난민에게 신속한 보호를 제공하여 진정한 난민의 인권 보호 강화
- 이의신청 제도의 특별행정심판 기능 강화로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및 난민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무정책 추진

- 국제거래규범 성안과정 적극 참여, FTA 등 통상협상 및 국제 투자분쟁대응 및 예방 역량 강화, 국제교류협력 및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 및 국격 제고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관련 법제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선제적인 정비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법무·검찰 현안 및 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선제적인 입법 추진 및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 제·개정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보호방안과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형사절차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화상공증제도 홍보 및 전자공증시스템 개선을 통한 공증 서비스 접근성 강화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개최, 공증 관계 법령 개정, 공증제도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공증제도를 개선·보완하고, 규제개혁 방안 등을 논의·추진함으로써 공증 활성화 및 선진화 도모

- 엄정한 감사를 통해 부적정 공증사무를 적발하고 위반 행위에 따라 공증인을 징계하여 공증사무의 신뢰 제고
- 국제화·전문화 시대의 법률 수요에 부응하는 법조인 선발을 위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시행
-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조계 전관 특혜를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시스템 정착 도모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변호사 선발 및 법률사무종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법률사무종사 제도 개선을 통해 법치행정의 기반 강화
-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변호사와 무변촌(無辯村) 또는 지방 소도시 등 법률소외지역 주민을 상호 연계하여 법의 문턱을 낮추고, 비대면 사회에 부합하는 상담시스템 개선하여 제도 접근성 강화

■ 국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강화를 통한 민생중심의 서비스 강화

- 뉴미디어를 통해 법무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
-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형사사법포털에 대한 서비스 개선 추진
- 형사사법기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보 공동활용 항목 및 정보연계 기관의 지속적인 확대
- 통합접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접견 품질 제고 및 민원(수용·출소) 증명서 개선으로 보다 향상된 교정 온라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스마트 접견 및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민원인이 교정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추진

-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교정정책별 홍보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출입국·외국인 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홍보하여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출입국정책 신뢰 확보

■ 법무행정 지원 역량 강화

- 사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 민생친화형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시스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법무행정 서비스 수행 지원
- 법무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여 안전한 법무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 국가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 법무행정의 인권 수준 향상 및 법률복지 요구 등의 정책 환경과 국민 수요를 분석 파악하여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이라는 3대 임무와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목표 및 59개 관리과제 설정

국 가 비 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무부의 임무

- **법질서 확립**
 -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외국인 관리 등 법집행 업무 수행
- **인권옹호**
 - 국가 인권정책 수립, 인권침해 예방,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 **법무서비스 제공**
 - 국가로펌으로서 법령 자문, 기본법령 제·개정, 송무 업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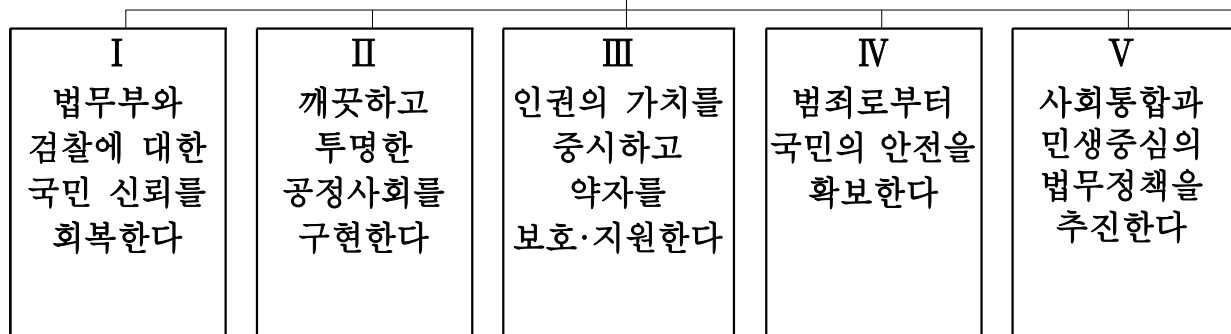


법무행정 비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전 략 목 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I.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적폐청산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II.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

-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에 기여한다
-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한다

III.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 지원한다

-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법률복지를 강화한다

전략목표

성과목표

IV.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 범죄예방활동 및 준법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구현한다
- 실질적인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V. 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
한다
- 국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민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 법무행정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5	4	12	28	59	117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I.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I-1.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적폐청산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①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국정 1-1
	②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국정 13-1 업무 1-2
	③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국정 13-2 업무 1-1 업무 1-2
I-2.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한다	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업무 3-2
	②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한 부정축재 사범 엄단 등 법집행 공정성 강화	국정 1-2 업무 3-1
	③ 감찰·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근절 및 예방	업무 1-2
II.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		
II-1.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실현에 기여한다	①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국정 2-3
	② 토착세력과 결탁한 비위 행위 등 지역 토착비리 척결	국정 88-1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③ 공익법인의 투명성 지원 강화를 위한 시민 공익위원회 설치	국정 2-5
	④ 부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 방지	국정 24-1
	⑤ 국가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감독 제도 마련	국정 2-2
II-2.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한다	① 금융·증권·조세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국정 23-2 국정 23-4 국정 24-1 업무 3-3
	②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	
III.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III-1.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국정 6-1 국정 6-3 업무 4-1
	② 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국정 6-3
	③ 통신 및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국정 6-2
	④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국정 14-8 업무 4-3
III-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법률복지를 강화한다	①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국정 6-4 업무 4-2
	② 여성·아동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국정 66-5 업무 2-1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③ 코로나19에 따른 상가임차임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국정 28-3 업무 3-1
	④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국정 21-4
	⑤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률 개정	업무 3-4
	⑥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	국정 25-4 업무 3-3
IV.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IV-1. 범죄예방활동 및 준법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구현한다	①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국정 14-2 국정 66-5
	②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업무2-3
	③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국정 14-8
	④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국정 14-2 국정 54-4
	⑤ 참여형·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	
IV-2. 실질적인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①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업무 4-3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②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③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가석방 내실화	국정 14-8 업무 2-2
	④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 강화	업무 2-1
	⑤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 내실화	업무 2-2 업무 4-3
	⑥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⑦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⑧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	업무2-3
	⑨ 출소자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한 따뜻한 사회구현	국무조정실 주요정책과제 62
V. 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V-1.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2-4
	②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 환경 조성	국정 10-1 업무 2-2
	③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업무 2-4
	④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업무 4-4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⑤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⑥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업무 4-4
	⑦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	업무 4-4
	⑧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V-2.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① 법률시장 개방 대비 법률서비스 국제 경쟁력 강화	업무 3-1
	②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	국정 92-4 업무 4-2
	③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국정 2-3 국정 6-2 업무 1-1 업무 2-1
	④ 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	
	⑤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선	
	⑥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제고 및 대국민 법률 서비스 향상	업무 3-2
	⑦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예방 역량 강화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V-3.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②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	업무 1-1 업무 1-2
	③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④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업무 4-2
	⑤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 강화	
V-4. 법무행정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①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②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업무2-2

Ⅲ . 세부 추진계획

III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I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기 본 방 향

◇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적폐청산 추진

-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을 옹호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확립
- 검찰 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
-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한 부정축재사범 엄단 등 법집행 공정성 강화
-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찰 활동 전개 및 감찰일원화 구현
- 감찰·감사를 통한 비위 근절 및 인권 증진 도모
-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감사 활동 전개
-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6	1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점수)
I-1.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적폐청산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에 대한 실행선고 실적(%)
	①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에 대한 실행선고 실적 (%)
	②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검찰제도개선추진실적 (점수)
	③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 국외훈련만족도(점수) (공통) - 국외훈련자 연구 논문 평가(점수)(공통)
I-2.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공판역량 강화 노력 및 성과(점수)
	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선거범죄 예방활동 실질화 실적(점수)
	②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한 부정축재사범 엄단 등 법집행 공정성 강화	- 국제 형사공조 실적 (점수)(공통) - 부정축재 범죄수익 환수역량강화 실적 (점수)
	③ 감찰·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근절 및 예방	- 상시 임행감찰 활동 횟수(건) - 비위직원 사전관리를 위한 시장자료 수집건수(건) - 자체감사 실시 횟수 및 감사활동만족도 (점수) - 반부패·청렴활동 실적 (점수) - 감사교육원 등 외부 기관 교육 참여율(%)

전략목표 1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1) 주요내용

□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확립

- '21. 4. 7. 재·보궐선거 대비,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계좌추적·디지털포렌식·지문감식·위치추적 등 과학수사기법 적극 활용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응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0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	55	50	55	56	52.5	57.5	58	과거 실적 및 추세와 '20년 실적인 57.5점을 감안하여 '25년에는 58점을 목표로 설정	한 국 행 정 연 구 원 주관의 연도별 사회 통합실태조사 (국가 승인통계) 상 검찰 신뢰도(4점 만점) × 25	한국행정연구원 발표자료(사회통합 실태조사 상 '검찰 신뢰도'를 근거로 산정)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효율적인 검찰 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검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인사 운영 및 법무행정 각 분야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 국민불편 해소 및 국민편익 증진
- 각종 선거에서 여전히 금품선거사범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선거범죄 적발 및 엄단 필요

-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 당락,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범죄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균형있게 수사·처리
- 재판 중인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유도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등 중점 수사 대상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내용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기여
-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 검찰 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맞는 형량이 선고·확정되도록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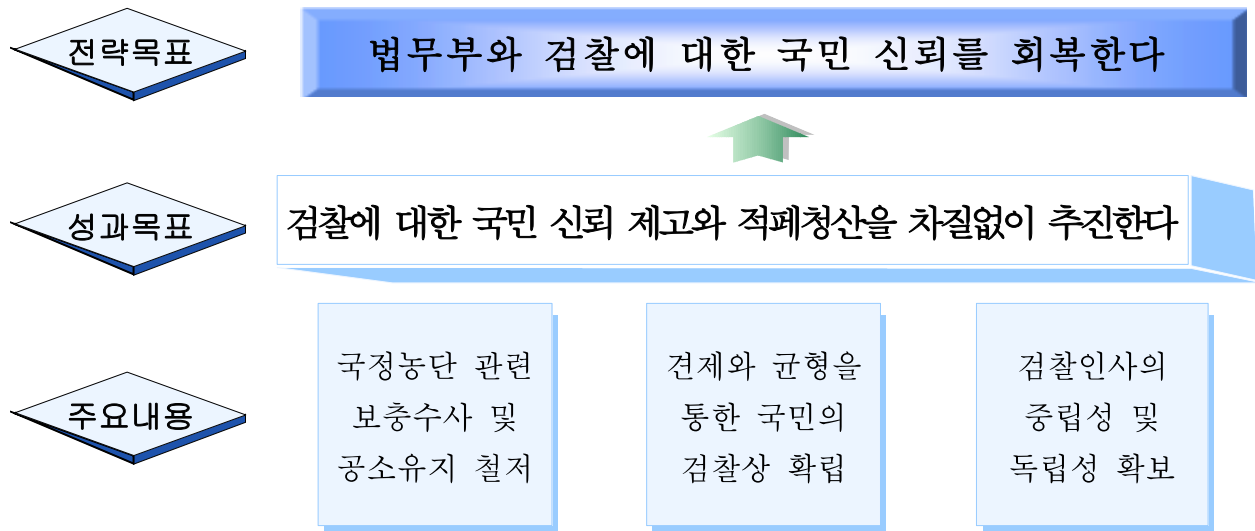
□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관여 통제 등 경찰권한 분산과 연계한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기능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구축 및 검찰 내부 조직문화 개선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

□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 검찰총장의 구체적 출석 의무화 방안 등 검토
-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목표체계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에 대한 실행선고 실적%	100	100	100	100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선고 대비 실행 선고율 100% 달성을 목표치로 설정	실행 선고된 인원 수/선고 인원수×100	담당부서인 대검 수사지휘·지원과로부터 자료 취합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 국정농단에 대하여 유죄선고 뿐 아니라 죄질에 맞는 형량이 선고·확정되도록 공소유지 철저
 -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로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의혹 해소 및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 '19. 10. 「검사 파견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법무부예규) 제정·시행

- 검찰 내외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공정하게 심사하여 불필요한 파견을 줄임으로써 일선 검찰청의 형사·공판부 인력 확충 도모

(4) 기 타

○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I -1-①)

□ 추진배경

-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하고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

<'21년도 과제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소유지 철저	1월 ~ 3월	
2/4분기	○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소유지 철저	4월 ~ 6월	
3/4분기	○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소유지 철저	7월 ~ 9월	
4/4분기	○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소유지 철저	10월 ~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일반 국민

□ 기대효과

-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의 토대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실적(%)	100	100	100	100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 인들의 선고 대비 실형 선고율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	실형 선고된 인원 수/선고 인원수 ×100(점)	담당부서인 대검 수사지휘· 지원과로부터 자료 취합

②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I-1-②)

□ 추진배경

- 검찰 기능을 조정한 제도의 안착을 통해 인권을 옹호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사권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법령 검토 및 개정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21.1.1.) 등에 따라 연관된 규정 개정 소요에 대한 입법 지원 및 후속조치가 미흡한 유관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개정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추진
- 수사권조정에 따라 변화된 수사실무의 조기 안착
 -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형사절차의 변화가 실무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변화 내용을 반영한 각종 수사매뉴얼, 지침 등 제·개정
- 변화된 수사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
 - 검사의 업무절차·범위 조정 등에 맞춰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변화된 수사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통계시스템 등 정비

<'21년도 과제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법령 발의안 검토 및 개정(연중)	3월	
	○ 각종 수사매뉴얼, 지침 등 제·개정 소요 파악 및 추진	3월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 KICS 시스템 개선(사건처리, 통계) (연중)	3월	
2/4분기	○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법령 발의안 검토 및 개정(연중)	6월	
	○ 각종 수사매뉴얼, 지침 등 제·개정 추진	6월	
	○ KICS 시스템 개선(사건처리, 통계) (연중)	6월	
3/4분기	○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법령 발의안 검토 및 개정(연중)	9월	
	○ 각종 수사매뉴얼, 지침 등 제·개정 완료	9월	
	○ KICS 시스템 개선(사건처리, 통계) (연중)	9월	
4/4분기	○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법령 발의안 검토 및 개정(연중)	12월	
	○ 각종 수사매뉴얼, 지침 제·개정 후 보완사항 검토 및 개선	12월	
	○ KICS 시스템 개선(사건처리, 통계) (연중)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형사사법 관련자(피의자, 피해자, 피고인 등)를 포함한 국민
- (이해관계집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법원행정처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

□ 기대효과

- 검찰기능의 조정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검찰상을 확립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 과 지 표	실 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검찰제도개 선추진실적 (점수)	130	210	270	180	현재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검찰제도 개선 방안은 서로 기능·영역이 중첩되어 각 제 도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방안 간 조정이 필 요한 점 등 감안(전년 목표 대비 120% 상향)	- 제도별로 추진항목마다 부 분 점수를 부여하고, 제도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산정 - 추진항목(점수) : 기존 제 도 운영성과 분석(10점), 수 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법령 개정 검토보고서(20점), 수사 메뉴얼 및 지침 제·개정(10 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 선(10점), 통계시스템 정비 (10점)	관련 보고 서, 법령 등 개정안, 관리지침, 메뉴얼 등

③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I-1-③)

□ 추진배경

-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검찰총장의 구체적 출석 의무화 방안 등 검토
-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 각 외부기관별 파견 유지 필요성과 적정성 검토 및 외부기관 근무 축소방안 지속 추진
- 검사 복무평정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 우수 여성검사 적극 발탁하는 등 우대
-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 의원 입법으로 「검사징계법」이 추가 개정(법률 제17500호, '21. 1. 21. 시행)됨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외부위원 추천 권한을 외부기관에 부여하는 등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외국 형사사법 및 검찰 제도 비교·연구를 위한 국외훈련

<'21년도 과제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파견 근무 축소	3월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2/4분기	○ 상반기 국외훈련 만족도(훈련과제, 교과과정 등) 평가	6월	
	○ 상반기 국외훈련자 연구 논문 평가	6월	
	○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파견 근무 축소	6월	
3/4분기	○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파견 근무 축소	9월	
4/4분기	○ 하반기 국외훈련 만족도(훈련과제, 교과과정 등) 평가	12월	
	○ 하반기 국외훈련자 연구 논문 평가	12월	
	○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파견 근무 축소	12월	
	○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방안 등 검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검찰 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제고 조치의 수혜자는 전체 국민이고, 이해관계집단은 법무부 및 검찰청 구성원

□ 기대효과

- 검찰 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충실히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제고

□ '21년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0년	'21년
일반재정(I-1-일반재정②)				
①	검찰운영(1333)	일반회계	87,974	90,497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301)		7,291	7,291
	▪ 국외교육여비(220-03)		3,054	3,05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 과 지 표	실 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21			
국외훈련 만족도(점수) (공통)	85.4	85.5	85.9	86.9	86.0	과거 실적,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 특성, 설문조사 대상자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목표설정	설문조사 합산 점수 / 훈련인원수	공문서, 관련 보고자료 등
국외훈련자 연구 논문 평가(점수) (공통)	84.8	85.5	86.3	87.4	85.4	과거 실적,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 특성, 연구과제의 난이도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설정 ※ <u>최근 3개년 목표치 평균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u>	논문평가 합산점수 / 평가인원 수	공문서, 관련 보고자료 등

(1) 주요내용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21.4.7. 재·보궐선거에 대비하여 해당 선거구 관할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하에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엄단을 통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추진
- 부정축재 등 국외도피사범 집중 소환
 - 특별관리대상 국외도피사범 중 부정축재자 현황 및 축재금액 등 파악
 -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조약 체결 등 국제공조망 확충
 - 부정축재 국외도피사범 송환 독려
- 국외도피재산 등에 대한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
 -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률안 개정 지원
 -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등 제·개정 지원
 - UN부패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OECD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범죄수익환수 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석
 - 법무연수원의 전문가 교육, 동호회 및 커뮤니티(TF 포함) 활성화, 워크숍, 세미나 등 담당자 역량 제고 노력 강화
-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찰 활동 전개 및 감찰일원화 구현
- 감찰·감사를 통한 비위 근절 및 인권 증진 도모
-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감사 활동 전개
-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21.4.7. 재·보궐선거와 관련, 해당 선거구 관할 검찰청에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신속·엄정하게 대응
-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등 중점 수사대상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해당 선거구 관할 검찰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운영하며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

□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한 부정축재사범 엄단 등 범집행 공정성 강화

- 대검, 경찰청, 외교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부정축재 국외도피자 및 부정축재 금액 파악
- 범죄인인도·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실무 담당자와 회의 등을 통해 유기적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체결 국가와의 관련 조약망 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
- 범죄수익환수 대상 관련 '기준식' 규정 도입을 위한 범죄수익은닉법 법률안 개정 지원
- 범죄수익환수 관련 범인에 대한 주형과 별개로 몰수·추징만을 청구·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 제도 도입 지원
- 범죄수익환수 관련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제·개정 지원
- UN부패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OECD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한 국제회의 적극 참가
- 법무연수원의 전문가 교육, 동호회 및 커뮤니티(TF 포함) 활성화, 워크숍, 세미나 등 담당자 역량 제고 노력 강화

□ 감찰·감사 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근절 및 예방

○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찰 활동 전개 및 감찰일원화 구현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위 행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고, 예방적 감찰 활동을 통해 내부 비위 근절을 사전에 차단
- 감찰담당관실에서 법무부 전체의 통일된 처리 기준과 징계양정을 통해 비위 사건을 파악하여 '봐주기식 감찰'이라는 오해와 불신 해소

○ 감찰·감사를 통한 비위 근절 및 인권 증진 도모

- 성 관련 비위와 갑질행위 중점 감찰을 통해 조직 내 인권 증진
-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감사 활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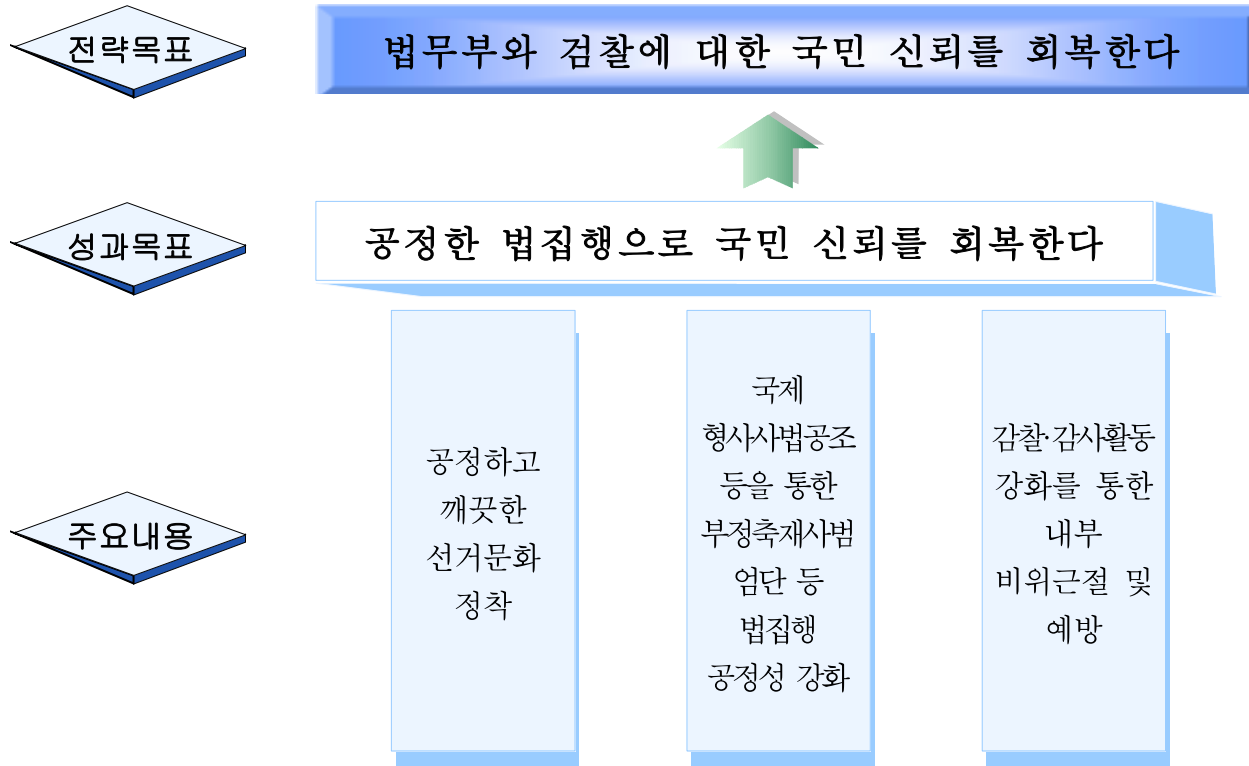
- 감사 업무 매뉴얼 개발·공유 및 우수 감사관 선발 제도 등을 통해 감사관 역량 강화 유도
- 감사관의 직렬별 상호 교차 배치로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하고 법무행정 전반의 서비스 향상 도모

○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 익명신고시스템(Help-Line) 활성화 및 청렴시민감사관 등 외부 부패통제인 제도 적극 운영으로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강화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의 날' 운영 지속 추진

※ 매달 '청렴의 날'을 통해 시기별·계기별 반부패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퀴즈 이벤트 등 직원 참여활동을 확대하여 청렴에 대한 관심 제고

《목표체계도》



(2)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실 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공판역량 강화 노력 및 성과 (점수)	150	160	170	172	- 본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2017년부터 매년 10점씩 상향되어, '20년 170점까지 설정되었으나, 본 지표는 각 평가인자가 아래와 같이 시간·인력의 소요가 매우 큰 업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기계적인 목표치 상향은 지양하여, 최근 3개년 평균실적 대비 7.2%를 상향한 172점으로 설정 - 무죄 감소 방안 마련 성과는 전년도 무죄 선고 사건 전수조사 및 분석, 분석 결과의 일선청 배포 등으로 구성 - 전년도 무죄 선고 사건 전수조사는 각 무죄 선고 사건의 판결문 및 기록 검토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음.('19년 무죄 선고 사건 전수조사 대상 인원 13,838명) '21년에는 연1회 무죄 선고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석 자료를 일선청에 연 1회 배포하고자 함 - 또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공판 관련 업무 개선을 위한 매뉴얼·지침을 작성 한 후, 일선	무죄 감소 방안 마련 성과 + 공판역량 강화 관련 교육 성과 + 공판업무 역량강화 방안 마련 성과	분석 보고서, 자료 배포 공문, 워크숍 및 간담회 관련 공문, 교육 관련 자료, 제도 시행 및 시스템 장비 도입 관련 자료

성 과 지 표	실 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청에 배포함으로써 무죄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노력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배점과 목표치를 설정 · 전년도 무죄 선고 사건 전수 조사 및 분석 : 회당 10점, 1회 목표 · 무죄 분석 등 공판 관련 자료 일선청 배포 : 회당 10점, 1회 목표 - 공판검사 역량 강화 관련 교육 성과는 공판검사 역량 강화 관련 교육 횟수, 워크숍·간담회·TF 등 개최 횟수로 구성 -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무죄 사례 분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판송무부 주최 전문분야 타깃형 교육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공판과정과 국민참여재판과정 등을 교육하고, 워크숍·간담회·TF는 수시로 실시하여 공판 우수사례 발표, 공소 수행 시 유의사항 공유 및 전파, 지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배점과 목표치를 설정 · 무죄 사례 분석에 대한 교육 : 회당 10점 · 교육·워크숍·간담회·TF 개최 : 회당 10점 - 공판업무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성과는 전국청을 대상으로 하는 공판 관련 업무 매뉴얼·지침 등 작성 횟수, 제도의 수립·시행 횟수 및 공판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전산 장비 등의 도입 및 운영 횟수로 구성 · 공판 관련 업무매뉴얼·지침 등 작성 횟수 ×10점 · 제도 수립·시행 : 회당 10점 · 시스템, 장비 등 도입·운영 : 회당 10점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21.4.7. 재·보궐 선거에 대비하여 해당 선거구 관할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설치
-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대상범죄에 수사력 집중
 - 3대 중점 대상범죄에 대하여는 각종 디지털 분석, 계좌·IP 추적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배후자 또는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수사
- 신속한 수사과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가명조서 작성', '형벌 감면' 등 적극적 신고자 보호조치를 통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
 - 선거사건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

□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한 부정축재사범 엄단 등 법집행 공정성 강화

- 신남방정책 및 확대되는 무역·인적 교류 등에 맞추어 아세안(ASEAN)과 추가적인 양자회담 개최 등 더욱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상대국 사법공조 실무자와의 핫라인 구축, 상대국 주재 대사관 등과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상시적인 국제정세 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외교부, 경찰청, 관세청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대학교, 연구소 등 국내 관련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도 필수적임

□ 감찰·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 근절 및 예방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직자 비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
 - 공직사회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감찰·감사활동시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잘못된 관행 등 제도개선 발굴에 역점
- 감찰·감사활동으로 일선 현장 근무자의 업무 위축을 초래하고 적극행정 구현 저해
 - 실적 위주의 감찰활동이 아닌 비위 발생의 취약 분야를 예방적·선제적으로 중점 감찰하여 감찰 활동의 탄력성 제고
-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직업무 증가로 인해 수감기관이 수감할 수 있는 감찰·감사 결과 도출을 위해 감사관 전문성 강화 노력 필요
 - 감사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감사관에 대한 수감기관의 평가 적극 검토 등을 통해 감사 전문성 강화
 - 실적위주의 감찰·감사 활동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포상 등 추천
- 국민에게 믿음 주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필요
 - 청렴우수기관 청렴파트너 선정 정보 공유, 찾아가는 현장감사,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부패취약분야 근무자 대상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여 반부패·청렴정책에 반영

(4)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I-2-①)

□ 추진배경

- 신속하고 엄정한 선거사범 수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등 '21. 4. 7. 재·보궐선거 철저 대비

※ 선거전담수사반 설치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가동, 선거사범 철저 대응

- 객관적 기준에 따른 선거사건 처리 및 그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 함으로써 공정성·신뢰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21. 4. 7. 재·보궐 선거 대비, 해당 선거구 관할 검찰청에 선거 전담수사반 설치,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하에서 신속·엄정 수사 -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중점 수사대상 범죄에 수사역량 집중

※ '21. 4. 7. 재·보궐 선거 관련 선거사범 철저 대응 지시('21. 1. 4.)

'21. 4. 7. 재·보궐선거 관련 단계별 특별 근무 지침

- 1단계('21. 1. 7.~'21. 2. 21.) : 전담검사 및 수사관 24시간 비상연락체제 유지
- 2단계('21. 2. 22.~'21. 3. 24.) : 전담수사반 중 적정인원 08:00~22:00 선거상황실 근무
- 3단계('21. 3. 25.~'21. 4. 6.) : 비상근무체제 강화, 전담수사반 전원 08:00~22:00 선거상황실 근무, 선거상황실 24시간 가동(적정인원 선거상황실 24시간 비상근무)
- 4단계('21. 4. 7.~개표완료시) : 선거일, 전담검사 및 수사반 전원 선거상황실 비상근무
- 5단계('21. 4. 8.~'21. 10. 7.) : 공소시효 완료일까지 전담검사 및 수사반 24시간 비상 연락체제 유지

<’21년도 과제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4.7. 재·보궐 선거 대비 해당 선거구 관할 검찰청 선거 사범 철저 대응 지시	2월	
	○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서(제10개정판) 배포	3월	
2/4분기	○ 공공수사분야 검사 타겟교육 실시	4월 ~ 10월	
3/4분기	○ 4.7. 재·보궐 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	1월 ~ 10월	
	○ 4.7. 재·보궐 선거 대비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설치,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가동	1월 ~ 10월	
	○ 4.7. 재·보궐 선거 대비 관련 지시공문 시행	1월 ~ 10월	
4/4분기	○ 4.7. 재·보궐 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	1월 ~ 10월	
	○ 4.7. 재·보궐 선거 대비 관련 보도자료 배포	1월 ~ 10월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건 처리기준 배포	10월 ~ 12월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지시공문 시행	10월 ~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선거전담수사반 설치,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등을 통해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회복
- 신속한 수사와 공정한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불필요한 사회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

□ 기대효과

- 선거범죄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범죄 수사를 통해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선거범죄 예방 활동 실질화 실적 (점수)	289.8	186	194	35	- 선거 관련 홍보 실적은 건수에 가중치 2점 부여 ※'21. 4. 7. 재·보궐 선거 관련, 역대 선거 중 재·보궐선거만 실시한 사례가 없기에 비교 분석할 통계수치 부존재 - 유관기관 대책회의는 건수에 가중치 1.5점 부여 ※'21. 4. 7. 재·보궐 선거 관련, 서울·부산시장 등 총 21개 선거구 관할 검찰청(18개청) 선거 대책 회의실적 각 1회 목표(18×1×1.5=27) - 선거사범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은 건수에 가중치 2점 부여 - 선거사범 양형기준 적용률은 목표치를 80%로 설정하고, 대책회의·홍보 실적과의 비중을 고려, 이수율 목표 점수를 40점으로 환산[(양형 기준 적용 선거사범/기소한 선거사범)×100×0.5] ※'21. 4. 7. 재·보궐 선거 관련, 역대 선거 중 재·보궐선거만 실시한 사례가 없기에 비교 분석할 통계수치 부존재 - 전체 목표점수는 홍보 실적 2점(2×1점), 유관기관 대책 회의 27점(18×1.5점), 교육 실적 6점(3×2점) 총 35점	- 선거 관련 홍보 실적은 건수에 가중치 2점(보도자료 배포, 언론 인터뷰, 홍보 팝업창 설치, 홍보 이메일 발송 등 건수 ×2점) - 선거 관련 유관 기관 대책회의는 개최 횟수에 가중치 1.5점 (개 회 건 수 ×1.5점) - 선거사범수사 관련 전문교육은 실시 건수에 가중치 2점 (실시 건수×2점) - 선거사범 기소 시 양형기준 적용률은 1%에 가중치 0.5점 - 선거관련 전국 단위 검사의회의 (오프라인 및 화상)는 실시 건수에 가중치 5점(실시건수 ×5점)	일선청, 대검, 법무연수원 등으로부터 통계, 유관 기관 대책 회의, 검사의회의, 교육 이수율 등 확인

②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한 부정축재사범 엄단 등 법집행 공정성 강화(I-2-②)

□ 추진배경

- 경제범죄를 저지른 후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거듭 드러나면서 사법정의 실현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 악화됨
- 형사처벌에 더하여,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모두 박탈하여야만 범죄의 근원적 동기를 없앨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부정축재 국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하는 경우에도 검찰의 범죄 수익환수 역량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역량 강화 필요
- 이에 부정축재 사범의 적극 송환 및 증거확보를 위한 국제 형사사법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부정축재사범을 엄단하고 법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부정축재 국외도피사범 등 특별관리 국외도피사범을 중심으로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집중 송환 추진 및 국외도피사범 조기 송환을 위한 여권무효화 조치 등
 - 국외도피 부정축재 사범 현황 및 부정축재 금액 파악('19. 3.)
 - 국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점검('21. 3.)
 - 국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여권 무효화 조치, 강제추방, 범죄인 인도청구 연중 지속 추진(연중, '21. 12.)
- 국외도피사범 발생 억제를 위한 출국금지 강화

- 국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등 국외도피사범 발생 억제를 위한 출국금지 강화(연중, '21. 12.)
- 국외도피 범죄수익환수 등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해외 공조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형사사범공조망 확충 노력
- OECD뇌물방지협약 작업반 회의 참석('21. 3., 6., 10., 12.)
- UN초국가범죄방지협약(UNTOC) 국제협력 실무그룹회의 참석('21. 3., 9.)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실무회의 참석('21. 8., 11.)
-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총회 참석('21. 2., 6., 10.)

※ 위 회의를 포함하여 반부패·범죄수익환수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석 예정

- 검찰의 부정축재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 노력
-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전담수사관 및 형사부·공판부 검사 등을 대상으로 법무연수원 교육('21. 4.)
- 범죄수익환수 관련 커뮤니티(TF 포함) 등 활성화, 워크숍, 세미나 개최 등 담당자 역량 제고 노력(연중, '21. 12.)

<'21년도 과제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특별관리대상 국외도피사범 및 자유형 미집행자 점검, 특별관리대상 국외도피사범 중 부정축재자 현황 및 부정축재 금액 점검	3월	
	○ OECD뇌물방지 협약 작업반 회의 등 범죄수익 환수 등 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여	3월	
	○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무연수원 교육	4월	
2/4분기	○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총회 등 범죄수익환수 등 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석	6월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3/4분기	○ 국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우수청 포상	7월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실무회의 등 국제 형사협력 및 국외도피 범죄수익환수 등 관련 국제회의 참석	8월	
4/4분기	○ UN초국가범죄방지협약(UNTOC) 국제협력 실무그룹회의 등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 관련 국제회의 참여	10월	
	○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 관련 커뮤니티 및 동호회, 세미나 등 개최(연중)	12월	
	○ 국외도피 등 자유형미집행자 발생 억제를 위한 출국금지 강화 및 국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여권 무효화 조치, 강제추방, 범죄인인도청구 등 집중 송환 추진(연중)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부정축재 등 국외도피 사범을 국내 송환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를 통해 은닉 재산이 발견·확보될 경우 범죄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으로 재산상 손실 보전이 가능함

□ 기대효과

- 부정축재 국외도피사범 국내 송환과 부정축재 재산 환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실질적 손실 회복
- 범죄인 인도, 국제 형사사법제제를 공고히 하여 공조 필요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범인 송환 및 증거확보 등 가능
- 국외도피사범 사건에 대한 종국적 사건처리 비율을 높여 법무·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21년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0	'21
일반재정(I-1-일반재정②)			
① 검찰운영(1333)	일반회계	87,974 (87,974)	90,497 (90,497)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301)		7,291	7,29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국제형사공조 실적(점수)(공통)	78.5	79.8	82.4	82.9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등의 업무특성상 소요기간 장기화, 상대국과의 관계, 국제정세 등 다양한 외부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 목표치 설정	(이행건수/요청건수×100+ 이행건수/접수건수×100)/2 ※ 측정산식은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건수 합계임	자체 통계 (외국의 주권적 결정·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실적이 변동 될 수 있으므로 평가시 고려 필요)
부정축재 범죄수익환수 역량강화 실적(점수)	신규	75	77	77	-국제정세 급변 등에 따른 외생변수에 의해 국제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질 우려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법률안 제정, 개정, 발의 여부가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적정 목표치 설정 ※전체 목표점수는 국제회의 참가 40점(4회×10점), 법률안 개정 5점, 법무연수원 교육 20점(2회×10점), 범죄수익환수 관련 커뮤니티 활동 12점(2회×6점)으로 총 77점	○범죄수익환수 및 형사사법공조 관련 국제회의 등 참가 (50점 상한) -국제회의 1회(×10점) -국제 실무협의 등 1회 (×5점) ○법무연수원 교육 -교육 1회(×10점) ○법률안 제정, 개정 등 지원 -법령 제·개정(×5점) -법령 국회 제출(×4점) -법령 발의(×4점) -법령 제·개정 관련 활동(×3점)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개정안 추진 중 ○범죄수익환수관련 커	공문서, 최종 결과문서, 보고자료 등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유니티(TF), 세미나 등 활동수 -커뮤니티, 동호회 등 활동 1회(×6점) -세미나, 워크숍, 공청회 등 1회(×6점) -그 외 선진범죄수익환 수기법 해외연수 등 범죄수익환수역량강화 관련 활동 1회(×6점) ※ 측정산식은 각 점수 합계임	

③ 감찰·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근절 및 예방(I-2-③)

□ 추진배경

- (목적) 정의로운 사회, 청렴한 공직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전문적·상시적인 감찰·감사활동을 전개하여 내부 비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필요
- (필요성) 사후 발생한 비위에 대한 엄정 대응뿐만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비위 근절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의 국민적 기대에 부응
- (이행) 상시적 암행감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감찰·감사 활동, 청렴교육 및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청렴정책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상시적 암행감찰 체제 강화(연중)
 - 증원된 인력을 바탕으로 비위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여 분야별로 적극적 사정활동 전개
-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 감찰체제 구축(연중)
 - 검사적격심사 대상자 및 검찰수사사무관 특별승진 후보자 중 감찰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세평자료를 분석하여 집중 세평 대상자 선정 및 자료 수집
- 본부 및 소속·산하공공기관 감사 강화
 - 소속기관 101개 기관, 산하공공기관 1개 기관 종합감사
 - 공공부문 신뢰 저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공정행정 확립

- 취약 시기·분야 등을 고려, 선제적 점검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쏠 기관 복무점검
 - 사증발급(대사관), 법무시설 공사현장 등 취약 분야 집중점검
- 법무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정정책감사 강화
 - 특정정책분야 종합적인 점검으로 단기간의 사무감사 한계 보완
 - 선제적인 해결방안 도출로 '국민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
- 현장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로 자체감사 만족도 제고
 - 감사과정에서 우수 성과자 적극 발굴 및 포상 확대
 - 자체감사 점검활동 강화로 수감기관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 부패취약분야별 청렴 멘토기관 선정, 파트너십 강화
 - 부조리 신고 활성화 및 철저한 조사로 부패방지제도 실효성 제고
- 감찰·감사 인력의 전문화 및 협업 추진
 - 지역별, 기관별, 분야별 전담 인력 지정 운용
 - 감사관 직렬간 상호 교차 배치로 전문성 활용 및 내부 협업 강화
 - 선진 감찰·감사제도에 대한 연구 및 외부기관의 관련 교육 적극 참여로 감찰·감사 담당직원의 전문성 제고
 - 감찰·감사부서 간 우수 감찰·감사기법에 대한 정보교류 추진

<’21년도 과제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검찰수사관 특별승진 후보자 세평자료 분석 및 세평 대상자 선정 및 자료 수집	1~3월	
	○ 감찰관실 중점·기획 감찰활동 전개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 검사적격심사자료 심층 수집 ○ '21년 소속기관 종합감사 연간계획 수립 ○ '20년 하반기 외부강의 이행실태 점검 ○ '청렴의 날' 운영		
2/4분기	○ 감찰관실 중점·기획 감찰활동 전개 - 검사적격심사자료 심층 수집 ○ 고등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철저 - 고검(대전, 광주, 대구, 부산)의 감찰담당부서에 대한 사무감사 ○ 소속기관 종합감사 실시 ○ '21년 청렴마일리지 운영계획 수립 ○ '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 '21년 산하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계획 수립 ○ 고위직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 '청렴의 날' 운영	4~6월	
3/4분기	○ 감찰관실 중점·기획 감찰활동 전개 - 검사적격심사자료 심층 수집 ○ 소속기관 종합감사 실시 ○ 추석 명절 복무감사 실시 ○ 상반기 자체감사활동 실태점검 실시 ○ '21년 상반기 외부강의 이행실태 점검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 '청렴의 날' 운영 ○ 법무부 청렴알림e 3호 발간	7~9월	
4/4분기	○ 감찰관실 중점·기획 감찰활동 전개 - 검사적격심사자료 심층 수집 ○ 대검 감찰본부 등에 대한 지휘감독 철저 - 대검 감찰본부 및 고검(서울, 수원)의 감찰담당부서에 대한 사무감사 ○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 감찰체제 구축 ○ 소속기관 종합감사 실시 ○ 법무시설공사 추진실태 특정감사 ○ '21년 청렴 마일리지 평가 실시 ○ '21년 산하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실시 ○ 하반기 자체감사활동 실태점검 실시 ○ '청렴의 날' 운영 ○ 감사교육원 등 외부기관 관련 교육 이수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전문성과 효율성을 수반한 감찰·감사활동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성을 제고함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한 공직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함은 전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기대효과

- 비위를 척결하여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회복 기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18	'19	'20				
상시 암행 감찰 활동 횟수(건)	2,036	1,980	1,308	1,425	○1일 투입인원 1명의 감찰활동을 1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합산 ○외근활동 직원을 6개조로 편성 연중 암행감찰 실시 ○코로나19 여파로 외근감찰활동의 어려움이 있지만 효율적인 감찰 수행을 목표로 암행감찰 횟수를 연 1,425회로 설정 -2020년 실적 1,308회는 외근활동 직원 총 17명이 월 6.4회(연76.9회) 감찰 활동 실적 (외근직원수(17명)×월6.4회×12개월=1,308회) -2019년 실적 1,980회는 외근활동 직원 총 14명이 월 11.8회(연141회) 감찰 활동 실적 (외근직원수(14명)×월11.8회×12개월=1,980회) -2018년 실적 2,036회는 외근활동 직원 총 14명이 월 12.1회(연145회) 감찰 활동 실적 (외근직원수(14명)×월12.1회×12개월=2,036회) -2021년 목표치는 외근활동 직원 총 18명이 월 6.6회(연110회, 직전 3년 평균 실적) 감찰 횟수를 기준으로 설정 (외근직원수(18명)×월6.6회×12개월=1,425회) -코로나19로 인한 외근활동의 어려움, 원격지 출장, 교육, 연가, 감찰 조사 등 상황	외근직원인원수×감찰활동 횟수(월)×12개월	분기별 감찰 활동 실적 보고 공문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18	'19	'20	'21			
					을 감안하면 1인당 연 79회의 암행감찰 활동횟수는 상당히 과감한 목표 설정임 ※3팀 4명은 인사검증 및 사무감사가 주된 업무이므로 제외함 ※암행 감찰활동 수행 직원은 진정, 비위사건의 조사·업무도 병행수행		
비위직원 사전 관리를 위한 사정자료 수집 건수(건)	470	454	437	452	-감찰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사정 자료를 정밀 분석, 비위 우려가 농후한 직원 등에 대한 비위정보·인사참고 자료 감찰전산망 입력건수 -입력한 자료를 활용하여 중점 감찰대상자 선정, 집중 사정활동 전개 및 인사자료 활용 -2018년도까지 사정 자료 수집 건수에 징계 입력 건수도 포함하였으나, 징계 건수는 편차가 심하고 통제 가능한 수치가 아니므로 감찰 활동 수행 직원이 생산한 비위정보·인사참고 자료 수집 건수 만을 사정 자료 수집 건수로 산정 -2018.~2020. 비위정보·인사참고 자료 수집 건수 평균 $[(470+454+437)÷3=453]$ 에 해당하는 453건에 코로나19로 인한 사정업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작년 대비 15건을 상향 조정한 452건을 목표치로 설정 -코로나19의 영향과 감찰조사 시 감찰활동이 불가한 점을 감안할 때 직전년 대비 15건 상향조정한 452건 입력건수는 매우 적극적인 목표 설정임	사정활동 결과 수집된 비위 정보 및 인사참고 자료의 감찰 전산망 입력 건수	분기별 감찰 활동 실적 보고 공문
자체감사실시 횟수 및 감사활동만족도 (점수)	-	신규	93.3	93.5	※ 연간 감사 활동, 자체감사 수행실태 점검 등 감사 전반에 대한 과정이 평가될 수 있는 항목(만족도)을 포함하여, 목표치를 산정함으로써 환류가 가능한 감사활동 시스템 구축 도모 - [목표값 : $93.5 = (118 + 69) / 2$] ○ 종합감사·특정감사·복무감사 등 자체감사 실시 횟수(118점) - '21년 연간감사 계획에 따른 감사계획 108회 이외 특정감사를 최대한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목표 최대치 설정(코로나19 확산 등 외생변수를 고려안함) ※ '21년 계획(108회) : 종합감사 102회 + 특정감사 3회 + 복무감사 3회, 연간감사계획 이외 특정감사 확대 실시(10회) ※ '20년 실적 119점(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면감사 전환으로 대면을 최소화하는 실태점검 등 특정감사 다수 실시) - 감사 대상기관 내 확진자 발생 등 사안에 따라 일정 조정.운영 등 방	(종합감사 등 자체감사 실시 횟수 + 연 2회 자체감사활동 만족도 평균값) ÷ 2 종합감사·특정감사·복무감사 등 자체감사 실시 횟수 ※ 종합감사·복무감사·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실시 1회당 1점으로 산정. 다만 종합감사의 경우 1수감기관 당 1점으로 산	내부문서 감사실시 계획 또는 결과보고서

성 과 지 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18	'19	'20	'21											
					역조치 단계별 자체감사 운영계획을 마련, 코로나 19 확산 위기 대응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수감기관의 불안감 해소 등 안전한 감사 추구 ○ 자체감사활동 만족도 목표(69점) - 감사담당관실이 실시한 소속기관 자체감사에 대한 수행실태 점검 및 수감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 품질 향상 - 연 2회. 자체감사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감사관의 전문성, 감사수행의 공정성, 수감부담, 감사태도 등 설문조사 실시 - 최근 3년간 실적 검토 시 매년 3%씩 상향하는 지표로 전년도 실적의 3% 상향 최대치로 목표 설정 <table><tr><td>평균값</td><td>'20년</td><td>'19년</td><td>'18년</td></tr><tr><td>65</td><td>67</td><td>65</td><td>63</td></tr></table>	평균값	'20년	'19년	'18년	65	67	65	63	정 연 2회 설문조사 결과를 합산 후 평균값 ※ 평가 5단계 중 긍정이상 점수 ※ 5단계: 절대부정, 부정, 보통, 긍정, 절대긍정	자 체 감 사 수 행 실태 점검 계획 또는 결과 보고서
평균값	'20년	'19년	'18년												
65	67	65	63												
반부패·청렴 활동 실적(점수)	신규			42.7	○ 반부패·청렴활동 실적을 신규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법무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도도 제고 - 고위직 참여활동(건당 5점) + 직원 참여활동(건당 3점) + 관련 회의·홍보 횟수(건당 2점) + 관련 제도개선 실적(가점, 건당 10점) + 전년대비 관련 외부평가 등급 향상 시 가점(20점)*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평가' 및 '부패방지시책평가'로 '20년 평가결과 대비 등급 향상 시 각 가점 10점씩 부여(단, 시책평가는 '19~'20년 연속 1등급이므로 '21년도 1등급 유지시 가점 10점 부여) - 최근 3년간의 평균점수 대비 5% 향상을 목표치로 설정 <table><tr><td>평균값</td><td>'20년</td><td>'19년</td><td>'18년</td></tr><tr><td>40.7</td><td>62</td><td>32</td><td>28</td></tr></table>	평균값	'20년	'19년	'18년	40.7	62	32	28	관련 활동 실적 합산점수 + 제도개선 실적 가점(장관님 보고 기준 + 관련 외부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 ※ 고위직 참여활동 등 각 실적은 감사담당관실 주관 활동실적에 한함	관련 실적 및 평가 자료
평균값	'20년	'19년	'18년												
40.7	62	32	28												
감사교육원 등 외부기관 교육 참여율(%)	신규	61	83.3	87	- 상시 암행 감찰 활동, 연간 감사 일정과 법무연수원 및 감사교육원 등 외부기관 교육계획 등을 고려하여 감찰·감사 전담직원(감찰팀, 감사팀)에게 연간 교육시간을 부여하여 직무에 대한 역량 강화 추진 - 감찰·감사활동 연간일수 및 전년도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의 105%로 목표 설정 ※ 하계기간 제외하고 감찰·감사활동 연중 실시	(교육 참여자 ÷ 교육 대상자) × 100	교육 이수증 등 교육실적 증빙 자료								

기 본 방 향

◇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사회실현에 기여한다

○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효율적 단속 및 양형기준 강화

○ 토착 세력과 결탁한 비위 행위 등 지역 토착비리 척결

- 방위사업 비리, 공기업·공무원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엄단
- 법조비리, 사이버언론, 교육비리 척결

○ 공익법인의 투명성 지원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제출·통과 추진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투명성 제고 추진

○ 부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 방지

- 국고손실을 철저히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고 투명한 사회 구현

○ 국가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감독제도 마련

-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등 위법한 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를 국민이 직접 감시·감독할 수 있는 참여수단 마련

◇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한다

○ 금융·증권·조세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기 본 방 향

-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구조적·고질적인 금융·증권 관련 비리 척결로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
 - 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각종 고질적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
 -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회계부정 행위 등 중요 경제비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 확보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로 역외탈세·자료상 등 탈세사범에 적극 대응하여 지하경제의 양성화 도모
-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
- 「산업기술보호 중점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 국가핵심 산업기술 국외 유출 방지 및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5	7	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		▪ 중대 부패 범죄 기소 실적(점수)
II-1.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실현에 기여한다		▪ 자유형 집행률(%(공통)) ▪ 재산형 집행률(%(공통)) ▪ 클린피드백 제도개선 발굴 안건 수(건)
	①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 중대 부패 범죄 기소 실적(점수)
	② 토착세력과 결탁한 비위 행위 등 지역 토착비리 척결	▪ 지역 토착비리 단속 및 부패대응 활동 (점수)
	③ 공익법인의 투명성 지원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 공익법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 (점수)
	④ 부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방지	▪ 국고손실 환수 실적 (점수) ▪ 국고손실 환수 역량 강화 활동(점수)
	⑤ 국가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감독 제도 마련	▪ 국민소송제도 도입 추진 실적(점수)
II-2.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한다		▪ 경제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점수) ▪ 기술유출사범 단속실적 (점수)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성 과 지 표
	① 금융·증권·조세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 경제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 실적(점수)
	②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	▪ 지식재산 침해사범 대응 실적(점수)

(1) 주요내용

□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은 법질서 확립

- 부정부패 사범·경제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통한 법질서 확립

-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 수사 전담부 등을 중심으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

- 주요 비리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패유발 관행과 제도 개선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중대 부패 범죄 기소 실적 (점수)	-	47	37	27	17	21	-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단속 건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도 실적 치(538명 x 0.032 = 17)를 목표 치로 설정한 '21년 목표치 이후 5%씩 증정한 기소 실적(654명 x 0.032 = 21)	- 중대 부패 범죄 기소 실적 1명 당 0.032점 (기소 1명 x 0.032점)	담당부서인 대검 수사지휘·지원과로 부터 자료 취합

※ 최근 4년간 중대 부패 범죄 기소 실적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중대 부패 범죄	1,465	1,165명	857명	538명

※ '21년 이후 목표치 5% 상향 수치 : '22년 565명, '23년 593, '24년 623명, '25년 654명

※ 관련 죄명

- 뇌물공여등, 뇌물수수등, 제3자뇌물수수, 특가법(뇌물)
- 알선뇌물수수등
- 특가법(알선수재), 특경법(알선수재)
- 업무상횡령·배임, 특경법(배임), 특경법(횡령),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산업기술유출방지
보호법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지속적인 부패척결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법질서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달
 - 부정부패 사범·경제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 합리적인 구형을 통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의 실현
 - 전국 검찰청 수사력 집중 및 지속적 합동수사 체계를 통한 비리 대응
- 선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통한 법질서 확립이 절실
 - 주요 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패유발 관행과 제도 개선, 불법수익의 환수를 통하여 부패 유발요소 차단, 일선 청 수사지원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
 - 법질서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여 선진국가 기반을 조성
 -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수사, 공소, 공소유지, 재판집행 등 검찰 수사활동에 대한 국정감사, 정부업무평가, 총리실 주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4) 기타

-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

(1) 주요내용

-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 방위사업 관련 비리, 공기업·공무원 비리,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국가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구조적, 고질적 병폐 척결
- 개인회생·파산 등 관련 법조비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약점을 이용한 금품갈취 등 지역토착세력과 결합한 사이버 언론비리 단속을 통해 숨은 비리를 척결하고 법률시장의 투명성 및 언론환경의 건전성 등 제고
-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제출하고, 통과 추진
- 부패, 비리 등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철저히 환수하여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고 투명한 사회 구현
- 국가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감독 제도 마련을 위해 의원입법 지원을 통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추진

□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에 수사력 집중

□ 토착세력과 결탁한 비위 행위 등 지역 토착비리 척결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공기업 비리, 국가보조금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 공공부문 전반의 구조적·관행적 비리에 적극 대응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
-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법조비리와 지역토착세력과 결탁하여 각종 이권·청탁 등에 개입하는 사이비 언론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전문직역의 숨은 비리에 철저히 대응하여 투명한 사회 확립
- 교원·교직원 채용·승진 인사비리 및 학교·재단의 시설공사 비리, 학교 입시비리 등 교육계에 만연되어 있는 고질적 비리를 집중 단속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환경 조성

□ 공익법인의 투명성 지원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 정부안 국회 제출 및 통과 추진
 -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 국회 설득 및 홍보, 관련 의원안의 심사 지원 등을 통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적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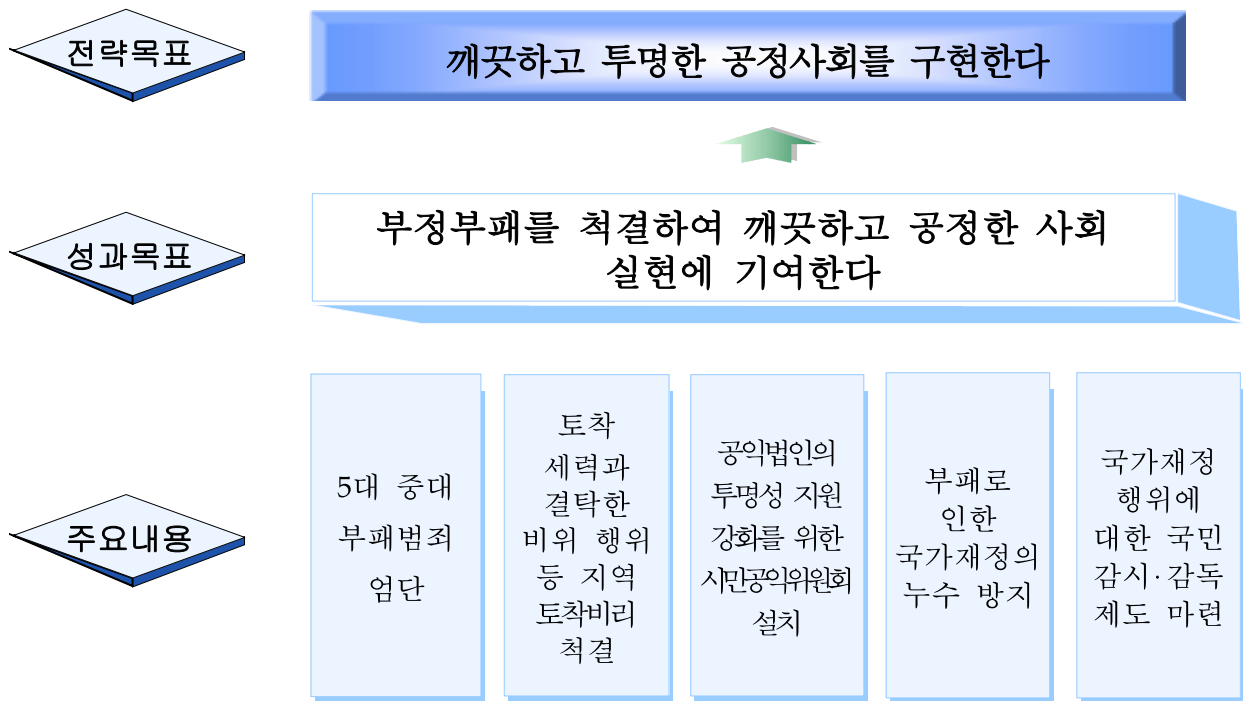
□ 부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방지

- 입찰담합, 부패비리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원인 제공자나 부당이득자를 상대로 국가가 원고로서 적극적으로 민사책임 추궁
- 국고가 투입된 경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국고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 및 지원

□ 국가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감독 제도 마련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국가 재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 방안 수립
- 새롭게 국민소송제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협조하여 국민소송 제도 도입을 추진

《목표 체계도》



(2)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실 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자유형 집행률 (%)(공통)	69.6	65.6	55.5	68.5	-과색재판 및 불구속 재판 증가 등으로 인해 매년 자유형 미집행자는 증가하는 반면, 사실조회 비협조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미제공 - '18. 8. 30. 위헌 결정), 해외 출국 용이, 도피수법의 지능화 및 검거기법 노출(실시간위치 추적을 피해 치명폰 사용 및 실사용 핸드폰 전원 OFF) 등 집행환경의 악화로 자유형 집행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추세임 -중점검거활동 전개 및 새로운 추적기법 활용 등으로 집행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발생건수가 더 많이 증가함으로써 결국 집행률 저하로 연결됨 -자유형미집행자 발생 증가에 따라 집행인력 1인당 집행대상 미집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수사 및 공판 등의 업무에 비하여 형집행 업무가 경시되어 집행인원 및 집행예산의 지원부족 등으로 인해 집행률 제고에 어려움이 많음 -'18.~'20.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치가 63.6%인 점을 감안하여, '21년 목표치는 위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치(63.6%) 보다 5% 상향한 68.5%로 도전적 목표 설정	(자유형 집행인원 / 자유형 접수인원) × 100	검찰통계 시스템 내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실적 현황
재산형 집행률 (%)(공통)	98.3	98.1	98.2	98.5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벌과금 지진 납부율 저조, 노역장 유치, 사회봉사 등 대체 집행 및 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 연기 확대 등으로 재산형 집행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 감안하여, '21년 목표치는 최근 3개년('18.~'20.) 실적을 고려하여 98.5로 목표 설정	(재산형 집행건수 / 재산형 처리건수) × 100	검찰통계 시스템 내 벌과금 집행실적 현황
클린피드백 제도개선 안건 발굴(건)	10	8	8	9	-최근 3년간 클린피드백 제도개선 발굴 실적 평균치(26건/3)를 목표치로 설정 -최근 3년간 실적 감소 추세 반영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통한 제도개선 발굴 안건 수	각종 시행공문 회 의 자 료 , 보고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지속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존재
 -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적극 단속, 불법수익의 철저한 환수 및 수사결과 발표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부패척결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 토착세력과 결탁한 비위 행위 등 지역 토착비리 척결

- 방위사업 비리, 공기업·공무원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엄단
 - 구조적·관행적 비리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중요
 - ※ 수사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관행적인 숨은 비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종료 후 제도개선 사항을 유관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조관계로 적극 대응 필요
 - 공공부문 비리 집중 단속으로 대형 국책 사업 진행 위축 등 우려
 - ※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로 구조적 비리 척결과 동시에 사업 추진 지연 등 부작용 최소화
- 법조비리, 사이버언론, 교육비리 척결
 - 최근 변호사 수의 급증, 수임사건 감소 등에 따라 변호사업계의 수임 경쟁이 과열되어 브로커의 사건 알선 등 문제점 발생
 - ※ 법조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조브로커에 대한 지속적 집중단속으로 엄정 대처
 - 언론환경 등이 취약한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이권과 관련한 비리 지속 발생
 - ※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구조적·고질적 비리인 사이버언론 사범 발본색원

- 교육계의 인사권, 시설공사권 등 주요 의사결정권한이 소수인원에 집중되어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견제 받지 않는 재량행사가 가능하여 구조적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교육계의 관행적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상시적인 감시체제 구축을 통한 깨끗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

□ 공익법인의 투명성 지원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 공익법인법 개정안은 공익법인 관련 업무를 총괄기구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으로 각 중앙부처 및 비영리·공익법인 등 이해관계 있는 자가 다수이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의견 조율 및 수렴에 시일 소요
- '18. 12.부터 각 중앙부처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수차례의 부처 간 회의를 통하여 다수의 이견이 해소된 상황으로, 추가 회의를 통하여 최종 협의 예정

□ 부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방지

- 환수소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들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수사 및 행정조치의 초기 단계부터 소관부처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춰 소송 대상자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거나 소송제기를 검토하는 등 민사환수시스템 구축

□ 국가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감독 제도 마련

- 제도 도입 추진 초창기와는 달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국가 재정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실현 가능한 입법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가재정행위 시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반면, 제도를 통한 남소의 우려도 예상되므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함

(4) 기타

-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Ⅱ-1-①)

□ 추진배경

- 국제 평가기관들이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은 2020년 역대 최고 점수를 달성하였지만,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

-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 결과 61점으로 33위

※ OECD 37개국 중 23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5대 중대 부패범죄 집중 단속

- 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효율적·집중적 단속 활동 전개

- 5대 중대 부패범죄 관련 검찰 사건처리기준 개정·시행('18. 6.)

※ 구속기준, 구형기준 등 강화

-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엄정 적용하여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5대 중대 부패 범죄 집중단속	1~3월	
2/4분기	○ 5대 중대 부패 범죄 집중단속	4~6월	
3/4분기	○ 5대 중대 부패 범죄 집중단속	7~9월	
4/4분기	○ 5대 중대 부패 범죄 집중단속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공정한 사회와 시스템을 바라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 기대효과

-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공직사회와 재벌에 대한 비리를 엄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스템을 갖추는 원동력 제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중대 부패 범죄 기소 실적(점수)	37	27	17	17	-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형사 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단속 건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도 실적치(538명)를 목표치로 설정(17점)	-중대 부패 범죄 기소 실적 1명 당 0.002점 (기소 1명 × 0.002점)	담당부서인 대검 수사 지휘·지원과로부터 자료 취합

※ 최근 4년간 중대 부패 범죄 기소 실적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중대 부패 범죄	1,465	1,165명	857명	538명

※ 관련 죄명

- 뇌물공여등, 뇌물수수등, 제3자뇌물수수, 특가법(뇌물)
- 알선뇌물수수등
- 특가법(알선수재), 특경법(알선수재)
- 업무상횡령·배임, 특경법(배임), 특경법(횡령),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산업기술유출방지 보호법

② 토착세력과 결탁한 비위 행위 등 지역 토착비리 척결(Ⅱ-1-②)

□ 추진배경

- 방위사업의 비리는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기강을 해치는 고질적인 적폐인 만큼 방위사업 관련 비리의 지속적 대응 필요
- 국고보조금 비리는 막대한 국가예산의 낭비이므로 지속적 단속을 통해 국가재정 누수 방지 필요
- 법조브로커는 변호사업계의 시장구조를 왜곡시켜 법조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
-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약점을 노리는 사이버 언론의 폐해가 여전히 심각
- 교육계의 인사권, 시설공사권 등 주요 의사결정권한이 소수인원에 집중되어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견제받지 않는 재량권 행사로 구조적 부패가 지속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계 강화(연중)
 - 공기업·공무원의 비리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기관 감사 결과를 통해 범죄의 단서가 확인되는 분야 집중 수사
 - 복지부 등 보조금 주관부처로부터 제공받은 부정수급 자료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수사대상·입건기준 등 선정

○ 공기업·공무원 비리 집중 단속

- 무리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방만·편법경영에 따른 부실화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 역량 집중

○ 국가보조금 비리 지속 단속

-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예방추진단」과 수사사례 및 보조금 지급실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점 발본 색원
- 수사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재정누수 방지

○ 방위사업비리 지속 수사 전개

-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고질적인 방위사업비리 지속 단속

○ 법조브로커, 사이비 언론 사범, 교육비리 사범 등 전문직역에 대한 전면적·상시적 단속 활동 전개

- 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수사 전담부 및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을 중심으로 집중적 단속

○ 주요 단속 대상 범죄

- 브로커를 변호사 사무원으로 고용하여 알선료를 지급하고 사건 수임하는 행위
- 개인회생·파산·면책 관련 무자격 법률 행위 등
- 개인·업체의 약점을 이용한 금품갈취, 기업체 대상 폭로기사 무마 명목 광고 강요 등
- 교원·교직원 인사비리, 학교·재단의 시설공사 관련 비리, 특기자 입학 관련 입시비리 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대검·감사원 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1~3월	
	○ 반부패특별수사부(반) 정비	1~3월	
2/4분기	○ 대검·감사원 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4~6월	
3/4분기	○ 대검·감사원 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7~9월	
	○ 반부패특별수사부(반) 정비	7~9월	
4/4분기	○ 대검·감사원 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10~12월	
연중	○ 지역토착비리·사이비언론 사범 집중 단속	1~12월	
	○ 공기업·공공인프라 비리 집중 단속		
	○ 보조금 비리 사범 집중 단속		
	○ 방위사업비리 사범 집중 단속		
	○ 법조비리 사범 집중 단속		
	○ 교육비리 사범 집중 단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공정한 사회와 시스템을 바라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보조금 및 방위사업 관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법조 및 언론 분야, 감사원, 국세청 등

□ 기대효과

- 숨은 적폐의 청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형성
- 상시적인 단속체계 확립 및 법조비리, 사이비 언론사범 등 전문직역 비리에 대한 지속적 대처 가능
- 전문직역의 숨은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을 통해 법률시장의 투명성 제고로 공정한 사회 실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지역 토착비리 단속 및 부패대응 활동(점수)	188	196	211	98	•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으로 인해 단속 건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근본적 부패원인 발본색원에 주력(최근 3년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50% 하향 설정) • 공공부문 정상화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비리, 방위사업 비리, 국가보조금, 민관유착 비리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정보 공유 실적 및 공공기관 비리 단속 실적 - 공공기관비리 단속 실적(9점) : 3년간 평균실적(10개)의 50% 단속(5개) - 유관기관 정보 공유 실적(64점) : 3년간 평균실적(156건)의 50% 정보 공유(78건) • 법조비리 교육비리 국가보조금 비리 사범 단속 실적을 점수화하여 목표치 설정 - 법조 비리 단속 실적(12점) : 3년간 평균 실적(259명)의 50% 단속(130명) - 교육 비리 사범 단속 실적(11점) : 3년간 평균 실적(18명)의 50% 단속(9명) - 국가보조금 비리 사범 단속 실적(2점) : 3년간 평균 실적(37명)의 50% 단속(19명)	- 공공기관 단속 실적 1개 기관 단속 당 1.85 점 (공공기관 단속 1개 기관 × 1.85점) -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1건 당 0.82점 부여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1건 × 0.82점) - 법조비리 단속 실적(1명 단속당 0.094점) - 교육 비리 사범 단속 실적(1명 단속당 1.2점) - 국가보조금 비리 사범 단속 실적(1명 단속당 0.128점)	담당부서인 대검 수사지휘·지원과로부터 자료 취합

※ 공공기관 비리 단속 및 유관기관 정보 공유 실적

구분	'18년	'19년	'20년	평균 (50% 하향)
공공기관 비리 단속 기관	16개	9개	6개	10개 (5개)
유관기관 정보 공유 실적	150건	146건	172건	156건 (78건)

※ 최근 3년간 법조 비리, 교육 비리, 국가보조금 비리 사범 단속 실적

구분	'18년	'19년	'20년	평균 (50% 하향)
법조 비리	83명	296명	398명	259명 (130명)
교육 비리	16명	23명	16명	18명 (9명)
국가보조금 비리	66명	22명	23명	37명 (19명)

※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으로 인해 단속 건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근본적 부패원인 발본색원에 주력(최근 3년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50% 하향 설정)

③ 공익법인의 투명성 지원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Ⅱ-1-③)

□ 추진배경

- 현재 공익법인은 목적에 따른 각 행정부처가 주무관청이 되어 개별적인 심사기준에 의하여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통일적 관리·감독 불가능하고,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등 폐해 발생

- 공익법인의 투명성 지원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지원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법무부 소속 행정위원회

** 공익성 인정을 통한 정경유착비리에 의한 특혜성 공익법인 방지,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부 등 감독 강화,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 강화

- 향후 정부입법절차를 '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함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민공익위원회에 대한 행안부 조직협의 완료	3월	
	공익법인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완료	3월	
2/4분기	공익법인법 개정안 국무·차관회의 제출 및 국회 제출	4월	
	국회 방문 및 홍보, 설득(6월)	5월~6월	
3/4분기	국회 방문 및 홍보, 설득, 법안 상정 시 국회 소위 대응 (법안 통과 시 하위법령 마련 및 위원회 설치 준비)	7월~9월	
4/4분기	국회 방문 및 홍보, 설득, 법안 상정 시 국회 소위 대응 (법안 통과 시 하위법령 마련 및 위원회 설치 준비)	10월~11월	
	공익법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및 공포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각 주무관청(행정 각부 및 지자체)
- 공익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개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 등

□ 기대효과

-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법인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통일성 및 관리·감독의 투명성 확보하고 공익법인의 사회적 위상 및 공신력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 공익법인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 (점수)	120	57	160	160	공익법인 등 총괄기구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 단계를 구분하여 점수화 (작년 입법예고, 공청회 등 정부입법절차가 상당부분 추진되었고,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정부입법절차 후 국회 제출 및 법안 통과가 주된 목표이므로, 남은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법제처 심사 (30점) -행안부 조직 협의(20점) -국무회의 (30점) -국회 제출 (30점) -국회 법안 심사 대응(각 20점) -관계부처 등 외부 전문가, 민간 단체 등과의 간담회 (각 10점) -대국민 홍보 (각 20점)	추진 단계별 작성, 수집, 연구 등 관련 자료, 회의일지, 개정안, 보도 자료 등

④ 부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방지(Ⅱ-1-④)

□ 추진배경

- 종래 부패·비리,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이 막대함에도 소관 부처별로 개별대응한 결과 체계적인 국고손실 환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음
- 법무부는 '15. 9. 22. 체계적인 환수소송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하였음
- 검찰에서도 '17. 2. 20. 국고손실환수 소송을 전담하는 「서울고검 특별송무팀」(현 서울고검 국가3팀)을 출범하여 법무부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고손실 환수가능 사례발굴 및 소송지원
 - 공정위 과징금 의결서, 형사판결문, 검찰 보도자료, 언론스크랩 등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국고손실 사례 발굴 및 소제기
 - 국고가 투입된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국고손실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및 지원 제공
- 환수가능 사례 발굴 등을 위한 소관청과의 실무자 간담회 개최
 - 서울고검 국가3팀, 소관부처들과의 상시적 실무자 간담회 및 소송총괄관 회의를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환수 사례 발굴
- 이론적 전문성 제고
 - 국고손실 환수송무 매뉴얼 개정·배포 및 소송수행자 등에 대한 매뉴얼 교육 등을 통해 국고손실 환수 관련 이론적 기반 구축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언론 보도, 형사판결문 등 상시 모니터링	3-12월	연중
2/4분기	소관부서 공무원 상대 국고손실 환수 송무 교육 실시	4-12월	연중
3/4분기	국고손실 환수 가능 사례발굴 및 소관청 실무자 간담회 또는 유선, 이메일에 의한 협의	7-12월	연중
4/4분기	국고손실 환수 송무 매뉴얼 개정 및 배포	12월	
	소송총괄관 회의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고손실 환수로 인한 국가
-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송당사자
- 소송 대리 변호사 및 소송제도 연구 학자
-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 기대효과

-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컨트롤타워로서 환수소송 지속 발굴 및 소송지원 활동으로 국가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
-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국고손실 환수 실적(점수)	6,096	3,566	2,388	2,600	'18년, '19년에 우체국 보험 사기 사건 관련 지급명령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실적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적이었다. '20년 실적치의 10% 상회된 값을 '21년 목표치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환수가능 사례 발굴 (건 당 20점) -소 제기(건 당 15점) -법률 자문·지원(회당 5점) -환수 금액(백만원 당 1점) -승소 건수(건 당 5점) -환수 건수(건 당 5점)	-공문, 관련 문서 -사건 조회 -소관청 첨부 자료
국고손실 환수 역량 강화 활동 (점수)	166	233	53	150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으로 교육 및 간담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올해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 및 간담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될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치 수준으로 목표치 산출	-국고손실 환수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건 당 2점) -회의 등 개최(회당 5점) -언론보도 등 홍보 (건 당 2점) -매뉴얼 개정 및 배포 (회당 30점) -매뉴얼 등 교육(회당 10점) -간담회 등 참석 또는 유선, 이메일에 의한 협의(회당 5점) -연구용역 및 자문(회당 5점)	-공문, 관련 문서 -보도자료, 언론 기사

⑤ 국가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감독 제도 마련(Ⅱ-1-⑤)

□ 추진배경

-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예산 운용 및 지출의 적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건전성 향상 필요
-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등 위법한 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를 국민이 직접 감시·감독할 수 있는 참여수단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민이 국가, 공공기관 등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2건)

순번	발의일자	법안명 및 주요 내용	현황
1	'20. 7.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이상민의원 대표발의)	법사위 1소위 심사중
2	'20. 12.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박주민의원 대표발의)	법사위 1소위 심사중

-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은 16대 국회부터 의원안이 발의되어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국회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입법이 좌절되었는바, 향후 국회 내 이견을 좁히고 실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대(對) 국회 설득 작업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 나아가 관련 부처 실무자들로부터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향후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국가 재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구체적 입법 방안 수립	1~3월	
2/4분기	○ 법안발의 의원실 및 법사위 의원실과 협의	4~12월	연중
3/4분기	○ 이해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 협의	6~12월	연중
4/4분기	○ 법안 통과	10~12월	연내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일반 국민
- 국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예산집행행위를 담당하는 각 부처 및 공공기관
- 감사업무를 담당할 감사기관 및 국민소송을 담당할 법원

□ 기대효과

- 방위산업 비리 또는 사인(私人)을 위한 부적절한 세금 집행 등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로 인한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이미 지출된 국고를 환수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향상
-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국민의 정부신뢰도 향상, 납세자인 국민이 예산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 실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국민소송제도 도입 추진 실적(점수)	신규	40	50	60	국민소송제도가 실제 입 법화되어 시행될 수 있 도록 대국회 설득 작업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 행하는 동시에 관련 연 구·검토를 병행하는 등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조 력 및 기여도를 점수화 하였음	-소관 상임위 위원실 간담회 또는 이메일, 화상회의에 의한 협의(각 10점) -법안 발의 의원실 간담회 또는 이메일, 화상회의에 의한 협의(각 10점) -이해 관계 부처 간담회 또는 유선, 이메일, 화상 회의에 의한 협의(각 10점) -소관 상임위에 국민소송 제도 관련 법안에 대한 법무부 검토 의견 제출 (20점) -법안 통과(20점)	관련 결과 보고서, 및 공문서 등

(1) 주요내용

-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구조적·고질적 금융·증권 등 비리 척결로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로 역외탈세·자료상 등 탈세사범에 적극 대응하여 지하경제의 양성화 도모
- 기술유출 범죄 관련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비리 엄단
- 지식재산권침해사범에 대하여 유관기관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지식재산권 수사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내 산업기술 보호와 문화산업 발전 토대 마련

□ 금융·증권·조세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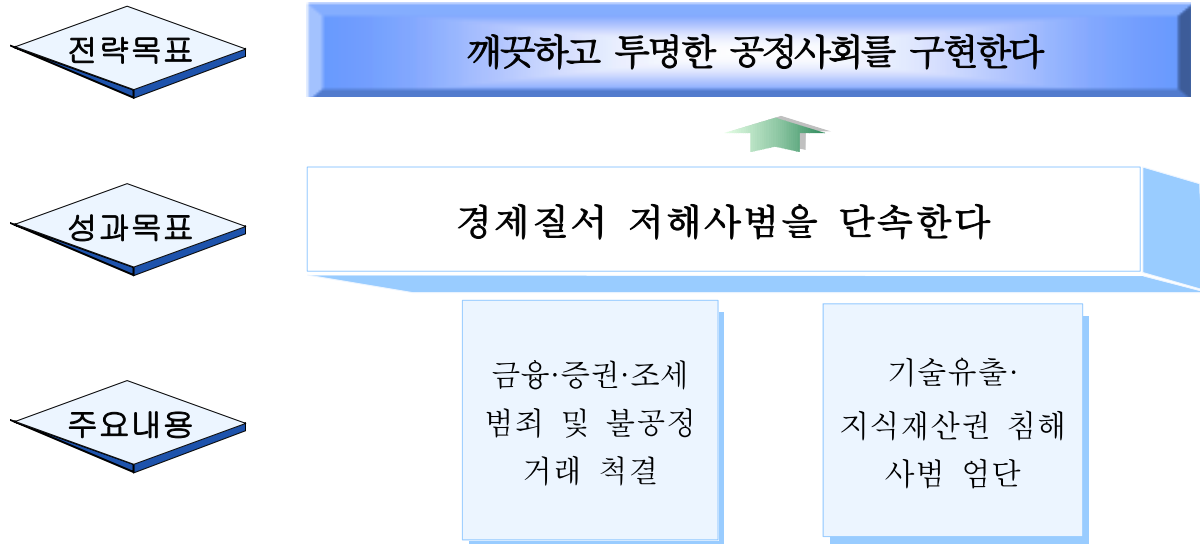
-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최적의 수사시스템을 지속 유지하여 자본시장 질서 교란 범죄에 적극 대응
-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 및 국세청에 과세대상 자료 통보 조치 등을 통해 범죄수익과 불법행위 연루재산 전액 환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입찰 담합 등 불공정거래 범죄 철저 단속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 사익 추구행위, 기업의 회계부정행위 집중 단속
-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수사·조사 협력체계를 통해 역외탈세·자료상 등 탈세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
- 검찰 수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엄중히 과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 세탁범죄를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기소

□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

- 전담부서(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및 유관기관(국가정보원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범죄에 대응하여,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기반 마련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웹하드, P2P, 오픈마켓 등을 통한 온라인 불법복제 및 위조 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온라인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을 엄단하여 온·오프라인에서의 지식재산의 건전 유통질서 확립
- 지식재산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및 대국민 홍보 강화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법의식을 고양하고 지식재산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문화체육부, 특허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자료나 정보 교환을 통해 수사역량 강화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및 수사관련 교육 강화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관련 최신 범죄유형 등에 대한 교육 지속

《목표체계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경제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실적 (점수)	85	1133	96.5	83	-주가조작 범죄 단속 실적 : 최근 3년간 평균 실적(140명)을 목표치(17점)로 설정 -중견기업 이상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 사익 편취 행위 단속 실적 : 최근 3년간 평균실적(9건)을 목표치(9점)로 설정 -조세포탈 범죄 단속 실적 : 최근 3년간 평균 실적(92명)을 목표치(17점)로 설정 ※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으로 인한 단속 건수 감소 추세 반영 -유관기관(국세청) 회의 개최수 : 분기별 2회, 각 5점(40점)	-주가조작 단속실적 1명당 0.122점 부여 (1명 단속 × 0.122점) -중견기업 이상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 사익 편취 행위 단속 1건 당 1점 부여 (단속1건×1점) -조세포탈 범죄 단속실적1명당 0.189점 부여(1명단속× 0.189점) -유관기관 회의 개최횟수 1회당 5점 부여(유관기관회의 1회× 5점)	담당부서인 대검 수사지휘·지원과로부터 자료취합
기술유출 사범 단속실적(점수)	20	12	55	29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추세를 반영	○기술유출사범 단속실적 -기술유출사범 직인자 인원 1명당 0.909점 부여	담당부서인 대검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로부터 자료취합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금융·증권·조세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 금융·증권·조세범죄 및 기업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으로 투자심리 위축 등 자본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단순한 실적 위주의 단속이 아닌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주요한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 및 유관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 수사 진행
-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 범죄 등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대검찰청·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필요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협업 등을 통해 범죄수익 적시 보전 등 체계적 대응

□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

- 검찰과 유관기관(국가정보원 등)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시 협력 및 정보 공유 체계 유지 필요
-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관계 법령 정비 및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질적인 상표 도용, 서적·음반컴퓨터프로그램 무단 복제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미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통상 마찰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창작 의욕을 저해하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통 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아 적극적 대응이 요구

- 최근 온라인 쇼핑몰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SNS 등을 통한 위조상품 불법유통이 빈발하고 거래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어 온라인상 위조상품 범죄수사 분야에 역량 강화 필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금융·증권·조세 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Ⅱ-2-①)

□ 추진배경

- 시장의 가격형성 기능을 왜곡하여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증권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 전국 검찰청의 금융·증권·조세범죄 전담부서 수사결과, 단속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던 기관투자자(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및 증권사 임직원, 증권방송 전문가 등의 주가조작 관여가 확인되는 등 증권시장의 구조적·고질적 비리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 수사가 필요
- 지하 경제에 대한 수사 진행을 통해 이를 양성화하고 국고수입 증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금융·증권 비리에 대한 지속적 수사 전개
 -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교란행위, 횡령·배임 등 기업 범죄, 기업사냥꾼 등 정상적 기업 활동 저해사범 등에 대해 집중 단속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거래 범죄 엄단
 -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 하도급 거래, 부당내부거래, 입찰담합 등 집중 수사
 -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공유·주요현안 협의 등 긴밀한 협업관계 유지
-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및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적극 활용

-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 재산국외도피, 해외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배임 등 조사
 - 검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불법재산환수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해외비자금 조성 등 역외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
 - 역외 은닉 재산 추적 및 환수를 위한 국제공조·협력 강화
- 대검찰청과 국세청 간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강화를 통해 조직적·지능적 세무자료상 근절
- 검찰 수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범죄수익 은닉 등 자금 세탁범죄를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기소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중점검찰청을 통한 금융·증권범죄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점 단속	1~3월	
	○ 전국 자료상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자료상 범죄 등 단속	1~3월	
2/4분기	○ 검찰청·국세청·관세청 등 「해외불법재산환수 유관 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4~6월	
	○ 「공정거래사범협의회」 개최	4~6월	
	○ 중점검찰청을 통한 금융·증권범죄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점 단속	4~6월	
	○ 전국 자료상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자료상 범죄 등 단속	4~6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분기	○ 중점검찰청을 통한 금융·증권범죄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점 단속	7~9월	
	○ 전국 자료상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자료상 범죄 등 단속	7~9월	
4/4분기	○ 검찰청·국세청·관세청 등 「해외불법재산환수 유관 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10~12월	
	○ 「공정거래사범협의회」 개최	10~12월	
	○ 중점검찰청을 통한 금융·증권범죄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점 단속	10~12월	
	○ 전국 자료상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자료상 범죄 등 단속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경제정의·공정사회 실현을 바라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국세청 · 관세청 등

□ 기대효과

-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으로 원칙이 바로 선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기반 마련
- 대형 경제비리를 엄단하여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함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 지하 탈세자금에 대한 수사 강화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도모하고 직접적 증세 없는 복지재원 조달 및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경제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실적 (점수)	85	113.3	96.5	83	-주가조작 범죄 단속 실적 : 최근 3년간 평균실적(140명)을 목표치(17점)로 설정 -중견기업 이상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 사익 편취행위 단속 실적 : 최근 3년간 평균실적(9건)을 목표치(9점)로 설정 -조세포탈 범죄 단속 실적 : 최근 3년간 평균 실적(92명)을 목표치(17점)로 설정 ※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으로 인한 단속 건수 감소 예상 반영 -유관기관(국세청) 회의 개최수 : 분기별 2회, 각 5점(40점)	-주가조작 단속 실적 1명당 0.122점 부여 (1명 단속 × 0.122점) -중견기업 이상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 사익 편취 행위 단속 1건 당 1점 부여 (단속 1건 × 1점) -조세포탈 범죄 단속실적 1명당 0.189점 부여 (1명 단속 × 0.189점) -유관기관 회의 개최횟수 1회 당 5점 부여 (유관기관 회의 1회 × 5점)	담당부서인 대검 수사지휘·지원과로부터 자료 취합

※ 경제질서 저해사범(주가조작사범) 등 단속실적

년도	'18년	'19년	'20년	평균
단속인원	184명	146명	90명	140명

※ 중견기업 이상 기업비리 단속실적

년도	'18년	'19년	'20년	평균
단속건수	16건	7건	5건	9건

※ 지하경제 근원 사범(조세포탈사범) 등 단속실적

년도	'18년	'19년	'20년	평균
단속인원	65명	98명	112명	92명

※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으로 인해 단속 건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근본적 부패원인 발본색원에 주력(최근 3년간 평균치를 목표로 설정)

②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Ⅱ-2-②)

□ 추진배경

- 최근 국가간 기술력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핵심 기술유출범죄 증가, 범행 수법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므로 전문성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필요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보호수단을 요구하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및 통상마찰 요인 제거를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의 지속적 단속 필요
- 최근 온라인 쇼핑물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SNS 등을 통한 위조상품 불법유통이 빈발하고 거래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어 온라인상 위조상품 범죄수사 분야에 역량 강화 필요
- 또한 P2P, 토렌트, 마그넷, 스트리밍 서비스, 해외 불법 웹하드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지식재산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지식정보산업 기반 조성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 및 공조수사체제 강화
 -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범죄첩보 접수단계 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한 기술 침해 사건 형사조정 제도 지속적 시행

-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2부 등 전담부서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범 엄정 수사 및 대응
- 전국 28개청에 설치·운영 중인 지재전담 검사실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지자체 등) 특사경과 지속적 협력 관계 유지
 - 지식재산권 단속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집중 단속계획 수립·시행
 - 지재전담 특사경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지휘 체제를 확립하여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불법저작물 유통업자(웹하드, P2P, 토렌트, 헤비업로더) 등 단속활동 강화
 -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에서 특사경(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휘 개선 방안 시행(장기미제·공소시효 임박 사건 관리, 책임수사지휘제도 실시, 범죄수익환수교육 등 역량 강화)
 - '17.3.2.부터 특허청 산하 '산업재산 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하여 '산업재산권 사건 분쟁조정제도' 전국청 확대 시행
 - 저작물 감정 관련 대검찰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간 업무협의를 통해 저작물감정 제도 활성화 시행('20년)
-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인 수원지검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력 강화
 - 전문검사, 전문수사관, 특허수사자문관 등 인적·물적 전문자원을 중점검찰청에 집중배치하여 전문수사시스템 구축
 - 대전지검 특허수사자문관(특허청 4급) 4명 정규직제화 반영('20년)
 - 특허수사자문관 4명(특허청 4급) 추가 파견받아 대전지검, 수원지검 각 2명 배치('20년)

○ 수사(단속)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노력

- 특별사법경찰과 일선 단속인력의 수사·지식재산권 역량 배양을 위한 공통교육과정 및 지식재산권 분야별 전문 교육 및 세미나 활동 강화

○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강화

- 범죄수익 은닉여부 조사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적극적 형사입건 등 범죄수익을 원칙적으로 환수하는 업무시스템 확립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국 28개 지식재산권 전담 검사실을 중심으로 문체부, 특허청 등 특사경과 지재권 침해사범 지속 단속 ○지식재산권 수사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참석(문체부, 특허청, 관세청, 지자체 등)	1~3월	
2/4분기	○전국 28개 지식재산권 전담 검사실을 중심으로 문체부, 특허청 등 특사경과 지재권 침해사범 지속 단속 ○지식재산권 수사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재 커뮤니티, 유관기관 워크숍, 간담회 참석(문체부, 특허청, 관세청, 지자체 등) ○특허·지재분야 검사 역량강화 교육(법무연수원)	4~6월	
3/4분기	○전국 28개 지식재산권 전담 검사실을 중심으로 문체부, 특허청 등 특사경과 지재권 침해사범 지속 단속 ○지식재산권 수사력 강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 유관기관 워크숍, 간담회 참석(문체부, 특허청, 관세청, 지자체 등)	7~9월	
4/4분기	○전국 28개 지식재산권 전담 검사실을 중심으로 문체부, 특허청 등 특사경과 지재권 침해사범 지속 단속 ○지식재산권 수사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재 커뮤니티, 유관기관 간담회 참석(문체부, 특허청, 관세청, 지자체 등) ○법무연수원을 통해 특사경 직무교육 실시(연중)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온·오프라인에서의 위조상품, 불법저작물 유통 웹하드 업체, 다량·상습 유통업자 및 제작자 등 강력한 단속으로 관련 산업 향상 발전 도모
-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해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자료나 정보 교환 등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

□ 기대효과

- 국내 산업기술 보호 및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공적 진입과 문화산업 콘텐츠 등 지식재산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단속의 실효성 도모
- 온라인 상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 인재 및 수사력 강화
 -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수사의 전문성 제고
 - 최근 더욱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효과 기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지식재산침해사범 대응 실적 (점수)	199	230	223	220	- 지식재산침해사범 합동단속실적, 중요 워크숍, 간담회, 세미나 등 회의 개최실적,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실적을 점수화하여 목표치 설정 ①지재권 침해사범 검찰 단속실적 : 60점 목표 ('20년도 54점) ②지재권 관련 각종 회의 개최 : 30점 목표 ('20년도 9점) ③지식재산권 특사경 교육 횟수 : 80점 목표 ('20년도 40점) ④산업재산권 사건 조정 실적: 50점 목표 ('20년도 120점)	①지재권 침해사범 검찰 단속실적 -구속인원×0.2+불구속인원×0.1점 (검찰통계시스템에서 산출) -단속결과 우수사례 보도자료 발표(건당×5점) ②지재권 관련 각종 회의 개최 -지재권 전담검사·수사관 워크숍 및 유관기관 합동워크숍 개최(회당×10점) -유관기관 정보교류 및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회의, 간담회, 세미나, 지재권 관련 출강 등 참여 횟수(회당×3점) ③지식재산권 특사경 교육 횟수(×2점) ④산업재산권 사건 조정 실적(건당×5점)	각종 보도자료, 보고서, 검찰통계시스템, 법무연수원 교육관련 자료 등 활용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대응 실적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① 단속 실적	구속인원	114	78	38	45	32	26
	불구속인원	1,019	883	344	279	178	186
	보도자료	5	5	5	5	5	6
② 각종 회의	검찰 및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참석	2	2	2	2	2	0
	간담회, 세미나 등 참석	28	17	5	13	13	3
③ 특사경 교육 횟수		19	20	41	39	38	20

기 본 방 향**◇ 인권 보호체계 강화 등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적·종합적 인권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인권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소통 정례화
-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심의 및 진정 접수 등 적극 대응 및 국제 인권규범과 국내 인권정책의 연계 강화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점검 체계 강화
- 인권 모니터링 제도 도입·운영으로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구현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대해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도입 추진 등 실태조사 강화 및 법무부 행정 공무원 직렬별 인권침해 방지와 관련한 다양한 인권교육 강화로 법무행정의 인권수준 향상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을 통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개축을 지속 추진하고,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환경 개선 및 수용자 개인용 위생식판 전면 보급 등 지속 추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법률복지를 강화한다

- 범죄피해자의 건강한 사회생활로의 복귀 지원 및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법의 문턱을 낮추는 법률복지 실현
-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진술조력 강화를 통해 여성·아동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내실화

기 본 방 향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아동인권 증진 연구용역 및 홍보 활동,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대응역량 강화 법교육 등을 통해 사범영역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인권 증진 도모
- 상가임대차 관련 철거·재건축시 임차인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에 대하여 해지권 인정 등을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
- 특정한 채권추심업자들에게 소멸시효 관련 사실의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된 일정 금액 이하의 대출채권은 채권추심업자가 양수받아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소멸시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를 보호하면서, 채권 추심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채권추심법 개정
-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가구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입법화
-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현대 사회구조 하 집단적 피해사고에 대비 하여 효율적 구제 및 예방을 도모하고, 악의적 위법행위 방지 위하여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5	10	1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I.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
III-1. 인권 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율(%)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인권정책 기반시스템 구축 및 인권옹호활동(점수)
	② 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 시스템 강화	- 실태조사 활동실적(점수) - 인권침해사건 직접 조사 실적(건)
	③ 통신 및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법제 정비 등 준비실적(점수)
	④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 수용환경 개선 수용자 만족도(%) (공통)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실적(점수) - 수용자 환경개선을 위해 협업을 통한 갈등노력 실적(점수)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I-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법률복지를 강화한다		▪ 사회적약자를 위한 법제 개선 실적(점수) ▪ 여성·아동 등 인권관련 법령·제도개선 실적(점수) ▪ 법률구조 수혜자 수 (명)(공통) ▪ 법률홈닥터 법률 복지 지원(건)(공통)
	①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 지원 만족도 (점수)(공통) ▪ 스마일센터 만족도(점수) ▪ 범죄피해자 종합지원 건수(건) ▪ 찾아가는 법률지원 건수(건)
	② 여성·아동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인원(명) ▪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건)(공통) ▪ 진술조력인 양성 인원 (명)(공통) ▪ 상근 배치 진술조력인 지원 실적(건)(공통)
	③ 코로나19에 따른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점수)
	④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채권추심법 개정 및 홍보 (점수)
	⑤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률 개정	▪ 1인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점수)
	⑥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	▪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실적(점수)

전략목표 3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1) 주요내용

- ☐ 국가인권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인권위 및 중앙·지방정부 인권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 향상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	80	100	91	88	89	95	과거 실적 및 추세와 최근 5년간 평균 실적인 89%을 감안하여 '25년 95%를 목표로 설정 *국정과제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성과지표와 일치	인권위 권고 건수 ÷ 법무부 수용 건수 (일부 수용의 경우 0.5건으로 집계)	국가인권위 확인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 등과 적극 소통

- 국내 인권정책 총괄부처로서 관계부처,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시 강화

(4) 기타

- ☐ 해당 없음

(1) 주요내용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인권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인권기구의 심의·조사 시 관련부처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대응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구제를 위해 화상조사시스템 설치 및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권구제시스템 구축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대해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도입 추진, 법무부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실시 및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 직렬별 인권교육 강화
-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 통제 강화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입법 추진
- 수용자의 인권보장 및 처우 향상을 위한 시설·생활환경 개선 지속 추진

□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인권옹호 총괄부처로서 국제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등 국제인권활동을 활발히 진행
- 범정부적·종합적 인권정책 체계 마련을 위하여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을 충실하게 실시

□ 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직접조사 확대, 화상조사시스템 확대설치,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 '21년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도입 추진
 - ※ 기존의 실태점검이 인력부족으로 대상기관 143개소에 대해 3-4년마다 1회씩 일률적·일반적 점검으로 진행됨으로써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전 예방 기능보다 사후 점검 위주로 변질 되었고 높아지는 국민들의 인권보호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져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새로운 점검 방식 도입 추진
- 법무부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찾아가는 인권교육 확대 등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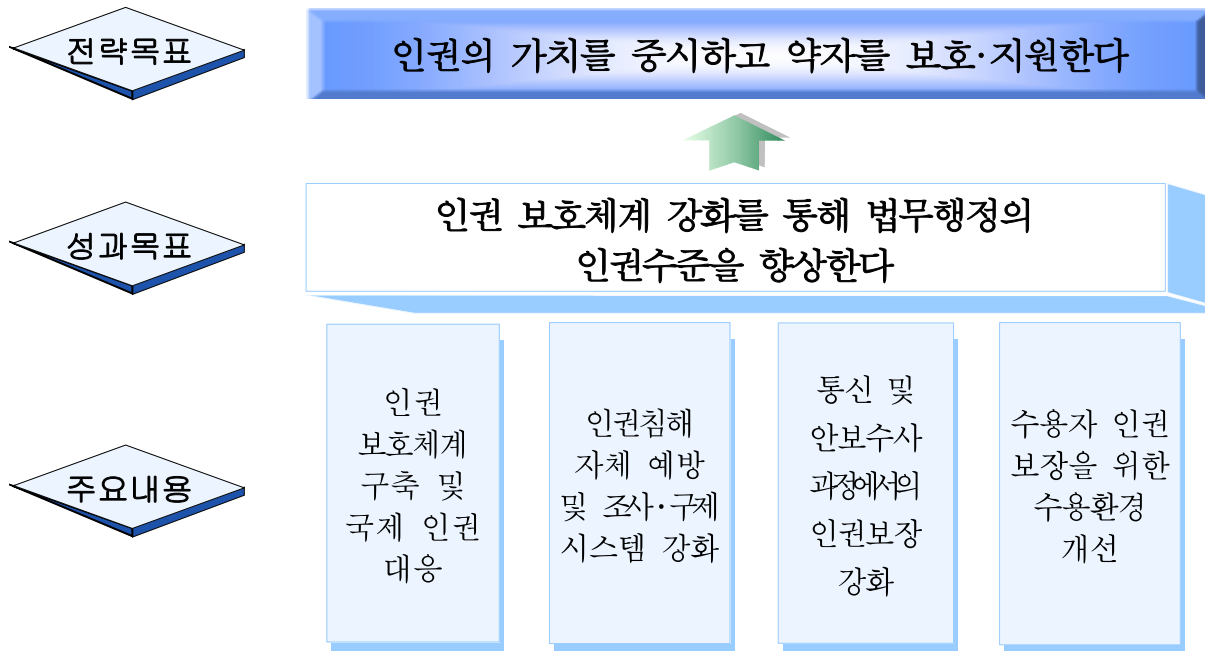
□ 통신 및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 긴급통신제한조치 후 사후영장 청구 필수화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 방지 및 국민의 인권보장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 이전·신축, 수용동 증축 추진
 - '23년 사업 완료 시 수용정원 증가로 과밀수용 해소 기대
- 수도권 및 도심 지역 과밀수용 해소 중점 추진
 - 경기북부구치소, 대전구치소, 화성여자교도소
- 경찰서 대용구치시설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설
 - 거창구치소, 남원교정시설
- 노후 교정시설 시설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을 통한 교정시설 현대화 및 주민 친화적 교정시설 조성 지속 추진
 - 청주강릉·천안·목포·제주여주·영월·춘천·경북북부제2교도소, 논산지소, 울산·서울구치소

《목표체계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율(%)	-	-	신규	100	국가인권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인권위 및 중앙·지방정부 인권정책간의 원활한 연계를 통한 '국민 인권 보호 강화'의 실천을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율을 설정 *국정과제 6-1 의 성과지표	* 부처안 마련(20%) * 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10%) * 법제처 심사완료 (20%) *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제출(20%) * 국회통과(30%)	관련 결재문서, 공문 등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국내 인권정책 총괄부처로서 관계부처,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시 강화
- 정부의 인권정책 역량 제고 위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업무협약의 강화

-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 외부 의견 적극 수렴
- UN 고문방지협약 정기 국가보고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 국내 인권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내 정책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

□ 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 인권침해신고에 대한 직접조사는 인력 및 예산이 수반되므로 원거리 수용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 근거리 수용시설의 경우 인권침해사건 진정인에 대한 방문조사, 원거리 수용시설은 예산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화상조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접조사 강화 필요
- 인권환경 개선 미흡기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여성·소년·장애인·외국인 등 인권 취약계층을 위해 내실 있는 실태조사가 요구됨
 - 취약계층 대상 면담 확대, 다수 미흡 사례 지적 기관에 대한 개선 여부 재점검 등 사후 관리 강화, 우수기관 선정 포상 등 내실 있는 실태조사 강화 필요 등 내실 있는 실태조사 강화 필요

□ 통신 및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 수사의 효율성 및 밀행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간의 조화 도모
 - 긴급통신제한조치 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당사자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갈등상황 발생
 - 수사 효율 및 밀행성을 고려하되, 인권 보장과의 조화를 위해 통신 제한조치에 대한 법원 통제를 강화하여 기본권 침해 방지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 교정시설 신축·이전과 관련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 도심에 위치한 노후 교정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의 시설 이전 요구 증가
- 교정시설 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집단이 다양하여 서로 상반된 내용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한 갈등 해소 노력

- 이해당사자 소통채널 구축, 현장의견 수렴 등 대화와 소통 강화
- 지방자치단체, 주민 단체·대표 등과의 면담 및 설명회 개최
- 시설참관, 주민참여 행사의 지속 추진으로 교정이미지 개선
- 갈등관리 전문위원회 운영 및 담당직원 갈등관리 교육 지속 추진
- 홍보책자(만화)제작·배포 등 홍보방식 다양화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4)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Ⅲ-1-①)

□ 추진배경

- 소극적 인권침해 방지에 주안점을 두었던 정부 주도 인권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고 적극적 인권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정부적·통합적 인권정책 수립 및 이행 필요
- 또한, 국제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비판적 견해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국제인권기구·시민사회·관련 전문가와 소통하며 인권 보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 인권거버넌스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인권정책기본법」제정을 통해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인권옹호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제도적 안정화와 이행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점검 강화 추진
 - ※ ‘20년 실적에 대한 이행 점검 시, 2차 시범과제(13개)에 대해 심층 실시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최근 핵심적 인권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규범의 국내 제도화 방안 마련
 - ※ 인권위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20. 5.),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상호자문, 정책정보 등 공유할 계획
- 법무행정 수행이 인권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사전점검하기 위한 인권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통해 법령의 제·개정,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인권적 접근 강화
 - ※ 모니터링 대상 : 3차 NAP 272개 과제 중 법무부 소관 50개 과제 및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사항 이행을 위한 제·개정 법령 및 제도, 정책
 - ※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법무부훈령) 제정·시행 예정(21. 4.)

○ 인신매매 대응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사용 실태조사’ 실시

※ 우리 정부는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상 '03년부터 18년 연속 1등급 유지

○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위해 광주광역시 세계인권도시포럼 세션 운영 참가

※ 광주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참가하는 세계인권 도시포럼을 매년 개최('21년 제10회 포럼 개최 예정)

○ 대한민국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유엔 인권핵심규약인 ‘강제실종 방지협약’ 비준 추진

※ 국제인권법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주축으로 위원회 구성, ‘강제실종보호협약’과 국내법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이행입법 준비 예정

○ 인권정책 방향 모색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관련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참여 절차 강화

- 국제인권규범 및 사회환경의 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초청, 국제인권 심포지엄 개최 및 정책 반영 검토
- 국제인권규약 국가보고서 제출 전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한 시민사회 의견수렴 강화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 점검 등 주요 인권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 활성화

○ UN 인권상황 관련 서한 질의·개인진정 답변, 국제인권조약 국가 보고서 작성

○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 중 대한민국이 수용한 권고의 이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제출

-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정부의 인권보호·증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강화

○ ‘인권의 주류화’ 관점에서 인권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인권 관점 의견 적극 제시, 인권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 회의	3월	
	○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성평등 해설서' 발간	3월	
2/4분기	○ 인권정책실무협의회 개최	4월	
	○ 부내 인권 모니터링 제도 운영(NAP 및 인권위 권고 관련)	4월~12월	
	○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개최	4월	
	○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제출	6월	
	○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 회의	4월~6월	
	○ 인신매매 피해자식별지표 사용 실태조사 실시	6월~12월	
3/4분기	○ 기 접수된 유엔 개인진정 답변 제출	7월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관련 질의 대응	8월~12월	
4/4분기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중간보고서 제출	10월	
	○ 광주광역시 세계인권도시포럼 세션 참가	10월	
	○ 국제인권 심포지엄 개최	12월	
연중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노력	연중	
	○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추진 노력	연중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점검	연중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및 국제 인권상황 질의 대응	연중	
	○ 국내외 인권 이슈 등의 홍보를 위한 뉴스레터, 카드뉴스 등 발간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가인권정책은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

□ 기대효과

- 범정부적·통합적 인권정책체계를 수립하여 인권을 우선하는 정책 및 법제를 구축하고, 국민 인권 수준 향상
-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체계를 마련하여 국제인권 선도 국가로 발돋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인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인권옹호 활동(점수)	118 (131)	147 (137)	238 (211)	247	○목표치 산출근거 -시민사회 참여 간담회: 연 14회 (전년 13회) -법무행정인권모니터링 실시: 연 6회 (금년 4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써 추정치로 산출, 차년도 계획 수립 시 금년도 실적 토대로 목표치 산출 계획)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35건 ·부내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7건 (전년 6건) ·법령 검토의견 제시: 14건 (전년 13건) ·유엔 결의안 등 국제인권 규범 에 대한 정부 의견 제시: 14건 (전년 13건) -국제인권회의참석: 1회(전년 1회) -인권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등 주최 : 1회(전년 1회) -국내외 인권 이슈 등의 홍보를 위한 뉴스레터, 카드뉴스 등 발간 32건 (전년 31건)	○활동실적×가중치 - (시민사회간담회) 횟수 x 4 - (인권모니터링) 횟수 x 4 - (인권정책의견제시) 횟수 = (부내정책의견제시) 횟수 x 1 + (법률안의견제시) 횟수 x 2 + (국제인권규범 의견제시) 횟수 x 2 - (국제인권회의 참석) 횟수 x 3 - (국제인권학술대회 등 주최) 횟수 x 5 - (국내 및 국제 뉴스 레터, 카드뉴스 등 발간) 건 x 3	공문 회의자료 발간물 등

※정책추진 환경 변화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 변경에
따라 전년도 지표의 핵심은
유지하면서 가중치를 조정
하고 지표구성 내용을 다소
변경함
⇒연도별 실적 중 괄호안 수치는
'21년 지표산식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

② 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Ⅲ-1-②)

□ 추진배경

- 법무행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체 조사·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인권침해 사전 예방 시스템 강화

- '21년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도입 추진

※'07년 구금·보호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이래로 시설별 체크리스트 마련, 예비설문조사를 통한 현장 맞춤형점검 실시,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위한 비방문 및 중점실태점검 추진 등 효율적 점검을 위한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나, 기존의 실태점검이 인력 부족으로 대상기관 143개소에 대해 3-4년마다 1회씩 일률적·일반적 점검으로 진행됨으로써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전 예방 기능보다 사후 점검 위주의 점검으로 변질 되었고 높아지는 국민들의 인권보호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21년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도입 추진 중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실시 방안 요약 - 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인권향상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무행정 운용실태를 위주로 집중점검 주제 선정, ②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다수 기관을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실태점검 실시, ③ 주제별 제도개선안 도출(장·차관 보고를 통해 집행력 제고), ④ 관련 실·국·본부에 권고

-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직접 면담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수립에 활용

- 반기별 인권보호상황평가 실시

- 인권교육 지속 추진

※교정직·보호직 인권심리상담 교육 과정 개설 추진- 심리상담 기법 교육하여 상황 대처 능력 함양('19년 연구용역 수행으로 교재 구비 완료)

※ 소년보호기관 수용관리 실태점검 연계 인권교육 추진- 업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례 및 모범 대응 방법 교육

○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신속 구제기능 확보

- 화상조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확대 등 인권침해사건 신속 조사·구제 강화

구분	화상조사 시스템 구축	사건접수	직접조사	화상조사
2010년	8개소	1,023	370	98
2020년	55개소	3,967	2,532	859

- 인권침해사건 현장 조사반 편성·운용

※ 중요인권침해사건 또는 신속한 현장조사로 관련자료 확보 및 개선·구제 가능성 높은 사건에 대비하여 편성

- 이첩 사건 관리 방안 마련('21. 1.)

※ 조사관별 이첩 대장 관리, 회신 요청 시스템 마련,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통한 관리 방안 마련 추진

- 매년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분석하여 향후 인권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심사분석 실시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1~3월	
	○ '20년 인권침해사건 심사분석 실시		
	○ '20년 하반기 인권보호상황평가		
	○ '20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 '21년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계획수립		
2/4분기	○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4~6월	
	○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실시		
3/4분기	○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7~9월	
	○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실시		
	○ '20년 상반기 인권보호상황평가		
4/4분기	○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10~12월	
	○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실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구금·보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수용되었던 사람 및 그 가족, 출입국·체류 외국인 등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소속 직원

□ 기대효과

- 인권침해에 대한 자체 예방시스템을 마련하여 법무행정 수행과정의 인권보호 증진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 조사 및 효과적인 구제기능 확보로 법무행정 전반의 인권보호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실태조사 활동 실적 (점수)	1551.6	1651	2,092	800	- '21년 실태점검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준비단계를 거친 후 하반기부터 시행 가능한 점, 시행 첫 해인 점, 필수 인력을 추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 추진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21년에 추진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치로 설정	(실태조사 기관 수×7)+(개선조치 요구 건수×4) +(설문조사인원×0.2) +(면담인원×1) +(보고서작성×2)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등 관련자료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실적(건)	1,778	2,116	2,210	2,232	- 직접조사 건수는 인권침해사건 접수 건수의 증감에 직접 연동 되는 점, 조사관 인력 부족 상황을 감안하여 '20년 실적 대비 1% 상향 설정	인 권 침 해 사 건 직접조사 건수	인권침해사건 시스템 통계자료

③ 통신 및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Ⅲ-1-③)

□ 추진배경

- 현재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착수한 후 36시간 내에 이를 중단할 경우 법원의 사후 허가가 불필요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해석·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봉쇄되어 인권보호에 공백 소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영장 필수화,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자료 폐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예정

※ 부처협의('20. 11. 13.~12. 24.), 입법예고('20. 11. 16.~12. 25.), 법제처심사('21. 2. 15.), 차관회의('21. 3. 4.)

- 국무회의 심의 후 '21. 3. 중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전체, 수사 대상자
- (이해관계집단) 수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기통신사업자

□ 기대효과

- 수사기관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 방지 및 이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허가 필수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3월	
2/4분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4~6월	
3/4분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속조치 관련 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등 마련	7~9월	
4/4분기	○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등 시행	12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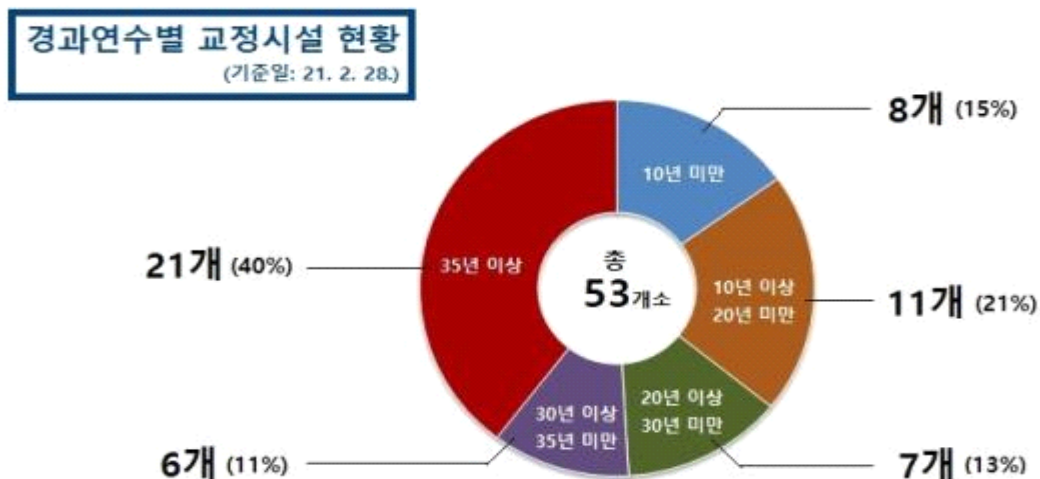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법제 정비 준비 실적 (점수)	신규	55	85	100	'18년 신규지표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법제 정비 단계를 구분하여 점수화,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위하여 전년도 실적 대비 목표치를 상향조정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 영장 필수화 등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100점) - 국무회의 심의(50%), 법률안 국회제출(70%),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80%), 법사위 소위 통과(90%), 국회통과(100%)	일선청, 대검, 법무연수원 등으로부터 통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감사회의, 교육 이수율 등 확인

④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Ⅲ-1-④)

□ 추진배경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과밀수용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 (2013헌마142)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 확보 촉구(보충의견 제시)



- 현재('21. 2.) 총 53개 교정시설 중 27개 시설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협소한 시설로 이전 및 신축, 시설환경 개선이 시급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교정시설 신축, 노후 교정시설 이전·신축을 통한 과밀수용해소 지속 추진
 - 관계부처·국회·지자체·주민 등과 정책협의 및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국민 교정행정 이해도 제고 및 안정적 사업 추진 도모

- 수용동 증·개축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및 노후시설의 수용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 인권향상 도모
- 수용동 리모델링,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수용거실 확보 및 과밀 수용 완화
- 수용자의 인권보장 및 처우 향상을 위한 시설·생활 환경개선 지속 추진
- 노후된 교정기관 급식시설 개선
 -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 교정시설 석면함유 건축자재 철거
 - 교정공무원 및 수용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석면 함유자재 철거
- 수용거실 난방시설 개선
 - 기존 수용거실은 복도에서 방열기를 가열하여 열원을 공급하는 간접난방 방식으로 난방효율이 낮아 직접 난방인 온돌방식으로 개선하여 수용자 처우 향상
- 수용거실 화장실 개선
 - 수용거실 화장실에 양변기를 설치하여 청결한 수용생활 환경 조성 및 수용자의 인권신장 도모
- 수용동 외단열 공사
 - 수용동 외벽단열, 노후 창문 교체, 옥상누수 보강으로 단열효과 극대화 및 에너지 절약
-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 수용거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유사 시 초동대처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여 대형 안전사고 방지

○ 개인용 식판 보급

- 수용자에 적합한 개인용 식판 지급, 취업장 등도 교체·통일

※ '20년까지 45개 기관 보급 완료, '21년에 미보급 8개 기관 순차적 보급 예정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수용동 증·개축 등 주요사업 계획 파악	2월	
	○ 주요사업 현장실사 및 점검, 관련 기관 협의	2월	
	○ 수용동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 재배정	3월	
2/4분기	○ 수용동 증·개축 등 주요사업 진행	4월~6월	
	○ 주요사업 현장실사 및 점검, 관련 기관 협의	5월~6월	
	○ 수용동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 재배정	6월	
3/4분기	○ 수용환경 개선 공사 착수	7월~9월	
	○ 주요사업 현장실사 및 점검, 관련 기관 협의	7월~8월	
	○ 수용동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 재배정	9월	
4/4분기	○ 주요사업 현장실사 및 점검, 관련 기관 협의	9월~12월	
	○ 수용동 증·개축 등 주요사업 공사 완료	12월	
연중	○ 석면함유 건축자재 철거 공사 시행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생활 환경개선으로 인권이 향상되는 수용자 및 가족, 교정교화 및 재범방지 기능 강화로 안전한 사회가 보장되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교정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된 지자체 및 지역주민, 시설 조성 및 수용생활 환경개선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재부·행안부 등 정부 부처

□ 기대효과

- 열악한 수용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의 처우 향상 및 심리적 안정 유도
- 교정시설 현대화로 일반국민의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쇄신
-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더불어 공감하는 교정행정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¹⁾	'20	'21
교도소 운영(Ⅱ-2-일반재정①)				
① 교도소 운영(1531)		일반회계	703	750
▪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302)			703	750
② 재소자 수용 및 교화(1532)		일반회계	220	220
▪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300)			220	2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수용환경 개선 수용자 만족도(%)(공통)	86.9	88.5	92.8	91	-수용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수용환경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 상승 폭이 크지 않음 -'20년 만족도 조사결과 92.8점으로 임계치에 도달하여 더 이상 향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지만, 만족도 조사 결과의 3년 평균 89.4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만족도 조사의 상한으로 볼 수 있는 90점보다 높은 91점으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함	-수용환경 개선을 완료한 거실에 실제 수용 중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측정방법을 현행대로 유지함 · (만족도 조사 중 긍정적 답변지수 / 총응답지수)×100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시행공문 등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실적(점수)	100	106	112	117	-코로나19 등의 집단감염 위험성으로 부터 예방하기 위해 과밀한 수용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과밀수용에 대해 위험판결을 한 현재 결정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2점으로 설정함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용환경 개선 사업 및 공사 실시가 어렵지만 수용자 인권보장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기대를 반영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함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향하고 있고 2년치 평균 추세치인 5.8% 상향하여 117점으로 목표치를 적극 상향 설정함	-수용환경 개선 점수 합산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증축, 개보수 기관 수×2점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생활 환경개선 기관수 ×2점	시행공문 및 개선 실적 자료 등
수용자 환경개선을 위해 협업을 통한 갈등 노력 실적(점수)			신규	88	-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수용동 신축·이전이 시급하나, 일부는 갈등관리 과제로 관리되고 있을 만큼 지자체 및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공사 진행이 쉽지 않아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꾸준한 협업이 필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신축·이전은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기존의 시설에서 수용거실 확충을 통한 과밀 해소를 추진하고자 하여도 가능한 유휴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각 기관에서 가능한 공간을 적극 발굴하는 등 수용기관의 협업이 필요 -협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점수를 설정하였으며, '20년의 실적으로 추산했을 때 75점이 나오므로 10% 상향하여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함	-협업관련 점수 합산 · 갈등민원해소 (50점) · 관계기관 협의 (5점) · 고충민원관련 협의 또는 현장 방문(10점) · 국회의원 및 의원실 설명(10점) · 수용기관현장점검 (2점)	시행공문 및 결과보고 등

(1)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강화를 통한 범죄피해 회복 및 건강한 사회생활로의 복귀 지원
-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법의 문턱을 낮추는 법률복지 실현
-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 조력인 지원, 아동인권 관련 제도 및 인식 개선 활동,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으로 여성·아동 인권 증진
- 상가 임대차 법제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 강화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 채무자들을 무분별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
-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1인가구의 권리 보호
-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집단소송법」 등 제정 추진 및 집단소송 활성화 도모

□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스마일센터 신규 개소 및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등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법률상담, 법교육 등 다양한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여성·아동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법무부 소관 여성·아동 관련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아동인권 증진 연구용역 및 홍보 활동,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대응역량 강화 법교육 등을 통해 사법영역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인권 증진 도모
- 여성·아동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상근 진술 조력인 추가 배치,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성 제고 교육 및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지속적 교육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실태조사 통한 여성·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내실화

□ 코로나19에 따른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 상가임대차 관련 철거·재건축시 임차인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에 대하여 해지권 인정 등을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채무자들이 시효완성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 대부업자의 장기간 추심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 소멸시효 기간 만료 채권의 추심 제한, 소멸시효 기간 등 통지의무 부과 등의 내용으로 채권추심법을 개정하여 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 채무자들을 무분별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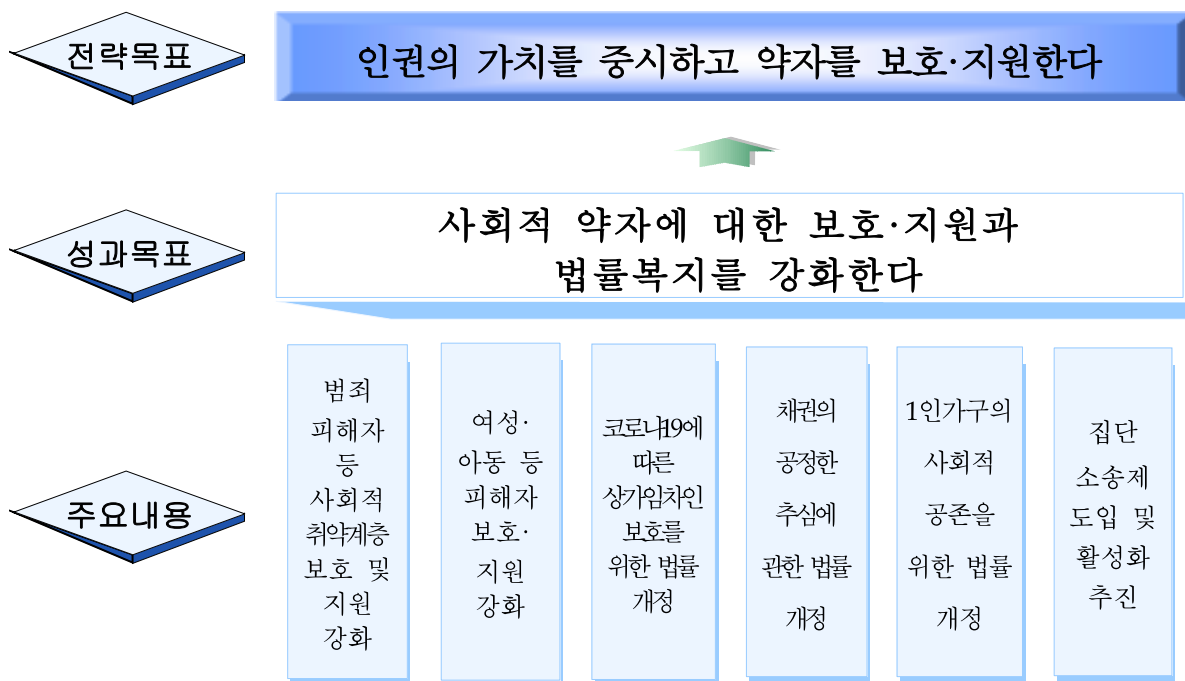
□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률 개정

-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발굴·논의하여 입법화

□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

-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예방하고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 집단소송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활성화 노력

《목표체계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법률구조 수혜자 수 (명)(공통)	197,505	207,150	158,025	217,600	'20년 특이요소(코로나19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파업)로 실적추계 곤란하나, 최근 3년간('17.~'19.) 평균 법률구조수혜자수(197,789명)에 5%를 가산한 207,876명을 넘어서는 '20년 목표치(217,600명)를 그대로 유지하여 '21년 목표치로 설정	민사 법률구조실적+형사 법률구조실적	공단 통계 전산프로그램 상담소, 상담원 월별 통계 보고
법률홈닥터 법률 복지 지원(건) (공통)	59,201	56,145	47,172	56,882	법률홈닥터 퇴직자 증가로 인해 최근 3년간 실적이 하향추세에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장상담기관 운영중단, 대면상담 자제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상담을 적극 운영함으로써 '21년 목표치를 3년 평균실적 대비 5%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설정	법률서류 작성 실적 +유관기관 연계 실적 +법교육 실적+법률 상담 실적 ※'16년부터 측정산식 변경	전국 법률홈닥터 매월 통계 보고
여성·아동 등 인권관련 법령·제도 개선 실적 (점수)	27	28.5	29.5	30.5	인권관련 법령·제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간 소요되어 목표치 상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20년 실적을 감안하여 30.5점으로 목표치 상향 조정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반영한 28.3점 보다 7.7%를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각 산식 합산 -제도개선건수 (건당1점) -법률안 의견제시 건수 (건당 0.5점) -법령 제·개정 건수 (건당 2점)	의견제시 공문, 개선 법령·제도 관련 공문 등의 자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 개선 실적 (점수)* 채권추심법	-	신규	80	100	과거 실적 및 추세와 '20년도 실적인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감안하여 '21년에는 국회 통과를 위해 대국회 대응활동 및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목표로 설정함	<채권추심법 개정> -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실방문 설명(20점) - 국회대응 및 안건 설명회(각 10점) - 국회 법사위 통과(30점) - 국회 본회의 통과(30점) - 대국민 홍보(10점)	추진 단계별 작성 화일 지 설명자료, 개정안 보도 자료 등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법률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재정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원확대를 위한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요구

□ 여성·아동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및 아동보호 제도 정비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필요
- 진술조력인의 상근 배치 및 진술조력 활성화를 위해 여가부(해바라기 센터 관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 형성 필요

□ 코로나 19에 따른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 상가임대차 관련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등의 법령 개정은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문제 등이 존재
 -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하여 관련된 갈등요인을 분석한 바, 마련된 대안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한 합리적 개정 절차 진행 필요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현재 법무부가 제출한 채권추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임

- 개정안은 특정 채권추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권을 양수받아 변제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위 금액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법무부는 금융위와 협의하여 그 상한액을 법사위에 제시할 예정임

□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률 개정

- 각 중점과제별로 갈등요인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친족·상속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반대가 예상됨
- ‘사공일가’ T/F 민간위원단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언론브리핑, 공청회 등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

□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

-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한 재계의 반대가 존재
- ‘20. 9.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위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현장·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계에서는 남소 등에 따른 기업 부담가중을 우려하여 도입 반대 의견 제기
- 입법예고·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합리적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기업계·소비자단체 등 주요 정책이해관계자 및 학계·언론계·국회 등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 입법동력 확충

(4) 기 타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마이크로페이지(www.범죄피해.com)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www.kcva.or.kr)
- 스마일센터 대표 홈페이지(www.resmile.or.kr)
- 법률홈닥터 대표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Ⅲ-2-①)

□ 추진배경

- 디지털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지속적 발생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하여 한층 강화된 경제적·심리적 지원 필요
- ‘변호사 2만명 시대’에 이르렀고, 법률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요구
- 범죄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확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확대를 위해 목포스마일센터를 신규 개소하여 전국 16개 광역단위 심리지원 서비스망 구축 및 홍보 강화
-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 확대 및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스마일공익신탁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체계 개편 방안 관련 유관부처 업무 협의 추진
-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절차 개선 등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방어권보장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국선 변호인 제도를 수사단계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및 「법률구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수요 파악 및 정책추진환경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및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2.~’26.) 발간·배포
-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서비스 확대
 - ※ 법률홈닥터와 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법률상담에서 소송구조까지 ‘One-Stop 법률서비스’ 지원
- 이동법률 상담차량을 연중 운영하여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방문이 어려운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상담 감소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이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시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법률상담 확대 실시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스마일센터 운영매뉴얼 개정, 사례지원 매뉴얼 개발, 학술심포지엄 개최
-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안내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책자·리플릿을 발간하여 정부부처부터 일반 시민의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단위 지방자치단체까지 배포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지도점검 실시로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소통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 옹호,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상호 소통

강화를 위한 ‘다링행사’,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범죄피해자 작품 전시회’ 등 각종 캠페인 전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마이크로 사이트 구축에 따른 키워드 검색광고 등 국민생활 밀착형 홍보매체 지속 발굴 및 홍보 강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분기	○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발주	2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책자 및 리플릿 제작·배포	3월	
	○ 목포스마일센터 신규 개소	3월	
	○ 1/4 분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정기 지도점검	3월	
	○ 법률홈닥터 홍보자료 배포	3월	
2/4분기	○ 2021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4월	
	○ ‘스마일센터 사례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발주	4월	
	○ 스마일센터 애니메이션 홍보영상 제작	4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병의원 키오스크 광고	5월	
	○ 2020년 스마일센터 운영백서 제작·배포	5월	
	○ 법률홈닥터 간담회	5월	
	○ 스마일센터 포스터·슬로건 공모전 개최	6월	
	○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 체계 개편 방안 관련 부처 업무 협의 추진	6월	
	○ 2/4 분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정기 지도점검	4~6월	
	○ 스마일센터 운영매뉴얼 개정	6월	
3/4분기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소통강화를 위한 ‘다링행사’ 개최	7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 스마일센터 홍보용 온라인 배너광고	7월	
	○ 3/4 분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정기 지도점검	7~9월	
	○ 스마일센터 심리지원·사례지원팀 전문역량 강화 교육	9월	
	○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1.~'26.) 수립	9월	
	○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9월	
4/4분기	○ '21년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11월	
	○ 법률홈닥터 간담회	11월	
	○ 스마일센터 학술 심포지엄 개최	11월	
	○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법안마련 및 제출	12월	
	○ 제14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12월	
	○ 제2회 범죄피해자 작품전시회 개최	12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라디오 광고	12월	
	○ 4/4 분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정기 지도점검	10~12월	
	○ 스마일센터 간행물 '다시웃기' 제작·배포	12월	
	○ 법률홈닥터 및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	12월	
	○ 스마일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12월	연중
	○ 사각지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스마일공익신탁' 나눔 실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 및 그 가족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 법률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 월평균 소득 260만 원 이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 등

□ 기대효과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강화로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신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법률상담, 법교육 등 각종 법률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향상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범죄피해자보호기금(IV-1-일반재정⑤)				
①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39,695	36,202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23,376	18,013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4,499	5,122	
▪ 범죄피해구조금		10,708	11,650	
▪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1,112	1,417	
법률구조(IV-1-일반재정②)				
① 법률구조(1100, 1131)	일반회계	57,068	58,086	
▪ 법률구조(300)		52,519	53,516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301)		4,549	4,57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범죄피해자 지원 만족도 (점수)(공통)	89.6	90.2	90.6	90.6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들이 느끼는 실제 정책 체감도를 측정(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사자 만족도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 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리서치 업체 선정 조사 실시 표본 추출 : 정책수혜자에 대한 전수조사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만족도 조사 결과가 90점 이상 임계치에 올라와 만족도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20년도 평가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되 적극적인 목표설정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90.6점을 목표치로 설정 ※최근 3년 평균점수(90.1점) 보다 0.5점 높은 수치임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조사척도 : 매우불만족~매우만족 5점 척도	
스마일센터 만족도(점수)	93.1	93.5	93.8	93.4	-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를 5회 이상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사자 만족도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임계치에 올라와 만족도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20년도 평가위원의 의견이 있고, 더 이상의 실적 상승요인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적극적 목표설정을 위해 최근 3년 평균치인 93.4점을 목표치로 설정	○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리서치 업체 선정 조사 실시 표본 추출 : 정책수혜자에 대한 전수조사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 조사척도 : 매우불만족~매우만족 5점 척도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
범죄피해자 종합지원 건수(건)	2,558	3,131	4,040	4,363	- 간병비, 치료비, 주거지원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 - '20년 실적치가 4,04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여 더 이상 비약적인 실적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 목표설정을 위해 전년 실적대비 8% 상향한 4,363건을 목표치로 설정 ※최근 3년 평균치(3,243건) 보다 약 35% 높은 수치임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구조금, 경제지원, 주거지원, 심리치료, 신변보호 등 범죄피해자 종합지원 실적 총 합산 (간병비+취업지원+구조금+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	각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실적 취합
찾아가는 법률지원 건수(건)	3,321	4,927	6,010	6,310	- 이동식 법률상담, 화상상담 등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법률지원 건수 - 코로나로 인한 대면상담의 어려움, 공단 내 공익법무관 인력 감소 등 악재로 실적 감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역대 최대인 전년도 실적을 상향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적극적 목표설정을 위해 전년 대비 5% 상향한 6,310건을 목표치로 설정 ※최근 3년 평균치(4,752건) 보다 약 33% 높은 수치임	법률상담, 화상상담, 법교육, 각종 현장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법률지원 실적 합산	분기별 실적 취합

② 여성·아동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Ⅲ-2-②)

□ 추진배경

- (아동인권증진)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신고 강화 및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필요성 증가

※ ('16년~)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1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및 피해아동 보호제도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 ('17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실시(총 504명 교육)

- (진술조력인 지원)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 장애인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 지원 요구 증가

※ ('13년)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14년~) 진술조력인 지원을 시작하여 총 10,329건 지원(상근 6,456건, 비상근 3,873건)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수사 및 공판절차 출석, 의견진술 등 형사절차 참여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의 필요성에 따라 지원 수요 증가

※ '12. 3.경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20. 12.말까지 총 153,949건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아동학대 판례연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등을 통한 유기적인 아동보호 협조체계 구축, 아동학대 현장 종사자의 형사사법 대응역량 강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118개 지자체에 '21년 374명 배치예정, '20년 290명 배치) 신설 시 아동학대 현장 종사자로서 대응역량 강화 법교육 실시

-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적합한 피해자 의사소통 지원 강화를 위해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및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확대

-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근 진술조력인 미배치 광역시·도에 진술조력인 추가 배치 예정
 -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지속, 기존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사례관리회의 등 실시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원활한 지원방안 마련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등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내실화
- 학대피해 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유관기관 제도 안내 및 홍보, 맞춤형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원활한 지원 도모
 -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적정성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규칙 개정 및 관련 법률 제정안 검토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진술조력인 사례관리회의	1~3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예산 배정 및 용도지시	2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대체인력 채용, 배치	3월	
	○상근 진술조력인 채용 및 배치	3월	
2/4분기	○진술조력인 사례관리회의	4~6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5월	
	○피해자 국선변호사 현장점검 실시	6월	
	○피해자 국선변호사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배포	6월	
3/4분기	○진술조력인 사례관리회의	7~9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상반기 실적 점검	7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제도 홍보 광고 송출	8월	
	○아동학대 관련 연구용역 실시	9월	
	○피해자 국선변호사 간담회 실시	9월	
4/4분기	○아동학대 현장 종사자 법교육 실시	10~12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개선 연구용역 실시	10월	
	○피해자 국선변호사 권역별 전문화교육 실시	11월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실시	12월	
	○진술조력인 자격부여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증진 사업의 1차적인 수혜자는 피해 아동이나, 아동이 건전한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정과 국가의 미래를 유지·발전시키는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인권증진 사업의 2차 수혜자는 피해 아동의 가족이며 궁극적인 수혜자는 국민 전체임
-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나,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아동학대 판례연구 실시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아동학대 현장 종사자 교육을 통한 피해아동 지원, 실무역량 강화 및 사건관리회의 지원을 통한 아동학대 사건 처리절차 강화
-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로 여성·아동 등 인권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 제고 및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실현
- 진술조력인을 통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및 2차 피해 방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IV-1-일반재정(2))				
②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1136)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75.0 (75.0)	80.0 (80.0)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305)		64.7	69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300)		10.3	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인원(명)	- (61)	신규 (52)	70 (331)	215	최근 3년간 평균 교육인원 148명 보다 45%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20년 코로나로 사이버교육 실시 하여 전년대비 교육인원 폭증	아동학대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인원 측정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결과보고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건)(공통)	22,755	25,487	26,007	27,225	최근 3년간 평균 지원 실적 24,750건 보다 10%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19년의 실적은 미투운동 확산 등으로 급등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건수 합산	일선 청 통계자료 수집
진술조력인 양성 인원(명)(공통)	13	15	14	13	진술조력인 제도 안착을 위해 양적 성장보다는 현재 양성되어 있는 진술조력인 내실화가 중요하며, 신규 진술조력인 지원자의 질적 수준에 따라 양성 인원엔 영향이 있어 최근 3년 실적치 평균보다 7.7% 다소 하향하여 목표치 설정	진술조력인 양성 인원 수	진술조력인 자격 명부 등
상근 배치 진술 조력인 지원 실적 (건)(공통)	1,017	1,391	1,326	1,406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의 등락 추 세를 고려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지원실적인 1,245건보다 12.9%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20년 실적은 코로나-19로 상근 진술조력인의 주 배치기관인 해바라기센터 소재 국립병원이 거점병원, 선별진료소로 지정됨에 따라 지원 실적 감소	상근 진술조력인이 활동한 진술조력 건수 합산	진술조력인 활동 보고서

③ 코로나19에 따른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Ⅲ-2-③)

□ 추진배경

-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과 이사걱정을 경감시킬 수 있는 법적 방안,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및 역량 강화 필요
- 철거·재건축 시 상가임차인 보호 등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에 대하여 해지권 인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업권 보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상가임대차 관련,
 - 상가임대차 관련 철거·재건축시 임차인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에 대하여 해지권 인정 등을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등
 -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권 강화 방안 마련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토론회·간담회·보도자료 배포 등 입법여론 확충 노력	1~3월	
	○ 국회 설명, 법안심사 지원을 통한 입법 추진		
	○ 정부안의 개정 절차를 통한 입법 추진		
2/4분기	○ 토론회·간담회·보도자료 배포 등 입법여론 확충 노력	4~6월	
	○ 국회 설명, 법안심사 지원을 통한 입법 추진		
	○ 정부안의 개정 절차를 통한 입법 추진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3/4분기	○ 토론회·간담회·보도자료 배포 등 입법여론 확충 노력	7~9월	
	○ 국회 설명, 법안심사 지원을 통한 입법 추진		
	○ 정부안의 개정 절차를 통한 입법 추진		
4/4분기	○ 토론회·간담회·보도자료 배포 등 입법여론 확충 노력	10~12월	
	○ 국회 설명, 법안심사 지원을 통한 입법 추진		
	○ 정부안의 개정 절차를 통한 입법 추진		
	○ 대국민 홍보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
- (이해관계집단) 임대인,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자,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단체 등

□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임대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상생을 논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기반 조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점수)	-	-	(산정)	160	TF 회의, 대안 제출 및 국회 설명· 대응, 대국민 홍보 등 제도 개선 단계를 구분하여 점수화	○ 법률개정을 위한 TF - TF 등 구성 (10점) - 회의 개최(1회×10점) ○ 개정안 마련 (25점) ○ 입안보고(15점) ○ 입법예고(15점) ○ 부처협의 등 의견조화(각 10점) ○ 법제처 심사 (30점) ○ 국무회의 (20점) ○ 국회제출 (20점) ○ 국회의원 및 의원실 설명 (1건×10점) ○ 법률안 법안심사소위 상정(1건×10점) ○ 법률안 국회 통과 (1건×50점) ○ 관계부처 등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각 10점) ○ 대국민 홍보(각 20점) ※홍보방법 : 보도자료 배포, 기고문, 홍보 동영상 제작, 리플릿·책자 등 홍보자료 제작 등)	각 추진 단계별로 작성되는 회의록, 설명자료, 개정안, 보도자료 등

④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Ⅲ-2-④)

□ 추진배경

- 대부업자 등은 채무자들의 시효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을 악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장기간 추심
 - 채무자들은 시효완성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시효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대응하지 못함
- 대부업자 등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채권을 양수하여 변제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제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소멸시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를 보호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
 -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에게 변제 요구 시 채권의 발생연월일, 변제기, 소멸시효 기간 등을 1회 이상 통지하도록 함
 - 특정 채권추심자는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된 채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을 양수받아 채무자에게 변제 요구 금지
-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을 방문, 채권추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예비검토 및 설명 등 국회통과를 위한 국회대응 업무 등
 - 채권추심법 개정 내용에 관하여 대국민 홍보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 방문 및 설명	1월	
	○ 국회 전체회의, 소위 상정 및 법안심사 지원	3월	
2/4분기	○ 국회 대응을 통한 입법지원	4~6월	
3/4분기	○ 국회 대응을 통한 입법지원	7~9월	
	○ 국회 법안심사 지원		
4/4분기	○ 국회 대응을 통한 입법지원	10~12월	
	○ 국회 법안심사 지원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대출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채권의 추심을 제한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소액 대출 채무자들의 권익 증진이 예상됨
- 채권추심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일부 제한이 예상되어 대부업자 등 채권추심자의 반발 가능성 있음

□ 기대효과

- (수혜자)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서민 소액 대출 채무자
- (이해관계집단)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등 채권추심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채권추심법 개정 및 홍보(점수)	신규	235	145	100	과거 실적 및 추세와 '20년도 실적인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감안, - '21년에는 국회 통과를 위해 대국회 대응활동 및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목표로 설정함	- 국회 법사위 전 문위원실 방문설 명(20점) - 국회대응 및 언론 설명회(각 10점) - 국회 법사위 통과 (30점) - 국회 본회의 통과 (30점) - 대국민 홍보(10점)	추진 단계별 작성, 회의일지, 설명자료, 개 정안, 보도자료 등

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률 개정(Ⅲ-2-⑤)

□ 추진배경

-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00년 15.5%에서 '19년 30.2%로 급증했음에도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 지속

- 현재 1인가구 관련 정책은 1인가구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 개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친족)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 필요성 검토
- (상속)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구하라법), 증여 해제의 범위 확대(불효자방지법), 유류분 축소 등 피상속인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논의
- (주거) 주거공유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차권의 양도·전대 요건 완화하는 방안, 1인가구도 집합건물의 관리·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 등 논의
- (보호) 임의후견 제도 홍보 및 임의후견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등을 통하여 1인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
- (유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논의

○ (T/F 운영)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구성하여,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발굴·논의

- (위원 구성)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1인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을 구성

- (운영 방식) 전자우편 및 단체 대화방 개설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격월 1회 대면회의의 진행**

* '친족'(가족 개념 재정립 등), '상속'(피상속인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제도 등), '주거'(공유형 주거에 대한 법적 지원 등), '보호'(성년후견 제도 개선 등), '유대'(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

** '21. 2. 3. (수) 킥오프 회의, 2. 17. (수) 제1차 회의 및 위촉식 진행

○ (자체 검토)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같은 친족 관련 제도 개선 등 자체 검토

*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母)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 통과

○ (논문 공모)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민사법 제·개정'을 주제로 '법조'지 논문 공모를 진행하여 1인가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발굴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법무부 '사공일가' T/F 구성 및 발족	1~2월	
	1인가구 관련 언론브리핑	3월	
2/4분기	1인가구 관련 공모 논문 학술지(법조지) 발행	4월	
	관련 법안 입안보고	5월	
	관련 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6월	
3/4분기	관련 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7월	
	관련 법안 차관회의·국무회의	8월	
	1인가구 관련 다큐 송출(정책 홍보)	9월	
4/4분기	관련 법안 국회 제출	10~12월	
	'사공일가' T/F 관련 1인가구 백서 발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각 제도 개선방안별로 청년·중년·노년·여성 1인가구가 수혜자가 될 것임
- (이해관계집단) 각 제도 개선방안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기본법인 「민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국민이 이해관계인이 될 것임

□ 기대효과

-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률 개정을 함으로써 보편적인 가구 형태의 하나가 된 1인가구의 권리를 보호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1인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점수)	-	-	(산정)	200	TF 회의, 대안 제출 및 국회 설명·대응, 대국민 홍보 등 제도 개선 단계를 구분하여 점수화	○ 1인가구 T/F - T/F 구성(10점) - 회의개최(1회×10점) ○ 개정안 마련(25점) ○ 입안보고(15점) ○ 입법예고(15점) ○ 부처협의 등 의견 조화(각 10점) ○ 법제처 심사(30점) ○ 국무회의(20점) ○ 국회제출(20점) ○ 국회의원 및 의원실 설명 (1건×10점) ○ 법률안 법안심사소 위 상정(1건×10점) ○ 법률안 국회통과 (1건×50점) ○ 관계부처 등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 (각 15점) ○ 대국민 홍보(각 20점) ○ 관련 논문 학술지 발행(15점) ○ 공청회(20점) ○ 대국민 홍보(각 20점) ※ 홍보방법 : 보도자료 배포, 홍보자료 제작, 백서 발간, 다류 제작 등)	각 추진 단계별로 작성되는 회의록, 설명자료, 개정안, 보도자료 등

⑥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Ⅲ-2-⑥)

□ 추진배경

- 가습기 살균제, 개인정보유출, 배출가스 조작, 주행 중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시 개별 피해구제의 한계가 꾸준히 제기
 -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예방을 도모하고,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 확보 위하여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함께 도입하고, 집단소송제 활성화 추진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 도입

「집단소송법」 제정안 주요 내용

- 분야 제한 없는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 피해자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
- 증거개시제 도입
- 국민참여재판제도 적용
-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

-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제도 확대 도입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상인의 고의·중과실 행위에 대해 손해 5배 한도 배상책임 도입

- '20. 9. ~ '20. 11. 입법예고 및 '20. 12. 1. 현장·온라인 공청회
- 입법예고·공청회 등의 제출 의견 검토 통한 법안 확정 및 국회 제출 후 국회 통과 추진

※ '21. 3. 현재 법제처 심사 중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법제처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	1 ~ 3월	
	○ 정책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입법여론 확충 노력		
2/4분기	○ 법제처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	4 ~ 6월	
	○ 정책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입법여론 확충 노력		
3/4분기	○ 국회 법안심사 지원	7 ~ 9월	
	○ 토론회·간담회 및 국회 설명 등 입법지원 노력		
4/4분기	○ 국회 법안심사 지원	10 ~ 12월	
	○ 토론회·간담회 및 국회 설명 등 입법지원 노력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일반 국민의 경우, 집단적 피해 발생 시 효율적 구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업들의 사전예방 노력이 제고되어 안전수준이 강화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음
- 기업의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오히려 사전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되어 기업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집단적 피해에 대해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악의적 위법 행위 유인을 제거하여 억지력을 확보함으로써 공정경제 실현
- 사후 손해배상책임이 실제 구현되도록 하여 사전적인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기업 활동의 폭을 확장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 과 지 표	실 적			목표치 '21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실적 (점수)	-	-	신규	250	-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노력 - 집단소송제도 활성화 노력	○ 「집단소송법」 제정 - 법률안 국회통과(250점) - 법률안 법안소위 상정 (1건×75점) - 법률안 전체회의 상정 (1건×75점) - 법률안 국회제출(150점) ○ 「상법」 개정 - 법률안 국회통과 (150점) - 법률안 법안소위 상정 (1건×50점) - 법률안 전체회의 상정 (1건×50점) - 법률안 국회제출(50점) ○ 국회의원 및 의원실 설명(1건×30점) ○ 토론회 (1건×20점) ○ 간담회 (1건×30점) ○ 집단소송 제기 건수 (1건×10점) ○ 집단소송 판결·결정 건수 (1건×10점)	○ 국회 법안통과 - 공포 ○ 법제 사법 위원회 홈페이지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언론보도 ○ 대법원 집단소송 공고 게시판 ○ 기타 다수

기 본 방 향

◇ 범죄예방활동 및 준법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구현한다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 준수 등 사건처리 관리 강화
- 수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전담 대응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활동을 통한 입체적 대응 강화

○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1:1 전자감독 확대, 야간시간대 귀가지도 및 집중관제 강화 등 밀착 지도감독 추진, 전자감독 장치 및 시스템 고도화, 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신상정보 등록 관리 강화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요인 해소 및 안전한 사회 구현

○ 학교폭력 등 청소년비행예방 기능 강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미설치 지역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추진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초기단계 위기·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선도 활성화를 통한 적기 개입 강화 및 교육 효과성 제고

기 본 방 향

- 비행예방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인프라 전문성 강화

○ 참여형·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시민, 이민자, 탈북자 등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상별 맞춤형 법교육 강화
- 청소년 대상 체험형·참여형 법교육을 강화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시민의식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실질적인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 친사회성·대인관계·준법정신 등의 분야로 구성된 비대면 영상강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집중인성교육 지원으로 교육 강화, 수용자 인성 함양을 위해 성별·연령 등에 따라 교양·역사·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수요맞춤별로 제공하여 수용자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는 등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복귀 지원
-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익히고, 교도작업을 통한 정역집행으로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숙련을 통한 산업현장 실무능력 향상 도모
- 모범수형자 등의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촉진하고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으로 재범률 감소
- 성폭력·중독사범 등의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성폭력사범, 마약·알코올 등 중독사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동기 없는 범죄 수형자, 정신질환 수형자 등

기 본 방 향

고위험군 특정사범에 대한 전문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범방지 효과 달성

○ 원격의료시스템의 추가 구축, 의료인력 확보, 의료장비의 현대화, 의료인력 직무역량 강화, 코로나19 감염병 차단 등 의료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도모

○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 소년원생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정교육과 시설 현대화를 통한 인권적 처우 환경 조성, 재범방지에 중점을 둔 인성교육 강화 등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

○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의사 및 간호인력 등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특수의료장비 도입 및 시설 개선 등 치료환경 개선을 통해 치료감호 내실화 도모

○ 실효적 보호관찰 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정부 부처,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실시
- 재범위험성 평가, 분류등급 개선, 정신건강 선별검사 전국 확대 등을 통한 과학적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지도감독 전문성 강화

○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보호사업 추진

- 생활환경, 취업경력, 희망직종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통합 취업지원 및 연계 취업 활성화
- 고용협력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발굴 확대 등 출소자 일자리 기반 확충 및 범죄예방활동의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를 통한 출소자 고용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제고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10	14	2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V.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하향지표)(공통)
IV-1. 범죄예방활동 및 준법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구현한다		- 전자감독 대상자 1인당 대면 지도 감독 횟수(회) - 비행예방교육 실시 인원(명) - 법교육 참여자 만족도(점수)
	①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전문 수사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간 협업 활동 추진실적(점수)
	②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전자감독 대상자 1인당 심리치료 집행횟수(회)(공통)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신속입력률(%)
	③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등 실적(건)(공통) - 보호외국인 동감프로그램 만족도(점수)(공통)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계도/예고(홍보) 활동 실적(건)
	④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비행예방교육평가점수(점)(공통) - 비행예방교육 운영률(%)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성 과 지 표
	⑤ 참여형·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	-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가자의 준법의식 수준(점) -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여 인원(명)
IV-2. 실질적인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 교육·교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 채용면접 수형자 취업 실적(구인·구직만남의 날 등) - 소년원 출원생 사회 정착률(%) (공통) - 피치로감호자 재입소율(%) (공통) -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공통) - 강력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처우 프로그램 실시 인원 - 취업지원사업 수료자 취업률(%)
	①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집중인성교육 이수인원 (명) - 교양 등 비치도서 대여 권수(권)
	②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수형자 정역집행률(교도 작업 및 직업훈련 참여율) (%) (공통) - 직업훈련수형자 만족도 (점수)
	③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가석방 내실화	- 모범수형자 등 가석방자 인원 증가율(%) - 가석방 내실화를 위한 노력(점)
	④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성폭력사범 심화교육 수료자의 왜곡된 성의식 점수 감소율(%) - 심리 치료 프로그램 전문화 실적(점수)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⑤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 내실화	- 수용자 의료처우 실시율(%) (공통) - 원격의료 이용자 만족도 (%)
	⑥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교육과정수료자 1인당 교육목표달성도(건) (공통)
	⑦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치료재활프로그램 만족도(점수) (공통) -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결원율(%) (공통)
	⑧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	-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 강력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처우 프로그램 실시인원
	⑨ 출소자 취업지원 강화를 통한 따뜻한 사회 구현	- 법무보호서비스 이용건수(공통) - 취업자일자리 품질 수준(%)

(1) 주요내용

□ 고위험 강력사범의 재범 방지 대책 강화

- 성폭력 등 고위험 사범에 대한 1:1 전자감독 등 밀착 지도감독, 근원적 범죄유발 요인 억제를 위한 심리치료 확대 및 외부전문가 연계 상담 강화

□ 주취·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개입 실시

- 보호관찰 개시 초기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활용하여 주취·정신질환 대상자를 조기 발견, 적극적 치료 개입 실시

□ 청소년 강력범죄 재발 방지 역량 강화

- 보호관찰 청소년 심야시간 재범방지를 위해 상담과 지도감독을 결합한 야간 전화상담 방식의 콜코칭 외출 제한명령 실시
-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살피고 개인의 강점을 발굴하는 상담치유형 면담 적극 실시

□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전문적·과학적 보호관찰 실시

- 재범위험성평가도구 등을 활용한 보호관찰 대상자별 범죄유발요인에 따른 전문처우프로그램 실시로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 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기능 강화

- 소년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정밀화 및 통합, 상담형 소년보호관찰 면담 체계 도입, 외출제한명령 집행 효율성 강화, 사회자원 통합 관리 추진 등 소년 보호관찰 재범방지 역량 강화

- 초기단계 위기·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선도 활성화,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역량 강화를 통한 비행예방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및 전문성 강화

□ 특정 성폭력사범 고위험군 대상 특별·유지과정 프로그램 운영

- 가학적·변태적 성폭력사범 등 특정 성폭력사범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 효과 유지 및 체계적·지속적 관리를 위해 특성화된 추가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 중 가학적·변태적 범죄 행위로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 및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등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하향지표)(공통)	10.1	10.6	10.9	10.5	10.6	10.6	성폭력, 강력사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등 재범고위험군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적극적 개입 및 재범방지를 위해 목표치를 최근 3년 평균 재범률(10.66%) 이하로 설정	(당해년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자 수 / 당해년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 실시 인원) × 100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매월 작성하는 통계 및 보호관찰통계 분석 시스템에서 추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고위험 강력사범의 재범 방지 대책 강화

- 조두순 출소 이후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아동성폭력 범죄자 등의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출소 예정인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선제적 관리, 전자감독대상자 감독 강화,

전자감독 시스템 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업 확대 등 면밀한 강력
범죄 방지 대책 수립·시행

□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전문적·과학적 보호관찰 실시

- 보호관찰대상자 및 성폭력 대상자 등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관찰 영역 확대에 대응한 효과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방안 및 다양한 사회자원 연계 확대 필요

□ 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기능 강화

- 청소년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조속한 실효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

□ 특정 성폭력사범 고위험군 대상 특별과정 프로그램 운영

- 성폭력사범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치료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존재
-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업무담당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전문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전문 강사진 확보 및 직무 교육과정을 통한 역량 강화 추진

(4) 기타

-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cppb.go.kr>)
- 2021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계획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안내책자 및 범죄예방 정책소식
- 보호관찰 통계분석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pist.go.kr>)

(1) 주요내용

- 젠더폭력·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 수사역량 강화 교육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입체적 대응 강화
-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강화로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 확보
- 외국인 밀집지역·시설에 대한 방역점검·계도 강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 주요 출입국사범 대한 기획조사, 유흥·마사지업소, 국민 안전·일자리 분야 단속, 주요 불법체류 발생 국가와의 협력강화, 보호외국인의 안전보호와 신속한 출국 조치 등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의 불안요인 해소
- 비행청소년 대책 수립·시행, 일반 청소년 및 학교폭력 등 초기단계 비행청소년 대상 교육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 과정 신설 및 비행예방교육 역량 제고
- 전 세대별 맞춤형 법교육을 강화하고, 체험형·참여형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시민 양성 및 준법문화 조성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 젠더폭력·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 수사역량 강화 교육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활동을 통한 입체적 대응 강화

□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출소 예정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사전에 선별하여 출소 전 부착 명령 부과 요청, 적정 준수사항 추가 신청, 1:1 전자감독 지정 등 선제적 관리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전자감독 확대, 야간시간대 지도 감독 및 집중관제 등 밀착 지도감독 강화
- 전자감독대상자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 등 범죄유발 요인 억제를 위한 맞춤형 심리치료 확대
- 전자감독대상자 관리에 지자체 CCTV 활용 확대, 전자장치 성능개선, 범죄징후예측시스템 및 신상정보 등록관리시스템 고도화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19. 12. 시행)」 지속 시행, 외국인 밀집지역·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제도 강화 및 자진출국 유도
-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 유흥·마사지업소, 국민 안전·일자리 분야 단속
- 주한외국공관 및 관계부처(외교부 등)와 협업하여 보호외국인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
- 보호외국인의 반한감정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 및 親한국화 도모를 통한 강제퇴거 보호외국인의 안전보호와 신속한 출국 조치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사범·보호 인력 증원 및 이민조사의 과학화 등을 통한 단속 관련 인프라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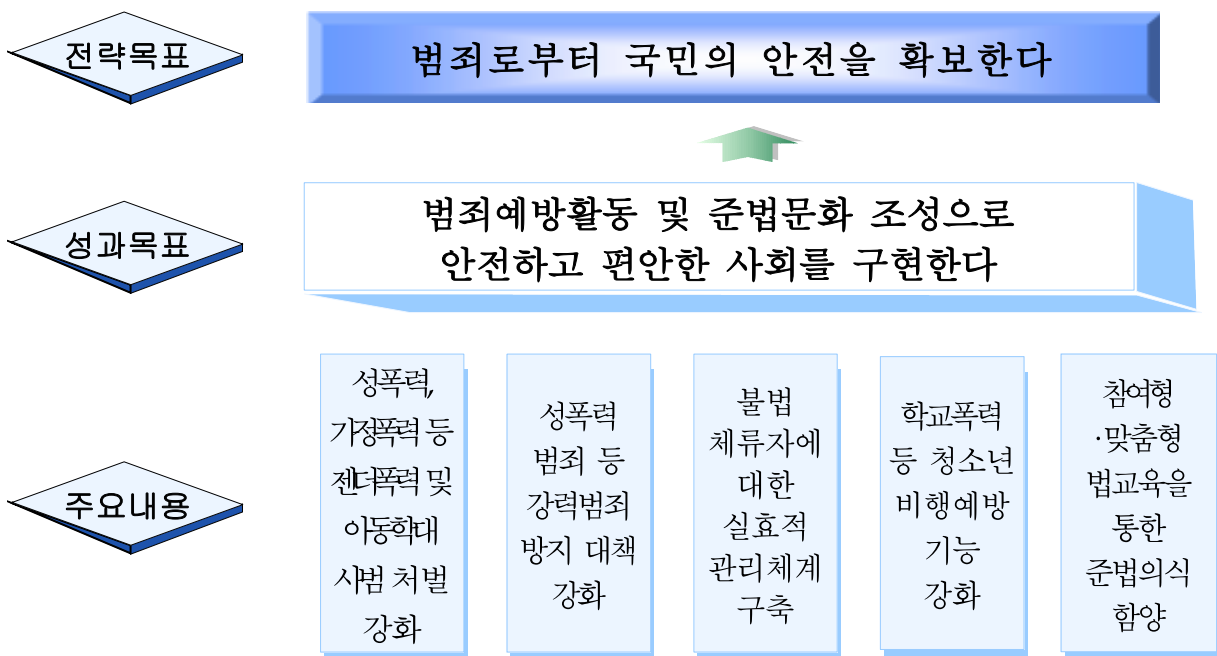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미설치 지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추진을 통한 비행예방교육기능 강화
- 초기단계 위기·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선도 활성화를 통한 적기 개입 강화 및 교육 효과성 제고
- 비행예방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인프라 전문성 강화

□ 참여형·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시민, 이민자, 탈북자 등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수요자 맞춤형 법교육 강화
- 청소년 대상 참여와 체험 위주의 법교육을 강화하여 법치주의 정신과 민주시민 의식을 재미있고 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준법문화 조성에 기여

《목표체계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전자감독대상자 1인당 대면 지도감독 횟수 (회)	- 신규 (37.4)	46.3 (46.5)		47.0	-전자감독대상자 1인당 대면 지도감독 횟수 -최근 2년간('19년~'20년) 평 균 실적인 46.4회 대비 약 1% 상향된 47.0회를 목표치로 설 정	연 중 전자감독 대상자 대면 지도 감독 횟수/ 전자 감독대상자 연도말 현재원	전국 57개 보호 관찰소 통계 보고서
비행예방교육 실시인원(명)	50,635	48,698	17,179	18,038	'20년 코로나19 감염병 확 산 예방을 위해 교육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실적이 급감하 였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환경 등을 고려 하여 '20년 실적 대비 5% 상향된 목표로 설정	학교폭력 가해학 생, 선도처분학생, 기소유예대상자 등 각 과정별 교육인원의 합	소년보호교육종합 관리시스템(TAMS) 입력결과
법교육 참여자 만족 도(점수)	87.6	88.3	89.4	89.5	법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평균이 '20년도에 목 표 대비 2배 이상 대폭 향상 (목표 0.4%향상 → 실적 1.1% 향상)됨에 따라, '21년 목표치 도 상향하여 직전 3년 평균 대비 1.3% 향상된 89.5점을 목표로 설정함	법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에 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흥미, 향후 프로 그램 추천 의향 등 7종에 대해 설문 조사	교육 실시 후 표준화된 온·오프라인 설문조 사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업체 의 통계 분석을 통하여 만족도 조사 결과 도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 상존
- 성폭력,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대상 범죄 전담검사 및 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통해 관련 범죄대응 수사역량 강화 필요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활동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응 시스템 강화
-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벌 강화

□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전자감독대상자의 98%가량을 재범 없이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전자장치 훼손과 강력 재범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 상존
-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한 24시간 밀착지도 및 시스템 개선, 관계기관 간 협업 확대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지속 강화 필요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19. 12. 시행)」 지속 시행, 외국인 밀집지역·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제도 강화 및 자진출국 유도
-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 유흥·마사지업소, 국민 안전·일자리 분야 단속
- 주한외국공관 및 관계부처(외교부 등)와 협업하여 보호외국인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
- 보호외국인의 반한감정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 및 親한국화 도모를 통한 강제퇴거 보호외국인의 안전보호와 신속한 출국 조치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사범·보호 인력 증원 및 이민조사의 과학화 등을 통한 단속 관련 인프라 확대 추진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전국 18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강원 강릉 등 센터 미설치 지역 존재, 지속적 교육수요에도 접근성 제한으로 지역 간 교육 편차 심각

-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18. 12.) 및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20. 7.)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이며,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한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

□ 참여형 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 의식 함양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종 대면 법교육 사업에 언택트 교육 체계를 병행 추진하여 유사시 빠른 대응 체계 구축
 - 법교육 전문강사가 온라인 강연 플랫폼(ZOOM, 시스코웹X 등) 숙지, 교육 현장 온라인 강의 수요에 즉각 대응
 - 외부전문기관 위탁 사업의 경우 용역제안서 작성시 온라인 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교육과정을 준비하도록 조치
 - 각종 대면 법교육 사업 추진시 강연 영상 사전제작,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과제 지정 및 피드백 과정, 온라인 백일장 개최 등 언택트 상황에 대한 대비·대안 프로그램 사전 구상
 - 기타 법교육 사이버랜드 콘텐츠 다양화 및 홍보, 법의식 향상도·만족도 온라인 조사 등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

(4)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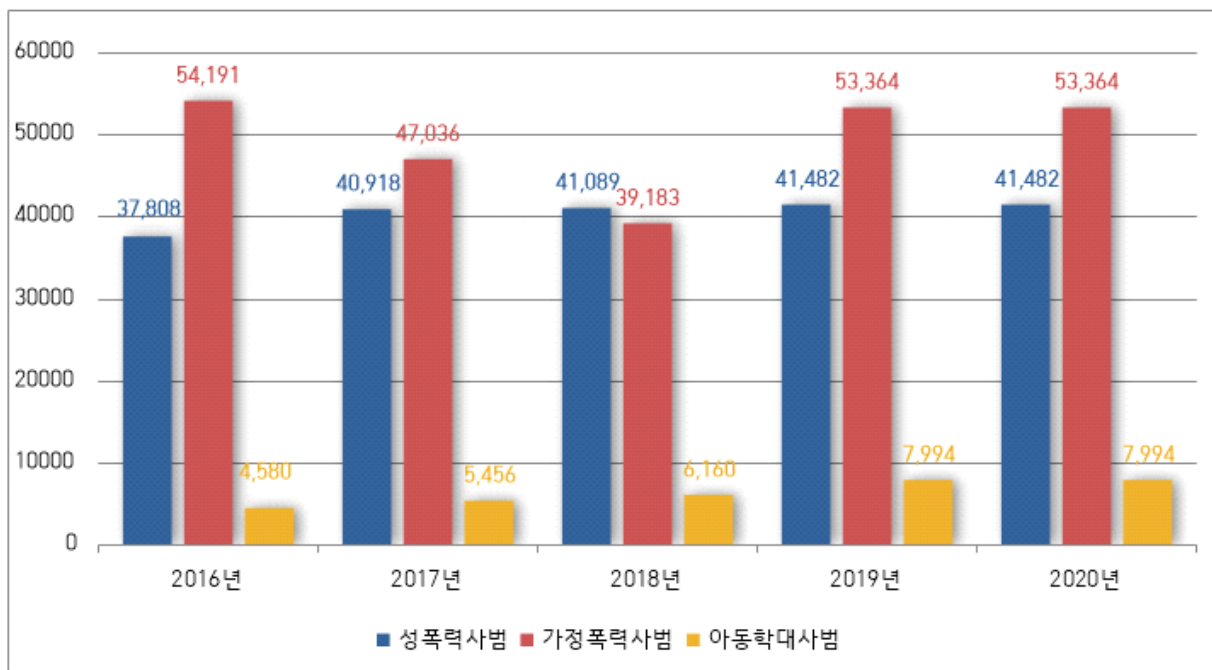
-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cppb.go.kr>)
- 2021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계획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안내책자 및 범죄예방 정책소식
- 보호정책과 홈페이지(<http://www.lawnorder.go.kr>)
- 법사랑 사이버랜드 홈페이지(<http://cyberland.lawnorder.go.kr>)

-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2019 개정판)
- 청소년의 법과 생활(법무부, 2019 개정판)
-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2020 발간)
 - 「법과 생활」 전 3권, 2021년 중 개정판 추진 예정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IV-1-①)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 상존



- 여성·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담검사 지정을 통해 형사처분·피해자지원 등 사건 전 과정에 걸쳐 책임수사 전개, 전담 수사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입체적 대응 강화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국 11개 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운영하여 각 청별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관련 범죄 전문 대응체계 내실화

-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 사건처리기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소지 사범 처리기준, 성범죄 관련 검찰사건처리기준 등 여성·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정비 및 세분화를 통해 관련 범죄 엄정 대응
- 성폭력 수사매뉴얼('18. 5.) 등 여성·아동범죄 관련 수사매뉴얼을 정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건 처리 유도
- 여성·아동대상 범죄 수사실무 등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 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여성·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입체적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 대응 정책 고도화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전국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회의 개최	1월	
	○ 전국 청 여성·아동대상범죄 전담검사 지정현황 점검 등 전담 대응체계 점검 실시(상반기)	2월	
	○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정비	3월	
	○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상반기)	3월	
2/4분기	○ 전국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회의 개최	5월	
	○ 성폭력 수사매뉴얼 등 여성·아동범죄 관련 수사매뉴얼 정비	6월	
3/4분기	○ 전국청 여성·아동대상범죄 전담검사 지정현황 점검 등 전담 대응체계 점검 실시(하반기)	8월	
	○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하반기)	9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4/4분기	○ 전국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회의 개최	10월	
	○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교육	11월	
	○ 유관기관과의 공동포럼, 간담회, 아동학대사건관리 회의 등 협업시스템 강화 활동	연중	
	○ 일선학교 학생 등 대상 출장강연(성폭력, 아동학대, 기타 폭력예방 관련)	연중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수사실무 등 전문화 교육(사이버 강의)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등

□ 기대효과

- 여성·아동대상 범죄 전담 수사체계 및 전문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과적 대응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의견 적극 청취, 사건의 적정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로 국민 안전 사회구현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전문 수사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간 협업 활동 추진실적(점수)	1,568	2,196	2,334	2,341	젠더폭력·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실효적 대응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 포럼, 세미나, 실무협의회 등 협업 활동 실적 전담검사 및 수사관 대상 전문화 교육 등 수사 역량강화 활동 실적 일선학교 학생 등 대상 범죄예방 강연 횟수를 성과지표로 채택 ※ 전년도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106.0%)를 감안하여 전년도 실적보다 0.3% 목표 상향 설정	젠더폭력,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포럼, 세미나, 실무협의회 등 개최 횟수, 매뉴얼 발간 (×10점)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간담회, 대책회의 개최(횟수×5점) 전담검사 및 수사관 역량강화 교육(횟수×교육 시간×참여 인원×1점) 법무연수원 사이버 교육 수강(횟수×수강인원×0.5점) 일선학교 학생 등 대상 범죄예방 강연 (횟수×0.5점)	유관기관과의 공동 포럼 및 간담회 자료, 교육자료, 일선 청의 정보보고, 언론 보도자료 등

②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Ⅳ-1-②)

□ 추진배경

-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강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1:1 전자감독 확대
 - 아동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1:1 전자감독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추가 지정
 - ※ '19년 4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후 '20년 말 기준 총 33명 실시, 향후 점진적 확대 추진
- 출소 예정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
 -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은 자를 사전에 선별하여 효과적인 재범억제책을 마련하고 출소 즉시 밀착 관리
 - ※ 출소 전 부착명령 미부과자에 대해 부착명령 부과 요청, 재범요인 차단을 위한 적정 준수사항 부과 신청, 1:1 전자감독 사전 지정을 통한 출소 직후 밀착 지도감독
-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지속 실시
 - 심야시간대 미귀가자, 외출자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귀가지도 등 야간 지도감독 강화
 - 관제센터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일일 이동경로 및 음주 등 재범요인을 상시 분석하고 실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상황에 선제 대응하는 집중관제 실시

- 재범요인 차단을 위한 외출제한, 음주금지 등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적극 신청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감독 강화
-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등 심리전문가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 등 개별 특성에 맞는 심리치료 실시

○ 경찰 등 전자감독 유관기관 공조 강화

- 경찰과 전자감독 협의회 개최, 전자장치 훼손자 검거 합동 모의 훈련(FTX) 지속 실시 및 대상자 정보 공유 확대 등

※ 전국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가 참여, '전자감독 협의회' 및 '합동훈련' 실시

○ 위치추적시스템과 지자체 CCTV 연계 확대

-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위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대처를 위해 지자체 CCTV 연계·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20년 대전·광주·서울(마포구 등 7개구), 강원도, 울산, 경기 부천·안산시, 충북 연계·활용 중, '21년 서울 강남구·도봉구·서대문구, 전남, 충남 등 연계 추진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및 안정적 운영

-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해 전자감독 전담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가능

※ 개정 「사법경찰직무법」 '21년 6월 시행 예정(전자감독 전담직원 사법경찰권 부여)

○ 전자장치 및 위치추적시스템 고도화 지속 추진

- 기존 '일체형 전자발찌'를 더욱 소형·경량화하고 전자식 탈부착으로 운영효율성을 높인 '2020년형 전자발찌' 보급 확대

※ '20년 10월 1293대 보급, '21년 1535대 보급 예정 및 694대 추가 보급 추진

- 대상자의 이동경로, 생활패턴 등을 분석하여 재범가능성을 탐지, 지도감독에 활용하는 범죄징후예측시스템 운영

- 음주상태에서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음주 여부를 상시 탐지하는 음주감응형 전자발찌 개발 추진

※ 산자부, R&D사업 예산 2년간 10.8억원('21년 12월 장치 개발 예정)

○ 범죄피해자 및 대국민 보호서비스 확대

- 기존 피해자의 주거지·직장에 한정된 접근금지 관리 방식을 개선, 이동 중인 피해자도 상시 보호가 가능한 피해자 보호서비스 확대
- 안전취약계층인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전자감독대상자의 범죄 예방 강화
-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를 통한 대국민 보호서비스 추진

* 위험에 처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흔들 경우 위치추적시스템이 해당 여성과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 정보 자동 분석 → 경보 발생 → 현장확인 등 대응

※ 서울, 안산, 안양 3개 지역 시범 실시('21년 5월 예정) 후 전 국민 대상 확대 추진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 강화

- 주거부정자, 신상정보 제출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신상정보 관리 철저
- 여성가족부·경찰청과 정기 회의를 통해 시스템 개선 및 소재 불명자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판결문 등 비전자기록물의 이미지화, DB화를 통한 통계 기능 강화 및 전자문서 사용환경 구축 등 신상정보 등록관리시스템 고도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TF 발족	2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일제 점검	2월	
	1:1 전자감독 심의위원회 개최	3월	
2/4분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실시	4~5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유관기관 협의회	5월	
	보호관찰소-경찰서 간 '전자감독 협의회' 개최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업무 지침 제정·시행	6월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 개정·시행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업무매뉴얼 개발·배포	6월	
	1:1 전자감독 심의위원회 개최	6월	
3/4분기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일제 점검	8월	
	'2020년형 전자발찌' 추가 보급	8월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 워크숍 개최	9월	
	1:1 전자감독 심의위원회 개최	9월	
4/4분기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일제 점검	10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워크숍(간담회) 개최	11월	
	보호관찰소-경찰서 간 '전자감독 협의회' 개최	12월	
	1:1 전자감독 심의위원회 개최	12월	
	신상정보 등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완료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전자감독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 운영으로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되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여성가족부(신상정보 공개·고지 주관), 경찰청(신상정보 확인 및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 발생 시 공조),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위치추적시스템과 지자체 운영 CCTV 연계 관련)

□ 기대효과

-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적 운영으로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최대한 억제

※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 재범률 : '19년 1.70% → '20년 1.27%

- 고위험 강력범죄자들의 재범을 선제적으로 방지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보호관찰(Ⅱ-1-일반재정①)				
① 보호관찰(1635)				
전자감독		일반회계	186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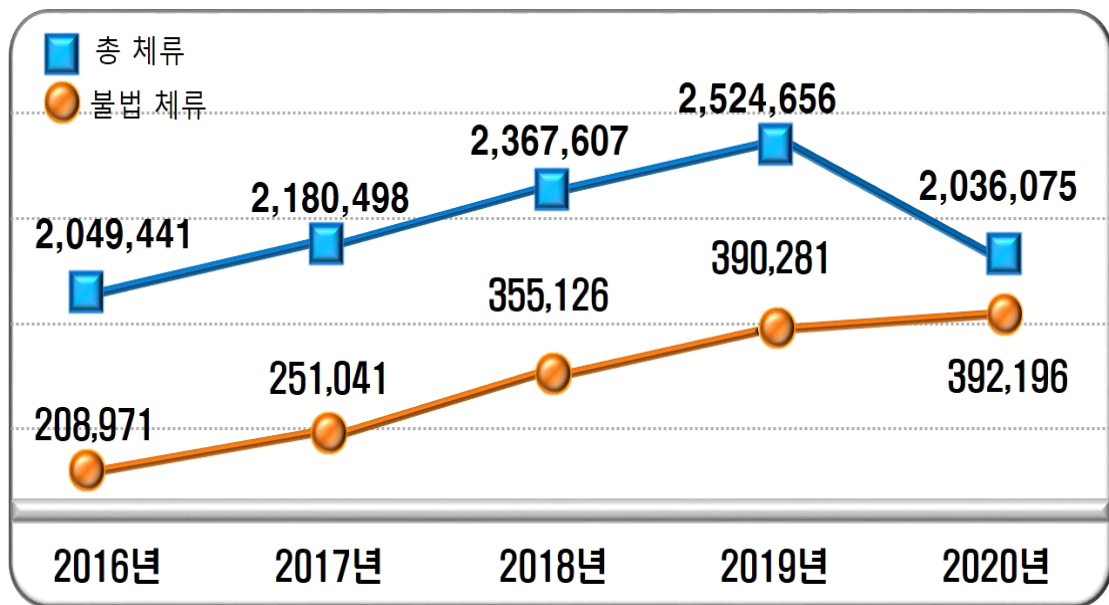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전자감독대상자 1인당 심리치료 집행횟수(회) (공통)	3.4	4.6	3.1	3.2	'20년에 이어 '21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년 실적 3.1회 대비 약 3% 상향된 3.2회로 목표치 설정	연중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 집행 횟수/전자감독대상자 연도말 현재원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실적보고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신속입력률 (%)	90.3	92.2	92.5	92.6	최근 3년간('18년~'20년) 평균 실적(91.6%)에서 약 1%p 상향된 92.6%를 목표치로 설정	(30일 이내 등록건수/신규등록건수)x100	신상정보등록관리시스템 통계보고

③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IV-1-③)

□ 추진배경

- 사증면제국가 국민의 입국 용이, 우리나라와 4~15배 임금 차이, 관광객 유치 등 개방정책에 따른 유입 증가,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



-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합법 외국 인력제도의 근간 훼손 등 제반 사회문제 야기

※ 다만, 코로나 19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감염확산 예방이 필요하여 대규모 단속은 자제, 방역·점검 계도를 통한 검진 유도

- 동감프로그램 시행 등으로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 및 반한 감정해소, 이들에 대한 보호기간 단축 노력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19. 12. 시행)」 지속 시행
 - 단속된 경우와 자진출국시에도 범칙금 부과 및 미납 시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체류질서 확립 및 신규 불법체류 유입 억제

-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한 단속·사범·보호인력 증원 추진
 - 단속·사범·보호 인력 증원 추진
-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참여 합동 방역·점검 제도
 -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정부합동단속으로 전환
- 특별단속지역 지정 및 단속·제도
 - 대규모 공단·건설현장 등 불법고용 만연지역을 특별단속지역 (전국 36개소)으로 지정하여 관리
-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
 -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순찰·단속, 제도 실시
-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유흥·마사지업소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활성화 및 테마별 집중단속 실시
- 외국인 보호시설 등에서 ‘동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호외국인의 반한감정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
 - 보호외국인 동감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점검·제도 강화
 - 별집촌·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밀집시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점검·제도, 통보의무면제 제도 홍보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	1월	
	○ 방역점검·제도 (외국인밀집시설 등)	1~2월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재지정	2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 고용노동부 합동, 방역점검·계도(외국인 사업장)	3월	
	○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진유도를 위한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3월	
2/4분기	○ 방역점검·계도(외국인 밀집시설 등)	4월	
	○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5월	
	○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 실무분과 위원회 ※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3분기(7~9월)로 연기	6월	
3/4분기	○ 방역점검·계도(외국인 밀집시설 등) 또는 정부합동단속(코로나19 상황 고려)	7월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계도/예고(홍보) 활동 실적 중간점검	8월	
4/4분기	○ 방역점검·계도(외국인 밀집시설 등) 또는 정부합동단속(코로나19 상황 고려)	10월	
	○ 동감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11월	
	○ 유흥업소 불법취업 외국인 및 알선 브로커 경찰 합동단속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 국민(방역사각지대 예방), 불법체류·취업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하고 있는 국민,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보호외국인
- (이해관계집단) 외국인인권단체(NGO),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한국노총·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외국인 불법고용 기업체 등

□ 기대효과

-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단속, 정부합동단속, 기획조사 강화, 특별단속지역 설정 및 집중단속 등 대응체제 강화로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외국인 체류관리(III-1-일반재정 ②)				
① 외국인체류관리(1233)		일반회계	452	477
	▪ 외국인보호관리(300)		151	166
	▪ 외국인체류질서확립(302)		89	6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불법체류외국인 적발 등 실적 (건)(공통)	34,555	37,059	14,162	15,578	-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단속 실적이 급감,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20년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치 설정 - '20년 실적에서 10%(1,416명) 상향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등 실적 -(가점) 위 원 회 개최(50), 기관 간 간담회 개최(30) ※ 1점=1건 환산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ICRM) 통계 (가점) 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 관련 개별 증빙자료
보 호 외 국 인 동감프로그램 만족도(점) (공통)	91.2	93.5	95.4	93.4	- 코로나19로 인한 각국 항공편 축소, 차단으로 보호기간 장기화, 정성지표(만족도)의 상승 한계 치 고려 최근 3년간('18.~'20.) 실적 평균치(93.4)로 설정	(화성외국인보호 소 만족도×40%) + (청주외국인보 호소 만족도 ×28%) + (여수출 입국사무소 만족 도×24%) + (인천 출입국사무소 만 족도×8%)	만족도 설문조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계도/예고 (홍보) 활동 실적(건)	(9,153) 신규 (47,812) (7,934)	21,571	23,728		-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단속 실적이 급감,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20년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치 설정 - '20년 실적에서 10%(2,157명) 상향 ※ 단속 계도/예고(홍보) 실적은 방역점검·계도실적을 포함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계도/예고 (홍보) 활동 실적 (건수) -(가점)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대국민 홍보활동 실적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ICRM) 통계 (계도/예고 실적) 또는 개별 입증자료 -(가점) 사진자료,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18년 실적은 47,812이나, 이중 11월~12월 실적(40,184건)은 별도 예산/인력을 한시적으로 동원하여 계도활동을 시행한 것으로 조정이 필요, '18년 1월~10월까지 평균 실적(762.8건)을 12개월로 환산한 9,153건을 '18년 실적으로 반영	→불법체류 관련 법령(50), 훈령(30)지침(15) 개선 (1회당 1점) →보조금 신청 기고 (1회 5점) →현수막, 홍보 배너 등 (1회 2점) →SNS(페이스북, 유튜브 등) 일반 포스팅 (1회 1점) ※1점=1건으로 환산	홍보 책자, 동영상, 페이스북 등 관련 자료 및 법령 등 개선 시 해당 증빙자료

④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Ⅳ-1-④)

□ 추진배경

- 비행예방교육의 지역 간 편차 및 교육 대상자의 원거리 이동 부담 해소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실현
-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되는 초기단계 위기·비행청소년 대상 교육·선도 활성화를 통한 적기 개입 강화 필요
- 비행예방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및 비행예방교육 효과성 증대를 위한 비행예방 교육 전문성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추진
 - '22년 3개 기관 신설을 목표로 정원 및 예산 확보 추진
 - ※ 신설 추진 지역 : 경북(안동), 강원(강릉), 전남(목포)
- 초기단계 위기·비행청소년 비행예방교육 활성화
 - 교육수요 발굴 등을 위한 학교·검찰·법원 등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20. 6. 11.)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특별교육 의뢰
 - 경찰 단계 소년사건 종결 시 '교육조건부 훈방조치(가칭)' 등을 제안하여 비행예방교육제도 활성화 지속 추진
 - 청소년 낙인 예방 및 자존감향상을 위한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계획' 준수 철저
 - ※ 지역별 감염 국면에 따라 교육·조사 중지 또는 재개, 교육실시 인원 조정 등 탄력적 대응

○ 비행예방교육 인력 및 프로그램 전문성 제고

- 인문학 인성교육 확대 및 교우관계 형성 교육 강화

※ '21년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표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신규개발 프로그램 연수 및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직원 교수역량강화

※ '청소년 폭력예방 및 절도예방 프로그램' 등 직원연수 실시 예정

<'21년 과제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21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계획 수립	2월	
	○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영상회의 개최	2월	
2/4분기	○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기법 등 직무연수	5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자특별교육 및 가족교실 운영	6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교육·법체험 운영	6월	
3/4분기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편람(매뉴얼) 개정	8월	
	○ 비행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훈령) 개정	8월	
	○ 비행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현장점검	9월	
4/4분기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11월	
	○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서 평가	12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규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추진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주요 정책수혜자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기소유예자·보호 처분 대상자 등 초기단계 비행소년, 위기청소년, 이 외에 일반학생, 교사,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반학교, 청소년단체, 검찰·법원·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연계, 정보교류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한 비행예방 기능의 효과성 제고
- 여가부, 교육부 등 부처 간 소년범죄예방 정책 협력 및 조정을 통한 청소년 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개입, 법의식 형성을 통한 비행 예방 및 상습 비행자로의 전이 차단
- 일반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법체험 등을 통한 건전한 성장 도모, 학교폭력 예방 캠프, 가족캠프, 직무연수 등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 범죄소년, 위기청소년에 대해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범죄 위험요인 완화 및 안정적 사회적응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년	'21년
소년보호(Ⅱ-1-일반재정③)				
① 소년보호(1632)	일반회계	60 (270)	56 (274)	
▪ 청소년비행예방(301)		60	5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비행예방교육 평가점수(점)(공통)	87.43	89.53	91.8	90	대안교육·상담조사 교육이수자 대상 무기명 교육만족도 조사 지표로써, '만족' 수준의 평가 점수인 80점보다 12.5% 상향한 90점으로 목표치를 설정	교 육 수 료 자 교육평가 점수의 합 / 교육평가 참여 인원	비행예방교육평가결과 및 BSC 성과관리시스템 입력결과
비행예방교육 운영률(%)	-	-	101.1 (신규)	102.6	연초 법무부에서 18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비행예방교육 실시인원 추세, 정책변화 및 지역별 특수상황 등을 고려 하여 교육계획서 상에 목표 인원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 대비 운영률을 측정하는 지표로, 전년도 실적대비 1.5% 상향한 102.6% 달성을 목표치로 설정 ※해당 교육과정 : 대안교육, 상담 조사교육, 보호자교육	교육과정별 교육 실시율 { (교육 실시인원 / 교육 계획 상의 교육 목표인원)*100 }의 평균	BSC성과관리시스템 입력결과

⑤ 참여형·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IV-1-⑤)

□ 추진배경

- 참여와 체험 중심의 대상별 맞춤형 법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 준법 문화가 확산됨으로써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 기여 모색
- 다문화가정, 이민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및 북한이탈청소년 등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계층을 위한 법교육·법체험 프로그램 강화 필요성이 증대
- 법교육의 대상이 확대되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간 법교육기관 및 교육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 업무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국 초·중·고교 및 학교밖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체험형 법교육 3종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체계 정립
 - (행복교실) 학교폭력·인성교육 등을 주제로 쉽고 재미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전국 초·중학교 대상으로 보급, 금년 중 사회 변화에 따른 주제로 '인권·법교육 신규 프로그램' 추가 개발·보급 예정
 - (학생자치법교육) 학교·학급 단위 스스로 자치규약을 제정하고 위반사항을 판단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체험토록 하며, 기존 운영학교의 등록제 유지·강화 및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한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 (꿈꾸는디케)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행하는 법·인권 체험 동아리를 육성·지원하여 청소년의 공감력과 긍정적인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민간 전문기관 공모·위탁을 통해 프로그램 및 사업의 전문성·내실 향상을 도모

※ '20년 사업 체계 신규 개발, 최초 시행을 통해 전국 70개팀 935명 참여

○ 소외계층 대상 법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

- 북한이탈 청소년 법교육,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등 프로그램 간담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등 소통 강화를 추진하고, 통일부 산하 하나재단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수혜 영역 확대 도모

※ 북한이탈 청소년 법교육 관계자 간담회 실시,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인권 관련 의견 수렴 및 워크북 개편 등 추진

○ 산간벽지·도서지역 등 법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법교육' 서비스를 제공

-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에 체험형 법교육 콘텐츠를 탑재한 이동식 버스를 파견하여 청소년 대상 법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로파크' 프로그램 운영('20년 총 668회, 12,165명 대상 실시)

○ 법교육전문강사가 일선 학교 등을 찾아가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등 진행하는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20년 총 2,731회, 243,129명 대상 실시)

○ 보호정책과·법사랑사이버랜드·전자도서관 등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온라인 법교육 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홈페이지 전면 리뉴얼을 통한 법교육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접근성 강화

○ 법교육·법질서 사업의 적극적인 민간전문기관 위탁 및 관계 부처 협업 등 외부 소통 활성화 (민간위탁 사업들, 교육부 협업)

- 법교육 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유인하여 법교육 활성화 도모
 - 강사관리, 출장강연형 프로그램 운영, 법교육 콘텐츠 개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민간위탁 추진
 - 교육부와 협조하여 자유학년제 학생자치법교육 콘텐츠 개발
-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일반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법질서 실천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캠페인 활동 '저스티스 서포터스' 운영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시민법교육 운영계획 수립	1월	
	○ 법과인권 체험동아리 운영계획 수립	1월	
	○ 법교육 출장강연 운영계획 수립	2월	
	○ 학생자치법교육, 모두가 행복한 교실 운영계획 수립	2월	
	○ 소외계층 법교육* 계획 수립	2월	
	○ 법교육 출장강연 프로그램 운영 위탁	3월	
	○ 법사랑사이버랜드 콘텐츠 제작 등 사업 계획 수립	3월	
	○ 법과인권 체험동아리 운영위탁 공모·선정	3월	
	○ 저스티스 서포터스 운영 계획 수립	3월	
	○ 소외계층(북한이탈, 이민자 법교육) 법교육 운영	3월	
	○ 모두가 행복한 교실 워크숍 개최	3월	
2/4분기	○ 강사 양성·관리기관 위탁 지정	4월	
	○ 법체험 동아리 모집, 선정 및 발대식	4월	
	○ 시민법교육(이로운 법률강연) 대면, 비대면 강연	4월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 학생자치법교육 워크숍 개최	5월	
	○ 소외계층(유아법교육, 어린이로스쿨) 법교육 운영	6월	
	○ 저스티스 서포터스 시상식 및 위촉식	6월	
3/4분기	○ 법교육 전문강사 신규 양성과정	7월	
	○ 법과인권 체험동아리 캠프 등 운영	7월	
	○ 소외계층 법교육 현장 등 모니터링	8월	
4/4분기	○ 법과인권 체험동아리 사례 발표회	11월	
	○ 저스티스 서포터스 최종 우수활동팀 선정 심사	12월	
	○ 학생자치법교육, 모두가 행복한 교실 운영보고서 평가 및 시상	12월	
	○ 법교육 출장강연 운영	연중	
	○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연중	
	○ 솔로몬로파크 법체험 및 법연수 운영	연중	

*(소외계층 법교육) 북한이탈청소년법교육, 이민자법교육, 아이가행복해지는법, 어린이로스쿨 등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법교육에 참여하는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과 북한이탈 청소년,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법문화진흥센터 등 민간법교육 기관

□ 기대효과

- 시민의식 향상과 준법문화 확산을 통해 일반범죄예방에 기여하고, 누구나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모두가 민주시민역량을 갖춘 안전한 사회 구현
- 법문화진흥센터 등 민간법교육 기관 참여를 통해 법교육 저변 및 민간 전문기관과 소통을 확대하여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0년	'21년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II-1-일반재정⑤)				
	①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1636)	일반회계	45	45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304)		(45) 45	45 4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 과 지 표	실적			목표치 '21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법 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가자 준법 의식 수준(점)	-	-	- (신규)	79.75	○ 목표치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변경 전 성과지표 법의식 향상도 산출에 사용된 설문조사 점수 중 차원인자정서행동 영역의 '20년 점수와 최근 5년(16년~20년) 동안의 차원 영역 표준편차 점수를 합산하여 '21년 목표치를 설정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의 목표치 부여 방식 표준편차 가감을 적용 - '21년 목표치에 최근 5년간 차원 영역 표준편차 점수를 반영함으로써 직전년도 '20년 성과 목표 이상의 도전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 '21년도 신규 지표로 목표치(79.75점)은 직전 년도(20년) 설문조사의 차원영역 평균점수(73.29점에 최근 5년간의 표준편차(6.5점)을 합산한 수치로서 성과지표 평가 근거인 최근 3년간 차원 평균 실적(66.15점)보다 22.4% 호 향상된 목표치이며, 직전 년도 실적(73.29점)보다는 8.8% 향상된 수치로서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된 목표 수치임 ▪ 외부환경 대비 - 대규모 대화형 법교육 프로그램의 폐지와 소규모 캠프형 전환 등으로 5종 프로그램을 제외한 참여인원 감소, 확대되는 법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전 부산 솔로몬로파크 및 '모두가 행복한 교실 운영 법교육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시민법률콘서트 어린이로스쿨 책으로 배우는 인성 프로그램의 확대, 신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고려 ▪ 개선사항 대비	○ 대표 법교육법질서 프로그램 6종 참가자의 법의식 수준에 대한 설문 조사 점수 ○ 측정산식: 법의식 수전점 = $\sum \text{교육과정별 평균 법의식 수준} \div \text{교육과정 수}$ 【하위산식】 1. 법의식 수준 = $\frac{\text{차원별 수준} \times \text{중합수준} \times 3}{10}$ 2 수전점 = $\frac{(\text{응답자} - 1) \times (\text{척도수} - 1)}{10} \times 100$ 3 모집단 및 측정방법: 법교육 이수자에 대한 준법의식 온라인 설문조사 4 측정시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측정 및 최종 실적치는 매년 12.31. 집계 5 측정내용: 인지적 영역(5문항), 정의적 영역(10문항), 행동적 영역(4문항), 종합수전(1문항)	외부전문기관 위탁 온라인 설문 실시

성 과 지 표	실 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기존 법의식 향상도 측정 문항의 조사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교육 프로그램 대폭 개편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신규지표 개발 및 '21년 적용		
법 교육 및 법 질서 프로그램 참여인원(명)	26,182	22,640	29,171	29,200	성과지표 평가기간인 3년 평균 실적('18년 26,182명 '19년 22,640명 '20년 29,171명 25,988명) 3년 평균 실적 대비 123% * 3년 평균 목표치('18년 25,888명 '19년 27,182명 '20년 25,810명) 26,233명 대비 11.0% 향상된 '21년 목표치 29,200명은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된 목표임	대표 법교육법질서 프 로그램 참가인원 수	자체 집계

(1) 주요내용

- 친사회성·대인관계·준법정신 등으로 구성되어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인성교육 강화, 수용자인성 함양을 위해 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교양·역사 등의 다양한 도서를 지원하는 수요맞춤별 프로그램 실시로 교정교화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수요가 많고 취업에 용이한 직업훈련 직종을 발굴하고, 교도작업을 통해 산업현장 적응력을 배양하며, 작업장려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과 사회정착금 마련 도모
- 모범수형자, 사회적 약자(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여 가석방 제도의 내실화 도모
- 수용자 건강권 등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라 의료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 내실화 도모
- 성폭력·중독사범 등 고위험군 특정사범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범방지 효과 달성
- 소년원생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 소년원 시설 소규모화 등 시설 개선을 통한 인권적 처우환경 조성하여 소년원 출원생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 도모
- 의료인력(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술직 등) 확보를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추진

- 과밀수용 해소 및 치료효과 극대화를 위한 중증환자 집중치료 병동 신축 상황 점검
- 피치료감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및 정신재활 치료 프로그램 운영
- 출소자에 대한 무상외래진료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전문처우 프로그램 등을 통한 행동변화 유도
- 보호관찰대상자 처우 프로그램 확대, 아동학대 대상자에 대한 전담직원제, 정부부처 및 다양한 사회자원 연계한 전문처우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한 행동변화 유도
-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기반 확대를 위하여 생계 기반 마련 지원 및 고용협력기업 지속 발굴 등을 통해 온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재범방지에 기여

□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집중인성교육은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준법정신, 친사회성, 자기통제 등 학습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
- 비대면 영상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수용자의 인성 함양을 돕고자 성별·연령 등에 따라 교양·역사·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수요맞춤별로 제공하여 수용자의 독서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등 프로그램 내실화 제고

□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산업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취·창업 유망 훈련과정 신설 및 직업훈련과정 개편을 통한 고급 숙련 기술인 양성
- 직업훈련·교도작업 참여 확대로 엄격한 정역 집행과 기술숙련 강화, 작업장려금 지급을 통한 건전한 근로정신 함양, 근로의욕 고취
- 직업훈련 연계 취업알선 확대, 고용협력업체 인프라 확충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수형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가석방 내실화

- 모범수형자, 사회적 약자(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 및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 지속 추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달성하고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으로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정신의료기관 입원조건부 가석방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중증 정신 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재범예방
- 가석방 심사의 전문성 강화와 실질적 심사를 위해 심층면접관 제도를 도입하고, 수형자 출석제도 활성화

□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재범 위험성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시간에 따라 과정을 구분하여 맞춤형 치료프로그램 실시
- 마약·알코올 등 중독사범의 중독 정도 및 재범 위험성에 따라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수용자 전문상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 직무 교육과정,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민간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여 직원 전문성 강화

□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 내실화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용자 필수예방 접종사업 실시
 - 코로나19 백신 접종, 잠복 결핵 치료사업, B형 간염 예방 접종 등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확산 방지
 - 수용동 도우미 등 주기적 PCR 검사 실시
 - 수용자 신속항원검사 및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등 지속 추진
- 원격의료센터의 운영·확대를 통한 의료처우 접근성 강화
- 다각적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 추진
 - 경력직 채용방식과 병행하여 임기제 채용방식 활성화
 - 의무관 확충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채용강화 방안 마련·시행
-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검진 실시
 - 신입수용자 대상 혈액검사 등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
 - 연 1회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정기 건강검진 실시
 - '21년 건강검진시 대장암표지자 검사대상 인원 확대
- 응급구조사 양성확대를 통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응급구조사(2급)위탁교육 실시 등 보건의료 인력 양성
- 교정공무원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연대회 등 실시
- 국가지급 및 자비구매 의약품 선정 회의를 통한 의약품 공급의 적정성 도모
-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
 -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및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 특성화학교로의 개편 등 교육 시스템 혁신을 통한 소년원 교육의 정상화
- 시설 소규모화를 통한 친인권적 생활환경 조성
- 초기 비행단계의 위탁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강화

□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환자 안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병실 수용 밀도 조정, 병상 간 거리 확대, 세면시설 및 환기시설 확충 등 시설 개선
-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 정신과 전문의, 일반진료 의사, 전공의, 영상의학과 공중보건과의사 및 간호인력 등 우수 의료인력 확보
- 치료효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치료방안 마련
 - 효과가 입증된 장기지속형 주사제 등 신약사용 확대를 통해 약물 순응도가 떨어지는 피감호자 및 퇴소자의 재발과 재범 위험을 감소
 -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프로그램 실시, 병동별 활동치료 실시
 - 원예치료활동, 수족관치료 등 정신재활치료프로그램 신설
- 치료감호 출소자에 대한 무상외래진료 지원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응력 향상

□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

- 과학적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보호관찰 프로그램 확대
 - 재범위험성평가도구,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을 활용한 보호관찰

대상자별 범죄유발요인에 따른 전문처우프로그램 실시로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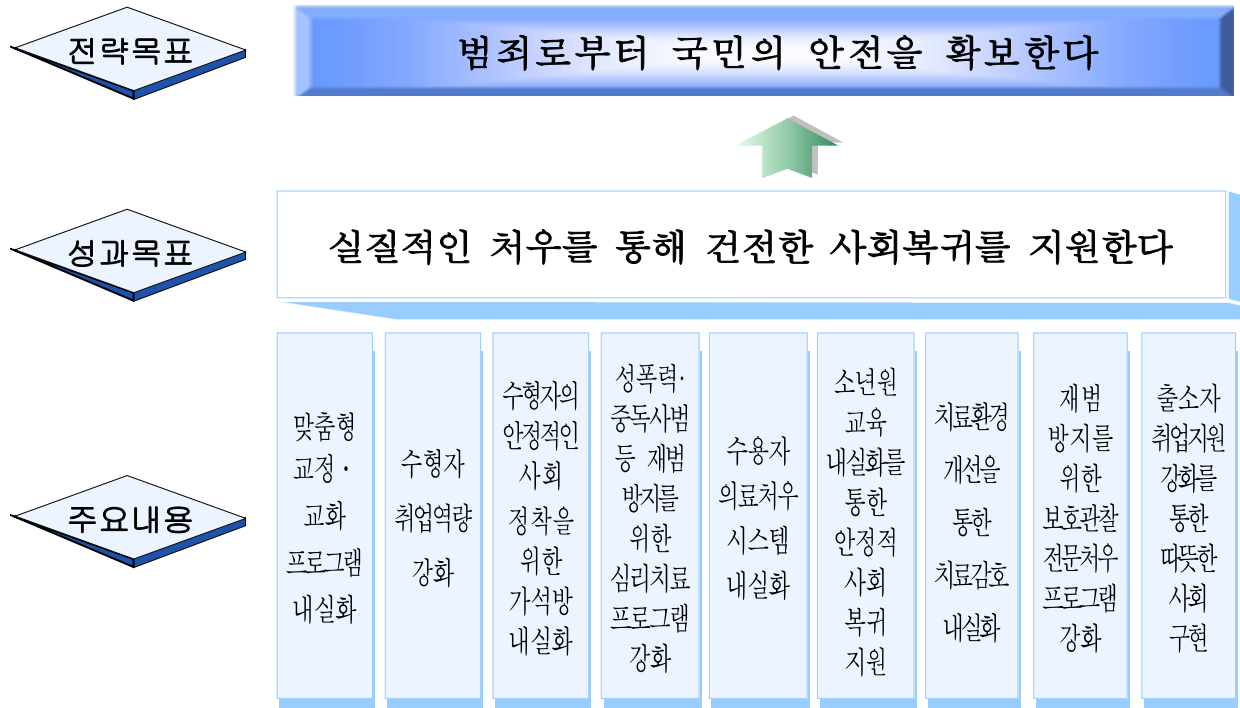
○ 아동학대·마약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 아동학대사범 전담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약물검사를 강화하여 재범 요인
사전 차단

□ 출소자 취업지원 강화를 통한 따뜻한 사회 구현

- 코로나 19 지속 확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서면 및 영상, SNS를
활용한 취업상담 및 구인 정보 제공 등 시대상을 반영한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으로 취업지원 수혜자 및 취업성공 지속 확대 추진
-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 취업역량 부족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법무
보호대상자를 위하여 고용협력기업 발굴 지속 확대를 통한 고용
기반 강화 지속 추진
- 취업 준비기간 중 심리상담 실시, 수당 및 원호 지원으로 취업에
대한 성취동기 부여와 생계 곤란 등으로 인한 이탈 방지
- 교정,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법무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회정착 추진
-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 연계 보호서비스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로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 출소자의 취업지원, 주거지원, 원호지원 등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로
수혜자 확대를 통한 재범방지로 국민안전 확보

《목표체계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교육·교화 프로그램 참여자만족도 (%)	72	74	74	76	-교육·교화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방식, 수용생활 도움 여부, 출소 후 도움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으로 설문조사하여 전체 응답자수 중 만족 이상 응답한 수를 나누어 백분율로 산정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 등으로 실적치 상승이 둔화되었으나, 상승국면 추세치 수준(2%)에 따라 성과목표 설정	(만족이상 응답자 수/총 응답자수) × 100	참여자 만족도 설문 조사 자료 및 분석
채용면접 수형자 취업실적(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	334	294	274	-'19년 신설 지표 -채용면접은 구인업체와 만남을 통해 근로조건 협의, 채용 약정 체결 등 사회복귀 준비를 지원함 -'20년 '코로나 19'로 인해 교정시설 출입이 통제 및	채용면접 참여 수형자 취업실적	자체 통계 자료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교정시설의 코로나 확산으로 취업알선에 어려움이 있어 목표치를 20% 하향하여 266명으로 조정 -'21년 목표치는 274명으로 전년도 목표치보다 3% 높임		
소년원 출원생 사회 정착률(%) (공통)	86.37	86.50	89.03	88.64	'18.~'20. 소년원 출원생 사회 정착률 평균값 87.30%에 연평균증가율 1.53%를 반영한 값 88.64%를 '21년 목표값으로 설정 ※ 사회정착률 : 소년원 출원 후 6개월간 사회정착 현황(적응, 위험, 부적응) 중 “적응” 상태의 매월 누적 측정값 ※ 사회정착 현황 : 적응(재학, 취업, 진학·취업준비), 위험(무직, 가출, 부적응(재비행))	[안정적 사회정착 인원(누계) / 소년원 출원(9·10호)인원(누계)] × 100	전국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률 정기 보고 문서 또는 성과관리 시스템 입력결과
피치료감호자 재입소율(%) (공통)	6.1	3.3	2.52	3.8	최근 치료감호소 재입소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피치료감호자는 심신장애, 약물 등 중독,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로서 완치율이 낮고, 외부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예측 곤란한 특성을 감안하여 '20년 실적은 2.52%이지만 최근 3년간('18.~'20.) 재입소율 실적 평균 대비 5%상향한 3.8%를 '21년 목표치로 설정함	출소 후 3년 이내 재입소 비율 ('18년 출소인원 중 3년 이내 재입소 인원/'18년 출소 인원) × 100]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통계 산출(월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공통)	7.2	7.2	7.3	7.2	성폭력, 살인 등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관찰 영역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대상자가 증가했음에도 관리 인력은 답보상태로 재범률 상승이 예상되지만 최근 3년 평균 재범률로 목표치 설정	(당해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 중 재범자수 / 당해연도 보호관찰인원) × 100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매월 작성하는 통계 및 보호관찰 통계분석시스템에서 추출
강력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처우 프로그램 실시 인원	5,953	7,673	9,261	8,010	코로나19로 처우 프로그램이 어려운가운데 강력사범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강력범죄 보호관찰대상자 처우프로그램 실시인원 최근 3년 실적보다 5% 향상한 목표인원을 설정	강력사범 처우 프로그램 실시 연인원 ※ 강력사범: 살인, 방화, 강도, 성폭력 등 7개 사범 가중료·가출소, 치료감호 기간 만료 후 보호관찰 등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처우 프로그램 실시 결과자료 및 보호관찰 정보시스템 상황기록
취업지원사업 수료자 취업률(%)	68.8	75.7	83.3	75.9	과거 실적과 '20년도 실적의 평균치를 반영하여 '21년에 75.9%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	-(취업자 수÷수료자 수)×100 -'21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수료자 중 취업자인원	취업지원사업 실적 월례보고 기준 결과 산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방지 대책으로 교육·교화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 발생('20. 1.~)
- 코로나19 관련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로 격상('20. 1. 27.)된 이후 현재까지 외부인사 참여가 불가피한 교육·교화 프로그램과 사회적 처우 등 운영에 차질 발생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가 조치 지시(경계단계)」 (의료과-990, '20. 1. 28.)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최우선하여 관련 부서 업무지시에 적극 협조
-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수준 하향 시, 사회적 처우 등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교화 프로그램 활성화
- 비대면 방식이 적용 가능한 사회적 처우 등 프로그램 개발

□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기관 내에 허그일자리, 채용면접 등 취업 행사가 제한되어 구직활동이 쉽지 않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 발생
- 코로나19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다양한 구직활동을 추진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시행
- 수형자의 취업장벽 해소와 안정적 취업처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과 수형자 취업연계 확대 및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사후관리 도모

□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가석방 내실화

- 가석방 관련 언론의 비판적 보도 및 국회의 지적에 따라 가석방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저하 가능
 - 가석방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언론·국회 등의 비판적 의견을 탄력적으로 수용
 - 가석방 제도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 및 오보에 대해 사후 대응 보다 선제적으로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언론브리핑 등을 통한 가석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 ※ 가석방 관련 홍보는 국민의 법 감정 등 고려하여 신중 필요
- 공정하고 투명한 가석방 제도의 운영으로 국민 신뢰성 제고

□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 강화

- 성폭력·중독사범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치료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존재
- 효과성 있는 심리치료 정책 집행을 위한 소속기관 심리치료과 신설 및 전문 인력 증원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필요
-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업무 담당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전문 강사진 확보 및 중독심리사, 생애위기상담사 등 민간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지원

□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 내실화

-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 총력 대응

- '20. 2. 24.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 최초 확진, 3차 대유행 이후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으로 '21. 3. 2. 기준 총 1,278명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교정본부 총괄 대책반으로서 코로나19 감염병의 교정시설 내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
- 4차 대유행 발생 시 '21년도 의료처우 실시율에 변수로 작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자 처우 조정표에 따른 의료처우 탄력적 운영 및 비대면 원격의료시스템 활용 등

□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의 전례 없는 전염병 감염의 위험 속에서 외부자원의 활용이 불가하여 자격증 시험 응시 기회의 감소 등으로 지표(교육과정수료자 1인당 교육목표달성도)상 교육성과가 하락

※ '20년 수용기관인 소년원의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유급강사, 시험감독관 등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보호소년등의 외출 금지에 따른 시험응시 기회 제한으로 교육성과 중 주요 실적 항목인 경시대회 입상건수와 자격 취득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37%와 23% 감소함

- 코로나 19바이러스 장기화에 대비한 자체인력 활용한 교육 활동 강화 추진 및 '22년부터 교육성과지표 개선하여 실질적 교육 성과 측정 예정

※ 교육목표달성도 : 각 교육목표 세분화 및 가중치 적용, 비행예방·인성교육 실적 반영

□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정신과 전문의, 일반진료과 의사 등 의료인력 부족

- '20.12 기준 의사 충원율 57.5%에 불과하여, 의사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특수의료장비 도입 예정에 따른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방사선사 충원 시급

○ 간호인력 충원 등 의료인력 확보 시급

- 유희병동 운영 및 근무연건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 필요

○ 과밀수용 해소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을 추진 중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 및 인력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 '20. 12. 착공하여 '23. 9. 완공을 목표로, 목표 내 완공을 위해 충분한 예산 및 운영 인력 수급 필요

□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

○ 보호관찰대상자 및 성폭력 대상자 등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관찰 영역 확대에 대응한 효과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방안 및 다양한 사회자원 연계 확대 필요

□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따뜻한 사회 구현

○ 특정범죄자 조○○의 사회복귀 후 출소자 지원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더욱 악화

○ 개별·집단상담 등 진행, 동행면접, 구인처 확보 등 대면 접촉이 중요하나 코로나 19 지속 확대로 난관 봉착 우려 ⇒ 교정기관·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비대면 상담 적극 도입, 화상 면접 등 실시로 선제적 대응 노력

- 출소자들은 대부분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능 부족·수감 생활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자립역량 부족 ⇒ 출소 후 취업에 대한 지속적인 어려움 존재
- 고용 등 출소자 지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 활동 전개
 - 출소자 지원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언론 보도 등 추진

(4) 기 타

-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cppb.go.kr>)
- 보호관찰 통계분석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pist.go.kr>)
- 소년보호기관 안내 책자 및 범죄예방정책 소식
- 치료·재활프로그램 연구 논문 게재(www.prism.go.kr)
- 보호관찰 통계분석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pist.go.kr>)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oreha.or.kr>)
- 교정본부 홈페이지(<http://corrections.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IV-2-①)

□ 추진배경

- 수형자 스스로 내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정·교화프로그램 시행
- 코로나19로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거나 제한된 상황에서 수용자의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독서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실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준법정신, 친사회성, 자기통제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집중인성교육 운영
 - 친사회성·자기통제력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보다 많은 수형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 수립
 - 집중인성교육 수료자의 재범개선도 평가 및 분석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개선 및 보안
- 교정시설 교양도서 활용, 수용자 스스로 인성 함양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With 코로나, 교정시설에 비치된 인문·역사 등의 교양 도서 활용도를 높여 수용자 인성 함양 도모
 - 교정시설에 수용자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교양 도서 보유량을 높이고, 도서 보급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
- 가족관계 회복·유지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으로 프로그램의 내실화

- 코로나19 상황에도 교정시설 수용으로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화상 가족접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가족 만남의 기회 제공
 -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현황을 조사하여 미성년 자녀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수용자에 대한 걱정된 처우 기준 마련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형 접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시설에 대한 경직된 이미지 개선
 - 여성수용자가 동화책을 녹음하여 6세 이하 자녀에게 전달하는 ‘엄마의 목소리’ 제도를 시행하여 엄마의 부재로 인한 자녀의 상실감을 완화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 강화
- 중·장기 수형자의 다양한 사회 적응훈련 및 처우 프로그램 도입으로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 사회적응훈련원 적정 수형자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에서 제한적으로 휴대폰 사용 등 천안개방교도소의 차별화된 계호 기준 마련
- 수형자 교정·교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송콘텐츠 개편 및 개발
- 국민이 참여하는 라디오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용자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 대국민 교정정책 홍보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으로, 수용자와 지역사회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교화방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방송 콘텐츠의 질적 개선 추진 및 사회적응 기여도 분석 및 평가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1년 사회복귀과 업무추진 유의사항 등 수립	1월	
	○ 수형자 미성년 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등)	2월	
	○ 화상 가족접견 운영계획 수립	2월	
	○ '20년 교정교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3월	
	○ '20년 집중인성교육 효과성 평가	3월	
	○ 가족관계 회복·유지 프로그램(엄마의 목소리 등) 선정	3월	
	○ 집중인성교육 실시	1~3월	
	○ 사회적 처우(가족접견 등) 시행	1~3월	
2/4분기	○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조사 실시	4월	
	○ 천안개방교도소 활성화 방안 수립	6월	
	○ 가족관계 회복·유지 프로그램(엄마의 목소리 등) 선정	6월	
	○ 교화방송 자문단 회의	6월	
	○ 대국민 교정정책홍보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	6월	
	○ 집중인성교육 실시	4~6월	
	○ 사회적 처우(가족접견 등) 시행	4~6월	
3/4분기	○ 교화방송 반응도 조사	9월	
	○ 가족관계 회복·유지 프로그램(엄마의 목소리 등) 선정	9월	
	○ 사회적 처우(가족접견 등) 시행	7~9월	
	○ 집중인성교육 실시	7~9월	
4/4분기	○ 교화방송 자문단회의	12월	
	○ 아동 친화형 가족접견실 증설	12월	
	○ 가족관계 회복·유지 프로그램(엄마의 목소리 등) 선정	12월	
	○ 비치도서 대여 실시	12월	
	○ 대국민 교정정책홍보를 위한 방송 콘텐츠 제작	12월	
	○ 사회적 처우(가족접견 등) 시행	10~12월	
	○ 집중인성교육 실시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실질적 재범방지 효과를 통해 안전한 사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국민
- 내면의 변화를 유도하는 집중인성교육과 인성 함양을 위한 독서 활동 등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의 기회를 갖는 수형자
- 가족관계 회복·유지프로그램을 계기로 가족관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형자 가족
- 프로그램 운영에 협업하는 관계부처·관계기관 및 사회단체

□ 기대효과

-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시행과 수용자 인성 함양을 위한 독서활동의 장려로 실질적 재범방지 효과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를 통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수용자에게 사회적응력 향상을 통한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
- 가족관계 회복·유지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 및 출소 후 변화된 사회로의 안정적 적응 유도
- 수형자 가족지원프로그램 참여 확대, 수용자 자녀의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수용생활 도모 및 수형자 자녀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유도
- 다양한 방송 콘텐츠 개편 및 개발로 수형자의 교정교화 효과 향상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년	'21년
교도소 운영				
①	재소자 수용 및 교화(1532)	일반회계	70	97
	▪ 교정교화(301)		70	9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집중인성교육 이수 인원(명)	신규 11,588	4,917		7,074	- 집중인성교육 이수 인원 - 코로나19 감염병 지속화로 교정 시설 외부강사 출입이 전면 통제 및 제한되어 비대면 영상강의를 통해 실시 가능한 집중인성교육 인원 고려 -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2020년 집중인성교육 이수 인원 4,917명 수치를 참고하여 목표치 설정	집중인성교육 이수 인원	자체 통계자료 활용 (연간실적)
교양 등 비치도서 대여 권수(권)	-	-	신규	86,771	- 비치도서 대여 권수 - 지난 5년간 각 교정기관의 비치 도서 대여 실적 평균을 목표 권수로 설정 - with코로나,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되어있는 상황을 고려, 교정 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독서활동 장려	비치도서 대여 권수	자체 통계자료 활용 (연간실적)

②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Ⅳ-2-②)

□ 추진배경

- 출소자의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재범이 최근 사회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출소 전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더욱 필요

※ ('21년 교정통계) 출소 후 3년 이내 재복역률 25.2%, 생계형 범죄인 절도죄는 50.0%

- (직업훈련) 취업유망직종 발굴, 직업훈련생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체계 품질을 개선하여 기업체가 선호하는 전문 기능인 양성

※ 취업유망직종 직업훈련 신설 : 지게차 운전, 웹디자인, 정보통신설비, 3D프린팅 기계설계 등

※ 직업훈련생 만족도 조사 반영

- (교도작업) 작업장 신축을 통해 교도작업 참여율을 높여 정역을 집행하고 실무중심의 기술을 습득하여 숙련 기술자를 양성하며, 교정작품전시회 출품작 제작, 신제품 개발로 생산성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2021년도 상반기 직업훈련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 직업훈련 개선사항 및 개설 희망직종 등 만족도 조사결과를 2022년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 교도작업 제품 품질개선 및 신제품 개발 간담회

- 교도작업 신제품 개발을 통한 직영작업 활성화로 수형자의 기술습득과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업무담당자 상호 간 소통과 정보공유로 교도작업 발전 추동력 마련

○ 교도작업 연계 직업훈련으로 훈련 효과 증대

-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교도작업을 통한 실무중심의 기술숙련으로 취업경쟁력 강화

※ 화성직훈(교) 목공인테리어, 경북직훈(교) 자동차정비, 안양(교) 도자기공예 등 교도작업 병행훈련 실시 중

○ 취업연계 강화를 위한 '취업매칭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

- 구인업체에서 제시한 필요직종과 인력소요 등에 따라 기능사 자격증 이상 기술 습득자를 대상으로 취업매칭반을 개설하여 실무 맞춤형 집중훈련 실시 → 출소 후 취업연계

※ 취업매칭반 개설 : 3개 기관, 6개 직종, 70명

○ 제50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 국민에게 '교정'을 알리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관심과 이해증진
- 교도작품 온라인 VR 병행하여 전시

○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활성화

- 화상면접 등 비대면 취업지원 실시로 안정적인 정책 추진

※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활용한 화상면접 시행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19) 3,627명 → ('20) 3,627명 → ('21) 3,700명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취·창업 지원 활성화
- 취업조건부 가석방 안정적 운영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1년 출소예정자 취업·창업교육 연간 계획	1월	
	○ '21년 교도작업 주요업무 추진 계획	1월	
	○ 상반기 직업훈련 및 1분기 단기실무 직업훈련	1월	
	○ '21년 작업장 신축 계획 시달	1월	
	○ 전국 직업훈련과장 영상회의	3월	
2/4분기	○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4월	코로나19 확산 시 연기
	○ 2분기 단기실무 직업훈련	4월	
	○ 보라미물 핫세일 행사	5월	
	○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6월	코로나19 확산 시 연기
3/4분기	○ 하반기 직업훈련 및 3분기 단기실무 직업훈련	7월	
	○ '21년 상반기 직업훈련 만족도 조사	8월	
	○ 전국 기능경기 대회 참가	9월	코로나19 확산 시 연기
	○ 실전창업교육 실시	9월~11월	
4/4분기	○ 4분기 단기실무 직업훈련	10월	
	○ 제48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10월	코로나19 확산 시 연기
	○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연중	
	○ 출소예정자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교정시설 수용기간 동안 직업훈련과 교도작업을 통해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전문기술인으로 사회에 복귀함으로써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의 1차 수혜자는 수형자와 그 가족이고,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재범방지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일반 국민임

- 취업·창업 유관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 기업체,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이해관계집단으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기대효과

- 수형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에 유리한 종목의 기술을 습득하고, 숙련·향상 과정을 통해 고급 숙련 기술인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취업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새 출발 도모
- 교도작업을 통해 건전한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실무중심 기술을 습득하여 산업현장 적응력을 배양하여 출소 후 취업을 통한 사회정착과 재범의 악순환 차단
- 취업연계 인프라 확대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연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 사회정착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¹⁾	'20	'21
교도소 작업운영 및 직업훈련(Ⅱ-2-일반재정(3))				
①	교도작업운영 및 직업훈련(1535)	교도작업 특별회계	69,976	69,065
	▪ 교도작업(300)	교도작업 특별회계	54,931	56,111
	▪ 직업훈련(301)	교도작업 특별회계	5,426	4,045
	▪ 시설보완(302)	교도작업 특별회계	9,619	8,90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정역집행률(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참여율) (%)(공통)	92.5	93.2	93.5	93.2	-최근 정역 집행률은 90% 이상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교정 시설에 작업장 부족 등 정역 집행을 위한 공간이 없는 한계 및 교정시설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과밀수용 심화로 작업장 일부를 폐지하여 수용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정역집행률 상승은 곤란함 -다만, 정역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수용자가 작업할 공간을 확보하고자 매년 작업장 신축을 추진 중이며, 목표치는 최근 3년치('18 ~ '20년) 정역 집행률 실적 평균보다 0.1% 상승한 93.2%로 설정	(당해연도 정역 이행자 수 / 당해연도 정역 집행 적격자수) × 100	자체통계 자료 활용
직업훈련수형자 만족도(점수)	72.8	73.7	74.3	73.7	-만족도 측정방식은 전체 직업 훈련 수형자 중 순수 만족 이상 답변한 인원을 측정하여 직업훈련의 궁극적인 효과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측정 방식으로 직업훈련의 다양화, 현실을 반영한 직업훈련 직종 발굴 등의 노력으로 인해 매년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 -매년 직업훈련의 만족도가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작년 목표치인 72.9% 보다 0.8% 상향되고 최근 3년치 실적의 평균보다 0.1% 상승한 73.7%로 설정	(만족이상 답변 인원 / 총 응답자수) × 100	자체통계 자료 활용

③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가석방 내실화(IV-2-③)

□ 추진배경

-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사회적 약자(환자·장애인·고령자 등)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고위험군 수형자(환자·노인) 등에 대한 가석방 확대 지속 추진
-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가석방 심사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심사기준 완화 및 심사제외 대상 최소화를 통해 공평한 심사 기회 부여
 - 심층 면접관 제도, 수형자 출석제도 도입으로 심층적 심사

※ 가석방 출소율('16.~'20.)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 출소인원 (형기종료+가석방)	28,515	31,596	30,452	29,187	27,599
가석방 인원(명)	7,157	8,275	8,693	8,174	7,911
가석방 비율(%)	25.1%	26.2%	28.5%	28.0%	28.7%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가석방 심사제도 개선(안) 수립 및 보고	3월	
2/4분기	○ 가석방 관련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4월	
	○ 심층면접관 제도 도입 추진	5월	
	○ 수형자 출석제도 활성화 추진	6월	
3/4분기	○ 가석방 업무담당자 교육	7월	
	○ 가석방 관련 「형집행법」 개정 추진	9월	
4/4분기	○ 가석방 업무담당자 워크숍(코로나19 관련 워크숍 개최가 곤란할 경우 서면 워크숍 대체)	11월	
	○ 가석방 확대를 통한 교정기관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 집단

- (수혜자) 모범수형자 등 가석방 지속 확대 및 관련 규정 개선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수형자와 그 가족, 재범률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 안전한 사회가 보장되는 일반국민
- (이해관계 집단) 가석방 출소자와 관련된 범죄피해자와 시민단체, 취업조건부 가석방 시 취업회사, 치료조건부 가석방 시 치료병원

□ 기대효과

- 심층적인 가석방 제도 정착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선별하여 재범률 감소를 통한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
- 모범수형자 등의 가석방 확대에 따른 기대감 상승으로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의지 촉진
- 코로나19 감염병 취약대상인 기저질환 수형자에 대한 기준완화로 교정시설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모범수형자 등 가석방자 인원 증가율(%)		신규	100 (3,273 명)	110 (3,600 명)	'20년 신규과제로 '20년도 실적인 3,273을 감안하여 '21년에 10% 증가하여 설정 ※ 모범수형자 등 : 모범적인 수형 생활로 가석방 인센티브 적용자, 보호사범(환자·장애인, 고령자), 취업연계 및 치료조건부 가석방자, 미성년 자녀양육자	'21년 모범수형자 등 가석방 인원 / 전년도실적 X 100	자체통계 자료 활용
가석방 내실화를 위한 노력(점)		신규	160	180	'20년 신규과제로 '20년도 실적인 160점을 감안하여 '21년에 12.5% 증가하여 설정	법령, 지침 개정 (각 20점) 제도개선 (각 20점) 보도자료 배포·취재요청 등 언론 대응(각 5점) 담당자교육 및 워크숍(각 20점) 유관부서 업무 협의(각 5점) 가석방 추가신청 (각 10점)	결과보고, 보도자료 등

④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IV-2-④)

□ 추진배경

- 아동 성폭행범 조OO 출소,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빈번한 언론보도 등으로 관련 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고조되는 상황
- 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및 동기 없는 범죄, 중독범죄 등 고위험군 특정사범에 대한 전문적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수용자 상담을 통해 재범방지
-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이수명령 법제화에 따른 원활한 이수명령 집행 및 내실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및 범인성 개선
 - 중독사범 범인성 개선을 위한 치료공동체 도입
 - 디지털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초 매뉴얼 개발
 - 마약류 사범 치료프로그램 운영체계 개편
 - 마약류 투약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 재범 고위험군 집중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수용자 전문상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직원 역량 강화
 - 임상심리사 2급(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과정 운영
 - 중독심리사, 생애위기상담사 등 심리치료 분야 민간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 전문상담 실무 과정, 심리치료 전문 과정 등 내실 있는 직무 교육과정 운영
- 심리치료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 수련감독자 훈련과정 운영
- 전담직원 상담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상담 사례회의(수퍼비전) 운영
- 우울특화 심리치료 담당직원 워크숍, 심리치료 담당자 영상회의 등 전문 분야별 회의 개최

○ 고위험군 특정범죄* 수용자에 대한 전문적 심리치료 실시

- 범죄 특성과 재범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전문상담과정 운영을 통해 재범 고위험군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및 재범방지 도모

* 범죄행위의 동기, 방법 등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 성폭력·마약·아동학대사범 이수명령 집행, 알코올·도박 등 중독사범, 동기 없는 범죄, 정신질환 수용자 등에 대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범죄성 완화를 위해 노력
- 가학적·변태적 성폭력사범 등 특정 성폭력사범*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 효과 유지 및 체계적·지속적 관리를 위해 특성화된 추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및 재범예방 도모

* 가학적·변태적 성폭력사범,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전문상담 사례회의 운영 계획 수립	1월	
	○ 성폭력사범 심화과정 운영기관 회의 개최	1월	
	○ 핵심(Core)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립	2월	
	○ 디지털 성범죄자 심리프로그램 기초매뉴얼 개발 계획 수립	2월	
	○ 비대면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립	2월	
	○ 수용자 '문제해결상담 가이드라인(표준안)' 개발 T/F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2월	
2/4분기	○ 심리치료 전문 자격증 취득 방식 이원화 추진	3월	
	○ '임상심리사(2급) 취득'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3월	
	○ 생애위기상담사 비대면 교육 과정 신설	4월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선 계획 수립	4월	
	○ 마약류 투약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5월	
	○ 전문상담 수련감독자 훈련과정 운영	5월	
	○ 마약류 투약사범 교육 담당자 교육 실시	6월	
	○ 우울특화 심리치료 담당직원 워크숍	6월	
3/4분기	○ 수용자 '문제해결상담 가이드라인(표준안)' 개발	7월	
	○ 중독사범 범인성 개선을 위한 치료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8월	
	○ 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 개편 운영	8월	
	○ 심리치료 업무 소통 활성화를 위한 영상회의 개최	9월	
4/4분기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담당직원 워크숍	10월	
	○ 법무부 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회 회의	11월	
	○ 디지털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초매뉴얼 개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수용자 및 그 가족
-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기관

□ 기대효과

- 효과성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전문상담 운영으로 수용자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안정된 수용생활 보장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기반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성폭력사범 심화교육 수료자의 왜곡된 성의식 점수 감소율(%)	27.8	28.5	30.1	30.4	-'19년, '20년 왜곡된 성의식 점수 감소율을 감안하여 '21년 30.4% 감소를 목표로 산정(0.3% 증가) ※ 왜곡된 성 의식 점수 : Burt(1980)가 개발한 강간통념 수용척도를 이석재(現 PSI컨설팅 소장, 뉴욕주립대 박사) 박사가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 가해자의 왜곡된 성의식 측정 도구	-교육전후 왜곡된 성의식 평가, 감소 정도 비교	자체 통계자료 활용 (연간실적)
심리치료프로그램 전문화 실적(점수)	170	220	250	255	-심리치료프로그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TF회의, 사례분석 회의, 자문위원단 회의, 직원 전문화 교육 등을 실시한 실적을 점수화 함 -'20년 실적치(250)를 고려하여 적극적 목표 설정	-워크숍 등 각종 회의 개최, 직원 전문화 교육 건수 ×5점+프로그램 개발×30점	연간실적으로 활용

⑤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 내실화(Ⅳ-2-⑤)

□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진료체계의 새로운 의료패러다임 전환 등 의료환경 및 시스템 구축·개선을 통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도모
 - 원격의료시스템 추가 구축 및 확대·운영,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
-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의료처우 강화 필요
 -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감염병 예방 의료활동 강화 및 홍보, 감염병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외부 건강검진 시 암 조기 발견을 위한 대장암 표지자 검사 대상인원 확대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확산 지속 대응
 - (수용자 백신 우선 접종) 교정시설은 코로나19에 취약한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으로 대규모 과밀 교정시설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용자의 백신 접종을 통한 수용자 건강권 확보 필요
 - ※ 전국 교정시설 총 54개 기관, 수용자 51,441명('21. 2. 17. 기준)
 - (주기적 PCR 검사) 교정시설 종사자 및 접촉이 많은 수용자 주기적 PCR 검사 추진
 - (사전 점검활동 강화) 소속기관 방역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점검을 통한 코로나19 교정시설 유입 차단
- 비대면 원격의료시스템 확대 운영
 - 원격의료시스템의 추가 구축을 통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료 실시
 - ※ 원격의료시스템 6개 기관 추가 구축 : '20년 47개 기관 → '21년 53개 기관

- 원격의료센터의 전문인력 충원 및 진료과목 확대, 직제화 추진

○ 예방 의료활동 강화

- 교정시설 외부 전문소독업체 방역 소독 강화
 - ※ '20년 연 6회 → '21년 월 1회 이상으로 강화
- 감염병 예방 등 교육 및 홍보
 -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국내 원인불명 감염병의 확산 등 위기상황 대응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내실화 및 자체 훈련 실시
 - ※ 계절별 감염병에 대한 대응지침 시달 등을 통한 경각심 고취
 - ※ 교화방송을 통한 홍보 : 감염병 예방 수칙 수시 교육
- 수용자 건강검진 시 간염 보균자 대상으로 B형 간염 예방접종 실시
 - ※ 간암 표지자 검사 시행 : B, C형 간염보균자 대상
- 4가 독감백신, 잠복 결핵치료 사업 실시
 - ※ 4가 독감백신 : 기존 H1N1, H3N2, Victoria + Yamagata 추가
- 외부 건강검진 시 암 조기 발견을 위한 CEA(대장암 표지자 검사) 대상 인원 확대
 - ※ '20년 만65세 중 희망자 → '21년 만61세부터~만65세 중 희망자('21.2.24. 기준 3,646명)

○ 의료인력 직무역량 강화

- 의료인력(공중보건 의사, 간호사, 의료과 직원 등) 전문 보수 교육 등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 교정공무원 응급처치 역량 강화

- 응급구조사 2급 양성 교육, 전국 교정기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하트세이버 선정, 직원 및 수용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 등

○ 전문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소통 및 홍보

-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소통 간담회, 홍보영상 및 리플릿(Leaflet) 제작 및 배포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소속기관 특별 현장점검	2월	
	○ 코로나19 대응 수용자(청소부) 주기적 PCR 검사	2월	
	○ 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격리 절차 및 자체 훈련	3월	
	○ 교정기관 외부전문업체 방역소독 실시	3~12월	
	○ 공중보건 의사(대표) 간담회	3월	
2/4분기	○ 국가지급의약품 공통품목 선정 회의	4월	
	○ 수용자 외부기관 건강검진 실시	5~12월	
	○ 혈액투석 공통품목 선정 회의	5월	
	○ 상반기 하트세이버 선정 및 포상	6월	상·하반기
	○ 자비구매의약품 공통품목 선정 회의	6월	
3/4분기	○ 원격의료시스템 추가 구축	7월	
	○ B형 간염 예방접종	9월	
4/4분기	○ 첨단의료장비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	10월	
	○ 하반기 하트세이버 선정 및 포상	11월	상·하반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11월	
	○ 의료인력(의무관 등) 간담회 개최	11월	
	○ 전국 교정기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12월	
	○ 응급구조사 양성	12월	
	○ 잠복결핵사업 실시	12월	
	○ 교정종사자 및 수용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차단 관련 중앙부처
- 외부 전문기관 건강검진 대상 수용자 및 기관 내 원격의료센터 적용대상 수용자
- 수용자 건강검진 외부 의료전문기관
- 원격의료시스템과 연계된 협력병원
- 교정 현장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처치하는 교정공무원

□ 기대효과

- IT 기술과 교정 의료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강화·유지하며 수용자에게는 의료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효과
-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건강한 수용 생활 보장 및 건전한 사회복귀 기반 마련
- 교정시설 내 감염병 차단 및 예방 의료활동과 응급상황 대처능력의 향상을 통한 교정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교도소 운영(Ⅱ-2-일반재정②)				
①	재소자 수용 및 교화(1532)	일반회계	227,2	239,0
	▪ 수용관리(300)		220,2	229,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수용자 의료처우 실시율(%)(공통)	116	116.2	97.3	98.0	-원격의료, 외부의료시설 진료, 정신질환진료 건수('20년 실적과 '21년 실적 비교산출) ① 원격 의료건수 ② 외부의료시설 진료건수 ③ 정신질환 진료건수 ④ ①+②+③합산값 ⑤ (④÷일평균수용인원)×100	(진료실적 증감률 /수용인원증감률) ×100 · 진료실적 원격의료건수+ 외부의료시설 건수+ 정신과진료건수	기관별 의료처우실시율 결과보고 및 교정통계
원격의료 이용자 만족도(%)	66.3	67.6	67.9	68.1	-수용자 의료서비스 만족도 등 정책 효과를 포괄하는 지표 -원격의료 만족도 : 수용자 만족 이상(%) 산출	(만족도 조사 중 긍정적 답변지수/ 총 응답자 수) ×100	원격의료 이용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⑥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Ⅳ-2-⑥)

□ 추진배경

- 소년원생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처우환경 개선 필요성 증대
- 소년원 시설 소규모화 사업 등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권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 출원생에 대한 사후지도, 정신과 무료진료, 민간자원 연계 등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필요
- 비교적 비행이 심화되지 않은 위탁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및 분류심사 제도 운영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직업훈련 소년원을 특성화학교로 운영하여 정규학력 취득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 인성교육 및 비행예방 프로그램 확대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한 소년원생의 근본적 변화 유도
- 서울, 부산 등 다인실 위주의 소년원을 침대와 화장실이 구비된 소규모 생활실로 리모델링하여 인권보장과 수용안정 도모

※ 대구·춘천·광주·청주·전주·대전 등 6개 기관 리모델링 완료

-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과 비행진단 위주로 운영하였으나, 초기 비행단계 위탁소년의 비행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인성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개편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우수한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효성있는 교육 실시

- 적극적 사후지도 방안마련, 소년원 출원생 무료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행 등으로 소년원 출원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

※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출원 후에도 소년원 교사가 출원생에 대한 사후 지도 실시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소년보호기관 교육계획 수립	3월	
	○ 코로나19 확진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수립	3월	
	○ 대구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계획 시달	3월	
2/4분기	○ 인성교육 강사양성 과정 운영	4월	
	○ 소년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간담회 개최	5월	
	○ 부산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착공	6월	
3/4분기	○ 소년보호기관 진정실 설치 완료	7월	
	○ 소년원학교 교원직무연수 과정 운영	9월	
	○ 대구소년원 교과 교육과정 신설	9월	
4/4분기	○ 소년원 학사서무 간담회	10월	
	○ 전국 소년보호기관 분류심사관 컨퍼런스 개최	11월	
	○ 소년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세스 구축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 제8~10호), 법원소년부의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소년법 제18조),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 제7호) 및 각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
- (이해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치유교육), 고용노동부(직업체험), 한국건강관리협회(무료건강검진), 대한결핵협회(무료결핵검사) 등

□ 기대효과

- 소년원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처우를 제공하여 교정교육의 효과 제고 및 자립역량 마련
- 학업연계, 취업알선, 사후지도,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출원 후 재비행 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 실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년	'21년
소년보호(II-1-일반재정③)				
① 소년보호(1632)		일반회계	270	274
▪ 소년원생수용(300)			209	21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교육과정수료자 1인당 교육목표 달성도 (건)(공통)	4.21	4.44	4.06	4.28	최근 5년간('16.~'20.) 평균실적(4.23건) 연평균 증가율(1.14%)을 반영한 4.28건을 '21년 목표치로 설정	연간 학과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이수자 교육실적(검정고시 합격, 자격취득, 경시대회입상, 진학, 학적회복, 전·편입학, 졸업장취득) / 학과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수료자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 입력 결과

7]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IV-2-⑦)

□ 추진배경

- (목적) 치료감호법에 따라 정신질환, 약물중독, 정신성적장애 등 피치료감호자별 증상에 맞는 치료·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도모
- (치료활동)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상담치료, 약물치료, 정신 재활치료교육, 단약교육, 인지행동치료, 직업훈련 교육 등을 통해 증상개선 도모
- (사후관리) 치료감호소 출소 후 증상악화로 인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무상외래진료 지원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 전국 5개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최장 20년 동안 무상으로 외래진료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의료인력 확보 지속 추진
 - 의사 채용방법 다양화를 통한 우수 의료인력 확보
 - ※ ‘메디케이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뉴스레터’ 등 의사 전용 유료 사이트를 통해 채용 홍보 강화
 - 영상의학과 및 정신과 전공 공중보건과의사 배정 추진
 -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와 업무협약 추진
 - 민간병원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신과 전문의 처우개선 추진
 - ※ 보수 인상, 관사 리모델링, 해외학술대회 활동 지원 등
 - 유희병동 운영 및 병동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증원 추진
 - ※ '22년 유희병동 운영 간호인력 증원 추진

○ 치료환경 개선으로 피감호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환경 제공

- 수용과밀 해소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400병상 규모의 중증 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진행상황 점검
- 병상간 이격거리(1m이상) 확보, 병실 수용인원 하향 조정, 병실내 세면 및 환기 시설 확보 추진
- 피치료감호자 선호도가 높은 수족관 치료, 천연염색 등 정신재활 치료(작업치료) 프로그램 확대 추진
- 원예치료 도입을 통해 치료감호 내실화 촉진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시 치료·재활프로그램 일시적 중단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 운영 예정

- 모범환자 및 단독가구·무의탁환자들에게 갱생보호육성기금 연계를 통한 보관금 지원 추진

○ 치료감호 내실화를 위한 연구

- 치료감호기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등 외부 연구용역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정신재활치료(특수치료) 및 직업훈련 계획 수립	1월	
	○ 의료인력 및 병동 운영인력 채용 절차 진행	2~3월	연중
	○ 의무직 채용 완료 배치	2월	
	○ 공중보건 의사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보건복지부)	2월	
	○ 의료인력(의료기술직, 방사선사 등) 채용 완료 배치	3월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2/4분기	○ 의료인력 및 병동 운영인력 채용 절차 진행	4~5월	연중
	○ 원예치료 도입(시설 조성, 프로그램 운영)	4~5월	
	○ 각종 연구용역 프로그램 등 계약	4~6월	
	○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진행 상황점검	6월	
3/4분기	○ 의료인력 및 병동 운영인력 채용 절차 진행	7~9월	연중
	○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범운영 상황점검	9월	
	○ 병동 등 노후시설 개선 추진 상황점검	9월	
	○ 각종 치료프로그램 실시	9월	
4/4분기	○ 전공의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보건복지부)	9~10월	
	○ 의료인력 및 병동 운영인력 채용 절차 진행	10~12월	연중
	○ 각종 연구용역 프로그램 등 개발 완료	12월	
	○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진행 상황점검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피치료감호자와 피감정유치자 및 출소자
- (이해관계집단) 보건복지부(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피치료감호자 치료 및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 법원·경찰청(형사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유치)

□ 기대효과

- 내실 있는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치료의 질 향상
- 소아성기호증 등 성폭력범죄자의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정신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 내실화로 사회복귀 및 사회적응력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치료감호(I -1-일반재정②)				
① 치료감호(1634)		일반회계	76	86
▪ 치료감호자수용관리(300)			76	8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치료재활프로그램 만족도(점수)(공통)	83.5	84.0	88.3	89.5	'20년 실적은 88.3점이나, 피치료감호자의 인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만족도를 급격하게 상향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3년 실적 평균 대비 5%상향한 89.5점으로 설정	치료재활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점수의 합 / 응답자 수×100 ※매 월 출 소 예정자 대상 치 료 재 활 프 로 그 램 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	치료감호소 분기 보고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결원율(%)(공통)	-	25.8	24.1	23.7	최근3년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등 의료인력의 채용 인원대비 면직인원 비율과 결원율, 그리고 채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원과 현원을 의무직에 5배 가중, 약무직에 2배 가중하여 '19~'20년 의료인력 결원율 25% 대비 5%상향한 23.7%로 설정	(1-현원/정원)×100 ※의무직에 현원 및 정원 5배, 약무직에 2배 가중함	치료감호소 직원현황

Ⅷ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Ⅳ-2-⑧)

□ 추진배경

- 지속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증가와 보호관찰 대상 영역 확대에 대응한 전문처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보호관찰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과학적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보호관찰 프로그램 확대
 - 현행 5단계로 운영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 분류등급 체계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보호관찰 개시 초기 면담역량 강화 및 저위험 대상자 개입 감소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방안 마련
 - 주취·정신질환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초기 선별검사 확대 추진
 - 대상자와 라포 형성 및 면담 역량강화를 위한 보호관찰 독립면담실 추가 설치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원호지원 확대
 - 교사·보호관찰위원 등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검정고시 무료 학습권 지원, 검정고시 학습 멘토 프로그램 등 실질적 원호지원 확대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보호관찰소 지도·점검 계획 수립	3월	
2/4분기	· 한국보호관찰 학회 개최	5월	
	· 보호관찰소 대기실 동영상 제작	6월	
	· 디지털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6월	
3/4분기	·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7월	
	· 사범별 지도감독 기법 재정립을 통한 효율적 지도·감독 방안 마련	9월	
4/4분기	· 수강프로그램 우수 강의안 및 강의 콘텐츠 공모전	10월	
	· 한국보호관찰 학회 개최	11월	
	· 보호관찰 독립면담실 추가 설치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 원호, 전문처우 프로그램을 이수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 (이해관계집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원호), 고용노동부(취업지원), 교육부(교사멘토링),

□ 기대효과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전문처우 프로그램 통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및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0	'21
보호관찰의 실효성 제고(II-1-일반재정①)			
① 보호관찰(1635)	일반회계	30,692	34,995
		(30,692)	(34,995)
▪ 보호관찰활동(300)		12,005	12,780
▪ 특정범죄자관리(301)		18,687	22,2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10.9	10.5	10.6	10.6	2020년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의 목표값과 동일하게 설정(신규지표)	(당해년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자 수 / 당해 연도 집중 보호 관찰 대상자 실시 인원) × 100	전국 57개 보호관 찰기관 월별 통계보고 및 보호관찰통계분석 시스템에서 추출
강력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처우 프로 그램 실시인원	5,963	7,673	9,261	8,010	코로나19로 처우 프로그램이 어려운 가운데 강력사범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강력범죄 보호관찰대상자 처우 프로그램 실시인원 최근 3년 실적 보다 5% 상향한 실적으로 설정	강력사범 처우 프 로그램 실시 연인 원 ※ 처우프로그램 멘토링 연계상담 개별상담자료 프 로그램 개발체험형 프 로그램, 집중연담 집 단상담프로그램 등 ※ 강력사범 : 살인, 방화, 강 도, 성폭력, 유 괴, 마약, 보복 등 7개 사범 가 종료·가출소, 치료감호 기 간 만료 후 보호관찰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처 우 프로그램 실시 결과자 료 및 보호관찰 정보시스 템 상황기록

⑨ 출소자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한 따뜻한 사회구현(IV-2-⑨)

□ 추진배경

- (목적)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 범죄 예방 활동 전개로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보호
- (취업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역량 강화로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도모
- (사회안전망 강화)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국민과 사회의 안전 확보 및 범죄로 인한 사회적비용 절감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취업지원사업 수행역량 강화
 - 진로선택 지원 상담기법 분석 등 취업지원 전담 인력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추진(3월~4월)
 - 권역별 실무자 사례회의 개최를 통한 취업지원 성패 사례 자체 분석 및 발전방안 공유(분기별 실시)
 -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 취업연계를 위한 출소자 채용약정 희망 업체 지속 발굴(연중)
 -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지침 준수를 감안한 사업추진 동력 유지를 위한 비대면 지원서비스 활성화 등 외생변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속 추진(연중)
- 취업지원사업 참여 취업자 생계지원 연계를 장기근속 유도
 - 취업자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연계로 취업 초기 필요한 기초자립 지원으로 장기근속 유도('21. 3. ~)

※ 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미소금융 취업성공대출 연계

○ 직업훈련 성과 제고 기반 강화

-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적극 활용으로 고용협력기업 발굴 등 직업훈련 연계 취업 강화(연중)
-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 여성 특화 종합 기술교육원 이전 운영으로 여성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강화('21. 4. ~)

※ '21년 상반기 서울동부기술교육원 개청

-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를 통하여 직업훈련교사 등 현장 실무자의견 수렴 활성화 등 현장과 소통하는 효율적 사업 여건 마련 추진(연중)

○ 출소자 고용기반 확대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선정 고용우수기업 인증 활성화를 통한 출소자 일자리 기반 확대(연중)

※ '09. ~ '20. 고용우수기업 50개 기업체 인증

- 고용우수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출소자 취업지원 독려, 고용 실태, 애로사항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정책 반영
- 취업분야 자원봉사자 조직인 '전국취업위원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출소자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일자리 기반 확충

○ 보호관찰소, 교정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 강화

- 보호관찰·교정·공단 3자 협의회 운영(분기별) 및 합동 워크숍 개최('21. 12.) 등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 활성화 추진
- 생계형 범죄자들이 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취업지원, 심리상담 등에 참여하는 '更生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활성화 추진('21. 4.)
- 교정(모범 수형자 선발 및 자격 취득 교육)·공단(현장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기업(안정적 일자리 제공)의 협업을 통한 취업 연계 추진('21. 5.~)

※ '20. 11. 공단 충남기술교육원과 광주교도소 직업훈련 시범 연계 추진을 위한 공단·교정·기업 3자 협의회 실시

○ 취업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부가 연계서비스 강화

-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출소자가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

※ '21년 신규 지원물량 156호('06.~'20. 임대주택 2,378호, 출소자 3,302명 지원)

- 주거지원, 원호지원 등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법무보호 서비스 연계 추진
- 교정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수용자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자녀학업 지원 등 가족지원사업 전개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공단·보호관찰·교정 3자 본부 협의회 개최	2월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출소자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매뉴얼 마련, 배포	2월	
	○ 고용협력기업 운영개선계획 시달	2월	
	○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한 취업지원직 온라인 전문화 교육 실시	3월~4월	
	○ 협업을 통한 취업지원사업 참여취업자 신용대출 연계 시행	3월	
	○ 출소자 취업지원의 사회적 필요성 언론 보도 추진	3월	
	○ 공단 사업안내 홍보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3월	
	○ 공단 소식지(아름다운 동행) 발간 및 배부	4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 공단·교정 합동 권역별 간담회 개최	6월	
	○ 취업지원사업 실적 점검을 위한 산하기관 지도방문	6월	
	○ 법무부·공단 선정 고용우수기업 인증식 개최	6월	
	○ 공단 사업 현황 관련 법무보호연감 발간 및 유관 기관 배포, 우호 여론 강화	6월	
3/4분기	○ 상반기 취업지원사업 참여현황·수료자 취업실적 등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7월	
	○ 법무보호대상자 주거지원 및 긴급원호 지원실태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7월	
	○ 공단 소식지(아름다운 동행) 발간 및 배부	8월	
	○ 공단 일선 지부 취업역량 집중을 위한 취업지원 전담부서 신설	8월	
4/4분기	○ 성과지표 중 미진 분야 점검 및 달설 방안 마련	10월	
	○ 갱생보호지원 유공 자원봉사 격려를 위한 포상 수여 및 언론보도 추진	11월	
	○ '21년도 실적 분석 및 차년도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 실시	12월	
	○ 법무부·공단 선정 고용우수기업 인증식 개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출소(예정)자 및 그 가족, 국민(광의의 수혜자)
- (이해관계집단) 출소자 고용주, 취업알선 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등 유관 기관

□ 기대효과

- 출소자 지원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언론 보도 추진, 소식지 등 배포 등을 통해 점진적 우호적 여론 형성

- 법무보호대상자가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함으로써 재범의 악순환 탈피,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
- 주거지원, 긴급원호, 등 통합적 보호서비스(total care)제공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적응 촉진 및 재범 억제로 범죄의 대물림 방지 효과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0년	'21년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보호사업 추진(1 -3-⑨)				
① 갱생보호(1633)	일반회계	33,009	40,565	
		(33,009)	(40,565)	
▪ 갱생보호활동(300)		33,009	40,56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법무보호서비스 이용 건수(공통)	97,432	105,490	101,663	109,697	'20년도 실적인 101,663건 및 초과 달성률 7.3%를 가산하여 '21년에 109,697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	-1년간 각종 법무보호 서비스를 받은 연인원	월별 보호사업 실적 통계 취합
취업자일자리품질수준 (%)	-	신규	25.0	25.2	'20년 실적25.0%로 목표(24.8%) 대비 0.2% 높은 실적을 감안 '20년 실적에 상승분 0.2%를 반영하여 '21년 25.2%달성을 목표로 설정	-('21년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수 ÷ '21년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취업희망인원)×100	취업지원사업 월례보고 기준 결과 산출

기 본 방 향

◇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정책을 추진한다

- 안전한 국경관리와 승객이 편리한 심사 환경 마련을 위해 과학적 승객정보 분석, 자동심사 확대, 생체인식 등 첨단기술 활용한 출입국 심사방안 마련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입국 전 외국인의 사전 정보를 통해 감염병력 등 위험 외국인을 분석하여 입국을 차단하고 필수 인력의 이동을 보장하는 등 효율적인 출입국심사 정책 시행
- 적정 외국인력 공급을 통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해외 우수인재 및 외국인관광객 적극 유치
-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공적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여 진정한 사회통합 기반 마련
- 이민행정정보의 대·내외 기관 간 연계 및 공유 기능 강화를 통한 과학적·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여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마련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추진
-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식 및 국민정체성 함양 교육을 실시

기 본 방 향

하여 귀화자의 국민정체성을 제고하고 대외 환경 및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국적 제도 개선

-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 제도 구축 및 난민인정자 등의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국내 정착 지원 강화
- '20. 2. 25. 난민 이의신청 조사 전담 부서인 <난민심의과> 신설, 난민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이의신청 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지원 등 법률서비스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서비스 제공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남북 교류 협력에 필요한 법제에 대해 선제적인 정비 추진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밀착형 법률지원 강화
-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정비
- 법무·검찰 현안 및 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선제적인 입법 추진 및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 재·개정
- 증가하는 비대면 서비스 수요에 따른 화상공증 제도의 성숙화
- 화상공증제도 홍보 및 전자공증시스템 개선을 통한 공증 서비스 접근성 강화

기 본 방 향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개최, 공증 관계 법령 개정안 마련, 공증 제도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공증의 영역확대, 규제개혁 방안 등을 논의·추진함으로써 공증 활성화 및 선진화 도모
- 엄정한 감사를 통해 부적정 공증사무를 적발하고 위반 행위에 따라 공증인을 징계하여 공증사무의 신뢰 제고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시스템 정착 도모
- 법치행정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등 법률사무종사 제도 개선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법적 지식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한 법조인 선발로 선진 법률서비스 제공
- 신속하고 내실 있는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을 통한 정책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 구현
- 효율적 국제투자분쟁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 국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민생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실천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추진을 위한 전략적·체계적 홍보 및 대국민 소통업무 추진
 -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입체적 홍보로 핵심 내용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

기 본 방 향

- 통합접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접견 품질 제고 및 민원(수용·출소) 증명서 개선으로 보다 향상된 교정 온라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스마트 접견 및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민원인이 교정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추진
- 대국민 소통강화를 위해 홍보방식을 다각화하고 추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 강화를 통해 대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여 정책 추진 동력 확보 및 정책 체감도 향상

◇ 법무행정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 민생 친화형 온라인민원서비스 운영으로 대국민 참여 확대와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법무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내부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및 재택근무·영상회의·화상교육 등 온라인 업무환경 지속 제공
- 보안관제·침해대응·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의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법무행정 환경 구현
- 법무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 법무시설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재난 선제적 대비 및 대응 태세 상시 유지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	4	6	22	5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V. 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
V-1.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 체류 민원 만족도(점수)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 출입국 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점수) ▪ 제도개선 실적(점수)
	②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 체류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노력(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이용자 만족도(점수)
	③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 시스템 보완 및 개선 실적(건) ▪ 유관기관 정보연계 실적(건)
	④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율(%)(공통) ▪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실적(점)
	⑤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건)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 성과(점수)(공통)
	⑥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 국민정체성 함양 실적(점수) ▪ 제도개선 실적(점수)
	⑦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	▪ 난민 심사 역량 강화(점수) ▪ 난민제도 정비(점수)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⑧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난민위원회 심의전문성 강화(점수) ▪ 이의신청 심의체계 개선(점수)
V-2.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무정책 추진 실적(점수)
	① 법률시장 개방 대비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점수)(공통) ▪ 법률시장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점수)(공통)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점수)(공통)
	②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실적(점수) ▪ 북한법령 연구 및 통일대비 법적쟁점 연구실적(점수) ▪ 북한이탈주민 법률 교육 실적(점수) ▪ 북한이탈주민 법률 지원 실적(점수)
	③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 형사관계 법령·제도의 정비를 위한 연구 및 성과(건)
	④ 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	▪ 공증 제도개선 및 신뢰도 제고(점수)(공통) ▪ 부적정 공증사무 적발(점수)
	⑤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선	▪ 변호사시험 시행 및 법조인 선발·양성 연구실적(점수) ▪ 변호사시험 복수정답 인정률 2%이하달성(점수)(공통)
	⑥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제고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점수)(공통) ▪ 법치행정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등 법률사무종사 제도 개선(공통)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성 과 지 표
		▪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비위변호사 제재 강화 등(점수) ▪ 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는 마을변호사 제도 개선 (점수)
	⑦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예방 역량 강화	▪ 국제투자분쟁대응 ▪ 국제투자분쟁예방 ▪ ISDS 제도개선 ▪ 투자협정(FTA, BIT) 및 기타 국제분쟁 법률 지원
V-3.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한다		▪ 법무정책 뉴미디어 활용 소통 노력도(명) ▪ 형사사법포털 온라인 서비스 이용량(1인당 이용횟수)
	①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법무정책 소통 동영상 조회수(회)(공통) ▪ 법무정책 소통 페이스북 채널 콘텐츠 도달수 (회)(공통) ▪ 법무정책 소통 트위터 채널 게시물 노출수 (회)(공통) ▪ 법무정책 소통 동영상 콘텐츠 생산량(건)(공통)
	②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	▪ 기관간 형사사법 정보 공동활용건수(십만건)(공통) ▪ 대국민 형사사법 포털 이용 만족도(점수)(공통)
	③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 스마트 접견 실시 이용자 만족도(%) ▪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실적(건)
	④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정책홍보활성도(점수) ▪ 온라인홍보 실적(점수)
	⑤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 강화	▪ 정책홍보활성도(점수) ▪ 홍보 만족도(점수)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V-4. 법무행정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EA 성숙도)(점)(공통) ▪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재난안전 매뉴얼 수립 건수
	①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보화 노력도(점수)(공통)
	②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코로나19 방역상황관리 (건) ▪ 재난안전관리 문제점 발굴 및 개선(건)

(1) 주요내용

□ 미래를 대비하는 선진형 법률서비스 추진

- 국제민상사규범 성안에 관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해 선진 법제 국내 도입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및 예방 강화, 법률시장 개방 대비 법률 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통일법제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연구 심화 및 북한이탈주민 생활 밀착형 법률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상공증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증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공증제도를 활성화하며, 부실공증에 대한 엄중 징계를 통해 신뢰사회 구축
-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시험제도 운영 및 신규 법조인에 대한 신뢰도 향상 도모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시스템 정착 도모
- 비대면 사회에 부합하는 온라인 상담예약 창구 마련 및 화상 법률상담 시스템 도입을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 접근성 강화

□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 재한외국인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하여 입국초기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정착단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결혼이민자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등 사회통합교육 운영
- 재한외국인 개인고충과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결정하는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을 운영하여 외국인 사회적응 지원
- ‘세계인의 날 기념식’, ‘상호문화 이해 교육’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존중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사회환경 조성

(2)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미래지향적 법무행정 추진

- EU 등 일부 국가의 법률시장 추가 개방 요구, 브렉시트 가능성 등 법률서비스 분야의 통상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외국로펌과 변호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국내 법률시장에 국제적 요소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
 - 각국 대사관 및 외국 로펌 등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강구
 - 국내로펌 해외설명회 개최 및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과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제 및 해외 사례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고 전문가 양성에 주력

- 관련 법령 개정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통해 잠재적 갈등 해결
- 코로나19로 인해 재외공관 방문을 통한 공증사무 지도점검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외공관 차원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자체점검 방안 마련
-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시험제도 운영 및 신규 법조인에 대한 신뢰도 향상 도모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관련 「변호사법」 개정 시 국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입법 추진 필요
- 비대면 사회에 부합하는 상담시스템 개발 및 무료법률상담 확대를 위해 지자체,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소통 필요

□ 이민국 사회통합지원 강화

- 코로나19 상황 하에 집합교육 중심 교육운영에서 전면 화상교육을 운영한 이후 점진적으로 비대면·온택트 방식의 교육방식 활용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교육 영상콘텐츠 개발 등 추진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 플랫폼(나라배움터 등)을 통해 자체 제작한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의 개설·운영

(4) 기타

- 비대면 사회에 부합하는 상담시스템 개선을 통한 마을변호사 제도 접근성 강화

- 지자체 홈페이지에 마을변호사 온라인 상담예약 창구 마련하고,
지자체에 비대면 상담 도입을 위해 화상상담 공간 개설
- ※ 행정안전부·대한변협·지자체 등 유관기관·단체와 적극적 협업 추진
- 마을변호사·마을법률담당공무원 캐릭터(신규개발 예정), 챗봇 등 뉴미디어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지역버스·신문 등 활용한 마을 단위 홍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및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참조

(1) 주요내용

- 입국 전 외국인의 사전 정보를 분석하여 감염병력, 국익위해 등 위험 외국인의 입국차단, 일반 외국인에게 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생체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출입국심사 간소화 정책 마련, 자동출입국 심사대 증설을 통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 등 심사 품질 개선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출입국심사 기반 마련
- 적정 외국인력 공급을 통한 산업현장 인력부족 문제 해소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해외 우수인재·외국인관광객 적극 유치
-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공적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여 진정한 사회통합 기반 마련
-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테러위협과 코로나19 감염증과 같은 치명적인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등으로 국가안보 및 국민 안전의 위협,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위해 관계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확대
- 외국인을 경제활동의 新주체로 인식하고, 유입부터 정착까지 계획성 있게 관리하는 단계로 개편하여 경제활동인구 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설계 및 추진
-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식 및 국민정체성 함양 교육을 시행하여 귀화자의 국민정체성을 제고하고 대외환경 및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국적 제도 개선
- 난민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와 난민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현행 난민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
- 국제기구, 관계 기관, 민간기구 등 협업을 통한 난민인정자의 안정적 국내정착 및 자립 지원

□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 안전한 국경관리와 승객이 편리한 심사 환경 마련을 위해 과학적 승객정보 분석, 자동심사 확대, 생체인식 등 첨단기술 활용한 출입국 심사방안 마련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입국 전 외국인의 사전 정보를 통해 감염병력 등 위험 외국인을 분석하여 입국을 차단하고 필수 인력의 이동을 보장하는 등 효율적인 출입국심사 정책 시행
-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으로 출국금·정지 결정 및 기간연장, 이의신청 등 출국금지 조치 적정성 심의로 기본권 보호 강화

□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 국민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확대로 농어촌 농·어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소 지원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보를 위한 유럽지역 비자신청센터 증설, 비자발급 간소화 등 추진
- 세금체납 등 공적의무 불이행 외국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기조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재정 누수방지에 기여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 관리 개선을 통해 출입국 민원 만족도의 향상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강화 등 전자정부 구현으로 테러리스트, 해외전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국경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국가 경제·안보·국민 안전 차원의 종합적인 외국인 관련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
-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시스템 등 신기능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시스템의 지속적 보완 및 개선을 통해 정확하고 편리한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하여 입국초기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정착단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해 국제결혼 제도 소개, 배우자 현지 문화, 가정폭력방지 및 인권교육 등을 제공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통해 이민자의 사회참여를 돕고 우수정착 이민자가 후배이민자에 노하우, 경험 등을 공유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계인의 날 기념식’ 등 문화행사 및 내·외국인 ‘상호문화 이해 제고 교육’ 등 실시

□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간 이주 현상 분석 및 이민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이민의 질적 고도화 추구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新)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민자를 우리사회 미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등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비대면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와 관련한 외국인재의 유치·정착·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
- 국내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치안·환경 악화,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개방적 이민정책 도입 요구 등 다양한 의견 표출

※ 국내 체류외국인은 '07년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19년 252만(국민 대비 4.9%) 명을 넘어섰으며 현 추세를 감안하면 '23. 까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 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국적법령 개정 및 국적업무 절차 개선에 반영
- 소속기관 국적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장의견을 수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
- 귀화 민간면접관 교육을 실시하여 국적업무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식 및 국민 정체성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귀화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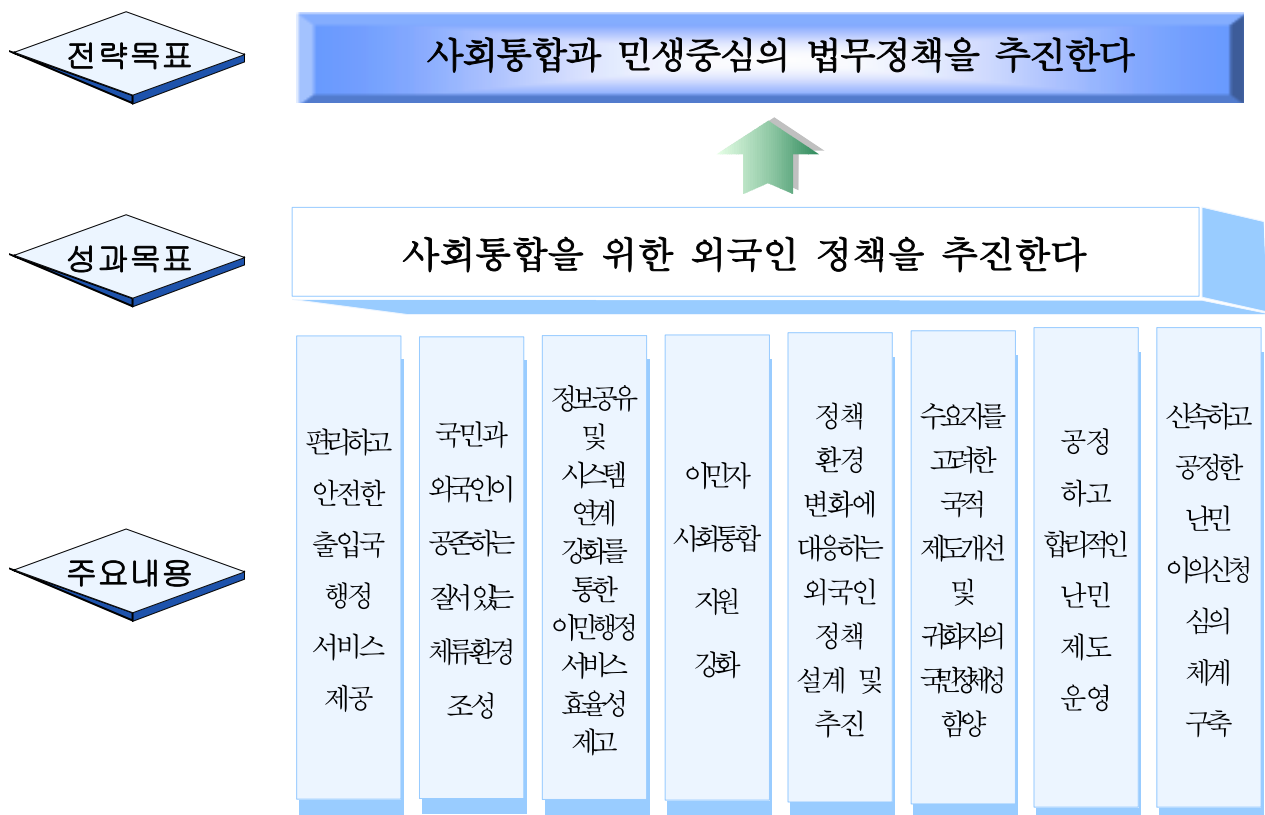
- 난민법령 및 지침 개정을 통한 현행 난민제도 보완, 난민전담 공무원·난민(전문)통역인 등 난민 업무 관련 인력의 교육·관리 강화를 통한 난민심사 전문성 제고

-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관계기관 및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난민인정자의 정착 및 자립 지원

□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난민위원회 심의 횟수 확대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심의하여 난민 제도 남용 유인을 차단하고,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진정한 난민에게 신속한 보호를 제공하여 진정한 난민의 인권 보호 강화
- 이의신청 제도 및 처리 절차, 신청인의 권리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불복절차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방어권 보장 등을 통한 특별행정심판 기능 강화로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및 난민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목표체계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체류민원 만족도 (점수)	87.7	89.9	90.9	91.8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1.8%)과 상승한계치를 고려하여 '20년도 실적치 대비 1% 상향한 91.8점을 목표치로 설정 *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후 100점 환산(매우만족 5(100), 만족 4(80), 보통 3(60), 불만족 2 (40), 매우불만족 1(20))	설문항목별 평균점수의 합계 / 참여자수	체류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 취합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 입국심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한 일부 국가 국민의 불법체류·불법취업 등 법 위반 및 허위 난민신청 사례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무사증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전정보를 취득하여 여행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전자여행허가제(ETA) 시행 예정('21. 9. 전면 시행 예정)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검역·방역 중심의 입국심사에서 외국인의 입국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출입국심사 기법 마련·적용
- 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실시한 무사증입국 정지 조치 관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무사증입국 정지 해제 시기·조건·대상 등을 고려한 사전 대책 마련

□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 갈등, 국민일자리 침해 논란, 반이민주의 확산 등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민 노동시장 보호, 외국인 투자 특정부문 편중 방지, 사회 안전 강화 등 정책리스크 요소를 관리하고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비자·체류정책 수립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별 정보의 공유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법률적 근거규정 미비, 시스템 연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침해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폭넓은 검토를 거쳐 정보연계 실시 필요
- 출입국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법무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재외공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무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적극 반영

□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 코로나19 등 비대면 방식의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교육 동영상 개발하여 이민자의 한국사회 기본소양 자율학습 기반 마련

□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 국내 체류외국인 증가로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입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 상존

-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동반자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상생 발전하는 외국인정책 발굴 필요
- 관계부처, 전문가,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외국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등 협력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구축

□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 대부분의 귀화자가 사회주의 국가 등 다른 문화권 출신으로서 국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국민들의 차별적 인식도 존재
- 귀화 시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식 및 국민정체성 함양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증진

□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

- 난민법 개정 및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양론 대립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 노력 지속
- 국민의 입법 의견 수렴 및 법안 재검토 등 법령상의 입법절차를 통해 난민법 개정 관련 갈등사항을 관리하고, 난민인정자 등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하여 난민 인식 개선에 기여

□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급증*(최근 3년간 평균 38% ↑)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 심의 적체**가 가중되어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진정한 난민에 대한 인권 보호 약화

* 이의신청 : ('18) 3,113건 → ('19) 4,068건(31% ↑) → ('20) 5,956건(46% ↑)

** 심의 적체 : ('18) 2,747건 → ('19) 3,255건(18% ↑) → ('20) 5,118건(57% ↑)

- 난민신청 국가 및 사례의 다양화·복잡화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이의신청의 절차적 권리 보장 미흡, 국가정황 조사 전문인력 부재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지속 제기

※ 난민 이의신청 국가 : ('13) 29개국 → ('20) 66개국(2.3배 ↑)

(4) 기 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및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참조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V-1-①)

□ 추진배경

- 난민 수용 여부, 이주민의 복지예산 무임승차론 등 반(反) 이민 정서와 더불어 ‘코로나19’ 관련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국경 안전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
- 한편, 필수적 인력의 이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동화·체계화된 심사기법 마련 등의 출입국심사 제도 개선도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
-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국경 안전 강화와 더불어, 상용·외교행사 등 필수 인력의 인적교류 확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안전·개방·협력·통합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 및 증설 사업 ('21.3.~12.)
 - 초기 자동출입국심사대(2011년) 내용연수 도과로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5식) 및 전국 공항만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36식)
 - 예산 : 총 54.12억원
 - ※ (5식×132백만원)+ (36식×132백만원)
- 외국인 선원 온라인 상륙허가 제도 시범 운영('21. 3.)
 - 상륙허가 신청, 심사, 허가서발급 과정을 온라인 비대면 심사 (여권 MRP판독 및 얼굴 정보 취득, 여권과 일치율 분석)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보안초소 출입통제 관리 강화

- 출국대기실 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실무자 회의 개최('21. 4. ~ 5.)
 -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어 있는 전국 8개 공항만* 실무담당자 회의 개최를 통해, 국가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사전 파악
 - *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양양, 무안, 청주, 대구
- 전자여행허가(ETA) 시행에 따른 탑승자사전확인제도 운영 지침 등 개정('21. 7.)
 - '21. 9. 사전여행허가(ETA)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ETA 허가를 받지 못한 승객을 탑승차단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 지침 개정
-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본격 시행('21. 9.)
 - 전자여행허가(ETA) 시스템 구축완료('21.3.) 후 시스템 테스트 및 보완('21.3.~4.), 제도 시범운영('21.5.~8.) 및 홍보 후, '21. 9.월부터 본격시행 예정
-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기법 발표회 개최('21. 10.)
 - 공항만 출입국심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출입국심사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문제 해결방안 마련 등 소통의 장 마련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또는 서면 형태로 개최 가능
- 제주공항 국내선 자동 출도 검색 시스템 신규 설치('21. 12.)
 - 공항만에서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시 이용하고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대와 유사한 자동출도검색대를 개발·설치하여 출도가능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확인
 - A구역 2대, B구역 4대(총 6대×154백만원 = 924백만원)
- 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 대응(연중)
 - '21. 9. 시행 예정인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통해 사전 정보제공 항목에 해외 감염병력 및 증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험도 분석 결과에 포함하여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해외 감염병 검증 강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인터폴 적색수배자 규제관리 개선안 시행	2월	
	외국인 선원 온라인 상륙허가 제도 시범 운영	3월	
2/4분기	2020년도 대테러 활동 실적 및 2021년 업무 추진계획 시행	4월	
	출국대기실 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실무자 회의 개최	4~5월	
3/4분기	ETA시행에 따른 탑승자사전확인제도 운영 지침 등 개정	7월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 회의(화상)	8월	
	입국규제 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9월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본격시행	9월	
	출입국심사 및 선박기법 발표회	10월	
4/4분기	출입국 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11월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개정	12월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교체 사업 완료	12월	
	제주공항 국내선 자동 출도 검색 시스템 신규 설치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제공·항만을 이용하는 출입국 승객/승무원(국민, 외국인)
- (이해관계집단) 외국인 및 출입국 정책 관계기관(외교부, 문체부, 지방자치단체 등), 전자여행허가·탑승자사전분석 등 정책 시행과 관련된 공공기관(공항공사) 및 운수업자등과 협력을 통해 출입국 제도 시행 성공을 위한 지지 확보

□ 기대효과

- 승객정보 분석 등을 통한 국익 위해 외국인 입국 사전 차단으로 국경 안전 제고 및 공공질서 보호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확대, 심사절차 간소화 등 출입국심사 시간을 단축하여 공항만 이용객의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을 해소하고 공항만 혼잡도 개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출입국 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	91.3	92.6	94.6	91	○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한 승객 및 승무원의 만족도 조사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간 인력이동이 제한 된 상태에서 전년 대비 출입국인원 84.2% 감소, 인천국제공항 외 공항만 폐쇄 또는 간헐적 전세기 운항 상황에서 출입국심사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의미 감소 - 감염병의 확산으로 출입국 인원은 대폭 감소했으나 화물선 등 선박의 이동량은 코로나19 전·후 감소량이 크지 않고 항만 이용 승무원의 출입국, 상륙허가 등 출입국 행정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만족도 조사 포함 ○ 승객/승무원 출입국 행정 이용 특성에 맞는 설문지 개발, 모집단을 나누어 승객/승무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합하여 나눈 값을 결과 값으로 하고 승무원에 대한 이용 만족도 최초 시행으로 '만족'에 해당하는 점수(83.3점)와 '21년도 출입국심사 만족도 점수(94.6), 최근 3년간 실적 값의 평균 값인 91점으로 설정	(설 문 항 목 별 평가점수 합계/ 참여자 수) ※국제공항 및 외항선 운항 항만을 이용하는 승객/승무원의 평가지표에 대한 만족도 설문 (7점 척도) 조사	출입국심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제도개선 실적	235	330	380	390	○제도개선 실적(점수) -법령, 지침, 고시 제·개정 실적 (10건×20점=200점)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채택건수 (1건×20점=20점) -소속기관 제도개선 건의 채택 등 정책개선 실적건수(10건×10점 =100점) -현장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14건×5점=70점)	-법령, 지침, 고 시 제·개정 사 항 (건당 20점) -국민신문고 국 민제안 채택 실 적(건당 20점) -소속기관 제도 개선 건의 채택 등 정책개선 실적 (건당 10점) -현장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건당 5점)	관련 법령, 지침, 보고서, 정보보고 등 관련문서

②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V-1-②)

□ 추진배경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비자·체류정책 요구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제조·농어업 등 각종 산업분야의 인력난 해소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해외 우수인재·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체류외국인의 편의는 증진하는 한편, 기초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체류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대상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로 신규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어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 국내 체류 중인 동반(F-3), 출국 유예 등을 받은 방문취업(H-2) 자격자 등*에게 계절근로 한시적 허용
 - ※ ‘농림부·지자체에서 건의했던 정책으로, 신청가능 대상자는 약 79,000명
 -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자체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세금채납 등 공적의무 불이행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
 -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채납한 외국인에 대한 제재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기초법질서 준수 및 국가재정 누수방지에 기여
 - ※ 제재 범위에 ‘사증발급인정서 초청’을 추가하여 공적의무 준수 강화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운영 개선

- 변호사·행정사 등이 이민정책 · 관련법령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출입국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불법 대행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제재를 내려 민원대행 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

*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부산, 광주 등 6개 권역 출입국기관에서 교육실시

○ '사전 방문예약제' 전국 확대 실시

- '16. 2월부터 서울·인천청 등 15개 출입국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전 방문예약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여 민원 대기시간 감소, 민원밀집도 완화 등 출입국 민원실 환경 개선
- 안정적인 '사전 방문예약제' 확대 운영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 · 하이코리아 공지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시행

※ (방문예약 운영기관) 서울·인천청 등 15개 기관 → 전국 34개 기관으로 확대

○ 해외 우수인재 등 유치를 위한 '비자신청센터' 증설 등 추진

- '21. 9월 운영이 종료되는 중국지역(광저우·칭다오) 비자신청센터의 운영기관을 공모 · 지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본격적인 해외 우수인재·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럽지역 등으로 센터확대 추진

<비자신청센터 개요>

- (기능) 재외공관에서 수행하는 비자신청 접수, 전산입력, 교부 등 단순업무를 민간(비자신청센터)에 위탁
- (효과) 공간협소로 열악했던 재외공관 비자신청 민원실 대신 쾌적한 비자신청 환경을 제공, 민원 편의 및 비자발급 업무 능률성 향상

○ 「가사·육아·간병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

- 가사·육아·간병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동포, 결혼이민자 등이 사전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취업을 등록하도록 하되, 범죄경력 등 기본 요건이 미비한 경우에는 등록을 차단

※ 고용하려는 국민이 등록 정보를 통해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탄력적 비자발급' 운영

- 코로나19 감염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자는 전면 제한하는 한편, 외교·공무, 기업 필수인력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발급을 지원하는 등 탄력적 비자정책 시행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제도 개선

-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사정을 반영, 숙련기능인력 선발 인원을 확대하여, 1,250명 선발 계획 수립(2020년 1,000명)
- E-9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후 코로나19 관련 임시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신설

○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민협력관)' 운영 개선

-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확인 등을 담당하는 '이민협력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선정기준, 활동 보고서 양식 등 개선안 마련

* 최근 감염병 장기화 상황에서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한 체류지 관리 강화 필요

○ 동포 취업신고 제도 개선

- 방문취업(H-2) 동포의 취업개시신고 제출서류 ·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한 불필요한 범위반 사례 방지 및 효율적 취업관리 도모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우수 유치기관을 지정

※ 우수 유치기관에게는 전자비자 신청, 재정능력 입증서류 간소화 등 혜택 부여

<’21년도 과제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일 정	비 고
1/4분기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운영 개선방안 마련	1월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제도 개선	2월	
	○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운영 개선	3월	
2/4분기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대상 확대	4월	
	○ 출입국관서 체류민원실 ‘사전 방문예약제’ 전국 확대	5월	
3/4분기	○ 중국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	7월	
	○ ‘21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개최	7월	
	○ 세금체납 등 공적의무 불이행 외국인의 제재 강화	8월	
	○ 동포 취업신고 제도 개선	9월	
4/4분기	○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사전등록 프로그램 구축	10월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11월	
	○ 체류·사증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체류외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 및 국내 관광업계 등
-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고용주와 농·어민
- 외국인력을 채용 예정이거나 고용 중인 국내 기업

□ 기대효과

- 외국인력의 선별적 유치로 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체류·비자 관련 이민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민원편의 및 만족도 제고
- 세금체납 등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체류관리 강화를 통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체류환경 조성
- 관광비자 발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광산업 고용 창출 및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 과 지 표	실 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체류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노력(건)	25	34	50	65	○ 체류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노력(건수) - 법령, 훈령, 고시, 지침 제·개정 건수 ※ 최근 4년간('17~'20년, '17년 : 23건) 평균 증가율이 30%로 '20년 실적에 △ 30%를 반영하여 '21년 목표치 설정	-법령, 훈령, 고시, 지침 제·개정 건수	법령, 지침, 고시, 보고서 등 관련 문서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이용자 만족도(점수)	-	76.9	77.96	79	○ 하이코리아(www.hikorea.kr)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에 의한 만족도 조사 ※ 국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 체류·국적 등 규정 안내, 온라인 체류민원 신청, 방문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포털 ※ 최근 2년간 평균 증가율이 1.4%로, '20년 실적에 △ 1.4%를 반영하여 '21년치 목표치 설정	·측정 산식 -설문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참여자 수 ※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불만족 40, 매우 불만족 20)	하이코리아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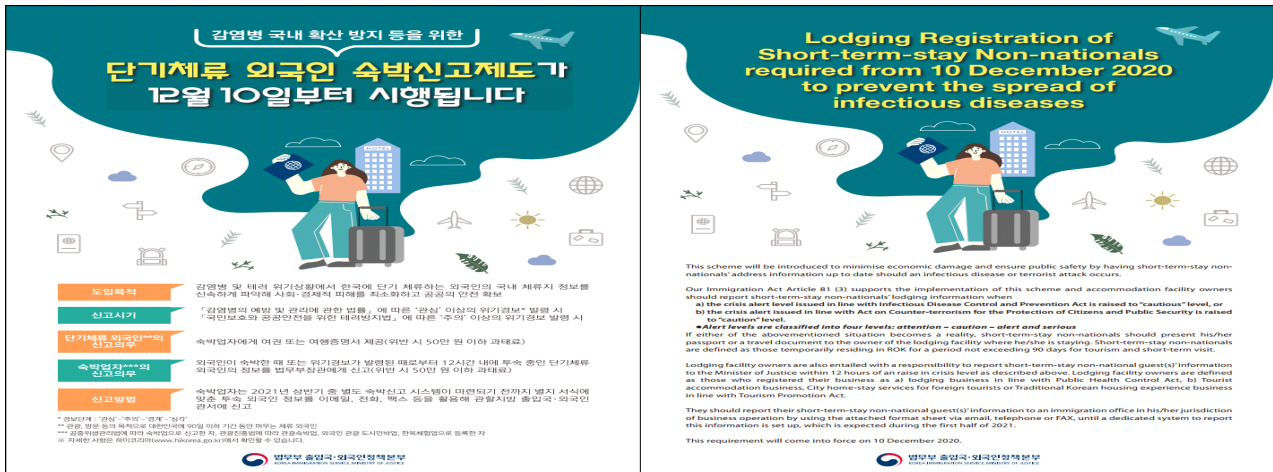
③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V-1-③)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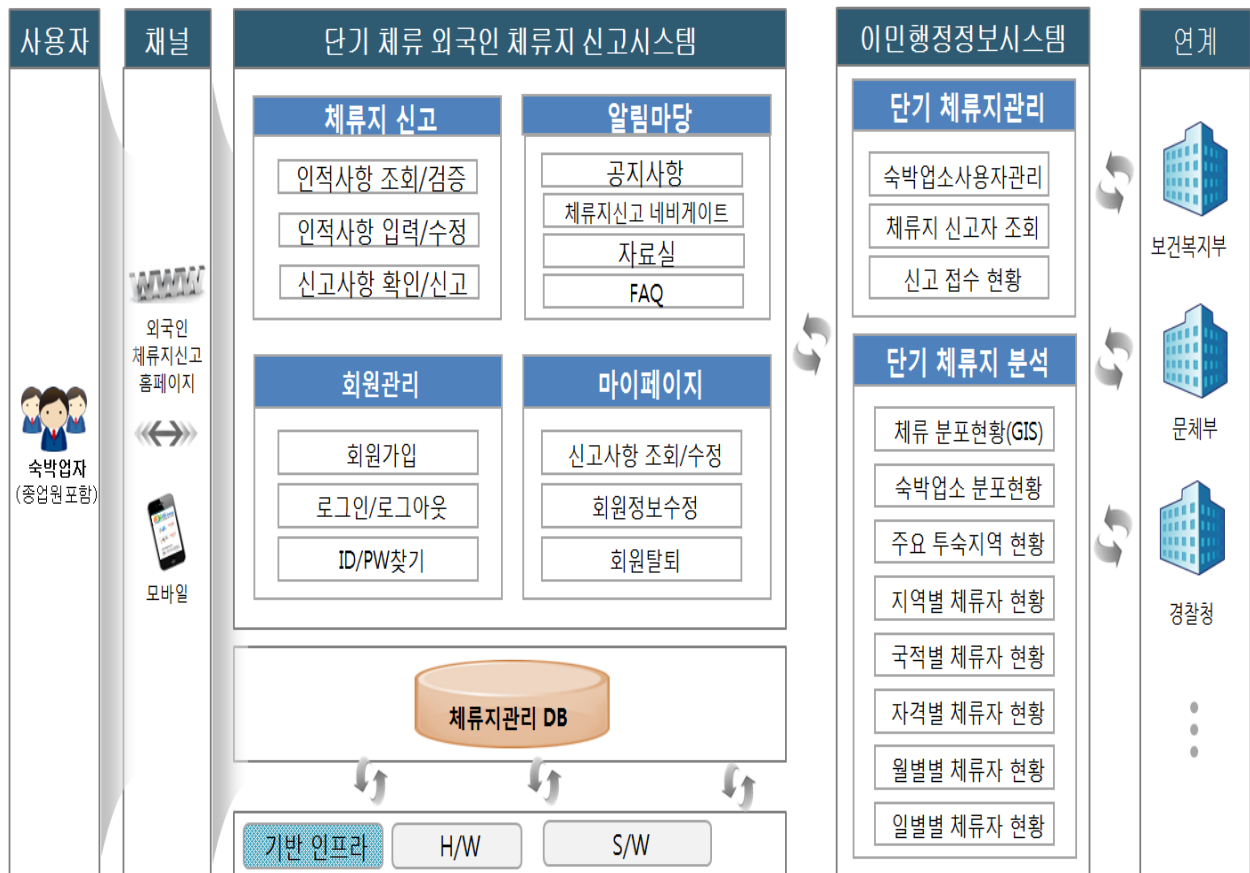
-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치명적인 감염병 발생 시 대한민국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숙박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를 방역당국 등 유관기관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 구축 필요
-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등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 시스템 구축 등 출입국·외국인 관련 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
- 법무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대포폰 등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보연계 기획 및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 시스템 구축
 - 감염병, 테러 등 국가적 위기 상황발생 시, 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신속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추진
 - 숙박업소 종별 회원가입 및 신고 조회·접수 프로그램 구축하고 숙박업소 여건에 따라 전자여권판독기(MRP), OCR판독, QR코드, 조회, 직접입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입력 처리 기능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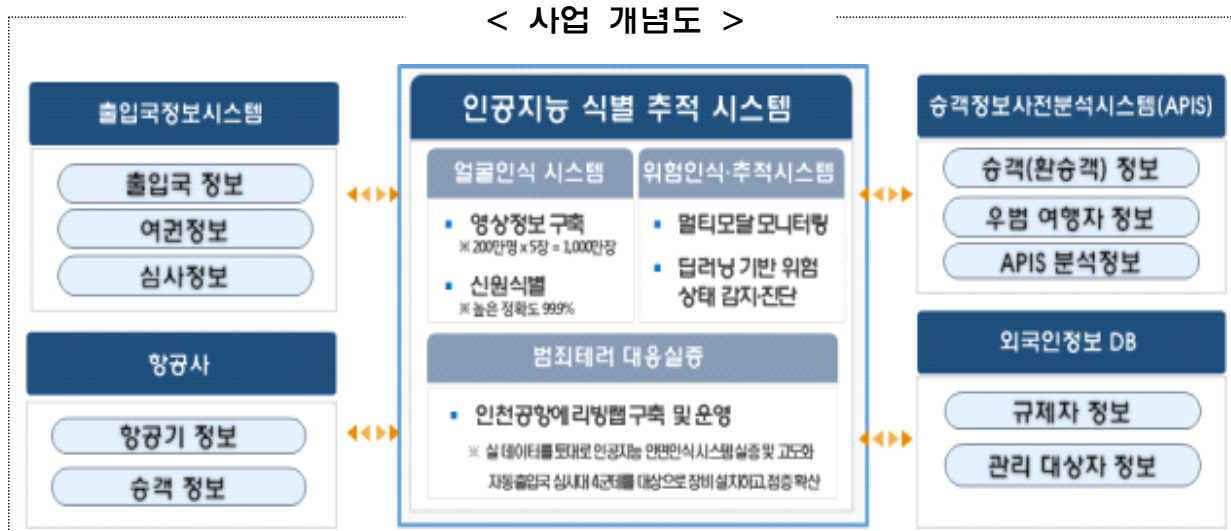
[그림] 목표시스템 개념도



○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기부 협업)

- 컴퓨터 비전 분야 선도적 기술 확보 및 AI 산업을 육성하고, 출입국 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법무부-과기정통부 부처 간 협력사업

- 공항 내 다수의 움직이는 사람의 신원과 위험상황을 탐지·추적하는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과 구성된 시스템에 대한 실증을 통한 기술고도화를 위한 실증랩(리빙랩) 구현 사업으로 진행



* 출입국정보시스템 등 기존 공항시스템과 연동하여 범죄·테러 대응 효과 검증

○ 정보화시스템 보완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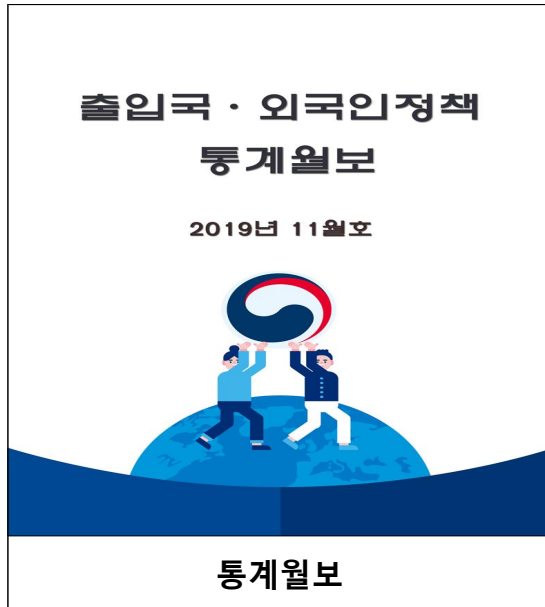
- 수많은 정보가 집대성되어 있는 정보화시스템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각 기관 또는 개인별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시스템 개선 실시
-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새로운 협업기관 발굴 및 기존 협업사항에 대한 개선 강화를 통해 기관 간 업무효율성 증대

○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전국 개인정보 처리자 및 증명발급 담당자 대상, 연 2회 정례 교육 실시
-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PC 영상회의 개최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및 통계연보 발간

- 주요 정책과제인 ‘정보공유 및 시스템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와 관련, 출입국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통계를 분석하여 통계월보 및 통계연보 발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증발급 신청문서 전자화 사업 완료	1월	
	외국인 선원 온라인 상륙허가 시범 사업 완료	2월	
	단기체류외국인 과거이력 관련 시스템 개선	3월	
2/4분기	전자우편(e그린) 서비스 도입	4월	
	대포폰 악용 방지를 위한 완전출국외국인 정보연계	4월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6월	
3/4분기	'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발간	8월	
	출입국통계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9월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시스템 구축 완료	9월	
4/4분기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얼굴인식 알고리즘 개발	12월	
	위험행동 cctv 관제시스템 구축	12월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감염병, 테러 등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감염(테러) 의심 외국인의 신속한 추적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 우범자의 대한민국 입국 원천 차단을 통하여 안전을 보장받는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체류 외국인
- 항공기 테러로부터 안전이 확보된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
- 출입국 관련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개선, 정보연계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되는 공공기관 등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증명발급 업무 담당자
- 출입국·외국인 통계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 국가기관, 학계 등 업무 관련자

□ 기대효과

- 기관 간 정보연계 강화로 테러리스트 등 위험외국인으로부터 안전한 국경관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등을 통해 국가 경제·안보·국민 안전 차원의 종합적인 외국인 관련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
-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관광 등 목적으로 국내 단기간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방역 업무 수행 능력 향상
-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 사전 인지·예측 기반의 업무 수행 및 무중단·안정적 운영시스템 기반 마련을 통해 연계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

-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 및 유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및 신뢰도 향상
-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에 대한 통계월보 및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국민들의 통계접근성 강화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시스템 보완 및 개선 실적(건)	신규 69	89		100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의 업무처리 편리성 향상 등을 위한 시스템 보완 및 개선 실적지표로서,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2020년 실적(89건) 대비 약 12% 상향값을 목표로 설정함	정보화시스템 보완 및 개선 실적 건수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유관기관 정보연계 실적(건)	- 신규 12			1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망연계 등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확대, 개선, 조정 등의 실적에 대한 지표로서,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2020년 실적(12건) 대비 약 17% 상향값을 목표로 설정함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확대, 개선, 조정 등 실적건수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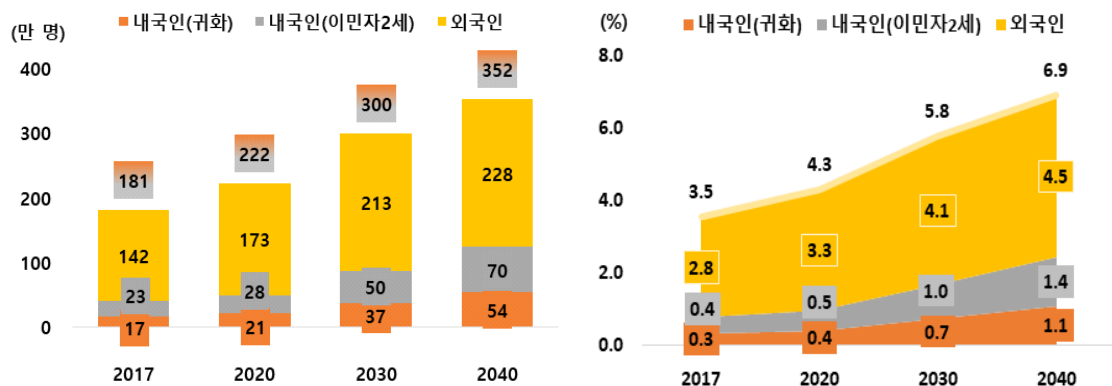
④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V-1-④)

□ 추진배경

-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이주배경인구*는 '20년 222만명에서 '40년 352만명으로 총 인구대비 4.3%에서 6.9%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국민과 외국인은 물론, 이주배경 인구를 포괄하는 사회통합 지원정책 필요

* 내국인(귀화), 내국인(이민자2세), 외국인

이주배경인구, 2017~2040년 (통계청)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입국초기 조기적응프로그램, 장기체류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이민자의 체류 단계별 정보제공·교육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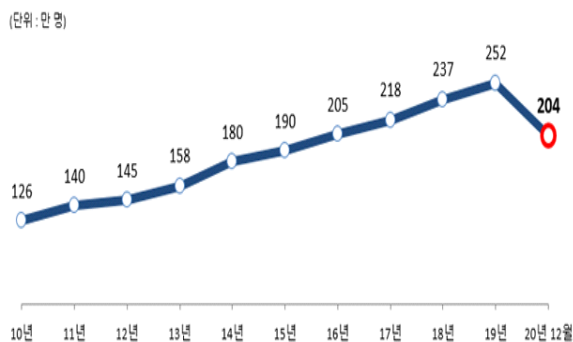
- 재한외국인 증가에 따라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등 인프라를 내실화하고 정책대상 간 선순환을 위한 우수이민자 활용방안 필요
-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호문화 이해 제고 노력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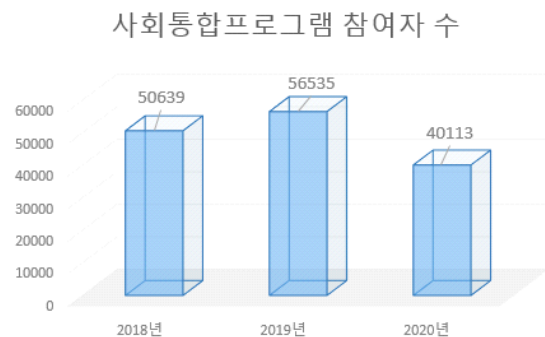
○ 사회통합교육 강화를 통한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 외국인 정착 단계별 한국생활정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영주체류자격, 국적 취득 시 기본소양을 갖추어 외국인 사회통합 촉진
- 늘어나는 이민자 수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선·후배 이민자 간 정착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를 통해 정책의 선순환 구조 수립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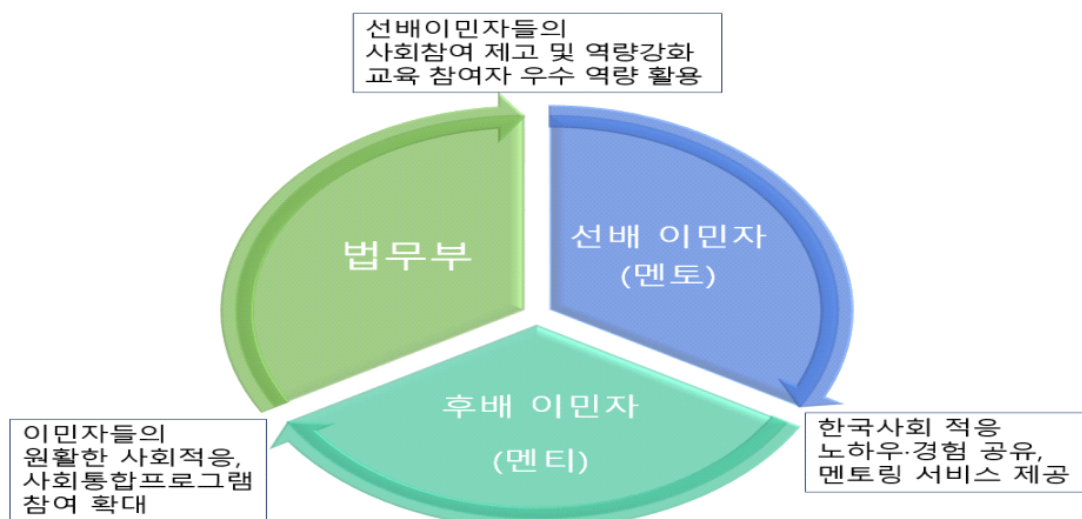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현황('18.~'20.)



※ '20년도 코로나19 상황 하에 체류외국인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감소

이민자 선순환 구조 (멘토)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국내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지원

※ 중도입국자녀 및 결혼이민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시 이들에 대한 정착 및 공교육 진입 지원 등 추진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 지원 강화

- 한부모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국내 체류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다자녀가구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결혼이민자 체류지원 방안 마련 등 추진

○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 제14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식을 개최하고, 공무원 대상 상호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 비대면 교육방식 활용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 수요를 충족하도록 관련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
- 코로나19 상황 하에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를 위해 '제14주년 세계인의 날'에 맞춰 미담사례집 발간 등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개설	1월	
	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자격(F-2-15) 신설	1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재개 방안 마련	2월	
	인사혁신처 나라배움터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개설	2월	
	사회통합프로그램·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교육	3월	
2/4분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위촉 등 정비	4월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 등 정비	4월	
	제14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유공자포상식) 개최	5월	법정기념일
	이민자 미담 사례집 발간	6월	
3/4분기	조기적응프로그램 중도입국자녀편 교재 개편	7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연수 실시	8월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기준 규정 개정	9월	훈령개정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실시	9월	
4/4분기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11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요건 고시 개정	12월	고시개정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12월	연구용역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동영상 교육콘텐츠 개발	12월	연구용역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중도입국자녀 등 장기체류 재한외국인
- 결혼이민자 배우자 및 이주배경 부모, 자녀 등 가족을 둔 국민
- 국내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분야에 종사하는 유관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 관계자
- 사회통합교육(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기관, 전담직원, 강사 및 다문화사회전문가 대학 관계자 등

□ 기대효과

- 입국초기부터 장기체류 등 단계별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능력 제고 및 국민과의 갈등 예방
- 세계인의 날(5. 20.) 운영, 내·외국인 상호문화이해 제고 교육 운영 등을 통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화합하는 계기와 문화다양성 인식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Ⅲ-1-일반재정③) ²⁾				
①	외국인체류관리(1233) ³⁾	일반회계	452	477
	▪ 외국인사회통합지원(301)		124	136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304)		87	10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율(%) (공통)	17.5	18.7	13	18	최근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에 따라 실적치가 등락인 점과 국제적 이동제한 등에 따른 사회통합교육 참여대상 자체의 감소를 고려하나 성과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실적 상승구간 추세치('18-'19년 6.9%)보다 최근 3년 간 실적평균의(16.4%) 9.8% 상향한 18%로 설정 ※ 전년대비 38.5% 적극 상향 설정 <table><tr><th>구 분</th><th>'19년</th><th>'20년</th><th>'21년 (목표치)</th></tr><tr><td>최근 3년 평균 신규 등록 외국인(명)</td><td>309,148</td><td>309,858</td><td>250,171</td></tr><tr><td>참여자(명)</td><td>56,535</td><td>40,113</td><td>45,000</td></tr><tr><td>참여율 (전년대비 증감율)</td><td>18.7% (6.9%)</td><td>13% (-30.5%)</td><td>18% (38.5%)</td></tr></table>	구 분	'19년	'20년	'21년 (목표치)	최근 3년 평균 신규 등록 외국인(명)	309,148	309,858	250,171	참여자(명)	56,535	40,113	45,000	참여율 (전년대비 증감율)	18.7% (6.9%)	13% (-30.5%)	18% (38.5%)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수) / (최근 3년간 평균 신규 등록외국인 수) * 100	사회통합정보망, 출입국 관리정보시스템 통계 등
구 분	'19년	'20년	'21년 (목표치)																				
최근 3년 평균 신규 등록 외국인(명)	309,148	309,858	250,171																				
참여자(명)	56,535	40,113	45,000																				
참여율 (전년대비 증감율)	18.7% (6.9%)	13% (-30.5%)	18% (38.5%)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실적	211	324	496	541	최근 실적치 추세치(53%)를 고려하고자하나, '18년에 비해 전년도 실적이 135%가 증가하는 등 추세치를 반영하기에 그 실적이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한정된 기간동안 제도 개선, 권익증진협의회, 관계기관 협의회, 홍보 등을 53% 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사회통합정책의 특성상 유관 기관, 지자체, 민간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므로, '회의 등 의견수렴' 전년 실적치 18건 대비 올해 목표치를 50% 적극 27건으로 상향 설정하여 총 점수는 전년 대비 9.1% 상승한 541점으로 설정	○ 총 541점 -제도개선안 마련 (각 10점, 22건 =220점) -유관단체 간담회, 회의 등 의견수렴 (각 5점, 27건 =135점) -권익증진협의회 개최(각 3점, 41회=123점)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유튜브, SNS 등 홍보실적 (각 3점, 13건 =39점)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자료발간 (각 3점, 8건=24점)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⑤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V-1-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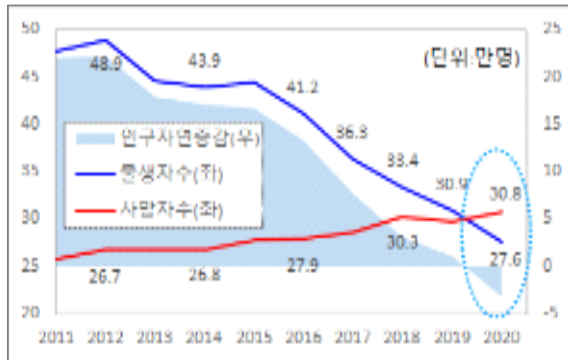
□ 추진배경

-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국가간 이주현상 분석 및 이민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이민의 질적 고도화 추구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新)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민자를 우리사회 미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등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비대면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한 외국인재의 유치·정착·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
 - 국내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치안·환경 악화,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개방적 이민정책 도입 요구 등 다양한 의견 표출
- ※ 국내 체류외국인은 '07년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19년 252만(국민 대비 4.9%) 명을 넘어섰으며 현 추세를 감안하면 '23년까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동반자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상생 발전하는 외국인정책 발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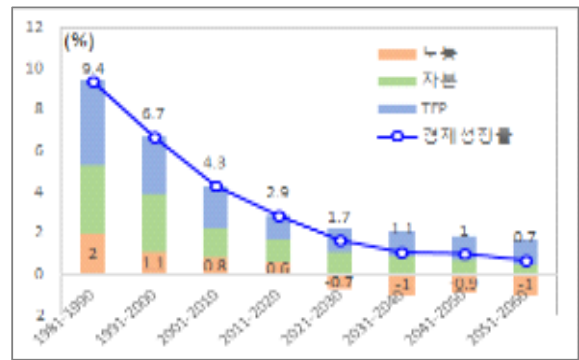
- 그간 정부의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연감소 시작,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력 국내도입 차질 등 부정적 충격 심화에 따른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



* 자료: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잠재성장률 전망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 생산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 정책을 인구절벽 충격 완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기 인구정책TF(팀장: 기재부 1차관)에 외국인정책반으로 참여
 - 외국인정책은 그 특성상 관련분야가 복잡·다양하고 정책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므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필요
 - 외국인정책 국가계획이자 정책지침서인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외국인·이민정책을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구축 추진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국인정책 개편'을 「목요대화」*논의 의제로 상정
- * 매주 목요일에 국무총리와 해당 의제 관련 전문가(약 10명 이내)가 총리공관에 모여 참석자간 개인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
- 코로나19 관련 해외 동향 등을 적극 수집·연구하여 해외 유입 및 확산 대응을 위한 외국인정책 입안에 활용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1년 정책연구과제 추진 계획(안) 마련	1월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1월	
	○ '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3월	
	○ 목요대화(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국인정책 개편)	3월	
2/4분기	○ 제3기 인구정책TF 외국인정책반 과제 발표	6월	
3/4분기	○ '2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8월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9월	
4/4분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 개최	11월	
	○ '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합동)	12월	
	○ 외부 전문가 초청 이민정책포럼 개최	연 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재한동포, 및 재한 외국인(국내 체류외국인)
- (이해관계집단)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 학계, 외국인정책 관련 시민단체(NGO), 외국인정책 전문가 그룹 등

□ 기대효과

- 저출산·고령화, 학령인구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외국인재, 필요 외국인력 유입·정착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환경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국제이민협력(III-1-일반재정①)				
① 국제이민협력(1231)		일반회계	26	24
▪ IOM이민정책개발지원(300)			4	4
▪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302)			22	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건)	27	36	45	39	○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안정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신속하게 확보 필요 ○ 또한, 환경 변화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외 동향 수집·분석 및 관계 부처, 정책 전문가 등과 긴밀한 소통·협력 요구 ○ 지난 3년간 실적 평균 대비 10% 상향하여 목표치 적극 설정	○ 법령 개정 - 법령 개정계획(안 마련(건수) - 공포·시행(건수) ○ 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구축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건수) - 관계부처 담당자 또는 민간인 참석 위원회 개최 및 참석(건수) - 공청회, 간담회, 심포 지엄 등 개최(건수) - 전문가 초청 이민정책포럼 개최(건수) - 관계부처와 협업 결과 발표(건수) ○ 외국인정책 동향 파악 및 사례 분석(건수)	각종 보고문서, 정보보고 간행물, 각종 회의 자료, 언론 보도자료 등 관련 문서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성과(점수) (공통)	신규 216 (161)	266	266	217	○ 산출근거 - 연구성과는 연구의 범위, 연구 수요에 대응하는 신속성, 투입되는 업무량을 고려 하여 기본연구와 현안연구로 구분하여 성과 측정 - 기본연구(연구보고서, 연구 총서, 수탁연구사업, 정책 보고서 포함)는 이민정책 및 학문에 대한 종합적 이고 심층적인 이슈를 다루며 현안 연구(워킹 페이퍼, 이슈브리프, 전문 매거진 등)는 이민 관련 현안 및 이슈에 대해 신속히	- 기본연구 발간물(건) × 7점 - 현안연구 발간물(건) × 3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성과물

성 과 지 표	실 적			목 표 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산 식 (또는 측정 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다룸 -연구 성과는 각각의 중요도, 업무량에 따라 기본연구 7점, 현안연구 3점으로 배점(가중치)을 적용 ○ 연구원 연구성과의 경우 연구인력 및 예산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이 커 신중한 목표치 설정 필요 ○ 이에, 최근 3년간 연구사업 실적 평균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18 실적은 '측정산식'에 해당하는 실적을 별도로 산출한 것임		

⑥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V-1-⑥)

□ 추진배경

- 귀화에 의해 국민으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연평균 1만 명 이상으로 인구 구성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어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도모하고 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높여 사회통합 기반 마련 필요
- 국제이주 증가, 헌법재판소의 '국적이탈'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등 국내외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적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와의 실질적 유대관계에 따른 미래지향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국적제도 개선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식 및 국민정체성 함양 교육 실시
 -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식의 법 개정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18개)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실시하고 국민정체성 함양을 위한 사전 또는 사후 교육 실시
 -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 실시 예정(8월 중)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국민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국적증서수여식 실시
-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개선
 - 공청회 또는 전문가 회의 및 연구용역을 등을 실시하여 국적 법령 개정 및 국적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 대외환경 변화에 부응한 국적업무 처리 관련 지침 개정 등으로 국적 신청자의 처우 개선 및 편의성 제고

-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제도설명회 및 온·오프라인 안내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 실시
- 사할린동포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할린동포 및 그 배우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국적판정 제도를 개선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국적업무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적업무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필요사항 적극 반영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하여 국적 관련 행사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귀화면접 등 업무 수행 시에는 면접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피면접자 간 접촉을 억제하는 한편, 면접 일정 통보 시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의심자를 사전에 차단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국민선서·국적증서수여식 개최	1월	
	○ 국적심의위원회 개최('21년 제1회)	3월	
2/4분기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4월	
	○ 국적심의위원회 개최('21년 제2회)	6월	
3/4분기	○ 국적법령 개정 관련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실시	6월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 개최	8월	
	○ 해외출생자의 국적취득방식 개선 연구용역 보고	9월	
	○ 국적심의위원회 개최('21년 제3회)	9월	
4/4분기	○ 국적관련 법령·지침 등 개정	12월	
	○ 국적심의위원회 개최('21년 제4회)	12월	
	○ 국적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 등 국적취득 신청자, 국민
- (이해관계집단) 외교부, 국가보훈처, 국적업무 전문가 그룹 등

□ 기대효과

- 귀화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정체성 함양 등을 통한 기존 국민과의 조화로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사회통합 기반 구축
- 국적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의 제도개선을 통해 신청자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국민 정체성 함양 실적(점수)	109	191	298	493.	실적달성도 및 상승평균치를 고려 '20년 실적(298점) 대비 65.5% 상향 설정 <table><tr><td>구분</td><td>산출목표</td><td>실제성과</td></tr><tr><td>'19년</td><td>34.0% ↑</td><td>75.0% ↑</td></tr><tr><td>'20년</td><td>55.0% ↑</td><td>56.0% ↑</td></tr><tr><td>'21년</td><td>65.5% ↑</td><td></td></tr></table>	구분	산출목표	실제성과	'19년	34.0% ↑	75.0% ↑	'20년	55.0% ↑	56.0% ↑	'21년	65.5% ↑		-독립유공자 후손 등 특별공로자 국적증서수여식, 지자체 협업 국적증서수여식 (각15점) -우수인재 유치 (1명당 10점) -홍보실적(보도자료, 인터뷰 등) (각5점) -해외사례 발굴 건수(각5점) -(행사참여형) 국적증서수여식 및 국민정체성 함양 교육 실시 횟수(1회당 5점) -(비대면) 국적증서수여 횟수(1회당 1점)	자체생산 보고서, 공문, 정보보고, 간행물, 각종 회의자료, 언론보도자료 등 관련문서
구분	산출목표	실제성과																	
'19년	34.0% ↑	75.0% ↑																	
'20년	55.0% ↑	56.0% ↑																	
'21년	65.5%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제도개선 실적(점수)	191	240	305	384	실적달성도 및 상승평균치를 고려 '20년 실적(298점) 대비 27% 상향 설정 <table><tr><td>구분</td><td>산출목표</td><td>실제성과</td></tr><tr><td>'19년</td><td>20.0% ↑</td><td>25.0% ↑</td></tr><tr><td>'20년</td><td>27.0% ↑</td><td>27.0% ↑</td></tr><tr><td>'21년</td><td>26.0% ↑</td><td></td></tr></table>	구분	산출목표	실제성과	'19년	20.0% ↑	25.0% ↑	'20년	27.0% ↑	27.0% ↑	'21년	26.0% ↑		-국적법 개정 (각30점)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각20점) -훈령·예규 등 제·개정(각15점) -전문가회의 (각10점) -공청회 등 의견수렴 실시(각10점) -제도개선안 마련(건당10점) -책자발간 등 (각5점) -홍보실적(보도자료, 인터뷰 등)(각5점)	관련 법령, 지침, 고시문, 자체 생산 보고서, 공문, 정보보고, 간행물, 각종 회의자료, 언론보도 자료 등 관련문서
구분	산출목표	실제성과																	
'19년	20.0% ↑	25.0% ↑																	
'20년	27.0% ↑	27.0% ↑																	
'21년	26.0% ↑																		

㉓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V-1-㉓)

□ 추진배경

- 전 세계적 난민발생 위기 상황 지속, 이로 인한 국내 난민신청자 유입 증가 등 '13년 제정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합리적 난민제도 운영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난민법령 개정 등 난민 제도 정비

- 난민법령,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규정, 난민인정심사·체류·처우 지침 등 난민 관련 법령 및 지침 정비
-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국제회의 및 국가간 교류활동을 통한 해외 사례 수집 및 연구 등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난민심사 역량 강화 추진

- 국제기구(유엔난민기구) 및 외부 전문가 초빙 등 난민심사 교육 과정 및 내용 공신력 제고를 통한 난민심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인증시험, 맞춤형 교육 등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추진을 통한 난민 통역 품질 및 신뢰성 제고

※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원격강의 병행 추진

○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개선을 통한 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

-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및 정착 지원을 통한 국제사회의 난민 문제 해결 노력에 지속 동참
- 난민인정자의 정착 및 자립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 관계기관, 난민지원 단체 협력 체계 구축 및 논의 지속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난민전담공무원 신규 과정 교육 실시	1월	
	○ 재정착 난민 수용 계획 수립	3월	
2/4분기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평가 실시	4월	
	○ 난민전담공무원 운영규정 개정	5월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시험(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6월	
3/4분기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7월	
	○ 난민법 시행규칙 개정	9월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9월	
4/4분기	○ 난민(전문)통역인 보수교육 실시	10월	
	○ 거점기관 난민심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11월	
	○ 난민심사 규정 등 자료집 발간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재정착희망난민, 인도적체류자
- (이해관계집단) 난민관련 민간단체(NGO), 유엔난민기구(UNHCR)

□ 기대효과

- 난민제도의 공정성·합리성 제고를 통해 진정한 난민에 대한 적시 보호, 사정변경 없는 반복적 재신청 건에 대한 효과적 대응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난민제도 운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난민 심사 역량 강화(점수)	-	60	90	108	'20년 난민 심사 역량 강화 실적 90점 대비 20% 상향값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난민심사관 교육 및 평가(10점) -워크숍 또는 학술포럼 개최(20점) -통역인 평가 및 교육(10점) ※역량강화 활동별 실적 집계	관련 보고서 및 정보보고 등의 문서
난민 제도 정비(점수)	-	110	165	181	난민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은 장기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여 '20년 난민 제도 정비 실적 165점 대비 10% 상향값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법령 개정(50점) -훈령 개정(20점) -지침 개정(15점) -제도 연구(10점) -관련 책자 등 발간(15점) * 난민심사 규정 법령·조약 등 자료집 -관계기관 간담회 등 개최(10점) -대국민홍보(20점) ※제도정비 활동별 실적 집계	관련 보고서 및 정보보고 등 관련 문서

⑧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V-1-⑧)

□ 추진배경

- '20.2.25. 난민 이의신청 조사 전담 부서인 <난민심의과> 신설, 난민 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이의신청 심의 업무 지원기반 마련 필요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급증*(최근 3년간 평균 38% ↑)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 심의 적체**가 가중되어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진정한 난민에 대한 인권 보호 약화

* 이의신청 : ('18) 3,113건 → ('19) 4,068건(31% ↑) → ('20) 5,956건(46% ↑)

** 심의 적체 : ('18) 2,747건 → ('19) 3,255건(18% ↑) → ('20) 5,118건(57% ↑)

- 난민신청 국가 및 사례의 다양화·복잡화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이의신청의 절차적 권리 보장 미흡, 국가정황 조사 전문인력 부재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지속 제기

※ 난민 이의신청 국가 : ('13) 29개국 → ('20) 66개국(2.3배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난민위원회 심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 해외 난민 심사기관의 심사 사례 등을 분석하고, 민간 난민 전문가 및 국제기구 등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 주제별(성소수자, 아동, 무국적 등) 심사 가이드 라인 및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매뉴얼, 난민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난민조사관 및 난민위원회 위원용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한 심의 지원
 - 국내외 주요 난민 결정·판례,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 이의신청 특이사례 공유 및 이의신청 사실조사 기법을 연구하는 난민 조사관 연구 모임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 난민 분과위원회 개최 확대를 통한 사전심의 기능 강화, 난민 위원회 개최 확대를 통한 위원회 회기별 심의 건수 적정 수준 유지로 심의 전문성 제고
-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 등에 대해 난민위원회(분과위 포함) 개최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이의신청 조사과정에서 추가 면접 실시 확대로 구두 의견진술 기회 보장

○ 국제수준에 부합한 이의신청 심의체계 구축

- 난민관련 법령 개정, 난민위원회 운영세칙(법무부 훈령) 등 난민 제도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비
- 내·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국제회의 및 국가 간 교류활동을 통한 해외 사례 수집 및 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이의신청 접수 및 보고, 추가 입증서류 제출 등에 대한 안내,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이의신청 자료의 열람·복사 등 이의신청 업무의 세부 규정 정비
- 구두 의견진술 희망 여부 및 사유, 추가 입증서류 제출 여부 및 입증 내용 등 이의신청서 서식을 개선하여 신청인이 불복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이의신청 제기기간(30일)을 도과하거나 행정심판 제기 후 이의 신청을 하는 등 부적법한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절차를 도입하여 절차적 적법성 확보

<’21년도 과제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난민위원회 개최	1월	
	○ 「민간 난민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2월	
	○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3월	
2/4분기	○ 난민위원회 개최	4월	
	○ 성소수자의 난민 지위 심사를 위한 안내서 발간	5월	
	○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6월	
3/4분기	○ 난민위원회 개최	7월	
	○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8월	
	○ 특정집단 난민 지위 심사를 위한 안내서 발간	9월	
	○ 국가정황정보 조사팀 구성 및 운영	9월	
4/4분기	○ 난민위원회 개최	10월	
	○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11월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12월	
	○ 난민위원회 운영세칙(법무부 훈령) 개정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국제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진정한 난민(인도적 체류허가자 포함)
- (이해관계집단) UNHCR 한국대표부, 난민관련 민간단체(NGO)

□ 기대효과

-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진정한 난민에게 신속한 보호를 제공하여 진정한 난민의 인권 보호 강화 및 난민 보호의 국제적 책무 이행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 제고
- 불필요한 소송 제기 및 재신청에 따른 행정 비용 최소화, 허위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 지출 등 국가 재정 낭비 방지 및 국민 세금 부담 완화
- 준사법절차 보장을 통한 특별행정심판 기능 강화로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및 난민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난민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점수)	-	-	신규	152	'20년 난민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 실적 127점 대비 20% 상 향 목표치 설정 ※증감율 <table><tr><td>구분</td><td>18</td><td>19</td><td>20</td></tr><tr><td>점수</td><td></td><td></td><td>127</td></tr><tr><td>증감율</td><td></td><td></td><td>20</td></tr></table>	구분	18	19	20	점수			127	증감율			20	-난민위원회 개최(각 5점) -분과위원회 개최(각 0.5점) -주제별 심사 매뉴얼 등 책자 마련(각10점) -연구용역실시(각 15점) -최신 국가정황 분석자료 마련(각10점) -직무능력 향상 교육(각 5점) -외부난민전문가강의(각5점) -전문가회의 등 간담회 개최 (각 5점) -국외연수 참여(각 10점) -민간 난민전문가 자문 의뢰 (각 3점) -관계기관 국가정황 등 사실 조회(각 2점)	관련 보고서 및 정보보고 문서 등
구분	18	19	20																
점수			127																
증감율			20																
이의신청 심의 체계 개선(점수)	-	-	신규	54	'20년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실적 45점 대비 20% 상향 목표 치 설정 ※증감율 <table><tr><td>구분</td><td>18</td><td>19</td><td>20</td></tr><tr><td>점수</td><td></td><td></td><td>45</td></tr><tr><td>증감율</td><td></td><td></td><td>20</td></tr></table>	구분	18	19	20	점수			45	증감율			20	-법령개정(20점) -훈령개정(10점) -지침개정(5점) -부처협의등의견조회(각5점) -제도개선안 마련(각5점) -외부전문가 등 간담회 개 최(각5점) -대 국민 홍보(각5점)	관련 보고서 및 정보보고 문서 등
구분	18	19	20																
점수			45																
증감율			20																

(1) 주요내용

- 국제 민상사규범 성안에 관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 및 성안된 규범의 국내 도입,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 시장 개방에 대응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및 청년 법조인 해외 진출 지원 등 법률서비스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에 관한 선제적인 정비 추진 및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위한 법률지원 강화
- 사회변화를 반영한 형사실체법 및 형사절차법 정비와 형사 사법제도 구축을 통해 법치기반을 확립하여 국민 행복에 기여
- 국제투자분쟁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제투자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예방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
- 공증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공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부실 공증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해 신뢰사회 기초 마련
-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시험제도 운영 및 신규 법조인에 대한 신뢰도 향상 도모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민의 사법신뢰 회복 및 법치주의 확립을 도모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및 법률사무종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법률사무종사 제도 개선을 통해 법치행정의 기반 강화
- 비대면 사회에 부합하는 상담시스템 개선을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 접근성 강화

□ 법률시장 개방 대비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등 국제 민·상사규범 성안에 관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제도와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성안된 규범을 국내에 도입하여 관련 법령 개정시 적극 반영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역량 강화
 - 행정기관·지자체·공기업 등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맞춤형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및 국제분쟁 예방가이드 발간·배포 등 법률지원 실시
-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심사 및 관리·감독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사업(O.K.프로젝트)의 일환으로 O.K.아카데미 운영 및 해외 장·단기 인턴 파견 지원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

-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북한법제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 방안 등 연구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연 4회) 및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설·운영
- 유관부처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강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시 방문 법률교육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시 온라인·전화 법률상담 실시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구축·운영하여 취약 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정비
- 법무·검찰 현안 및 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선제적인 입법 추진 및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 제·개정

□ 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

- 화상공증제도 홍보 및 전자공증시스템 개선을 통한 공증 서비스 접근성 강화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개최, 공증 관계 법령 개정, 공증제도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공증제도의 접근성 확대하고, 규제개혁 방안 등을 논의·추진함으로써 공증 활성화 및 선진화 도모
- 엄정한 감사를 통해 부적정 공증사무를 적발하고 위반 행위에 따라 공증인을 징계하여 공증사무의 신뢰 제고

□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선

- 국제화·전문화 시대의 법률 수요에 부응하는 법조인 선발을 위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시행
- 도입 12년을 넘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제고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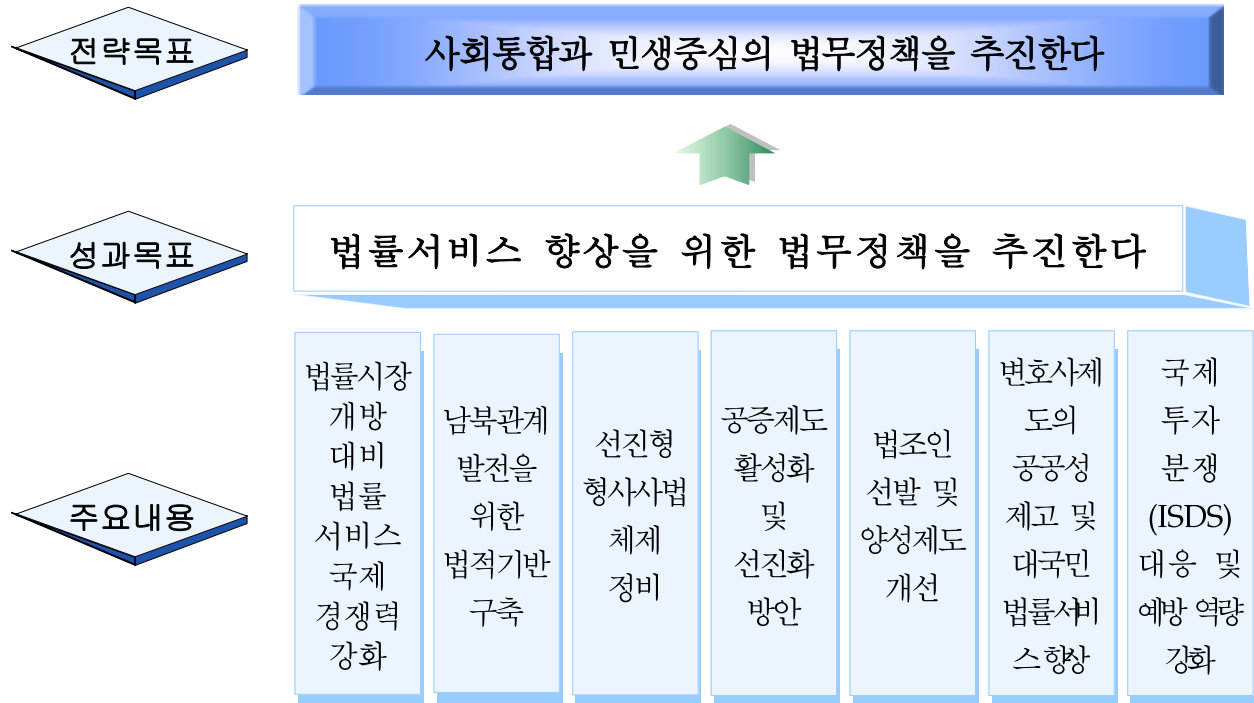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
 -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조계 전관 특혜를 근본적으로 근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사법시스템 정착 도모

- 법치행정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등 법률사무종사 제도 개선
 - 15개 국가기관에서 약 70명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선발하고, 법률사무종사기관 대상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실무역량을 갖춘 신규 변호사 양성 및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치행정 강화 도모
- 비대면 사회에 부합하는 상담시스템을 마련하여 마을변호사 제도 접근성 강화하고, 틈새없는 법률복지 실현
 - (온라인 상담예약 창구 마련)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마을변호사와의 상담을 예약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마을주민의 제도 이용 편의 증진
 - (화상 법률상담 공간 개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현장상담 축소에 대응하여 지자체에 마을변호사와 화상으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 개설

□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예방 역량 강화

-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일관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 국제분쟁대응과 소속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축적 및 직접수행 능력 증진 도모
-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 실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시행 부처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범부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분쟁 발생 위험 조기 탐지 및 선제적 분쟁 예방
- 자유무역협정(FTA), 투자보장협정(BIT) 협상 참석 및 법률자문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내 외국인 투자자 보호·증대와 외국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 및 제도 마련
- 국제투자분쟁절차 제도개선 등 논의를 위한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회의 등 국제 투자분쟁절차 제도개선 논의에 정부 대표로 적극 참여
- 기타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법률검토·지원

《목표체계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무정책 추진 실적(점수)	1800	1547	1501.8	1578	-A+B+C+D -'20년 지표 실적치를 합산하여 (A+B+C+D+E) 5% 목표치 상향설정 ※ 국제법무과 업무가 국제법무과와 국제분쟁대응과로 나뉘에 따라 기존 A 지표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제분쟁 대응예방 및 법적지원 실적, 610점)를 현재 A 지표로 변경 -A(국제투자분쟁대응·예방 및 기타 국제분쟁 법률지원) -B(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실적, 231.8점) -C(부적정 공증사무 적발실적, 546) -D(변호사시험 복수정답 인정을 2%이하 달성, 114점)	A+B+C+D -A 국제투자분쟁 대응단회의 개최 (각 10점), 기타 국제투자분쟁 대응회의 개최 (각 10점), 국제투자분쟁 교육·간담회·세미나 개최 건수 (각 10점), 보도자료 등 홍보 건수 (각 5점), 국제투자분쟁 예방 법률검토 (각 20점),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개최 (각 20점), 홍보 건수 (각 5점), 국제투자분쟁 예방 관련 자료 발간 (각 10점), 국제투자분쟁	-공문, 출장계획서·보고서, 연구용역 결과 등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예방교육 만족도 (만족도/응답지수) ▷매우만족 50 ▷만족 40 ▷불만족 20 ▷매우불만족 10, 투자협정(FTA·BIT) 관련 법률 지원 건수 (각 10점), 기타 국제분쟁 법률검토 건수 (각 10점) -B::통일과 법률 아카 데미 수강 인원개 최 횟수(단 수료 인원의 경우 1명 당 2로 계산, 만 족도 평균 점수, 홍보 건수(매체 별 1건 15점), 소모임 개최건 수(1건 10점) -C: 직무감사에서 지적 및 시정 조치된 공증사 무소 1개소 당 2점(징계에 이 른 경우 그 수 위에 관계없이 1 개소 당 0.5점 추가부여), 재 외공관 공증사 무 지도점검·자 체점검표 횟수 1건 당 10점 정 기감사 외 특별 감사 실시×10 점 -D:복수정답인정률 2%이하 달성 = (복수정답인 정 문항수 / 전체 문항수)×100% ▷ 점수= 100점+(2-인정 률)×10점	- 자체 통계 자료 활용(통일과법 률 아카데미 이수인원 및 만족도 설문지, 참석현황 등) -공증서류검열 보고서, 공증인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재 외공관 공증사 무 자체점검표 -정답확정회의 등 회의자료 및 보고서 등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법률시장 개방 대비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EU 등 일부 국가의 법률시장 추가 개방 요구, 브렉시트 가능성 등 법률서비스 분야의 통상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외국로펌과 변호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국내 법률시장에 국제적 요소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
 - 각국 대사관 및 외국 로펌 등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강구
 - 국내로펌 해외설명회 개최 및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 외국인의 국내 직접·간접 투자 증가 및 국제거래 증가에 따라 국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법률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통한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분쟁해결 지원 및 국제분쟁 예방가이드 제공을 통한 분쟁대응능력 배양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

- 남북관계 발전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과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교류협력 관련 법제 및 해외 사례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고 통일 법제 전문가 양성에 주력
-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지원의 필요성 증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방문 법률교육 및 온라인·전화 법률상담을 강화
- ‘하나센터 담당 변호사’ 제도를 통해 입국 후 5년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 법률 재교육 실시, ‘지원변호인’ 제도를 구축하여 취약 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 형사실체법 및 형사절차법 정비, 선진형 형사사법제도 도입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도출과 관련 법안 국회 통과에 상당기간 소요 예상
- 공청회 개최 및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후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개정안 마련

□ 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

- 화상공증 제도 접근성 확대를 위한 신분확인시스템 개선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없는 재외국민도 편리하게 화상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공증시스템상 사용 가능한 신분증의 범위를 여권으로까지 확대하고,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전자공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
- 공증 관계 법령 개정 시 관련 기관 의견 수렴
 - 「공증인법」, 「공증서류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등 공증 관계 법령 개정 시 공증제도 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잠재적 갈등요소 해결

○ 재외공관 지도점검 시 자체점검 방안 마련

- 코로나19로 인해 재외공관 방문을 통한 공증사무 지도점검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외공관 차원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자체점검 방안 마련

□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선

- '17.12. 사법시험법 폐지로 법조인 선발 방식이 일원화됨에 따라 일반 국민,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 정책수요자로부터 예비시험 도입,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 신설 및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 및 연수 방식 개선, 합격률 조정 등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급증
- 법무부는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 대한변호사협회, 교육부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방지하고 신뢰도 높은 국민중심의 법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제고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 「변호사법」 및 시행령 개정 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의 추진
 -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 시 의원실 방문 등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변호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 시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 등 법조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 법치행정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등 법률사무종사 제도 개선

- 법률사무중사 변호사 선발을 위해 국가기관과의 지속적 소통이 필요하고, 법률사무중사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법률사무중사기관 등 이해관계자 반발 최소화
- 온라인 상담예약 창구 마련 및 화상상담 공간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고, 마을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확대에 대해 대한변협 등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어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소통 및 지속적인 협의 필요

□ 국제투자분쟁 대응 및 예방 역량 강화

- 외국인의 국내 직·간접 투자 활성화로 국제투자분쟁 및 기타 국제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
 - 국제투자분쟁의 효율적 대응·예방을 위해 전문성 축적 및 역량 강화하고 ISDS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참여 지속 추진
 -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조치 담당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긴밀한 소통 필요

(4)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법률시장 개방 대비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V-2-①)

□ 추진배경

- 국제교류의 증대로 민·상사 규범의 국제적 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민·상사 관련 국제 통일규범 성안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법제의 입장을 반영시키고, 선진 법제를 수용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경쟁력 제고
-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우리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법률과 제도를 여러 나라에 전파하고, 우리 기업 해외 진출시 제도적 난관을 줄여 나가는데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제규범 성안 및 국내 도입(이행)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규범 성안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측 의견을 최대한 개진하고, 논의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전파 및 우리 법제에 반영

※ '20년 UNCITRAL 온라인 회의(6회), HCCH(1회), IMO법률위원회(1회),

OECD경쟁위원회(2회) 등 각종 국제회의 논의 참여

- 조정으로부터 도출된 국제적 화해합의에 관한 유엔협약(싱가포르 조정협약, '19. 8. 서명) 이행법률 제정을 통해 저비용·효과적 국제분쟁 해결수단 마련

※ 21. 3.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발족

- 국제재판관할 규정 35개를 신설하는 「국제사법」 전부개정 추진
-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역할수행 및 각국 중앙당국과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20년 법률지원 43건)

○ 법률시장 개방 대응(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지원(O.K. 프로젝트)을 위한 제7기 O.K.아카데미 운영으로 청년법조인들에게 국제법무 교육 기회 제공('20. 11. ~ 12. 제6기 O.K. 아카데미 운영, 66명 수료)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의 안정적 정착 추진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 전년도에 계속하여 몽골,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의 지속적 시행 및 지원 대상 국가 확대 추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법률과 제도를 적극 전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제도적 난관을 줄여 나가는데 기여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을 위해 몽골 형사법제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20. 1.,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 형사법제 개선방안 및 캄보디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주제로 각 연구용역 실시('20. 10.)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국제민·상사규범 성안도입)			
1/4분기	○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발족식	3월	
2/4분기	○ 국제사법 연구 관련 자료 발간	4~6월	
3/4분기	○ 법무부-WIPO 아시아·태평양 지식재산권 워크숍 개최 ○ 국제거래법연구단 정례회의 개최	7~9월	
4/4분기	○ 국제사법 전부개정 추진 ○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회의 개최	10~12월	
연중	○ 국제규범 제정회의 협상 참여 ○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역할 수행		국제기구 등 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1/4분기	○ 통상법률 편집위원회 개최 ○ 통상법률 제150호 발간	1~2월	
2/4분기	○ 통상법률 제151호 발간	5월	
3/4분기	○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 통상법률 제152호 발간	6~9월	
4/4분기	○ 제6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운영 ○ 통상법률 제153호 발간	10~12월	
연중	○ 법률서비스 관련 FTA 협상 준비 및 참가 ○ 통상법률 지원 ○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시스템 운영		통상 일정애 따라 변동 가능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1/4분기	○ 베트남·미얀마 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참석	1~3월	수원국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2/4분기	○ 베트남·미얀마 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평가	3~5월	
4/4분기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연구용역 실시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제거래규범 도입 및 통상협상 관련 관계부처 및 학계
- 법률시장 개방 관련 법조인, 법률서비스 이용 국민

□ 기대효과

- 국제거래규범에 대한 국내 학계·재계 인식 제고 및 이해 확산, 관련 자료 축적을 통한 연구 및 국제거래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선진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을 통한 우리법제 전파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국격 제고, 국내 로펌 등 법조 전문인력 진출의 발판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국제민·상사규범 성안·도입(공통)	116	222	230	235	-코로나 19 사태로 국제 회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정 고려 전년도 목표치 대비 약 2% 상향된 235점을 목표로 설정 -국제회의 참가 위하여 보다 충실한 준비 및 안전 검토 위해 관련 산식 추가 -연구실적의 경우 연구에 대한 결과평가를 충	-국제민·상사규범 성안 ▷국제회의 참가(각 10점) ▷준비회의 개최 및 참가(각 2점) ▷검토의견 제출(각 2점) ▷세미나 개최(각 10점) ▷관련 연구실적(각 10점) / 결과평가(각 10점)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입법 추진 ▷T/F 구성(10점) ▷실무작업반 구성(10점) ▷회의 개최(각 10점) ▷관련 연구실적(각 10점) / 결과평가(각 10점)	공문, 회의참가보고서 등 자체 생산문서, 출장보고서, 세미나 등 행사자료, 홍보 교육자료 및 간행물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실히 할 목적으로 결과 평가에 관한 산식 추가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 입법 준비에 착수함에 따라 관련 산식 추가 -국제사법 전부개정 추진에 따른 산식 추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관련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및 해외 중앙당국과의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관련 산식 추가	-국제사법 전부개정 추진 ▷전문가 등 간담회(각 10점) ▷국회 제출 법안 본회의 통과(40점) ▷설명회 등 후속조치(각 20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 지원 ▷민원 응대(각 2점) ▷지원사건 수(각 10점) ▷해외 중앙당국과 간담회 개최(각 10점) ▷INCADAT 판례 업데이트(각 5점) -국제거래규범 관련 자료 발간(각 20점) -보도자료 배포(각 5점)	
법률시장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 경쟁력 강화(공통)	165	235	245	255	-통상 관련 일정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치 대비 약 5% 상향 설정 -통상법률 지원 강화를 위하여 자문제공 등 산식 추가 -통상법률 발간 관련 산식 추가 -코로나 19 사태로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산식 삭제 -연구실적의 경우 연구에 대한 결과평가를 충실히 할 목적으로 결과 평가에 관한 산식 추가	-통상법률 지원 관련 ▷법률시장 개방 관련 통상협상 참가(각 10점) ▷대책회의 참가(각 5점) ▷자문제공(각 5점) ▷기타 통상법률 지원 실적(각 5점) ▷통상법률 발간(각 20점) -외국법자문사 관련 ▷외국법자문사 승인 건수(각 5점) ▷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건수(각 20점) ▷외국법자문사법 관련 설립인가 및 승인 등 소요시간 1개월 내 처리 건수 (각 5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간담회 개최(각 10점) ▷외국법자문사법 개정(30점) - OK아카데미 운영(수료자 수 × 2점) -법률시장 개방 관련 연구용역(각 10점)/결과평가(각 10점) -통상 관련 자료 발간 (각 20점) -보도자료 배포(각 5점)	공문, 회의참가보고서등 자체 생산 문서, 출장보고서, 세미나 등 행사자료, 홍보 교육자료 및 간행물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공통)	135	140	145	145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개발도상국 초청 및 방문이 불가능해진 사정	-ODA 관련 외국 정부, 해외 기관 초청 세미나 개최 건수 (각 40점), 간담회 개최 건수	공문, 회의참가보고서등 자체 생산 문서, 출장보고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고려 전년도와 동일하게 목표 설정 -외국인사 초청 행사 개최의 난이도, 업무량을 고려하여 배점을 상향조정(다만, 행사 규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연구실적의 경우 연구에 대한 결과평가를 충실히 할 목적으로 결과평가에 관한 산식 추가	(각 20점) -개발도상국 전문가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건수(각 30점) -ODA 관련 국내회의 참가 건수(각 10점)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연구실적(각 30점) / 결과평가(각 10점) -보도자료 배포(각 5점)	세미나 등 행사자료, 홍보 교육자료 및 간행물

②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V-2-②)

□ 추진배경

-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심화 및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제의 선제적인 정비 필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통일부·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남·북한법제 및 해외 사례 등 연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기반 구축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남북가족특별법 개정 사안 등에 관한 연구 심화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계간 발행 및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 통일부·법제처 등 유관부처와의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통일법제 관련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강화
 - 남북관계 일일스크랩, 북한 실태 분석 등을 실시하여 통일·남북 관계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실시간 파악·분석
 -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www.unilaw.go.kr>)를 운영하여 통일법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G-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한편,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영문 홈페이지 구축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위한 법률지원의 내실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기초 법률교육 실시, 북한이탈주민 대상 무료 온라인·전화 법률상담 실시
- ‘하나센터 담당 변호사’ 운영을 통해 입국 후 5년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 법률 재교육 실시, 취약 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변호인’ 제도 전국 확대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실시	1~12월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제45호 발간	2월	
	○ 베니스위원회 제126차 정기총회 참석	3월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2월~6월	
2/4분기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구성·운영	4~11월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제46호 발간	5월	
	○ 독일 나우만재단 개최 한·독 대학생 통일법률 교육 행사	5월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5월~6월	
3/4분기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확대 시행	7월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제47호 발간	8월	
	○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9~11월	
4/4분기	○ 통일법제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제48호 발간	11월	
	○ 베니스위원회 연례보고서 발간	12월	
	○ 통일법제 유관부처(통일부, 법제처 등) 공동학술회의 개최	12월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개최	12월	
	○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개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북한이탈주민 포함)
- (이해관계 집단) 대법원, 통일부, 법제처, 변호사, 교수 등 남북 관계·통일법제 전문가 및 민간 연구단체

□ 기대효과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연구 및 법제의 정비를 통해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사전에 준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의 강화를 통해 안정적·성공적인 정착 및 생활을 지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실적 (점수)	314.2	299.8	269.8	262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설 등 적극 행정 반영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추세치(-7.3%) 보다 60% 이상 상향하여 목표치(-2.9%) 적극 설정 ※ 목표치 산출(60% 반영수치) : 7.3-(7.3×0.6)=2.9%	A~D를 합산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수강 인원/개최 횟수(A) (단, 수료 인원의 경우 1명 당 2로 계산) - 만족도 점수(B) (만족이상/응답자수 비율) ▷ 만족이상 80% (100점) ▷ 만족이상 70% (90점) ▷ 만족이상 60% (75점) ▷ 만족이상 50% 미만 (60점) - 홍보 점수(C) (매체별 1건 15점) - 소모임 개최 점수(D) (1건 10점)	공문, 수강자·수료자 명단,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 등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북한법령 연구 및 통일대비 법적쟁점 연구실적(점수)	292	293	319	339	최근 3년간 실적 추세치(4.6%)보다 30% 이상 상향하여, 목표치(6%) 적극 설정 ※ 목표치 산출 : $4.6 \times 1.3 = 6\%$ - 소관 법률 1개, 최근 5년간 법령 개정 실적 없음	A~E를 합산 - 학술회의 점수(A) ▷ 국제학술회의 개최 (1회 10점) ▷ 국내학술회의 개최 (1회 5점) ▷ 주제발표(1회 5점) ▷ 토론(1회 2점) ▷ 학술회의 참석 (1회 1점) ※ 개최·참석·발표·토론이 중복되더라도 별도 항목으로 계산 - 법령 개정 점수(B) ▷ 법률 개정 (1건 10점) ▷ 대통령령 개정 (1건 5점) ▷ 부령 개정 (1건 3점) ※ 발표 등 활동 내용은 학술회의 점수 준용 - 자료집 점수(C) (1건 10점, 단 200쪽 이상 20점)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점수(D) ▷ 위원회 등 연구반 구성(1건 10점) ▷ 위원회 활동(1회 3점) - 연구용역 점수(E) (1건 10점)	공문, 보고서, 자료집, 주제발표문, 지정토론문, 위원회 운영현황, 연구용역계약서 등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실적(점수)	262	277	319.1	128	코로나19 관련 북한 국경 봉쇄되어 탈북자 수 극감소로 법률교육 실시 불분명하나, 목표치 적극 설정하여 전년도 실적 대비 40% 반영 - '19년 교육생 922명→'20년 교육생 214명(76% 감소) - '19년 교육 횟수 10회→'20년 교육 횟수 7회(30% 감소) ※ '21년도 교육생 50명 미만 예상 ※ 법무분과 합동실무팀(T/F) 검토의견(목표치 하향 검토) 반영	A~D를 합산 - 법률교육 점수(A) (1회 7점) - 만족도 점수(B) (만족이상/응답자수 비율) ▷ 만족이상 80% (30점) ▷ 만족이상 70% (25점) ▷ 만족이상 60% (20점) ▷ 만족이상 50% 미만 (15점) - 법률교육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교재 제작 점수(C) (1건 20점)	공문, 법률교육 현황,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 등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법률교육 피드백 점수(D) (1건 2점)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실적 (점수)	405	468	615	576	전년도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및 모바일 등 상담 건수가 급증한 특이 상황으로, 2020년도 실적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실적 추세치 (17.6%) 보다 30% 이상 상향하여 목표치(22.9%) 적극 설정 ※ '17년 실적 : 339 ※ 목표치 산출 : $17.6 \times 1.3 = 22.9\%$	A와 B를 합산 - 온라인·모바일 등 북한이탈주민 상담 점수(A) (1건 3점) - 소송구조연계 점수(B) (1건 6점)	북한이탈주민 법률 상담 현황 통계 등

③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V-2-③)

□ 추진배경

-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사회 발전과 국민 윤리의식의 변화로 인한 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 해소 및 형법과 형사특별법 상호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형사실체법 정비 필요성 대두
-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해당 직무와 무관한 민간인의 비공개 정보수집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진형 형사사법제도 도입
 -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약식절차에서의 집행유예 도입[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원발의('20. 12.)]
 -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비대면·비접촉 업무방식을 활성화하고, 증인의 원거리 출석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원발의('20. 12.)]
- 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새롭게 대두된 젠더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논의 지원('21. 3.), 법 시행 성과 추적 관리 및 입법 미비점 검토

※ '20. 1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 국회제출

-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규정 재정비, 가정폭력 등 관련 제도 개선
 -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21. 1.)
 - ※ 주요내용 :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죄 등 추가, 임시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
 -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21. 1.)
 - ※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 피해자 신원 등 비밀누설범죄의 법정형 상향 등
- 현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 개정시한('20. 12. 31.) 경과에 따른 입법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신속히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 적극 지원
 - ※ '20. 11. 「형법」 정부안 국회제출
- 불법사찰 처벌 관련 법령 또는 지침 제·개정
 - 불법사찰 관련 판례, '20년 개정된 국가정보원법 등 불법사찰 관련 개별 특별법 검토를 통해 추가 법률 개정 필요성 검토
- 주요 추진 법안 대응 철저
 - 국회에 제출된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 전문위원실, 법원 등 적극 접촉 및 설득
- 학계 등과 소통 및 협력 강화
 - 형사법 관련 학회에 적극 참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 연구 과제 추진 등 교류 확대

<’21년도 과제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월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3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통과 추진	3월	
	○ '20. 선고된 불법사찰 관련 판례 등 검토	3월	
	○ 형사법 및 형사절차법 개정 관련 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및 참석	3월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통과 추진	3월	
2/4분기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통과 추진	5월	
	○ '20. 개정된 국가정보원법 등 불법사찰 관련 개별 특별법 검토	6월	
	○ 형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	6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시행 준비	6월	
	○ 형사법 및 형사절차법 개정 관련 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및 참석	6월	
3/4분기	○ 형사법 및 형사절차법 개정 관련 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및 참석	9월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통과 추진	9월	
	○ 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법 시행 성과 추적 관리	10월	
4/4분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성과 추적 관리 및 입법 미비점 검토	12월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통과 추진	12월	
	○ 형사법 및 형사절차법 개정 관련 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및 참석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형사사법 관련자(피의자, 피해자, 피고인 등)를 포함한 국민
- (이해관계집단) 국민을 위한 시대 변화 반영 및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제적 법령 개정과 관련한 국회, 학회, 법원
 - 불법사찰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정보기관 · 감찰기관

□ 기대효과

- 형법체계의 합리적 재정립을 통한 범죄 구성요건 신설 · 폐지 및 적정 양형 구현으로 국민의 사법신뢰 증진 도모
-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형사관계 법령·제도의 정비를 위한 연구 및 성과(건)	39	52	59	52	형사관계 법령 및 제도 마련을 위하여 실시한 연구 및 법령 마련 건수 목표치를 전년도(47건) 보다 10% 상향한 52건으로 설정	법령안 제출(건수) +법령안 공포·시행(건수) +학술대회·세미나 참가 및 개최(건수) +공청회 참가 및 개최(건수) +연구용역 발주(건수) +책자발간(건수) +보도자료 배포(건수)	법령안 제출, 공포, 시행 근거자료, 학술대회 및 공청회 참가 및 개최 자료, 연구용역 발주서, 책자발간공문, 보도자료 등

④ 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V-2-④)

□ 추진배경

- 공증 관계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비대면 사회에서 늘어나는 화상공증 수요 따라 화상공증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
-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해 정기적 점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증인법」, 「공증서류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등 공증 관계 법령 개정절차 진행
- 정기적으로 전국의 공증사무소를 감사하여 부적정 공증사무를 적발하고 위반 행위에 따라 공증인을 징계
- 전자공증시스템 개선
 - 촉탁인의 신분확인방법 확대

※ 현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의하여만 신분확인이 가능하나, 여권을 통해서도 신분확인 가능하도록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화상공증가이드북 개발·배포	1월	
	○ 「공증서류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월	
	○ 공증인 징계위원회 개최	2월	
2/4분기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4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 「공증인법」 개정안 국회제출	5월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5월	
3/4분기	○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관련 개정안 입안보고	7월	
	○ 공증인 징계위원회 개최	8월	
4/4분기	○ 화상공증제도 집중 홍보	10월	
	○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지정·고시	12월	
	○ 전자공증시스템 신분확인방법 확대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공증촉탁인 등 공증제도 이용자, 공증인
- (이해관계 집단) 대한공증인협회 및 협회 소속 각 공증인

□ 기대효과

- 공증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집행증서 작성업무와 공증서류 보존 업무를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공증사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비대면 사회에 부합하는 시스템 개선으로 공증제도 접근성 확대
- 공증인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징계를 통해 공증사무 신뢰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

		회계구분 ¹⁾	'20	'21
법률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 선발(V-1-일반재정③)				
	▪ 공증제도운영및활성화(300)	일반회계	740	7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공증 제도개선 및 신 뢰도 제고(점수)(공통)	715	573	960	1152	'18년의 경우 화상공증 제도 도입을 위해 공증인법 시행령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등 여러 법령을 개정하여 '19년에 비해 성과 가 높게 나타났고, '20년의 경우 전 자공증시스템 개편을 통한 전자공증 이용건수의 증가로 성과가 높게 나 타났음. '21년의 경우 공증 관련 법 령의 제·개정 뿐 아니라 전자공증 이용건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최근 3년간의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 목표치 설정	○공증제도개선 위원회 회의 건 수×20점 ○법령 제·개정 안 마련 -법령안 입안(제· 개정 조문 1개당 4점) -입법예고(제·개 정 조문 1개당 4 점) -관련기관 협의 (제·개정 조문 1 개당 4점) -법제처 심사(제· 개정 조문 1개당 4점) -국무회의 심의 (제·개정 조문 1 개당 4점) -법률안 국회제 출((제·개정 조문 1개당 4점) -국회심의 중 설 명회·간담회 등 개최(1회×20점) -공증관계 하위 법령안 공포(제· 개정 조문 1개당 5점) -각종 지침 제· 개정(제·개정 조 문 1개당 5점) ○의사록인증 제 외대상법인 지정· 고시(고시1회당20 점) ○간담회, 세미나 참석×20점 ○유관기관 대상 제도안내·유권해 석·업무협의·의견 수렴 등 건수×10 점 ○공증 홍보 건 수×20점 ○공증연구용역 건수×30점	공증인제도개선위원회 각종 보고서 및 회의 자료, 공청회 결과물, 법령안, 보도자료, 간담 회 및 세미나 참석 보 고서, 연구용역, 홍보물, 전자공증시스템, 앱스토 어 기록 등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 공증인·공증보조자·재외공관 공증담당자 직무교육 건수×20점 ○ 전자공증시스템 개편 -전자공증시스템 신분증 이용 확대×100점 -헬프데스크 질의 응답건수×0.1점 -전자공증이용건수×0.5점(화상공증 이용시 건별 0.5점 가점 부여) -모바일앱 다운로드 건수×0.05점 -시스템기능개선 건수×50점 ○ 법무부·외교부 협의 통한 재외공관 공증제도 개선×20점	
부적정 공증사무 적발(점수)	508.5	618.5	238	546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년 실적이 미달되었고, '21년의 경우에도 감사·지도점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재외공관 공증사무 직접 지도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재외공관 공증사무 자체점검표 제작·배포로 대체하여 최근 실적치 평균을 고려하여 적극 목표치 설정	- 직무감사에서 지적 및 시정 조치된 공증사무소 1개소 당 2점(징계에 이른 경우 그 수위에 관계없이 1개소 당 1점 추가부여) -재외공관 공증사무 지도점검·자체점검표 횟수 (1건X 10점) -정기감사 외 특별감사 실시×10점	공증검열보고서, 공증인 징계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재외공관 공증사무 자체점검표 등

⑤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선(V-2-⑤)

□ 추진배경

- '17년 사법시험의 폐지로 법조인 선발방식이 일원화됨에 따라 높아진 정책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변호사시험을 운영, 양질의 법조인 선발양성 및 선진 법률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

※ 변호사시험제도 도입 취지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 체제로 법조인 배출 형태를 전환한 것

- 도입 후 12년이 경과되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

- 5일간 기록형·선택형·사례형 시험이 한 번에 치러지는 시험全过程(출제·인쇄·집행)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시험 집행·관리
- 출제 시 실력 있는 검토위원을 다수 투입하여 문제의 완성도 제고, 출제 문제 검증 등을 통해 오류 없는 문제가 출제되도록 진력을 다함

※ 복수정답 인정률 2% 미만 목표(제1회 5문항/ 제2회 4문항/ 제3회 0문항/ 제4회 5문항 / 제5회 2문항/ 제6회 4문항/ 제7회 4문항/제8회 4문항/제9회 8문항에 대한 복수정답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인용사례는 없었음

※ 다만, 제9회 시험에서 처음으로 '정답없음' 사례 1문항, 제10회에서 유사문제 1문항 오류 사례 발생

- 가채점회의, 채점위원 의견수렴, 관계기관 의견수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합격인원 결정

○ 변호사시험 개선 TF 구성·운영

- 내부의 관행적이고 편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성 있고 보다 실질적인 과제 선정 및 논의를 통해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추진
- 2월중 변호사시험 개선 TF 구성*, 4월중 변호사시험 전 과정에 대한 개선안 도출, 이후 내년도 변호사시험에 이를 반영 및 점검 확인

* 법전원협의회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3명, 법무부 2명 총 8명

○ '21년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시행

- 변호사의 직업윤리 위반과 그에 따른 책임 관련 문제 위주로 출제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직역윤리를 검증
- 변별력 있는 검증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경우 통과 가능하도록 난이도 조절
- 객관식 시험인 점을 감안하여 오류 없는 출제 관리 노력 예정

○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및 절차 개선 추진

- '20년 제9회 변호사 시험에 전주 시험장을 추가하여 전국 6대 권역으로 확대 실시한 데 이어 '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법전원 소재 전국 25개 대학으로 시험장을 확대하여 실시

※ ('20년)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 ('21년) 제주 포함 전국 25개 시험장

- 전 과목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 제9회 시험까지는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

-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을 바탕으로 제작된 한글 법전을 응시자에게 제공
- 출산(시험일 전후 90일 이내 출산 시) 등 응시기간 연장,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모든 과목에서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 응시수수료 환불(시험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등 법령개정 필요 사항에 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 추진
- 기타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 개선, 노트북 활용 답안 작성 방식 도입 가능 여부 등 심도 있는 연구 및 검토 진행
- 그 밖에 각 계의 의견 수렴, 외국사례 분석, 제도 개선 결과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한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활동 지속

<'21년 과제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	1월	
	○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	1월	
2/4분기	○ 제21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개최	4월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4월	
	○ '22년 시험계획 수립	6월	
	○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응시원서 접수	6월~7월	
3/4분기	○ 제12회 법조윤리시험 문제 출제	7월	
	○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8월	
	○ 제12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9월	
	○ 제11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9월	
4/4분기	○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10월~11월	
	○ 제13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변호사시험 응시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졸업생,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대한변협 등이 수혜자이자 이해관계 집단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내실화, 저비용 고품격의 선진 법률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최종적인 수혜자는 국민

□ 기대효과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법적 지식수준 및 사고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한 법조인 선발로 선진 법률서비스 제공
- 신속하고 내실 있는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을 통한 정책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 구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변호사시험 시행 및 법조인 선발·양성 연구실적 (점수)	623	789	760	867	- 변호사시험 전반사항을 보다 내실화 시키고 그에 따라 추진계획을 작성해 시행 및 준비과정의 중요성에 따라 점수를 배정하여 그 합계를 목표치로 산출 - 변호사시험은 한치의 오차 없는 철저한 시험준비·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매년 보다 높은 기준의 목표치를 산정할 경우 시험의 안정적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시험 문제 이외제기 신청률 10%이하 달성 >(신청률)=이외제기 문항수/총문항수×100% >(점수)=25점+(10-신청률)×1점 - 시험관리위원회 개최(건수×20점) - 변호사시험 관련 법령개정 (건수×50점) - 제도개선 실적(건수×30점) - 제도 연구·용역 등(건수×20점) - 해외자료 연구 및 자료 수집 실적(건수×20점) - 법조인양성제도 관련 공청회·토론회·내부회의 참석 및 개최(건수×20점) - '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회의(건수×20점) - 시험문제은행구축(건수×20점) - 장애인 편의제공(명수×10점) - 장애인시험위원회개최(건수×10점) - 시험관련 민원검토(건수×5점) - 보도자료 등 홍보(건수×20점)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보도자료, 관련 공문 등

성 과 지 표	실 적			목 표 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변 호 사 시 험 복 수 정 답 인 정 률 2% 이 하 달 성 (점 수) (공 통)	120	120	114	100	- 과거 사법시험의 평균 복수 정답 이의제기율(4.1%)과 현재까지 변호사시험 평균 복수정답 이의제기율 (2.1%)을 함께 고려하여 복수정답인정률 2% 이하 달성을 성과지표로 설정	-복수정답인정률 2%이하 달성 =(복수정답인정 문항수/ 전체 문항수)×100% ▷ 점수= 100점+(2-인정률)×10점	정답확정회의 등 회의 자료 및 보고서 등

⑥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제고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V-2-⑥)

□ 추진배경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

- 법조계 전관특혜는 전관변호사와 공직자 간의 연고에 의해 사법 제도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실효적 근절방안 마련 필요

※ '19. 11. VIP 주재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안건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상정

○ 법치행정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등 법률사무종사 제도 개선

-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자리 부족 및 대한변협 집체식 연수 방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신규 변호사의 실무역량 함양에 어려움이 발생함
- 공익법무관 인원 대폭 감소로 인해 국가기관의 소송수행, 법률 구조, 법률 자문 등의 업무 공백 발생 불가피

○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비위변호사 제재 강화 등

- 지속적인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비위 변호사를 엄중 징계하여 법률시장의 투명성 제고하고, 법조 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변호사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 '20년의 경우 징계위원회 2회 개최(6월·12월), 약 25건 징계 심의·의결

- 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등 여러 법조단체 및 각종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비대면 사회에 부합하는 상담시스템 개선을 통한 마을변호사 제도 접근성 강화
 - 변호사 2만 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지방 소도시 거주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
 -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연장등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이 포함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발의하고 관련 하위 법령을 제때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 토대 마련
- 법치행정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등 법률사무종사 제도 개선
 - 15개 국가기관에서 약 70명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선발하고, 법률사무종사기관 대상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실무역량을 갖춘 신규 변호사 양성 및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치행정 강화 도모
-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비위변호사 제재 강화 등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지속적 개최를 통해 변호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 징계
 - 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세미나·심포지엄·간담회 등 참석하여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협업관계 유지
- 비대면 사회에 부합하는 상담시스템 개선을 통한 마을변호사 제도 접근성 강화

- 지자체 홈페이지에 마을변호사 온라인 상담예약 창구 마련하고, 지자체에 비대면 상담 도입을 위해 화상상담 공간 개설
- ※ 행정안전부·대한변협·지자체 등 유관기관·단체와 적극적 협업 추진 예정
- 마을변호사·마을법률담당공무원 캐릭터(신규개발 예정), 챗봇 등 뉴미디어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지역버스·신문 등 활용한 마을 단위 홍보
- 마을변호사 제도 개선 세미나 및 8주년 기념식 개최를 통한 제도 발전 방향 모색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변호사법」 개정안 규제심사	2월	
	○ 「변호사법」 개정안 법제처심사	3월	
	○ 법률사무종사기관 대상 실태조사 실시	3월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1~3월	
	○ '20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취합	3월	
2/4분기	○ 「변호사법」 개정안 차관·국무회의 상정	5월	
	○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	6월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관리·감독 등	6월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4~6월	
	○ 마을변호사 활동물품 제작 및 배포	6월	
	○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캐릭터 개발	6월	
	○ 마을변호사 온라인 예약상담 창구 마련	6월	
3/4분기	○ 「변호사법」 시행령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등	9월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관리·감독 등	9월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7~9월	
	○ 마을변호사 지역버스 및 시외 버스터미널 광고	9월	
	○ 마을변호사 유관 기관(행안부·대한변협 등)과의 실무협의	9월	
	○ 마을변호사 화상상담 공간 마련	9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4/4분기	○ 「변호사법」 시행령 마련 및 입안보고	11월	
	○ 「변호사법」 시행령 마련 및 입법예고	12월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수료식 및 의견 조회	11월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10~12월	
	○ 마을변호사 카카오톡 채널 기능 개선	12월	
	○ 마을변호사 제도개선세미나 개최	12월	
	○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 개최	12월	
	○ '21년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취합	12월	
연 중	○ 소송·집행정지 수행, 등록취소명령	연 중	
	○ 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토론회 참석 등		
	○ 소송·집행정지 수행, 등록취소명령		
	○ 법률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실시		
	○ 마을변호사 SNS 홍보 강화(단일이미지, 카드뉴스 등 제작·배포)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

- 전관특혜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법절차를 보장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 마련
- (이해관계집단)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제재 강화, 신고센터 설치 등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 검찰, 대한변협, 법조윤리협의회 등 법조 유관기관·단체 전반

○ 법치행정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등 법률사무종사 제도 개선

- (수혜자) 국민, 신규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 (이해관계집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사기업 등 법률사무
종사기관
-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비위변호사 제재 강화 등
 - (수혜자) 변호사 징계, 변호사제도 개선 시 국민
 - (이해관계집단) 변호사·변호사단체 및 법조인접직역 등
- 비대면 사회에 부합하는 상담시스템 개선을 통한 마을변호사
제도 접근성 강화
 - (수혜자)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법률소외지역 주민
 - (이해관계집단) 자치행정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변호사 단체인 대한
변협·지방변호사회

□ 기대효과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
 -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법조계 전관특혜를 실효적으로 근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
- 법치행정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등
법률사무종사 제도 개선
 - 국가적으로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신규 변호사의
실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공익법무관의
업무상 공백 대체 및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치행정 강화
-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비위변호사 제재 강화 등
 - 비위변호사 엄중 징계를 통해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사법신뢰 회복
 - 유관기관과의 소통·협업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향상 도모

○ 비대면 사회에 부합하는 상담시스템 개선을 통한 마을변호사 제도 접근성 강화

- 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는 온라인 상담예약 창구 및 화상상담 공간 개설,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마을 변호사 제도 접근성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법률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 선발(V-1-일반재정③)				
① 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 선발(1038)		일반회계	9.3 (49.9)	7.2 (48.3)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303)		일반회계	9.3	7.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점수)(공통)	-	215	435	615	- 「변호사법」 개정안의 정부입법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점수화 하여 목표치 산출 - 추후 관련 하위 법령 마련 및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점수화하여 목표치 산출	○「변호사법」개정안 정부입법절차 - 규제심사(1회×20점) - 부내심사(1회×10점) - 법제처심사(1회×20점) - 차관회의 제출(1회×20점) - 국무회의 제출(1회×20점) - 법률안 국회제출(1회×50점) - 국회 심의 중 설명회·간담회 등 개최(1회×20점) -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1회×20 점) -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 치(1회×20점) - 유관기관과의 회의, 간담회 등 개최(1회×20점) ○「변호사법」시행령 등 하위 법령 마련 및 입법절차 - 개정안 마련(조문별 각 20점) - 입안 보고(1회×15점) - 입법예고(1회×30점)	변호사법 개정안, 심사 결과서, 관련 공문, 간담회 보고서 등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사전영향평가(1회×10점) - 관계부처 협의(기관별×5점) - 규제심사(1회×20점) - 부내심사(1회×10점) - 법제처심사(1회×20점) - 차관회의 제출(1회×20점) - 국무회의 제출(1회×20점) - 유관기관과의 회의, 간담회 등 개최(1회×20점) ○「변호사법」 개정 관련 홍보 - 웹툰 등 홍보콘텐츠 개발(1편×5점) - 웹툰 등 홍보콘텐츠 게재·배포(1편×5점) - 관련 보도자료 등 배포(1회×10점)	
법치행정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등 법률사무종사 제도 개선(점수)	60	185	605	717	- 법률사무종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국가기관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대폭 선발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산출	○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 유관기관 협의 및 의견 조화(1회×10점)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공고(기관별×10점)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서류전형(지원자 1인×0.5점)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면접(면접자 1인×1점)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관련 예산 대응(1회×10점)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관리·감독 및 업무 지원(1회×10점)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대상 의견 조화(1회×10점) ○ 법률사무종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 법률사무종사 제도 실태 조사(1회×20점) - 법률사무종사기관 대상 개선사항명령(1회×20점) - 법률사무종사 제도 관련 간담회·토론회 등 참석(1회×10점) - 법률사무종사제도 관련 연구용역 실시(1회×20점) ○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한변협 연수 지원 - 대한변협 연수 자료 개발 및 제공(1회×10점) - 대한변협 연수 강의 진행(1회×20점) - 대한변협 연수운영위원회 참여(1회×10점) - 대한변협 연수 운영백서 출간 참여(1회×10점)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자료, 법률사무종사기관 실태조사 보고서 등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비위변호사 제재 강화 등	710	810	830	910	-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변호사징계 관련 처분 및 행정소송 수행,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점수화하여 목표치 산출	○ 변호사징계 관련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건수(1회×30점) - 법무부 변호사징계건수(징계 1회×10점) - 변호사 업무정지명령 건수(1회×10점) - 변호사징계 관련 행정소송 심급별 종결 건수(승소시 1회×10점, 패소시 1회×5점) - 변호사징계 관련 집행정지 심급별 건수(각결정시 1회×5점, 인용결정시 1회×25점) - 등록취소명령 건수(1회×3점) ○ 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 유관기관과의 회의, 간담회 등 개최(1회×20점) - 변호사제도 관련 토론회·세미나 등 회의 참석(1회×15점) - 변호사제도 관련 시스템 개선(1회×15점) - 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1회×10점) - 개정안 마련(조문별 각 20점) - 입안 보고(1회×15점) - 입법예고(1회×30점) - 사전영향평가(1회×10점) - 관계부처 협의(기관별×5점) - 규제심사(1회×20점) - 부내심사(1회×10점) - 법제처심사(1회×20점) - 차관회의 제출(1회×20점) - 국무회의 제출(1회×20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행정소송 판결문, 간담회 보고서 등
비대면 사회에 부합하는 마을변호사 제도 개선(점수)	1,956	2,725	4,081	5,900	비대면 사회에 부합하는 마을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해 마을변호사 온라인 상담 예약창구 마련, 화상상담 공간 개설, 카카오톡 기능 개선 항목을 추가하고, '제5기 마을변호사 배정·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에 관한 산식'을 '제5기 마을변호사·마을법률담당공무원 관리 산식'으로 변경하였음	-지자체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창구 마련(지자체당 50점) -지자체에 화상상담 공간 개설(지자체당 100점) -카카오톡 채널 기능 신설(챗봇 등)(각 100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캐릭터 개발(100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캐릭터 저작권 등록(50점) -마을변호사 상담건수 (1건당 0.5점, 현장/대면 상담시 0.5점 가점) -제5기 마을변호사 관리(1명당 0.5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관리(1명당 0.5점) -설문조사 중 제도 인지 응답자 수 / 총 응답자 수(100점)	마을변호사제도관계자(대한변호사협회, 마을변호사, 마을법률담당공무원 등)가 생성한 자료 및 내부 자료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모범지자체 운영 사례(매뉴얼) 제작·배포(각 100점) -마을번호사 홍보컨텐츠·물품(이모티콘, 포스터, 달력, 현수막, 상담사례집 등) 제작·배포건수(각 50점) -마을번호사 활동물품 제작·배포건수(각 50점) -마을번호사 SNS(블로그, 페이스북, 밴드 등) 게시물 업로드 횟수(각 10점) -마을번호사 SNS 채널 신설(각 100점) -마을번호사 제도 관련 실무협의/제도설명/간담회 개최 건수(각 50점) -마을번호사 지역버스·시외버스터미널 광고(버스 1대당 10점, 옥외광고 한 건당 10점) -마을번호사 제도 관련 건의사항 청취 횟수 (각 20점) -마을번호사 8주년 기념식(100점)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평가(탁월 100점, 우수 75점, 보통 50점, 미흡 25점) -제도관련 수상실적(건당 100점)	

7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예방 역량 강화(V-2-7)

□ 추진배경

- '20. 8월 국제분쟁대응과 신설로 ISDS 대응체계가 구성*됨에 따라 효율적 ISDS 대응, 전문성 축적 및 체계적 예방활동 토대 마련

- * ①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법무부장관등 주재, 관계부처 차관·차관보급으로 구성),
②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급으로 구성),
③ 국제분쟁대응과(실무 전담)로 구성

- 국제투자분쟁의 효율적 대응·예방을 위해 전문성 축적 및 역량 강화하고 ISDS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참여 지속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제투자분쟁사건 대응 및 기타 국제분쟁 법적지원

- 사건의 중요성·난이도를 고려하여, 부산투자자 ISDS 사건 등 일부 사건의 경우 중재대리인으로 외부로펌을 선임하지 않고 자체 수행
- 정부대리로펌을 선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불필요한 절차 진행 방지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정부대리로펌의 사건 진행 및 대응에 관한 지휘·감독 강화
- 기타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는 사안에 대한 법률검토

○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법적지원

-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국인 투자 담당자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실시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 등 비대면 진행 방식의 예방교육 추가 실시

-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조치 시행, 기타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제투자법 일반 원칙 및 관련 투자협정의 위반가능성을 검토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제공

-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 등 국제투자분쟁 예방 관련 자료의 현행화, 최신 중재판정례 반영 등 개정 작업 추진

○ 국제투자분쟁절차 제도 개선 및 관련 규정 개정

- 투자협정 등 국제 규범 및 제도 마련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투자보장협정(BIT) 협상 참석 및 법률자문
- ISDS 제도개선 등 논의를 위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여 및 정부 의견서 제출
-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효율적 수행 및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의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개정 추진

○ 국제투자분쟁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국제투자분쟁 실무 전담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사건 직접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내·외부 국제투자분쟁 세미나 및 연구활동, 해외파견, 단기 해외연수 등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국제 투자분쟁 세미나	1월~3월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회의 참가	1월~3월	
	○ 알기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 발간	1월~3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회의 참가	4월~6월	
	○ 국제투자분쟁사건(중국투자자 ISDS) 본안 전 항변 심리 및 절차기일 참석	4월~6월	
3/4분기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정부의견서 제출	7월~9월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참가	7월~9월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정부의견서 제출	7월~9월	
	○ 국제투자분쟁 세미나	7월~9월	
4/4분기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회의 참가	10~12월	
	○ 국제투자분쟁사건(엘리엇 ISDS) 심리기일	10~12월	
연 중	○ 국제투자분쟁사건 대응 ○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실시 ○ 국제투자분쟁 및 기타 국제분쟁 법적지원 ○ 투자협정(FTA·BIT) 협상 준비 및 참가	1월~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해외투자 국민 또는 기업, 외국인 투자 관련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 투자협정 담당 관계부처 및 학계

□ 기대효과

- 국제투자분쟁 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검토 등 적극 지원활동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
- 체계적인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법적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사전에 준비

- 자유무역협정(FTA), 투자보장협정(BIT) 협상 참석 및 법률자문 제공을 통해 국내 외국인 투자자 보호·증대와 해외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투자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0	'21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 연구(V-1-일반재정④)				
①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 연구(1032)		일반회계	4,750	4,882
			(6,430)	(6,355)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308)			4,750	4,88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국제투자분쟁대응	-	-	신규	400	과거 회의 등 개최 건수 및 추세를 감안하여 목표 설정	- 국제투자분쟁 대응단회의 개최 (각 10점) - 기타 국제투자 분쟁대응 회의 개최 (각 10점) - 국제투자분쟁 교육·간담회·세미나 개최 건수 (각 10점) - 보도자료 등 홍보 건수 (각 5점)	· 공문 · 계획보고서 · 검토보고서 · 회의안건자료 · 보도자료 등
국제투자분쟁예방	-	-	신규	160	과거 예방교육 등 개최 건수, 관련 자료 발간 횟수를 감안하여 목표 설정	- 국제투자분쟁 예방 법률검토 (각 20점) -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개최 (각 20점) - 홍보 건수 (각 5점) - 국제투자분쟁 예방 관련 자료 발간 (각 10점)	· 검토보고서 · 예방교육 및 세미나 개최 계획보고서 · 공문 · 예방교육 자료집 또는 연구 용역 결과 · 보도자료 등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만족도 (만족도/응답지수) ▷매우만족 30 ▷만족 20 ▷보통 10 ▷불만족 0	
ISDS 제도개선	-	-	신규	100	과거 회의 참가 및 정부 의견서 제출 건수를 감안하여 목표 설정	- 제도개선 국제 회의 참여 및 의견서 제출 (각 20점) -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령 등 제·개정 (각 20점)	· 회의 결과보고서 및 정부의견서 · 개정 규정 등
투자협정(FTA, BIT) 및 기타 국제분쟁 법률지원	-	-	신규	100	과거 회의 참석 횟수, 법률검토 건수를 감안하여 목표 설정	- 투 자 협 정 (FTA·BIT) 관련 법률 지원 건수 (각 10점) - 기타 국제분쟁 법률검토 건수 (각 10점)	· 공문 · 계획 또는 결과 보고서 · 검토의견서

(1) 주요내용

- 국민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법무정책을 뉴미디어 소통 매체로 각광받고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채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소통
- 형사사법기관이 선행 단계에서 입력한 전자정보를 기관 및 부서 간 신속·정확하게 공유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공정한 사법절차를 실현하고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품격 향상에 기여
-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여 교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시간·교통비용을 절감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증대
- 주요 교정정책에 대한 홍보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유튜브, 소셜네트워크 등 영향력이 큰 매체를 활용,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 및 교정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실천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추진을 위한 전략적·체계적 홍보 및 대국민 소통업무 추진
-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입체적 홍보로 핵심 내용에 대한 대국민 적극 소통 강화

- (콘텐츠 다변화) 정책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영상, 인포그래픽, 웹툰, 카드뉴스 등) 및 참여형 콘텐츠 확대 기획·제작
- (소통채널 다양화)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최근 트렌드인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 소통 강화
- (맞춤형 홍보) 홍보 타깃별(일반국민-전문가)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으로 우리 부 주요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
- (협업홍보 강화) 범정부·민간과의 협업홍보 강화로 홍보효과 극대화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제고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관계기관의 효율적 업무처리와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향상

*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이 각종 형사사법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공통 표준의 전자업무 시스템

□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 스마트접견 활성화를 위한 통합접견시스템 구축 완료('21. 3.~4.)
 - 일반접견실의 마이크 콘솔(Console)·화상기기, 스마트 접견실의 PC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태블릿 형태의 단말기 도입
 - 접견 데이터를 저장, 관리할 수 있는 대용량 서버 증설
 - 수용관리팀 사무실 등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도 스마트접견이 가능하도록 무선 LTE 태블릿 단말기 도입
 - 통합접견시스템 구축 관련 홍보 실시('21. 3.~4.)
 - 통합접견시스템 구축 관련 운영 실태 점검('21. 7.)

○ 스마트접견 대상 수용자 확대 ('21. 7.)

- 장비 확대 설치, 녹음·녹화 저장용량 확보 및 네트워크 속도 향상을 기반으로 스마트접견 대상자 확대 검토

○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활성화 지속 추진

- 전국 교정기관 민원실 등에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홍보물 등 게시('21. 5.)
- 민원(수용·출소)증명서의 목적 외 사용 차단을 위한 증명서 서식 개선('21. 7.)

○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추진

- 스마트접견 및 민원증명서 관련 담당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의 개선사항 도출('21. 10.)
- 스마트접견 및 민원증명서 관련 만족도 조사 실시('21. 11.)
- 현장직원 및 민원인이 느끼는 운영상 문제점 및 보완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및 업무 능률 제고

□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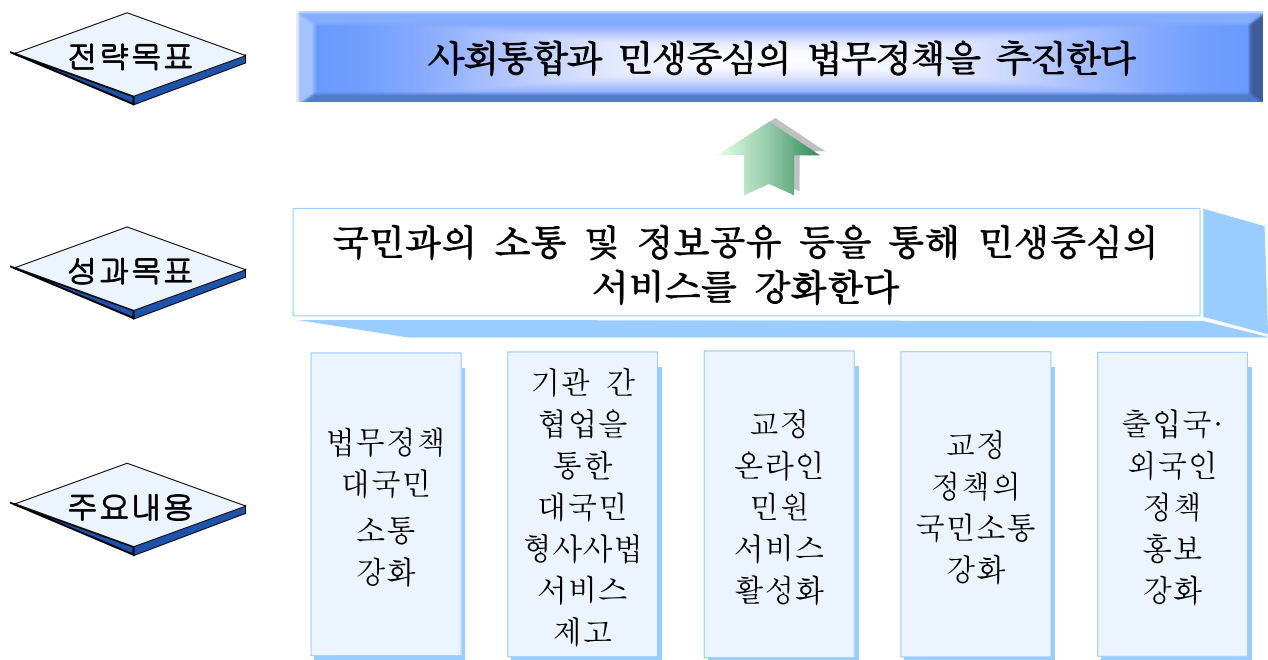
- 유명 유튜버 등 영상제작 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정공무원 업무 및 수용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언론,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교정행정을 왜곡 없이 소개하는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 호송차량 외관 랩핑을 통한 홍보, 분류처우 브랜드화, 주요정책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교정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교정공무원 자긍심 고취

□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 강화

- SNS, 홈페이지, 정책메일 등 홍보 접근성이 뛰어난 온라인을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 효과 제고 및 정책 고객 접근성 향상
 -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동영상 자료 등 시각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고객 이해도 제고 및 정책효과 확산
- 다양한 매체(신문, 방송, SNS 등)를 활용한 소통 활동의 강화로 온라인 홍보 방식 선호 고객뿐만이 아니라 전 정책 고객층에 출입국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
- 중점과제를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 공감대 형성

《목표체계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법무정책 뉴미디어 활용 소통 노력도(명)	16,417	31,238	26,237	23,100	▪ 모바일 환경에 맞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이 다양화되고, 상대적으로 블로그 이용이 감소하는 온라인 이용 환경을 감안 ▪ 법무부가 운영하는 SNS 중 유튜브의 구독자수를 포함하여 목표치에 반영 ※'19년 실적은 조국 전장관 이슈 등으로 일시적 단발작비 정상적인 실적차이고 '20년 목표치는 '16~'18 실적 평균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목표치 설정	▪ SNS 정책 소통 방문자수 증가(각 산식 합산) - 블로그 $\frac{\text{일평균 방문자수}}{2}$ - 페이스북 증가 Fan 수 - 트위터 증가 팔로워 수 - 유튜브 증가 구독자 수	▪ 법무부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 집계자료 ▪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 집계자료 ▪ 법무부 공식 트위터 집계자료 ▪ 법무부 공식 유튜브 집계자료
형사사법포털 온라인 서비스 이용량 (1인당 이용횟수)	신규 4.9 (4.3)	5.8		6	형사사건 관계인이 사건 및 벌과금 조회, 각종 민원 신청을 위해 포털에 방문하여 이용한 서비스 횟수 모바일 사용자 수 증가에 따라 형사사법포털 온라인 서비스 이용량은 증가추세 특히, '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형사사건 관계인 수가 감소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실적 근거로 사용하기에 부적합 따라서 '21년 목표치는 기존 '20년 목표치(5.3)에서 '19년 상승률인 13%를 반영한 6.0으로 산정	형사사법포털 이용량[사건진행사항조회건수+벌과금조회건수+민원서비스신청건수] / 전체 형사사건 관계인 수(전체 사건 피의자수+고소인수+고발인수)	형사사법포털 사용자DB(모바일 포함)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국내 SNS 환경 변화

- 2020년 국민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1위 앱은 '유튜브'
- 2020년 소셜미디어 전체 사용률 순위 또한 '유튜브'를 1위로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가 뒤를 이음
- 연령별로 보면, '유튜브'는 전 연령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10대는 '페이스북', 20·30대는 '인스타그램', 40·50대는 '밴드' 및 '카카오톡'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뉴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기조 확산

- '18.7. 청와대 조직 개편 시 디지털소통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디지털을 활용한 소통 강조 기조가 전 부처에 확산

○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추진

- 동영상·이미지(인포그래픽, 웹툰, 카드뉴스 등) 등 디지털 콘텐츠 기획·제작 및 국민들의 SNS채널을 활용한 일상적인 정보습득과 의견 표출 경향에 맞추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소통 강화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

- 정보 공동활용 및 형사사법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하여 형사사법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보 공유체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추진

-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개인 정보유출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함에 따라 형사사법포털 사용자 의견을 청취하고 포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형사사법 서비스 품질 개선

□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 일부 개방처우급(S1급) 수형자의 스마트접견 독점
 - 일부 개방처우급(S1급) 수형자의 경우 1일 1회 접견을 할 수 있는 점을 활용, 월 20회 이상 스마트접견을 독점하는 등 타 수형자와의 기회균등 문제 발생
 - 이에 스마트접견 호실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통합 접견시스템 구축('21. 3.)과 함께 스마트접견 기회 분산을 위한 방안 검토 예정

□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주요정책 시행 시 적극적인 정보제공으로 교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교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교정정책 수요자인 국민에게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교정에 대한 인지도 제고
 - 미디어를 통해 교정에 대한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언론인, 작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교도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정행정의 올바른 모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강화
-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등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한 사후 조치 강화

-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일방적 주장에 기초하여 작성된 언론기사 등 잘못된 언론 보도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 정정 요청, 설명자료 배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등을 통한 언론 대응 강화

□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 강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항공편이 축소·중단되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증가 및 불법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방역 사각지대 형성
 -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관련 언론 및 온라인 매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여론 동향 파악 및 선제적 대응·홍보 추진
 -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대상 방역 수칙 준수 및 코로나19 검사 안내 적극 홍보
 - 가짜뉴스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 조성 방지를 위해 언론 보도(온·오프라인) 상시 모니터링 및 가짜뉴스 발견 시 적극 대응
- 체류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 차이에서 오는 내·외국인갈등 관리
 -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존중의식 제고를 위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소수 문화계층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소통 교류를 위한 홍보 추진
 - 출입국·외국인 정책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생활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통해 알리고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정책 위주로 홍보 추진
 - 재한 외국인 미담 사례 발굴 및 우수인재 유치 홍보를 통한 이민자에 대한 인식 개선

(4) 기 타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교정본부 홈페이지(<http://corrections.go.kr>)
- 법무부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mojjustice01>)
- 법무부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ojkorea>)
- 법무부 트위터(<http://twitter.com/happymoj>)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immigration.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V-3-①)

□ 추진배경

- 2021년 법무부의 슬로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체계적 홍보 방안 마련
- 변화한 대내·외적 홍보 환경을 감안하여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하여 주요 추진 법무정책 홍보
 - 소셜 미디어 사용률 1위 ‘유튜브’ 채널에 맞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법무정책 홍보 강화
 - 딱딱한 정책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저들의 감성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웹툰 등)를 기획·제작하여 SNS 채널에 게재·확산으로 적극적 소통
 - 주요 이슈 등 발생 시에 설명·해명자료의 주요 내용을 디지털 콘텐츠(#사실은 이렇습니다)로 신속 제작하여 대국민 설명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영상콘텐츠 1/4분기 조회수 증가 추진	1~3월	
	○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법무정책 콘텐츠 제작 추진 -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가진 인물과의 협업 콘텐츠 제작 - 명예 교도관, 보호관찰관, 이민자 멘토단 등 협업 추진	1~3월	
	○ SNS 정책소통 방문자 확대 추진 -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한 콘텐츠 확산 홍보 - 블로그 기자 기사 보완 및 게재 등	1~3월	
	○ 법무정책 소통 동영상 조회율 증가 노력 - 카드툰,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게재	1~3월	
2/4분기	○ 영상콘텐츠 2/4분기 조회수 증가 추진	4~6월	
	○ SNS 정책소통 방문자 확대 추진 -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한 콘텐츠 확산 홍보 - 블로그 기자 기사 보완 및 게재 등	4~6월	
	○ 법무정책 소통 동영상 조회율 증가 노력 - 카드툰,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게재	4~6월	
3/4분기	○ 영상콘텐츠 3/4분기 조회수 증가 추진	7~9월	
	○ SNS 정책소통 방문자 확대 추진 -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한 콘텐츠 확산 홍보 - 블로그 기자 기사 보완 및 게재 등	7~9월	
	○ 법무정책 소통 동영상 조회율 증가 노력 - 카드툰,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게재	7~9월	
4/4분기	○ 영상콘텐츠 4/4분기 조회수 증가 추진	10~12월	
	○ SNS 정책홍보 방문자 확대 추진 -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한 콘텐츠 확산 홍보 - 블로그 기자 기사 보완 및 게재 등	10~12월	
	○ 법무정책 소통 동영상 조회율 증가 노력 - 카드툰,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게재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법무행정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향유하는 모든 국민
- 국무총리실·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언론, 민간단체 등

□ 기대효과

- 일방적 홍보가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누리꾼들의 신뢰를 형성하는 법무부 위치 포지셔닝
-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솔직하고 능동적인 소통으로 법무 정책 집행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법무정책 소통 동영상 조회수 (회)(공통)	2,260,660	9,000,538	8,101,473	8,506,547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는 '16년 175,210회에 불과하였으나 '17년 1,246,938회, '18년 2,260,660회로 콘텐츠 조회수가 점차 증가하였음 -특히 '19년에는 유튜브 조회수가 9,000,537회로 '18년 조회수 대비 6,739,877회 폭증하였음 -'20년 조회수는 '19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으나 조회수가 폭증한 '19년 조회수 달 성치를 유지한 수준의 조회수를 보임 -이에 '20년 조회수에 105% 상승분인 8,506,547회를 목표로 설정	법무정책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조회 수(회)	법무부 정책 유튜브 집계자료
법무정책 소통 페이스북 채널 콘텐츠 도달수 (회)(공통)	-	6,020,154	22,225,090	7,000,000	-누적 이용자가 가장 많은 소셜 미디어이지만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및 이미지 기반 인스타그램 채널의 강세에 따른 정책기를 맞이하고 있고, DMC리포트에 따르면 5대 소셜 미디어 중 향후 이용자 확대 가능성이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다른 플랫폼 대비 '좋아요', '공유'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기획 콘텐츠의 제작과 더불어 국민 참여, 인플루언서	법무정책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수(회)	법무부 정책 페이스북 집계자료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와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양산이 게시물 도달수 증대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함 - '20년 12월 검찰 개혁 조두순 출소 이동학대 사건 등 법무부 관련 다수의 이슈가 동시에 대두되어 대응 콘텐츠의 지표가 급상승함 - 페이스북 내 이용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 지만 '20년 상승한 실적치를 반영해 작년도 목표치(5,000,000회)를 기준으로 140% 상승분인 7,000,000회를 '21년 목표치로 설정		
법무정책 소통 트위터 채널 게시물 노출수 (회)(공통)	1,379, 124	12,002, 881	7,317, 062	5,096, 145	- '16년 대비 '17년 트위터 노출수가 850,794회(39%) 급감했고, '17년 대비 '18 년 20,377회(1%) 소폭 증가라는 아쉬운 실적을 남겼으나 '18년 대비 '19년 10,623,757회(770%) 폭증하였음 - 이는 '19년 취임한 조국 전 장관 취임과 함께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 국민들의 관심이 법무부 이슈에 집중되었고 특히 조국 전 장관의 트위터 팔로워(1백만 이 상)들의 자발적인 공유로 인해 활발한 콘 텐츠 확산으로 노출량이 급증한 것으로 목표치 합산에 포함하는 것은 무의미하 다고 판단됨 - 트위터 이용자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반영 하여 '16년 2,209,541회, '17년 1,358,747회, '18년 1,379,124회, '19년 12,002,881회, '20년 7,317,062회의 평균치 4,853,471회를 기 준으로 '21년 목표치를 평균치의 105% 상향한 5,096,145회로 설정함	법무정책 소통 트위터 게시물 노출수(명)	법무부 정책 트위터 집계자료
법무정책 소통 동영상 콘텐츠 생산량(건)(공통)	37	82	101	93	- 최근 3년간 법무부 동영상 콘텐츠 제작 건수는 '16년 34건, '17년 36건, '18년 37 건으로 평균 36건의 영상 콘텐츠를 생산 하였으나 '19년 82건으로 평균치보다 227% 향상 되었고 '20년 101건으로 대폭 향 상됨 - '19년과 '20년 제작 건수가 대폭 향상된 이유는 '19. 7. 디지털콘텐츠 제작 인력(작 가 1명, 디자이너 1명, 영상PD 1명)추가 배 정으로 콘텐츠 제작 건수가 대폭 증가했으 나 '21년 3월 현재 영상 제작 인력 1명 공 석으로 영상 콘텐츠 생산량 증대에 무리 가 있음 - 이에 제작량이 대폭 향상된 '19년과 '20년 동영상 콘텐츠 생산량의 평균치인 91.5건 을 기준으로 '21년 목표를 93으로 상향 설정함 - 이는 무리하게 영상콘텐츠를 생산량을 증가하 는데 노력하기 보다는 제작량을 유지 하면서 더불어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데 역량을 쏟 기 위함임	법무정책 소통 영상 콘텐츠 제작 건 수(건)	대변인실 자체 집계

②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V-3-②)

□ 추진배경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근거하여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취득·작성된 전자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동활용하여 업무효율화 도모
- 형사사법절차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 및 형사사법 절차 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형사사법포털 및 전자적 사건처리 활용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 형사사법포털 이용 활성화 및 전자적 사건처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물품 제작·배포
-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 관련, 관련 부처 공무원 및 일반 국민 상대 변화된 형사사법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 현재는 입법절차 및 ‘차세대 KICS 구축사업’ 등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초기 단계이므로 정책방향을 알리는데 집중
 - 특히,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 수행 기관(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의 공무원에 대한 정책 홍보도 병행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정책의 변화된 모습을 중심으로 웹툰, 카드뉴스, 유튜브 채널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활용·홍보 강화
-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
 -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연 2회),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

(연 2회), 실무자회의(연 12회)를 개최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중요사항 협의·조정

○ 통계 콘텐츠 개발을 통한 통계업무 지원

- 소년보호 비정형통계 사용자 교육 실시 및 시스템 오픈
- 보호관찰 주요 통계 개선 및 메일링 통계 개발

○ 제도 및 시스템 변경에 따른 통계 산출업무 지원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기존 비정형 통계 개선 작업
- 차세대 보라미시스템 구축에 따른 교정 통계 개선 작업

○ 전문업체에 의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시스템 성능 진단(통계)

-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및 성능에 대한 분석·평가·대책 수립
- 서버 및 소스 취약점 점검 : '21. 7. ~ 9.
- 성능 진단 : '21. 10. ~ 11.
- 주요내용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성능 진단 후 조치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및 형사사법포털 안정적 운영(연중)

- 서비스수준관리(SLA)를 통한 서비스 안정화 유지
- 장애 모의 훈련, 서버 이중화 기능 점검, 시스템 성능 진단 등
안정화 활동 수행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 스토리지 증설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사사법 자료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스토리지 증설 사업 추진

○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에 의한 보안취약점 진단(공통시스템)

- 전문 업체를 통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 점검기간 : '21. 3., '21. 9. (연 2회)
- 주요내용 : 서버 및 소스 취약점, 모의해킹 실시 후 도출된 취약점 분석·조치
- 검찰·경찰 등 연계시스템 개선 지원(연중)
 -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및 경찰 시스템 개선, 공수처시스템 구축 , 차세대 KICS 구축 등에 따른 연계환경 변경 적용 및 연계 인터페이스 신규·변경 개발
 - 연계 대상기관 수요에 따른 연계 인터페이스 상시 개발 지원
- 형사사법포털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 형사사법포털에 대하여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의 웹접근성 품질 인증 취득(갱신)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기반 구축을 통해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의 신속성과 투명성 증대
 - 사업기간 : '21. ~ '24. (*법무부, 검찰, 경찰, 해양경찰 공동추진)

<'21년도 과제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홍보계획 수립	1월~3월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 운영	1월~3월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및 형사사법포털 안정적 운영	1월~3월	
	○ 차세대 보라미시스템 구축에 따른 교정 통계 개선 작업	1월~6월	
	○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에 의한 보안취약점 진단	3월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2/4분기	○ 차세대 보라미시스템 구축에 따른 교정 통계 개선 작업	1월~6월	
	○ 제1차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 개최	4월~6월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 운영	4월~6월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및 형사사법포털 안정적 운영	4월~6월	
	○ 소년보호 비정형통계 사용자교육, 시범운영 및 오픈	4월~6월	
3/4분기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 스토리지 증설 사업완료	7월	
	○ 관련 부처(경찰, 해경, 검찰 등) 상대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홍보	7월~9월	
	○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홍보 콘텐츠 개발	7월~9월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 운영	7월~9월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및 형사사법포털 안정적 운영	7월~9월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비정형 통계 개선 작업	7월~9월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보안취약점(서버 및 소스코드) 점검	7월~9월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및 착수	7월~9월	
	○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에 의한 보안취약점 진단	9월	
4/4분기	○ 형사사법포털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10월	
	○ 제2차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 개최	10월~12월	
	○ 형사사법포털 및 전자적 사건 처리 홍보	10월~12월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 운영	10월~12월	
	○ 보호관찰 주요 통계 개선 및 메일링 통계 개발	10월~12월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성능 진단	10월~11월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및 형사사법포털 안정적 운영	10월~12월	
	○ 검찰·경찰 등 연계시스템 개선 지원	10월~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형사사법포털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피의자,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 하고 알권리와 방어권 보장에 기여
-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의 형사사법 운영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 달성

□ 기대효과

- 형사사법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업무의 투명성 제고로 선진형사사법 기반 구축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 스토리지 증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사사법 자료 운영·관리의 안정성 확보
- 형사사법포털 기능 개선 등에 따른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의 향상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차별 없는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통계 콘텐츠 개발 및 통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원활한 통계업무 지원
- 형사사법공동시스템의 체계적인 서비스수준 관리 및 장애 모의훈련 등 안정화 활동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실현 및 비대면 수사여건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0	'21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V-3-정보화②)				
①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7038)		일반회계	9,238 (9,238)	27,967 (27,967)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300)			9,238	8,308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301)			-	19,65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기관 간 형사사법정보 공동활용 건수(십만 건)(공통)	5,643 (4,505)	6,084 (4,862)	5,776 (4,976)	5,090	-전체 사건 접수 처리현황 감소율, 연계처리 효율화로 인한 공동활용건수의 감소, 정보공동활용 항목 증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특히, '20. 9.부터 교정본부가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다수 연계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20년 목표치 미달성했으며, '20년 실적을 '21년 목표치 설정 바탕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 -교정본부 연계 실적 감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향후 교정본부 연계기능 중 전자결재 연계항목 미사용에 따른 영구적 감소이므로 목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교정본부 연계기능이 빠짐에 따라 '21년 목표치는 '20년 연계처리 실적에서 교정본부 연계기능 미사용 실적을 제외한 값 4,976(십만 건)을 바탕으로 2.3%(특이값을 보인 '19년 실적을 제외한 '3년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5,090(십만 건)으로 설정	- 형사사법 기관 간 정보연계 건수 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DB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 형사사법정보 공동활용 실적 (연도별) <table><tr><td>연도</td><td>'18</td><td>'19</td><td>'20</td></tr><tr><td>목표</td><td>5,641</td><td>5,755</td><td>6,218</td></tr><tr><td>실적</td><td>5,643</td><td>6,084</td><td>5,776</td></tr><tr><td>조정 실적</td><td>4,505</td><td>4,862</td><td>4,976</td></tr></table> * 조정실적 : 기 집계된 실적에서 교정본부 결재정보 연계 건수를 제외한 실적	연도	'18	'19	'20	목표	5,641	5,755	6,218	실적	5,643	6,084	5,776	조정 실적	4,505	4,862	4,976		
연도	'18	'19	'20																				
목표	5,641	5,755	6,218																				
실적	5,643	6,084	5,776																				
조정 실적	4,505	4,862	4,976																				
대국민 형사사법 포털 이용만족도(점수)(공통)	66.2	67.8	69.3	70.5	- '20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렴된 사용자 의견 반영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노력 등을 고려 - '21년도는 '20년 실적치(69.3) 대비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 상승률 1.8% 반영한 70.5점으로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 (∑ (해당 점수 × 인원)) / 총응답인원) ※ 리커트5점 척도 (만족 100점, 대체로 만족 75점, 보통 50점, 대체로 불만 25점, 불만 0점) 측정 후 100점 기준 으로 환산	- 연1회, 1개월간 형사사법포털 이용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사용자 편리성 및 고객 대응성에 대한 만족도 측정)																

③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V-3-③)

□ 추진배경

- 생업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원거리 교정시설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감소방안 마련 필요

< 최근 5년간 교정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용 현황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스마트접견	63,856	65,405	67,843	86,976	259,364
민원증명서 온라인발급	-	-	-	3,905	6,791

※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의 활용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본격화된 '20년에 전년 대비 298%(스마트접견), 174%(민원증명서 온라인 발급)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스마트접견 활성화를 위한 통합접견시스템 구축 완료('21. 3.~4.)
 - 일반접견실의 마이크 콘솔(Console)·화상기기, 스마트접견실의 PC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태블릿 형태의 단말기 도입
 - 접견 데이터를 저장, 관리할 수 있는 대용량 서버 증설
 - 수용관리팀 사무실 등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도 스마트접견이 가능하도록 무선 LTE 태블릿 단말기 도입
 - 통합접견시스템 구축 관련 홍보 실시('21. 3.~4.)
 - ※ 대용량 서버 증설, 통합 단말기 도입 등을 통한 스마트접견 품질 제고 등 개선사항 홍보(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 통합접견시스템 구축 관련 운영 실태 점검('21. 7.)
 - ※ 각 지방교정청별로 소속기관 대상 점검(서울청·대구청·대전청·광주청)

○ 스마트접견 대상 수용자 확대 ('21. 7.)

- 장비 확대 설치, 녹음·녹화 저장용량 확보 및 네트워크 속도 향상을 기반으로 스마트접견 대상자 확대 검토

※ 미결수용자 등 대상자 확대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는 접견방식에서 화상접견방식으로 대전환 예상

○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활성화 지속 추진

- 전국 교정기관 민원실 등에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홍보물 등 게시('21. 5.)
- 민원(수용·출소)증명서의 목적 외 사용 차단을 위한 증명서 서식 개선('21. 6.~7.)

※ 증명서 용도를 명시하여 수용자 의사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 차단

○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추진

- 스마트접견 및 민원증명서 관련 담당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의 개선사항 도출('21. 10.)

※ 각 지방교정청별로 2~3개 교정기관 대상 개최(서울청·대구청·대전청·광주청)

- 스마트접견 및 민원증명서 관련 만족도 조사 실시('21. 11.)

※ 온라인 교정 민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등을 조사함으로써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필요사항 발굴에 활용

- 현장 직원 및 민원인이 느끼는 운영상 문제점, 보완점을 파악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및 업무 능률 제고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스마트접견 활성화를 위한 통합접견시스템 구축 완료 ※ 태블릿 형태 단말기 도입, 대용량 서버 증설 등	3~4월	
	○통합접견시스템 구축 관련 홍보 실시 ※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3~4월	
2/4분기	○전국 교정기관 민원실 등에 민원(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홍보물 등 게시	5월	
	○민원(수용·출소)증명서의 목적 외 사용 차단을 위한 증명서 서식 개선* * 증명서 사용 용도 명시	6~7월	
3/4분기	○통합접견시스템 운영 관련 실태 점검 ※ 각 지방교정청별 실시	7월	
	○스마트접견 대상 수용자 확대 ※ 미결수용자 등 스마트접견 대상자 확대 검토	7월	
4/4분기	○스마트접견 및 민원증명서 관련 담당자 간담회 개최 ※ 각 지방교정청별 개최	10월	
	○스마트접견 및 민원증명서 관련 만족도 조사 실시 ※ 민원인 및 수용자 대상 실시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시행 전 시간적·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 및 해당 수용자

□ 기대효과

- ‘스마트접견 제도’는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어 민원인과 수용자 간의 접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수용자 가족관계 회복에 기여
-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제도’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 각종 행정절차에 수용(기간) 확인 등이 필요한 민원인이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 절감 예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스마트 접견 실시 이용자 만족도(%)	-	-	89	90	(강점) 목표치(80%)에 대비하여 초과 달성한 전년도 만족도 실적 (111%) 및 통합접견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영상·음성 등 접견품질 개선 기대 (약점) 정책고객이 상용 영상통화의 편리성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보안 절차 등으로 인해 스마트접견 영상·음성 등 품질 개선에 대한 체감도 반감 우려 (산출) 강·약점을 적절히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치(80%) 대비 10% 이상 상향 조정	(만족)상 응답자수 / 총 응답자수) ×100%	스마트접견 이용 민원인 및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실적(건)	-	-	신규	7,000	(강점) 민원증명서 발급 홍보 강화 및 서식 개선 등으로 인한 수용(출소) 증명서 인터넷 발급 활성화 기대 (약점) 민원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 도 시행 후 민원 발급 절차에 유의 미한 변경사항이 없는 점 등 (산출) '19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평균 추세치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19~'20년 평균 발급 건수를 기준으로 130%이상 상향된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 ※ '19년 3,905건, '20년 6,791건 ※ '19년~'20년 평균 5,348건	수용 및 출소 증명서 인터넷 발급 건수	형사사법포털 통계자료 활용 (연간 실적)

④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V-3-④)

□ 추진배경

- 교정행정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대국민 소통과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홍보전략 마련
- 추진 정책별 홍보가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언론보도,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교정본부 캐릭터 활용, 호송버스 외관 랩핑 등을 통한 교정행정 이미지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유튜브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체험을 실시하여 교정행정의 현장을 가공 없이 보여줌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유명 유튜버 등 영상제작 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정공무원 업무 및 수용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언론,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교정행정을 왜곡 없이 소개하는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 '21. 상반기 유튜브 인플루언서(진용진) 교정행정 체험 예정

- 호송 차량을 움직이는 홍보매체로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랩핑 기법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교정공무원 자긍심 고취
 - 대국민 '호송 차량 랩핑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

* '20. 8. 3. ~ 9. 25. 제75주년 교정의 날 기념 호송차량 랩핑 공모전 실시

- 분류처우를 브랜드化하여 과학적 정밀분류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처우 등 재범 위험성에 따른 차등처우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인권친화적 교정정책의 추진동력 확보

- 분류처우 브랜드를 공모하여 로고 및 홍보영상물 제작 등으로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수형자 사회복귀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 '21. 분류처우 브랜드 공모 및 로고 제작 예정

- 주요 추진정책, 교정공무원 및 수용자 일상 등 교정행정 전반에 관한 웹툰을 제작하여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교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 '21. 하반기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대상 '수용생활 웹툰 공모전' 개최 예정

- 지난 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대체복무제 운영의 국민 신뢰도 확보
- 교정본부 교화방송센터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교정정책, 교도관 업무 등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재범방지, 심리치료 등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
- 교정공무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자가 직접 소개하면서 현장직원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교정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 홍보영상 게시를 위해 유튜브에 '교도소 24시' 개설·운영 중

- 정기간행물(월간 '교정') 배포, 다양한 대국민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교정정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 및 참여도 제고
- 주요정책 시행, 사회적 이슈 발생 등 언론홍보 필요 시 보도·설명 자료를 적시 배포하여 교정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월간 「교정」 발행	1~3월	
	○ 분류처우 브랜드 공모 및 선호도 조사, 선정	2~6월	
2/4분기	○ 유튜브 인플루언서(진용진) 교정행정(교도관, 수용자) 체험	4~6월	
	○ 월간 「교정」 발행	4~6월	
3/4분기	○ 호송차량 랩핑	7~12월	
	○ 분류처우 브랜드 홍보 및 로고 제작	7~9월	
	○ 교정의 날 기념 교정정책 관련 대국민 공모전 실시	7~9월	10월 시상
	○ 월간 「교정」 발행	7~9월	
4/4분기	○ 월간 「교정」 발행	10~12월	
	○ 수용자 대상 '수용생활 웹툰 공모전' 실시	11~12월	
연 중	○ 소셜네트워크(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및 유튜브 운영	1~12월	
	○ 보도·설명 자료 배포	1~12월	
	○ 홍보영상 제작	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교정 민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인 수용자 가족 및 교정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
- 교정정책 홍보 및 교정행정 이미지 형성에 영향이 큰 언론기관 및 문화산업 종사자

□ 기대효과

- 교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정책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 강화
- 생활밀착형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중심의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정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정책홍보 활성화도(점수)	933	1,173	1,083	1,191	지난 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위축된 홍보행사 등으로 보도자료 배포 등 정책홍보 활성화 감소 금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추세를 확신할 수 없으나,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고려, 전년도 실적대비 10% 상향하여 적극적 목표 설정 *평가 제외 대상 -감염병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시설 출입을 필요로 하는 교정시설 참관 등을 성과지표 평가항목에서 제외 -교정시설 참관, 보라미 준법교실, 언론홍보 교육 (다중접촉 고려)	-보도·설명자료 배포 (건당 1점) -월간 「교정」 발간 (건당 10점) -홍보기획 영상 제작 (건당 5점) -포스터 등 기타 홍보물 (건당 5점) -홍보행사 참석(건당 10점)	해당 자료 결과 보고 결과 책자 등
온라인 홍보 실적(점수)	신규	47,100	62,616	68,877	전년도 실적 대비 10% 상향하여 적극적 목표 설정 *목표치 산정 대상 교정정책 홍보 채널(4) :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친구 *채널별 영향력을 고려하여 가중치 적용	-유튜브 구독자수*4 -페이스북 팔로워수*2 -카카오톡 구독자수*2 -카카오톡 친구 친구수*2	온 라 인 홍보 채널 구독자 자료 등

Ⅴ 출입국·외국인정책 홍보 강화(V-3-⑤)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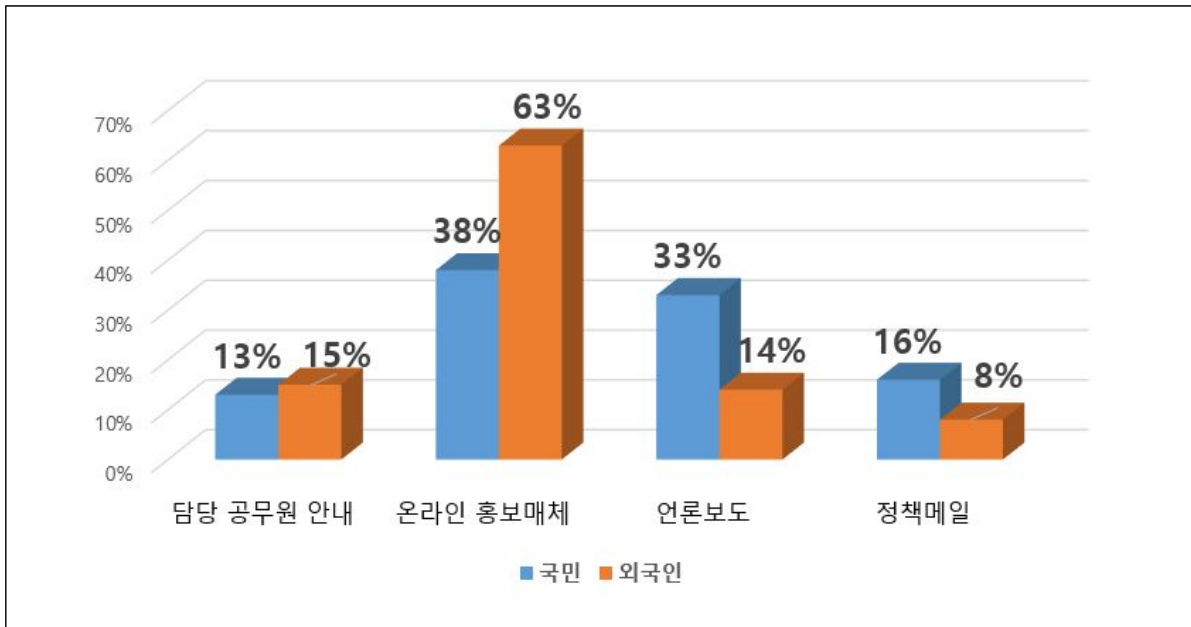
- 국내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내·외국인들에게 출입국·외국인 정책의 중요성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출입국·외국인정책 추진 지지기반 확보
- 정책 고객의 수요를 반영하여 고객이 원하는 매체와 수단을 중점적으로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 추진으로 공감대 형성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출입국·외국인 정책 현안 집중 홍보 및 정책 체감도 향상
 - 난민, 불법체류 등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함으로써 정책 추진 동력 확보
 - 출입국심사, 사회통합 정책 등 정책 고객과 접점이 큰 분야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추진으로 정책 수요자의 체감도 향상
 -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주한 외국공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파급 효과 확산
 -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알려 긍정적 인식 제고
 - 포스터·리플릿, 보도자료 등을 수시로 정책고객에게 메일로 발송하여 주요 정책의 시행·변경 사항 홍보 강화
- 민·관·학계의 이민정책 연구 성과 등을 대내외에 공유·확산하여 이민정책의 긍정적인 인식 제고 및 국민들에게 이민정책 관심 환기

- 언론 동향, 온라인 여론 동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고객의 관심사 파악 및 선제적 대응·홍보 추진
 -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기고 등 언론사를 활용한 홍보 강화
 -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부정적 여론 형성 억제
 - 보도자료, 기고, 인터뷰 등 언론사를 활용한 주요 홍보 내용을 홈페이지, 정책메일 발송 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확산
 - 사회적 약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미담사례를 홍보하여 긍정적 인식 제고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지(共Zone) 등을 통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의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이민자에 대한 인식 개선
 - ‘규제 개혁’ 사례 홍보 강화
 - 출입국·외국인 정책 중 일반 국민이나 정책 수혜층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사례와 성과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출입국·외국인 정책 신뢰 기반 확보 및 긍정적 인식 제고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 SNS 온라인 이벤트 진행을 통한 온라인 홍보 매체 활성화
 - 영향력이 큰 온라인 홍보(유튜브, SNS 등)방식 강화 및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활용한 국민 중심의 홍보 실시
- ※ '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홍보 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 국민과 외국인 모두 희망 홍보 매체 1순위로 '온라인 홍보 매체'(국민 38.2%, 외국인 63%)를 선정하였으며 매년 온라인 홍보매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희망 홍보 매체】



- 생소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많은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 카드뉴스 등 시각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국민 중심의 홍보로 효율성 제고
- 정책 고객의 수요 파악을 위한 홍보 만족도 조사 실시
 - 홍보 매체 활용도 및 만족도,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희망 홍보 매체 등 홍보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수요를 반영한 홍보 콘텐츠 개발
-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본부 대표 홈페이지 상시 개선
 - 가독성이 낮거나, 정책 정보 수집 경로가 복잡한 경우 등 홈페이지 이용 불편 사항들을 적극 개선하여 출입국외국인 정책이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월 단위로 기획 홍보물(신규 시행 정책, 달라지는 정책, 유용한 출입국 정보 등)을 제작 및 게시하여 정책수요자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정책 홍보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타 부처의 우수 사례를 참조하여 기획

<'21년도 과제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본부 소식지 「공존」 발간계획 수립 및 용역입찰	1~3월	
	○ 정책메일 발송	3월	
2/4분기	○ 본부 소식지 「공존」 발간	4월	
	○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홍보	5월	
	○ 정책메일 발송	6월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4~6월	
3/4분기	○ 본부 소식지 「공존」 발간	7월	
	○ 온라인 이벤트 진행	8월	
	○ 이민자 사회 공헌 사례 발굴 및 홍보	8월	
	○ 본부 소식지 「공존」 발간	9월	
4/4분기	○ 정책메일 발송	10월	
	○ 홍보 만족도 조사 실시	11월	
	○ 출입국·외국인정책 홍보 달력 제작 및 배포	12월	
	○ 본부 소식지 「공존」 발간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 강화를 통해 정책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일반 국민과 국내외 외국인
 - 정책 이해도와 관심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외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확산

○ (이해관계집단)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언론기관

- 보도자료, 기고, 인터뷰 등 언론기관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국내외 외국인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주한 외신 및 해외 언론사를 활용한 홍보 추진
-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설명, 설명자료 배포 등 적극 대응

□ 기대효과

-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를 추진하여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 추진동력 확보
- 정책 고객과 소통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감동을 주는 정책과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 및 신뢰도 제고
- 국내 사회에 기여하는 이민자의 미담사례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공존 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사회통합 촉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정책 홍보 활성도(점수)	15,646	20,671	25,912	26,291	-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측정산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문 행사(1회 50	-홍보책자, 동영상 제작 (1건당 30점) -보도자료·인터뷰·기고 (1건당 10점) -리플릿·포스터·배너 제작(1건당 10점) ※ 홍보책자, 동영상 등 모든	결과보고서, 연수보고서, 사진자료, 홍보 책자, 동영상, 페이스북 등 관련 자료

성 과 지 표	실 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항목 제 외)				점)와 출입국 현장투 어(1회 15점) 대면홍 보를 평기항목에서 제외 하여 측정산식을 개선 - 최근 3년간의 측정산식 개선 값의 평균 증가는 38.2%이나 상승 한계치와 급속한 홍보 환경변화 등으로 전년도 대비 실적을 높이기 힘 든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확산을 통한 홍 보효과 제고를 위해 전년도 개선값에서 15% 상향한 점수설정 - 카카오톡과 연계되어 접 근성이 뛰어난 '카카 오채널'과 영상콘텐츠 플랫폼인 '유튜브'의 경 우 현재는 초기 운용 단계이지만, 플랫폼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페이스북'과 비교하여 그 홍보 파급력이 상 대적으로 크다는점을 감안하여 '플랫폼별로 다른 가중치 적용	홍보물을 외국어로 제작 시 건당 기본 점수에 언어별 추가 50% 가점 -뉴스레터 발송(1건당 5점) -온라인 이벤트 실시 (1건당 30점) -웹툰 등 외부작가 의뢰 제작 정책 홍보물 및 동영상 포스팅 (1건당 10점) -정책 포스터 등 홍보물 포스팅(1건당 5점) -기획 홍보물 포스팅 (1건당 30점) -SNS(페이스북, 유튜브) 일반 포스팅 (1건당 1점) -SNS Fan 수 증가 페이스북 팔로워 수: 1점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 2점 유튜브 구독자 수: 4점 ※ 채널별 홍보 파급력을 고려하여 가중치 적용	
홍보 만족도 (점수)	88	90.2	90.3	90.7	만족도 조사 특성상 상승 한계치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 목표 치 대비 0.5% 상향 조정 이는 3년 평균 실적치 89.5점보다 1점 높은 수치임	설문항목별로 리커트 척도 5단계(매우만족 100점, 만족 90점, 보통 80점, 불만 70점, 매우불만 60점)로 측정 후 배점 기준에 따라 환산된 점수의 합계로 측정 ※ 정책메일 수신자, 하이코 리아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인지경 로·제공자료에 대한 만 족도 등 조사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1) 주요내용

- 홈페이지·업무시스템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다양한 사용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 보안관제·정보보호 시스템의 고도화 및 법무사이버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사이버 위기 대응·관리 체계 강화
- 정보화사업 사전검토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 및 정보시스템 성과관리를 통한 운영 관리 효율화 향상
- 소속기관 코로나19 방역관리 매뉴얼 수립 및 실효적 현장점검을 통해 법무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
- 체계적인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법무시설의 안전을 확보

□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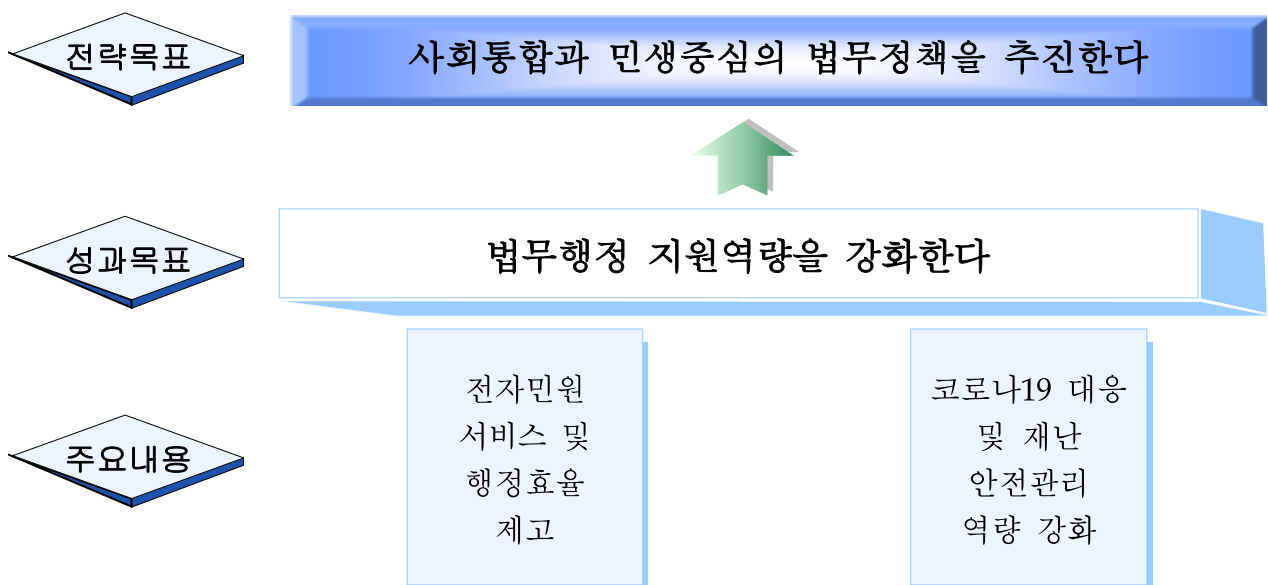
- 국민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비대면 전자민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여 편의성 제고
- 지속적인 직원 의견 수렴 및 기능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환경 제공과 안정적인 법무포털시스템 운영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무 분야의 데이터 개방 확대와 융합데이터 발굴 등 법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

-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사이버 위협과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안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법무사이버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무중단 관제를 통해 사이버 위기 관리 체계 강화
-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로 사업의 유사·중복 검토 및 시스템 공동이용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및 관리를 통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효율성 향상

□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유행에 대응하여 법무시설 방역관리매뉴얼 수립 및 전국 소속기관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법무환경 조성
- 수용시설인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점검 활동 등을 통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목표체계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EA 성숙도)(점) (공통)	4.56	5.00	5.00	4.98	-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 수준(과거 EA 성숙도)'이 매년 변경되는 측정모델의 세부 항목에 따라 점수 변동이 다소 있으며, 최근 범정부 GEAP 측정기준이 수시 체크 점수 반영으로 한층 강화됨에 따라 18년 범정부 점수가 하락했으나, 정보화 부서 지원을 대상으로 연2회에 걸쳐서 EA개념 및 활용, 정보등록 교육을 강화 - '18년부터 '20년까지 실적치 3년 평균 실적(4.85점, 5점만점 기준) 보다 상향 반영하여 목표치(4.98점) 설정	(정보자원관리수준 + 단계별성과관리 이행수준 + 중복투자 예방) / 3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성과관리 수준 진단(행정관리역량 평가)' 측정결과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재난안전 매뉴얼 수립 건수	-	-	-	62	·코로나19 관련 지표는 올해 신규 생성된 지표로 참고 가능한 과거 기준이 없는 관계로, 측정 산식의 개별적인 목표값 예상을 통한 목표치 도출 1) 소관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 건수 : <u>8건</u> - 상·하반기 네 개 기관씩 방역취약시설 점검 예정 2) 본부 및 소속기관 재난 안전관리 매뉴얼 제·개정 건수 : <u>54건</u> - 표준매뉴얼 1건, 실무매뉴얼 3건, 행동매뉴얼 50건 ·합산한 62건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	소관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 건수 + 본부 및 소속기관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제·개정 건수	·방역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 매뉴얼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 공공데이터 및 공공서비스 개방 확대 제한

- 국민들은 출입국 · 범죄예방 · 교정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과 제공 형식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보의 민감성 · 보안성 등으로 인해 공공데이터 및 공공서비스 개방 확대에 제한
- 단기적인 개방이 어려운 정보 외에 우선적으로 개방이 가능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무부서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며, 공공데이터 수요자 실태조사의 정기적인 실시를 통해 다양한 의견 지속 확인 · 반영

○ 정보보호 전문 · 전담인력 확보 필요

- 보안관제 · 침해대응 · 개인정보 등의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어려움 발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6개)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위치추적시스템, 교정정보시스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출입국심사시스템, 출입국관리시스템

-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전문직위 조정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전문직 충원 추진

□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코로나19 대응) 법무부는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수용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부처로, 수용자가 과밀 환경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수용시설의 특성 상 작은 빈틈이라도 발생 시 기관 전체의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서울동부구치소 '20.11월 첫 확진자 발생 → '21.1월 관련확진자 1,000명 이상으로 폭증

- 수용시설 직원 및 신규 수용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초동조치 등을 수립한 매뉴얼을 점차적으로 정교화하여 법무시설의 감염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재난 안전관리) 사회재난·자연재난 증가로 법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관리 필요성 증대

- 포항지진('17. 11. 15.),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17. 12. 21.),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18. 1. 16.),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18. 9. 6.), 강원 대형 산불('19. 4. 4.), 한국 역대 최대 규모의 폭우로 인한 풍수해 발생('20. 6. 10.~9. 13.) 등 다방면에 대한 재난 안전관리대책 필요성 증대

(4) 기 타

○ 법무부 온라인서비스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minwon.moj.go.kr)

○ 법무포털시스템 : 법무샘(portal.moj.go.kr) ※내부직원용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정보자원관리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V-4-①)

□ 추진배경

-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대국민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확대 운영 및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 필요
 - ※ 수용자 ‘인터넷서신’ 등 전자민원서비스 14종 제공 외에 민원 편의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확대 추진
- 보안관제·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 및 보안사고 예방 활동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력 향상과 사이버 위기 관리체계 강화 필요
 - ※ 노후화 된 시스템의 제품 단종 및 기술지원 종료 등 기능적·성능적 한계, 축적된 대규모 이벤트 자료의 분석·활용을 위한 기능 제한 등 개선 필요
- 지식행정 활성화를 통해 조직성과 창출 및 업무 수행능력 향상, 법무지식의 양적·질적 성장 도모
- 공공데이터의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과학적 지능형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고품질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노력 필요
-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지원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이행 추진
- 중복투자 방지 및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이행노력이 필요하며,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보화 행정효율 제고 노력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대국민 편의성 제고

- 홈페이지 통합검색 기능 개선, 여권번호 실명 확인 서비스 개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추가 확대 등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이용 만족도 제고
-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접근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대국민 편의성 제고

※ 법무부 운영 웹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갱신) 추진

- 웹 취약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고, 홈페이지 개인 정보 노출 여부를 매일 점검·조치하여 웹 사이트 안전성 확보

○ 법무포털시스템 등 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법무샘 기능 개선’ 게시판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기능 개선으로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법무포털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법무포털시스템의 웹 취약점을 점검·제거하고, 시스템 응답시간 수준 측정을 통해 시스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 신규 임용자와 서무 담당자에게 법무포털시스템 및 온-나라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환경 적응 능력 향상

※ 법무샘 및 온-나라 매뉴얼 개선·배포, 법무연수원 신규자과정 교육 지원 등

○ 사이버침해 대응 및 보안사고 예방 강화 활동 추진

- 빅데이터 통합분석시스템 및 네트워크 위협관리 시스템 확충 등 효율적인 사이버침해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관계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6개 기관, 6개 시설)에 대해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 및 보호 대책 수립
-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해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해 유해 트래픽 (악성코드, DDos, 좀비PC, 유해사이트 접속, 홈페이지 위변조)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실시간 보안관제를 24시간 연중 무중단 실시
 - ※ 본부 및 205개 소속·산하기관, PC 2만 여대, 54개 웹사이트 등 관제
- 정보보안 감사,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등을 통해 취약요소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
- 용역업체, 정보보안 담당자, 직원들의 보안의식 함양과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체계 마련 및 교육 실시

○ 지식행정 활성화 및 지식성과 보상 강화

- 우수 학습동아리 선정·지원, 지식행정 우수기관·우수지식인 선정, 지식행정리더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지식마일리지 BSC 실적 적용, 지식활동 실태점검, 법무 지식컨테스트 개최 등 고품질 법무지식 공유·활용을 통한 업무 성과 창출 및 지식활동 활성화 추진
- 지식검증자 교육 및 의견 청취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지식 검증체계 구축
- 법무지식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식성과 보상 강화

※ 지식행정 및 학습동아리 인센티브 : 표창, 상금, 인사가점, 운영경비 지원 등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확대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2월)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자체 실태점검 실시 및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현행화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반 마련

- 사회안전분야 및 법률복지분야 등 법무 분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수형자 교화프로그램 및 보호대상자 통계 등 공공데이터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한 개방 확대 추진
- 품질관리 규정 마련, 데이터 품질 오류 진단 및 개선, 데이터 표준화 계획 등 고품질 데이터 제공을 위한 방안 추진
-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발굴·개방의 기초자료 수집과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수요자 실태조사 실시
-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표준화 전문교육, 직원 대상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교육 실시

○ 법무 빅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

- 대용량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구축 및 고품질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기반 마련
- 범죄예방, 교정, 출입국·외국인, 인권 분야 전반의 빅데이터 분석 기반 및 과학적 지능형 행정체계 구축 기반 마련

○ 보호소년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지원

- 보호소년 및 치료감호자의 교육환경과 선호에 맞는 실용중심의 교육과정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
- 기초·고급·심화 과정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강사 지원
-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PC, 모니터 등 전산장비 지원
- 자격증 응시 수수료 및 정보화 교육 교재 비용 등 지원

○ 정보화 업무소통 강화 및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의견 수렴

- 본부 및 소속기관의 신규 정보화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의 의견 검토를 위한 법무행정정보화 신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에 반영
-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외부 업무담당자 협의체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정보화 업무소통과 행정효율 강화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보화 사업 및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추진에 반영

○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해 사업중복성 및 타시스템 간 연계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 절감, 정보시스템 상호 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
- 정보화사업 관련 법률 이행사항, 성과지표 설정 및 보안성 등 사전검토를 통해 정보화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 하여 조달 발주까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정보화사업의 추진 효율화 제고
-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효율화 제고를 위해 구축 후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의 비용측면 및 업무측면을 측정하여 시스템 유지·고도화·재개발·폐기검토 등 유지관리 유형을 식별하고, 정보자원의 경제성 및 정성적 효과 등 투자 타당성 분석을 통해 향후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실시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법무 정보화 업무계획 수립	1월	
	법무포털시스템(법무샘) 운영 계획 수립	1월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 계획 수립	1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1월	
	보호소년 등 정보화교육 지원계획 수립	1월	
	지식행정 추진계획 수립	1월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1월	
	법무부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서 갱신	3월	
2/4분기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개최	4월	
	'22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5월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6월	
3/4분기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7월	
	법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9월	
4/4분기	법무지식 컨테스트 개최	10월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11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11월	
	온라인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12월	
	법무행정시스템(법무샘) 만족도 설문조사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법무포털시스템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과 업무지식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한 기관 내부직원, 온라인 법무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어린이·장애인·고령자 등 국민, 정보접근의 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하게 되는 보호소년 및 치료감호수용자
- (이해관계집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등의 유관기관, 법무부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운영의 정보화 관련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 기대효과

- 비대면 온라인 민원 서비스 및 법무포털시스템 기능 개선, 사용자 중심의 운영을 통해 사용자 참여 확대와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
- 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및 보안사고 예방 강화 활동으로 보안 피해예방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운영 기반 확보
- 지식행정 활성화 및 지식성과 보상 강화를 통해 실효적이고 업무 활용도 높은 법무 지식의 등록·공유 문화 정착
-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 등의 노력으로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리 향상
-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행정문서를 생산·개방함으로써 국민체감 중심의 데이터 분석·활용 제고
- 법무 빅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으로 법무 분야 전반의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

- 보호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 제공과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자격증 취득 등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기여
- 정보화 실무자 및 외부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정책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법무행정 정보화 업무의 행정효율 증대
- 정보화사업 사전검토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실시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향상 및 시스템 운영·관리의 효율화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0	'21
법무행정정보화(V-3-정보화①)				
①	법무행정정보화(7034)	일반회계	38,859	36,099
			(38,859)	(36,099)
	▪ 법무행정정보화(500)		38,859	36,09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보화노력도(점)(공통)	신규	125.5	136.4	137.8	'19년 신규 성과지표이며 실제 업무에 적용한 최근 3년간 실적은 '18년 98점, '19년 125.5점, '20년 136.4점으로 평균 119.8점이며, 평균값에 15% 적극 상향 반영하여 '21년 목표치를 137.8점으로 설정	=공공데이터 개방수준 + 정보시스템 개선노력도 + 정보보안수준강화 + 정보시스템 응답시간 수준 + 홍보노력도 + 정보화 소통노력도 ※ 측정산식 설명 ○공공데이터 개방수준 [개방건수 × 5점] ○정보시스템개선노력 [(법무샘+홈페이지등 기 능개선 100건당) × 5점]	공문 및 보고 서, 사이버안전 등록건수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정보보안수준강화 [(보안취약점점검+정보보안교육+실태점검 횟수)×3점+(보안 소식지 발송+뉴스레터 발송 +유해사이트등록 건수100건당)×1점] ○정보시스템응답시간수준 [(전자민원+법무샐 등 각10점) - (시스템응답시간(초)×1.5)] ○홍보노력도 [언론,블로그,홈페이지 등 홍보건수×0.5점] ○정보화소통노력도 [직원간담회, 워크샵, 유관기관 협의, 대국민 홈페이지 블로그기자단 의견수렴 횟수 등×5점]	

②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V-4-②)

□ 추진배경

- 법무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제고
-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사전 점검 등의 부재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등 증가하고 있는 재난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법무부 임무 및 기능의 효율적 수행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코로나19 법무부 방역상황관리 총괄(연중)
 - 법무부 코로나19 대책본부 구성, 중대본 등 범정부 대응 협력
 - 수용시설 대응 매뉴얼 마련, 전 소속기관 상황관리지표 진단, 수시 방역실태 현장점검 등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
- 일일재난안전결산 시행(연중)
 - 매월 점검테마를 선정, 전 소속기관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기별로 발생 가능한 재난에 집중한 선제적 대비 시행
 - ※ 여름철은 폭우·태풍 대비, 겨울철은 화재 대비 시설물 점검 등 테마 다양화
- 법무시설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상반기)
 - 교정·출입·범죄예방 전체 통합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수립 완료(1월) 후 후속 실무매뉴얼(3월) 및 행동매뉴얼(6월) 제정
- 소속기관 재난안전 담당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연중)
 - 소속기관 재난안전 담당자 대상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주관 전문교육에 참여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10월)

- 안전한국훈련 관계기관 워크숍 참석, 안전한국훈련 세부추진계획 작성, 실제훈련기관 주관 하에 유관기관 회의 2~3회 실시, 중수본 및 지수본 사전회의 2~3회, 민간 외부전문가 참여 컨설팅 회의 2회

○ 재난안전점검 실시(하절기 9월/동절기 12월)

- 안전대진단 추진실태, 재난관련 매뉴얼 작동 실태 등 중점 점검

○ 법무부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12월)

- 재난관리 목표, 재난·안전관리체계, 중점추진과제, 재정투자계획 등 연간 추진할 안전관리 총괄 집행계획을 작성·시달

<’21년도 과제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1/4분기	○ 코로나19 방역상황관리 - 수용시설 대응 매뉴얼 마련 - 상황관리지표 진단 - 현장 점검 실시	연중	
	○ 일일재난안전결산 시행	연중	
	○ 법무시설 위기관리 표준·실무 매뉴얼 수립	1~3월	
2/4분기	○ 코로나19 방역상황관리 - 수용시설 대응 매뉴얼 마련 - 상황관리지표 진단 - 현장 점검 실시	연중	
	○ 일일재난안전결산 시행	연중	
	○ 법무시설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 수립	4~6월	
3/4분기	○ 코로나19 방역상황관리 - 수용시설 대응 매뉴얼 마련 - 상황관리지표 진단 - 현장 점검 실시	연중	

구 분	추진계획	일정	비고
	○ 일일재난안전결산 시행	연중	
	○ 하절기 재난안전 점검 실시	9월	
4/4분기	○ 코로나19 방역상황관리 - 수용시설 대응 매뉴얼 마련 - 상황관리지표 진단 - 현장 점검 실시	연중	
	○ 일일재난안전결산 시행	연중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0월	
	○ 동절기 재난안전 점검 실시	12월	
	○ 법무부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법무시설을 이용하는 국민 및 수용자·보호외국인
- (이해관계집단) 행정안전부(중앙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등

□ 기대효과

- 코로나19의 법무시설 유입차단 및 효과적인 확산방지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법무환경 조성
- 각종 자연재난(풍수해·지진 등) 및 사회재난(화재·폭발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 과 지 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코로나19 방역상황 관리(건)	-	-	-	91	·금년도 신규 생성된 지표 로서, 참고 가능한 과거 기준이 없으므로, <u>측정산 식의 개별적인 목표값 예상을 통한 목표치 도출</u> 1) 수용시설 대응매뉴얼 제·개정 건수 : <u>53건</u> - 제정 대상 소속기관수 (교정기관) 2) 상황관리지표 진단 건수 : <u>9건</u> - 향후 4~12월(9개월) 3) 방역실태 현장점검 실적 : <u>8건</u> - 현재 예정된 계획 ·세 산식의 예상 실적치를 <u>합산하면 총 70건</u> ·향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u>예상치의 30%</u> <u>가량을 더하여 91건</u> 목표	수용시설 코로나19 대응매뉴얼 제·개정 건수 + 상황관리지표 진단 건수 + 소관시 설 방역실태 현장점검 건수	·대응매뉴얼 ·상황관리지표 결과 ·현장점검 결과 보 고서
재난안전관리 문제점 발굴 및 개선(건)	113	123	58	130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은 98건으로, 이에 <u>30%이상</u> <u>상향한 목표치는 130건</u> ※(참고) 작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속기관 방문점검 일정 축소로 실적 급감 ·올해도 코로나19로 출장 자제 권고 상황이 지속 되고 있으나, 작년도 재난 점검의 축소로 인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재난안 전관리 업무 추진 예정	재난안전점검 후 문 제점 발굴 건수 + 본부 및 소속기관 재난관리 매뉴얼 제· 개정 건수 + 일일재난 안전결산 보고 건수	·재난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 매뉴얼 ·일일재난안전결산 보고 자료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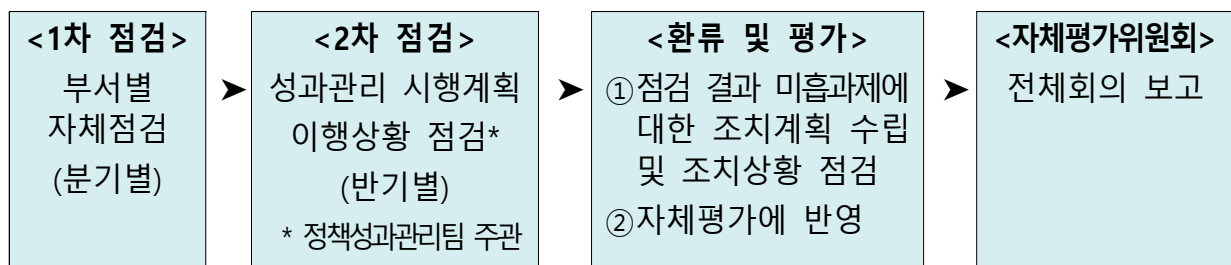
□ 「법무부 성과관리 점검체계」 구축·운영

-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및 추진실적의 상시적 관리·점검체계를 구축하고,

※ BSC 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성과지표를 소관 부서의 관리지표로 반드시 채택하도록 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내용을 반영

- '21년 법무부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관리과제별 추진정도, 성과 달성정도 및 미흡과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점검 체계 >>



□ 점검 개요

○ 1차 점검 : 부서별 자체점검

- (점검 대상)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의 성과지표(121개)
- (점검 내용) 연초 수립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등
- (점검 주기, 방법) 분기별,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부서별 자체점검 후 실적 입력

○ 2차 점검 :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 (점검 대상)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성과목표의 성과지표(27개) 및 관리과제의 성과지표(121개)
- (점검 내용)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각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
- (점검 주기, 방법) 반기별, e-IPSES 시스템을 이용한 부서별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책성과관리팀 주관 실적 점검·확인, 자체평가위원회에 점검 결과 보고

○ 환류 및 평가

- (지도점검) 성과지표 실적 관리를 포함한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 전반에 대해 기관별 점검
- (미흡과제 관리) 이행상황 점검 결과 미흡과제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계획 이행여부 점검·관리
- (자체평가에 반영) 자체평가 시 '추진일정의 충실성'(7점),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30점)' 지표로 평가·관리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 전체위원회

-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 등의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각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 의사결정 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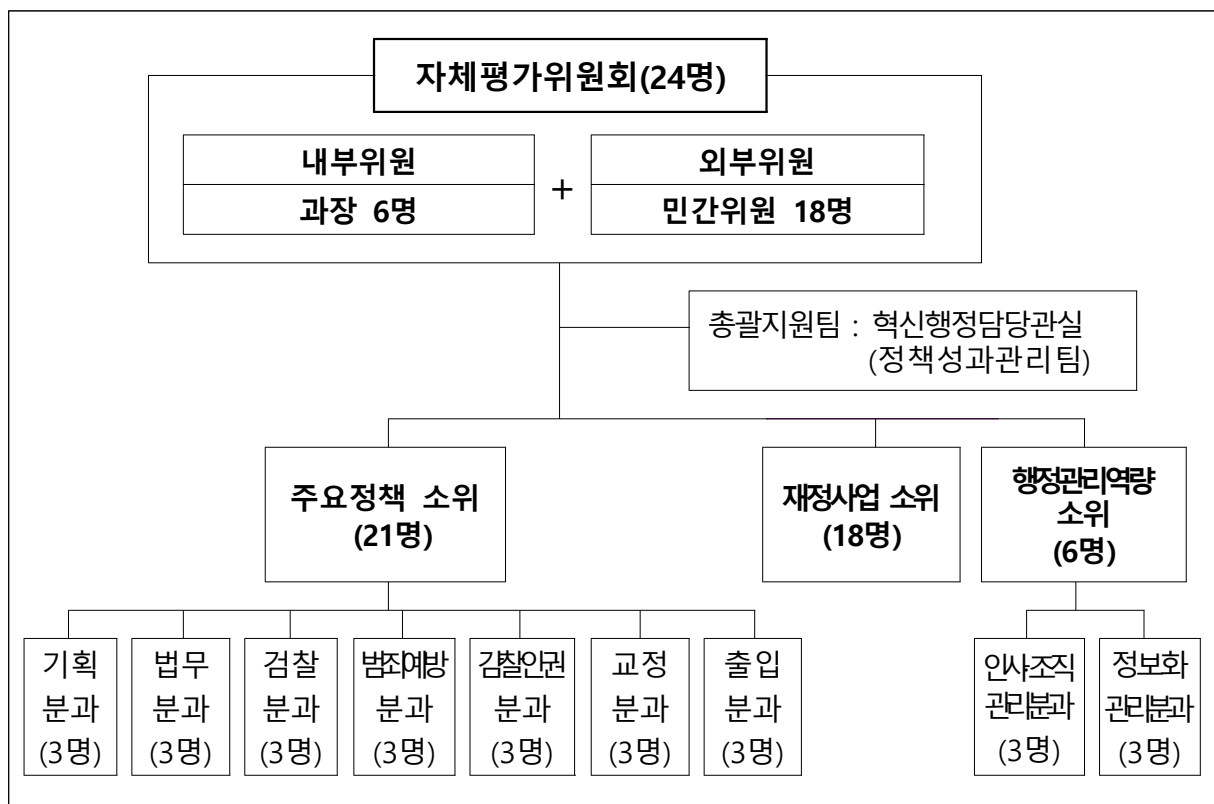
○ 소위원회(3개)

- 주요정책 평가결과 등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심의 및 평가
- 그 밖에 전체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심의
- 각 부서에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 요구
- 의사결정 방법 : 전체위원회와 동일

○ 분과위원회(9개)

- 해당분과 주요정책 등 평가실시 및 평가 보고서 작성
- 의사결정 방법 : 전체위원회와 동일

<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도 >



※ 기획분과 위원이 인사·조직관리 분과 위원 겸임, 재정사업 소위는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

2.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 목 적

- 정책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에 활용하는 한편 이를 개인성과 및 인사와 연계하여 성과급, 승진에 반영하도록 하여 정부정책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분야별 활용방안

분 야	활 용 내 용
정책개선	· 평가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과제, 정책개선이 필요한 과제, 평가결과 5~7등급에 속하는 과제 담당 부서장은 별도의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 과제의 미흡원인에 대한 심층진단 실시 및 다음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
예 산	· 성과개선 -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성과관리개선대책 수립 ※ 미흡사업 : 평가결과 하위 15% 과제 - 평가지표인 예산 집행률, 성과목표 달성률, 외부 기관 성과우수성 인정의 부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성과 제고방안을 수립

분 야	활 용 내 용
	· 이행실적 점검 - 성과관리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 시 논의 예정) · 평가자료 대외 공개 -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결과(사업별 평가등급)를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예정
인 사	· 인사와의 연계 - 승진심사를 위한 종합서열명부 작성 시 BSC 평가점수를 10% 반영 · 성과급과 연계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BSC 평가점수를 20% 반영 · 포상 등 활용 - 자체평가 우수과제 담당자를 선정하여 성과급 1등급 상향 지급 및 인사가점 0.25점 부여 - 성과관리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장관 표창 및 포상금 지급
조 직	· 조직관리 유공부서 포상 - 조직관리 부문 정부업무평가에 기여한 유공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직관리 활동성과 제고 촉진

□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단계]

- 성과관리시스템은 BSC(균형성과평가제도)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된 IT기반의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뜻하며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을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고객 · 정책(업무) · 운영/행정개선 · 학습성장 등 4개 관점에서 과제 및 지표의 실적을 관리
- 지표의 성격에 따라 분기·반기·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성과평가 부문 : 조직 및 개인]

○ 조직 성과평가

- 평가항목은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와 '조직 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로 구성되며,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 비율은 '성과지표 평가' 90%, '성과기여도·업무난이도' 10%로 함
-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란 지표의 목표달성도를 뜻하며,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어 점수 산정

※ 자체평가 결과의 경우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에 반영되어 조직 평가점수로 산정

- '성과기여도·업무난이도 평가'는 평가군별 평가자의 정성평가를 뜻하며, 조직별로 점수가 차등 부여
- 기관 및 부서 단위로 각각 평가가 진행되고, 부서의 조직평가점수 산정 시, 상위 조직의 조직평가점수가 40% 반영

○ 개인 성과평가

- 조직 평가점수는 개인 평가점수의 기준이 되어
- 과/팀장급 이상 부서장은 부서의 조직 평가점수를 개인 평가점수로 하며
- 부서원의 경우, 부서장이 조직 평가점수의 ± 3 점 범위 내에서 성과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평가결과의 환류]

- BSC 개인 평가점수를 승진 명부 작성(10%), 성과급 등급 결정(20%), 교육훈련자 선발(10%) 시 반영

3. 변화관리 계획

(1) '20년 변화관리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

□ 행정개선활동으로 인한 법무행정 효율성 향상

- 자체 행정개선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불합리한 업무관행 및 규정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연중 발굴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법무행정 효율성 향상
 - 행정개선관리시스템, 공무원제안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과제 총 968건 및 공무원제안 22건 등 총 809건을 접수하여, 「외국 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일부」 등 183건 채택·개선 추진
-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자체 추진한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직 내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 시행 완료 또는 시행 중인 90건의 우수사례 접수하여 「대국민 형사사법 포털 모바일 서비스 편의성 개선」 구축 등 제도개선 우수사례 17건을 채택·포상

□ 창의적·개방적 법무행정 문화 조성

- 소통·협력·신뢰하는 법무행정의 실현을 위해 사람중심, 일과 삶의 균형, 상호 존중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공유·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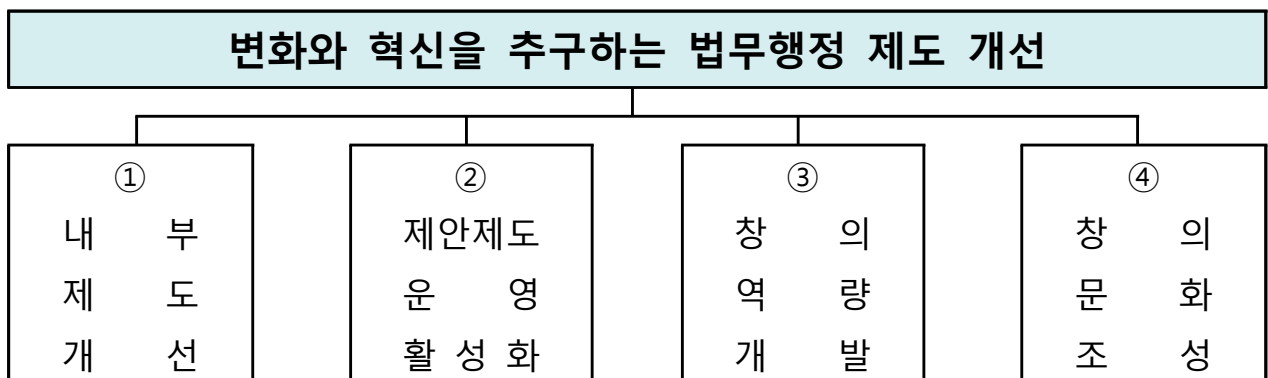
□ 창의행정 역량 개발

- 창의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창의력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 증진

- 창의적 지식역량과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신개념 멀티미디어 지식서비스 제공
 - 자기주도적 학습시스템을 제공하여 구성원들의 창의능력 향상 및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인재 육성
- 조직문화 활성화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 업무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 과정 지원으로 직무능력 제고 및 협업능력 강화
 - 각 분야의 직무능력 역량 제고 및 직장 내 우수사례 공유·전파,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2) '21년 변화관리 추진 계획

① 4대 전략 추진



내부 제도 개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간소화로 행정낭비 및 행정비효율 제거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구성원의 창의적 의견 및 고안의 적극적인 정책반영으로 업무혁신 도모
창의 역량 개발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한 법무행정능력 강화, 변화추동력 확보
창의 문화 조성	구성원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열린 조직문화 조성

② 세부 추진계획

① 내부제도 개선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간소화로 행정낭비 및 행정비효율 제거

- 다양한 제안채널을 가동하여 제도개선 과제의 지속적 발굴 개선
- 업무처리방식 효율화, 예산절감 등 내부 효율성 제고 등

②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 구성원의 창의적 의견 및 고안의 적극적인 정책반영으로 업무혁신 도모

- 다양한 행정개선시스템을 활성화하여 24시간 제안시스템 구축
 - 직원이면 누구나 즉시 제안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대내시스템(행정개선시스템) 및 대외시스템(국민신문고 ‘공무원 제안코너’) 운영

□ 인센티브 다양화 · 활성화

- 제도개선 제안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
- 포상·인사가점 외 ‘상시학습’ 인정 등 인센티브 다양화, 우수제안 공모 시 인센티브 대폭 상향
- 제안자 중심의 인센티브를 제안을 채택한 부서에까지 확대하고 또한 실행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인센티브 가점 부여

③ 창의 역량 개발

□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한 법무행정능력 강화, 변화 추동력 확보

- 변화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조직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법무행정능력 강화

- 조직구성원의 창의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 등 교육을 통해 조직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법무행정 기반 및 환경 조성

□ 변화관리 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변화대응역량 강화

- 업무분야별 담당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담당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과정 운영
- 협업형 연구모임 활성화 등 우수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으로 협업을 통한 직무전문성 향상 도모

□ 우수사례집 발간('21. 12.)

- 행정제도 개선 우수성과에 대한 공유 및 확산

④ 창의 문화 조성

□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 기관별 '행복한 직장만들기'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도 구성원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열린 조직문화 조성

□ 소통을 중시하는 사람중심 조직문화

- 기관장 등 간부진과 직원과의 주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 부서 및 유관기관 간 교류활성화로 협력, 협업하는 조직문화 조성
- 각종 동호회 활동, 지역주민과의 교류, 봉사·나눔활동, 재능기부 등을 통해 교류 기회 증진 및 소통하는 문화 기반 조성

□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근무여건

-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퇴근 편의, 임신/육아 등 상황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출퇴근 시각 설계가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

-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재충전, 자기계발 등을 위해 직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여건 및 조직문화 조성

□ 존중하고 신뢰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 신규 직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로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 향상 도모 및 우수부서/직원 발굴 및 포상 등으로 칭찬하는 문화 조성

③ 연간 추진계획

월별	주요 추진내용	비 고
연중	▪ 행정개선시스템 운영 - 제도개선 제안 심사 및 포상 (연중) ▪ 비능률적 행정제도·문화 발굴 및 개선 추진 (수시)	
3월	▪ 「2021년도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 「2021년도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4월	▪ 「2021년도 법무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	
5월	▪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 -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포상 및 행정자치부 추천 ▪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5~11월)	
10월	▪ 공무 국외출장(법무행정제도 개선 유공자)	
12월	▪ 법무행정제도 개선 유공 연말 포상(기관, 개인) ▪ 법무행정제도 개선 마일리지 BSC 반영 ▪ 「2021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목 적

-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및 환류의 정책추진 전 단계에 걸쳐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 추진되거나, 이해당사자 입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정책실효성이 저하되는 사례를 예방

□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체계

- (대상정책) 원칙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모든 관리과제
- (의견수렴 주체) 원칙적으로 과제 담당부서, 필요시 행복민원센터, 정책성과관리팀에서도 의견수렴 실시
 - 의견수렴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시 연구기관·조사전문기관 등 활용
- (의견 수렴방식) 해당과제별 가장 적합한 방식을 과제담당 부서에서 선정, 정책추진 전 단계에 걸쳐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 ※ 현장방문, 간담회, 여론조사,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등
- (의견 수렴 점검·평가) 과제별 현장의견 수렴 여부 및 정책 반영 여부를 자체평가에 반영
 - ※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를 자체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관리

□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방안

- 정책추진 전 단계에 걸쳐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신문고(국민제안·정책참여), 규제개혁신문고,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코너 등 각종 대국민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 의견 수렴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

- ◇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정책참여 >

- ◇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 국민 관심이슈 등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찬반토론, 의견제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국정에 반영하는 온라인 시스템

○ 정책고객 체계적관리를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

- 국민소통을 위한 정책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견 적극 반영
- 온·오프라인 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환류 강화

< 법무부 실·국·본부별 정책고객 현황 >

명 칭	담당부서	활동 인원	활동 기간	활동방법	활동내역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행복민원 센터	53명	2년	온라인 및 오프라인활동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안건 의견제시, 일선현장의 국민 불편·건의사항 발굴 등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대변인실	40명	1년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 (취재, 워크숍 등)	정책설문 참여, 실시간 댓글 작성, 법무현장 취재 및 블로그 기사 작성
저스티스 서포터즈	보호 정책과	160	1년	온라인 및 오프라인활동	법질서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 활동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정책고객	출입국 기획과	6,720명	계속	PMS 이용 (정책메일서비스)	설문조사 참여, 메일링 서비스 수신

○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형 민원서비스 제공(행복민원센터)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과 관련한 정책현장 외 대학교·지방자치단체 등 민원사무와 관련한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선제적으로 청취
- 접수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 공모제안 활성화로 국민의견 수렴 및 의견 반영
- 온·오프라인 민원(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우편 등)의 반복 및 불만족 민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개선과제 발굴
- 정책수혜자, 일선기관 정책집행자, 외부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 평가단' 운영 활성화
- 발굴된 개선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행복민원센터와 실·국·본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원·정책 제도개선 T/F' 운영을 활성화하여 협업 성과 제고

○ 법무행정 집행에 국민이 참여하는 체계 구축, 투명성 제고

- 시민옴부즈만, 시민모니터링 등 법무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강화
-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민간 참여,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항고심사회 활성화

○ 일선 직원 의견 적극 수렴 및 인센티브 강화

- 지도방문,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국민 접점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기관 직원 의견 적극 수렴
-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를 통해 의견 공유 및 민원의식 제고

- 적극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원 서비스 동기 부여 강화

□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여부 자체평가 반영

-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를 '21년 자체평가 평가지표에 반영, 관리
- 과제별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여부, 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평가하여 자체평가에 반영

※ 단계별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추진 프로세스

< 정책 수립단계 >

- ① 정책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그룹이 누구인지 구체화
- ② 정책의 특성별로 현장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방법 결정
 - 현장방문,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정책 수요자별 심층 면접,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을 통한 체계적 조사 등
- ③ 정책수요자 및 이해관계자별로 현장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
- ④ 수렴된 의견의 실행가능성, 정책수요자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사항은 정책 수립에 반영

< 정책 집행단계 >

- ① 집행과정에서의 현장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 ② 정책 추진경과 및 운영 실태에 대해 주기적인 현장 모니터링 실시
- ③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분석하여 정책 집행을 보완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 정책 평가 및 환류 >

- ① 정책 현장의 여론, 정책수요자의 만족도 등을 통해 사후 평가 실시
- ② 사후평가 결과를 향후 정책 추진 시 환류

정책추진 체계도



□ 성과목표별 현장의견 반영 계획

성과목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적폐청산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성과목표 1-1)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수사와 철저한 공소유지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검찰에 대한 신뢰도 제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 공청회, 여론조사, 세미나,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한 각계 의견수렴 - 검찰개혁 관련 주제들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해외 형사법제 관련 연구 병행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과 역할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 해외 입법례 조사, 의견 수렴 - 검찰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
②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성과목표 1-2)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일선청별로 선거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예방 및 단속활동에 공동 대처 - 선거사범 단속 현황 등 선거관련 보도자료 배포는 수사기관의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홍보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공명선거 문화 정착에 기여 - 선거사건 양형기준 및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서를 일선에 배포함으로써 선거 사건 법리검토 역량을 강화
	국제 형사사범 공조 등을 통한 부정축재사범 엄단 등 법집행 공정성 강화	- 외교부, 경찰청, 출입국, 관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민의 법감정 기대에 부응하고 재외국민 등 직간접 정책수요자의 의견 수렴 반영 계획 - 국제협력을 통한 상대국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하여 국외도피사범 집중 송환 추진
	감찰·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근절 및 예방	- 감사종료 직후 현장에서 강평, 간담회 등을 통해 기관 현장근무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이메일, 유선전화를 통한 추가 의견 수렴 - 상·하반기 각 1회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 실태 점검 확대 실시 - 적극적 행정행위로 인한 과오에 대한 면책, 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와 긴밀히 협의, 자체감사 실태점검 시 도출된 미흡 사항 적극 개선

성과목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 종합감사 전 설문조사(청렴 부진분야 항목)를 실시하여 조직문화와 청렴의식 등을 진단 후 현장에서 피드백 제시 및 향후 반부패·청렴정책에 반영
③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에 기여한다 (성과목표 II- 1)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 전국 검찰청에 중점 수사 방향을 전파하고 단속 결과 및 수사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사 효율성 제고 및 개선 방안 마련
	토착세력과 결탁한 비위 행위 등 지역 토착비리 척결	- 수사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속 시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에 반영 - 전문직역 비리와 관련한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여 전국 검찰청에 효율적으로 단속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 전파, 제도개선 건의 등 정책에 반영
	공익법인의 투명성 지원 강화를 위한 시민 공익위원회 설치	-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하여 정책 반영 - 국회제출시 등 단계마다 적극 홍보 통해 긍정적인 국민 여론 조성
	부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 방지	- 소관 부처 실무자들로부터 환수가능 사례, 정책 시행의 문제점, 개선사항 등 의견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 학계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법리개발 및 이론적 기반 구축
	국가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감독 제도 마련	- 소관 부처 실무자들로부터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향후 반영해야할 개선사항 등 의견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④경제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한다 (성과목표 II- 2)	금융·증권·조세 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범죄유형 파악 등 비리 심화분야에 대한 집중단속과 수사결과 발표 등 홍보활동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제도개선 발굴을 통한 정책반영
	기술유출·지식 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	- 유관기관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신종 기술유출 침해 유형과 동향, 대응방안,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하여 수사기법 개발 및 제도개선 건의 등 정책에 반영

성과목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⑤인권 보호체계 및 국제인권 대응체계 강화 등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성과목표 III-1)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강화 및 UN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우리나라 인권상황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참여 등 회의 개최
	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조사·구제 시스템 강화	- 인권침해사건 신속한 구제를 위한 화상조사 시스템 점검,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설문 및 면담, 인권감수성 심화 프로그램을 위한 내부강사 워크숍 참여 등 다양한 정책현장 점검 - 인권감수성훈련교육 대상자 상대 설문 조사 실시 - 인권침해 예방, 인권사각지대 발굴·해소, 인권교육 등 인권정책 수립에 반영
	통신 및 안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 시민단체 및 학계 입장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통해 수사실태 확인 및 의견 수렴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 노후 교정시설 리모델링, 수용거실 스프링클러설치, 화장실 개선 등 수용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하여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개선 거실에 실제 수용중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수용환경개선 사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
⑥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법률복지를 강화한다 (성과목표 III-2)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정기 통계 보고 점검 -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현장의견 반영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수시 지도점검 - 각종 간담회 개최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 - 법률홈닥터 등 정기 통계 보고 점검 - 워크숍 등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여성·아동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현장점검 실시로 전담 변호사의 근무환경 등 점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의 현장의견 수렴 - 진술조력인이 상근 배치된 해바라기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청취 - 진술조력인 사례관리회의를 통하여 우수조력사례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반영 - 진술조력인 자문단 간담회를 통하여 신규 양성 선발방식, 교육과정, 자격관리방안 등 의견 수렴 - 복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아동보호기관 종사자 등과의 간담회,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법령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

성과목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코로나19에 따른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 부동산 정책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입법례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의 적정성 및 균형성에 대한 설문조사 등 실시 - 대안마련 시, 공청회 시, 입법예고 시, 국회제출 시 등 단계마다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긍정적 국민 여론 조성 - 장관님의 민생행보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하여 법제개선 필요성 등을 홍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국회 대응 추진 - 국회, 학계, 관계부처 등 대상 법안설명 및 홍보 노력을 강화하여 법안 추진 동력 확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률 개정	-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등 1인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 T/F 운영 - 법안별로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	- 입법예고·공청회 등 제출 의견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통한 합리적 입법방안 확정 및 국회 제출 - 국회,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대상 정책설명 및 홍보 노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입법환경에서 법안 추진 동력 확보
⑦범죄예방활동 및 준법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구현한다 (성과목표 IV-1)	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진술조력인, 성폭력·가정폭력·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 반영 검토 - 일선학교 학생 등 대상 법교육 출장 강연 강화 - 일선 검찰청 정보보고, 언론보도 자료 등 모니터링 및 분석·검토

성과목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및 전자감독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 성폭력범죄 예방 효율화 방안 모색 - 정책현장에서 집행 효율화를 위해 소속기관 직원들의 제도 개선 의견 및 건의 사항 수렴(수시) - 전자감독 전담직원 워크숍 및 간담회, 기관 현장 점검,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 - 정책 수립 및 지침 시행 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관련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및 반영여부 검토 - 전국 조사과장 회의 개최,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지시(소속기관), 주한외국공관원 초청 간담회, 유관부처와 회의개최 등 ※ 영상회의 활용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실질적 정책 시행을 위해 정책수요자, 공급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정책수요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교육의뢰 기관 담당자의 반응 등 분석 - 정책공급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간담회, 실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현장방문 등 정책현장 점검 지속 - 정책이해자 관계자: 범정부협의회 구축, 학술대회, 유관 기관 및 단체 세미나, 회의 등 참여 - 정책수요자 의견 중 단순개선은 자체적으로 바로 해결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할 경우 정책부서에서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 정책수립·시행 시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실무자 의견을 적극 반영, 현장중심의 행정 구현 - 유관기관 및 단체의 요청사항이나 의견을 적극 반영, 협업을 통한 효율적 행정 구현
	참여형·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 대상 법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청소년 동아리 지원 및 모두가행복한 교실 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고,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포상, 자유학년제 활용 등 청소년 법

성과목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교육 저변 확대 - 민간 법교육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전문적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의 의견을 반영 - 법교육위원회 정기회의, 법문화진흥센터 실무자 회의를 통해 현장중심의 행정 구현 - 법사랑사이버랜드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콘텐츠를 강화하여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법교육 실시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1년 법교육·법질서 프로그램 참가자의 준법의식 향상점 및 각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정책에 반영 - 북한이탈청소년·이민자 법교육 등 소외계층 대상 법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법교육의 질적 향상 추진
⑧ 실질적인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성과목표 IV-2)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교정교화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참여 수형자 의견 수렴으로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추진 - 업무 담당자와의 비대면 영상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비대면 교육 기회 부여 등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추진 - 외부강사 등 전문 인력과의 교류를 통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및 노하우 공유 추진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직업훈련 만족도 조사(연중) · 대 상 : 직업훈련수형자 · 내 용 : 시행 중인 직업훈련에 대한 수형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다음 년도 직업훈련계획에 반영 검토 -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1조의 2 (직업훈련 만족도 조사)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가석방 내실화	- 가석방심사 실무담당자 교육시 업무 관련 애로 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파악 - 현장 업무담당자 소통을 위한 워크숍 개최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 소속기관 업무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실시하여 정책 수립 시 반영

성과목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수용자 의료 처우시스템 내실화	- 원격의료 만족도 조사 실시 - 감염병 차단 및 예방 등 의료업무 현장점검을 통한 소통 강화 - 현장 의료인력 간담회를 통한 소통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실질적 정책 시행을 위해 정책수요자, 공급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정책수요자 : 교육과정선호도 조사, 소년원생 생활 만족도 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 - 정책공급자 : 실무담당자별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수용실태점검 등 정책 현장점검 지속 실시 - 정책이해자·관계자 : 소년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 회의, 유관기관 및 학술 세미나 등 참여 - 정책수요자 의견 중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자체 해결하고,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 경우 본부에 보고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 정책수립·시행 시 간담회, 워크숍 등에서 도출된 실무자 의견을 적극 반영, 현장중심의 행정 구현 - 유관기관 및 단체로부터의 요청사항이나 의견을 적극 반영, 협업을 통한 효율적 행정 구현
	치료 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효율적인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피치료 감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의료 인력 확보 및 치료환경 개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치료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및 치료 효율성에 대해 분기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 직원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 - 치료감호 현장 수시 방문, 피치료감호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 청취 - 진정·청원 및 각종 민원을 통해 피치료감호자 개선사항 직접 수렴 -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술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문제점을 파악하여 단기, 중기, 장기해결 과제로 구분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 필요 예산 및 인력 확보 위해 적극 노력하여

성과목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피치료감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재발 및 재범방지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 - 피치료감호자들에게 정기적인 수용생활만족도 조사를 통해 친인권적 처우를 제공하는 등 치료 감호 내실화 실천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 처우 프로그램 강화	-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유관기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공급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정책수요자 : 보호관찰 처우 프로그램 참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수요자 의견 청취 등 - 정책이해자·관계자 : 보호관찰관 직무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보호관찰 처우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 및 자원봉사자의 의견수렴
	출소자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구현	- 출소자 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 현장 방문 등 실무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 청취 및 정책 반영 -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 간담회 개최 등 자원 봉사자들의 의견 수렴 - 전국 교정 등 유관기관 실무담당자 합동 워크숍 개최를 통해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 반영
⑨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성과목표 V-1)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 출입국 행정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및 승객·승무원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제안, 개선 의견 등을 적극 반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항공사 등), 운수업자(항공사, 선사) 등 관계기관과 주요 정책현안(전자여행허가제, 승객정보분석, 송환자 관리 등) 관련 정기 및 수시 소통 기회 마련 - 출입국심사기법 발표회, 정책현장 방문, 행정제도 개선 제안 등을 통해 내부직원의 우수지식·노하우 및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반영 및 구성원의 직무몰입을 유도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관련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 - 동포 처우개선 등을 위한 동포지원센터 등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출입국관리 강화를 위한

성과목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비자발급 강화 및 재입국제도 운영 관련 주한 외국공관 등의 의견 수렴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 반복 제기된 민원의 적극적 수용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의 정보연계 담당자로부터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 연계시스템 구축에 적극 반영 - 출입국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법무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재외공관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적극 반영 - 외국인관련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및 통계연보와 관련 사용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자료의 범위 확대 및 새로운 통계수요 개발 등에 활용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 사회통합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한외국인, 이민자 지원단체, 국민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 - 사회통합교육 담당직원 및 운영기관 담당자 간담회 개최하여 의견 청취 -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담당자 워크숍 개최하여 의견청취 - 사회통합교육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견 청취, 교육운영과정에 반영 검토 - 재한외국인 고충처리, 사회통합교육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나타난 의견을 각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반영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개발 과정에 반영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 이민정책 관련 국내·외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을 통하여 외국인정책 우수사례 공유, 이해증진 및 협업과제 발굴 - ‘목요대화’,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정책발표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성과목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 국적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소속기관 직원의 의견 수렴(워크숍) 실시 - 귀화 민간면접관에 대한 정기 교육 시 면접심사 및 귀화 관련 현장 의견 수렴 - 독립유공자 후손 발굴, 사할린 동포 국적판정을 위한 외교부·보훈처 등 관계부처 협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	- 출입국항·거점사무소 등 난민심사 현장 방문 및 난민 심사기법 발표회, 직원 간담회를 통해 난민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고충사항에 대한 소속기관 담당자 의견 수렴 - 난민관련 단체·연구기관 주최 학술포럼, 세미나 참석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난민심사, 처우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각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고 결과를 공유할 예정
	산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시민사회단체(NGO)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관계부처, 민간 난민전문가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정황정보에 대한 외부 검증 강화 - 연구기관 등에서 개최하는 학술포럼,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한 난민 이의신청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 이민정책 관련 국내·외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을 통하여 외국인정책 우수사례 공유, 이해증진 및 협업과제 발굴 -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공청회, 정책발표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 의견수렴 결과를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효율성 극대화
⑩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성과목표 V-2)	법률시장 개방 대비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강사진 및 강의주제 선정에 반영 -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결과 및 예방설명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자문단 및 설명회 주제 선정에 각 반영

성과목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	- 북한이탈주민 지원번호인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간담회, 화상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현장의견 적극 수렴 후 제도개선 등에 반영 - 정부부처, 민·관 연구기관 등 통일법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통일법무 발전 관련 의견 수렴 후 통일법제 등 정비방안 모색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 언론보도, 관계기관 협의, 형사법·형소법 특위, 세미나, 법령 제·개정 건의 민원 등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형사관계 법령·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하여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방안 모색
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개최, 공증인협회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공증업무 관련 전문가집단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한 결과를 공증 관계 법령 개정안 마련 시 적극 반영 - 대한공증인협회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통해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공증실무의 간극 해소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개선	-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기본적 법률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선택형 7과목을 3과목으로 축소 - 헌법상 가치인 모성보호를 위해 시험일 전후 일정기간 내 출산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기간(5년) 도과 후 최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 법무부는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 대한변호사협회, 교육부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여 신뢰도 높은 국민 중심의 법무서비스를 제공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제고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 국가기관,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마을변호사 제도 개선 세미나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창구(네이버 밴드, 전화, 간담회, 설명회, 실무 협의,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등)를 활용하여 생생한 의견 수렴

성과목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국제 투자분쟁 (ISDS) 대응 및 예방 역량 강화	-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대상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강의 방식 및 주제 선정에 반영
⑪국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민생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성과목표 V-3)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홍보협의체를 통한 홍보 전략 수립 · 차관 주재 정책홍보전략 실무협의회를 통한 현안별 실·국·본부 대응방안 논의 등 홍보 전략 수립 - 전문 민간컨설팅 업체를 통한 법무부 디지털 소통 전략 수립 컨설팅 진행 -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여론 동향 분석 - 취합된 의견을 분석하여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을 재수립하여 추진 · 정책의 내용에 대한 의견은 정책 수립 및 개선 과정에 반영하고 그 성과를 다시 홍보에 활용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 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	-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 「실무자회의」 개최를 통해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관련 형사사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추진에 반영 -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기능 및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과 포털 운영의 효율성 제고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 각 지방교정청별 일선기관 간담회 개최 - 시스템 편의성 및 품질 개선 등을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보완 등 적극 활용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정책홍보 콘텐츠 연중 게시 및 반응 모니터링 - 해당 소셜네트워크 댓글 의견 수렴 - 질의 사항, 의견 제안에 대한 적극적 피드백 실시 - 정책현장 점검 및 대국민 공모전 의견 적극 수렴

성과목표	의견수렴 및 반영 계획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강화	- 홍보 매체 활용도 및 만족도,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희망 홍보 매체 등 홍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매체를 위주로 홍보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의견을 홍보 정책에 반영 - 본부 소식지(공존) 리뷰이벤트*를 활용하여 정책 고객의 환류를 통한 의견 수렴 확대 *현재 페이스북에서만 리뷰이벤트를 진행 중이나 기타 플랫폼(유튜브 등)에도 리뷰이벤트를 확대 실시
⑫ 법무행정 자원 역량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V-4)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 효율 제고	- 온라인민원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국민 신문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홈페이지 및 온라인서비스 기능 개선에 반영 - 법무행정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성·활용도·편의성 등의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법무샘 기능개선 게시판 운영으로 주기적인 사용자 의견 취합 및 반영 - 법무행정정보화 신규 사업 설명회를 통해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의 신규 정보화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법무행정정보화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 - 데이터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 발굴·개방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공공데이터 이용실태 설문조사 실시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보화사업과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반영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코로나19 방역현장점검 및 재난안전 점검 시 각 소속기관 방역관리자 및 재난담당자 의견 청취 - 방역현장점검 및 재난안전 점검 이후 결과 보고서를 검토 후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을 시행 - 안전한국훈련 시 외부위원 컨설팅 의견 수렴 및 반영

별첨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5	4	0 (0)	0 (0)	2 (50%)	2 (50%)	3 (75%)
성과목표	12	28	0 (0)	0 (0)	19 (68%)	9 (32%)	26 (93%)
관리과제	59	117	0 (0)	3 (3%)	92 (79%)	22 (18%)	102 (87%)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1.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점수)	한국행정연구원 주관 연도별 사회통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상 검찰신뢰도(4점만점)×25	58	정성	결과	
2.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	중대 부패범죄 기소 실적(점수)	중대 부패 범죄 기소 실적 1명 당 0.032점 (기소 1명 × 0.032점)	21	정량	산출	
3.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	인권위 권고 건수 ÷ 법무부 수용 건수 (일부 수용의 경우 0.5건 집계)	95	정량	산출	
4.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하향지표) (공통)	(당해년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자 수 / 당해 연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 실시 인원) × 100	10.6	정량	결과	
5. 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	-	-	-	-	-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 표 종 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I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1)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적폐청산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에 대한 실태선고 실적(%)	실태 선고된 인원 수/선고 인원수 ×100(점)	100	정량	산출	
(2)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공판역량 강화 노력 및 성과 (점수)	무죄 감소 방안 마련 성과 + 공판 검사 역량 강화 관련 교육 성과 + 공판업무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성과	172	정량	산출	
전략목표 II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						
(1)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에 기여한다.	자유형 집행률(%) (공통)	(자유형 집행인원 / 자유형 접수 인원) × 100	68.5	정량	결과	
	재산형 집행률(%) (공통)	(재산형 집행건수 / 재산형 처리 건수) × 100	98.5	정량	결과	
	클린피드백 제도개선 안건 발굴(건수)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통한 제도 개선 발굴 안건수	9	정량	산출	
(2)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한다	경제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점수)	주가조작 단속실적 1명당 0.122점 부여(1명 단속×0.122점) +중견기업 이상 대주주의 횡령· 배임 등 사익편취행위 단속 1건 당 1점 부여 (단속1건×1점) +조세포탈 범죄 단속실적1명당 0.189점 부여(1명단속× 0.189점) +유관기관 회의 개최횟수1회당 5점 부여(유관기관회의 1회× 5점)	83	정량	산출	
	기술유출 사범 단속실적(점수)	○기술유출사범 단속실적 -기술유출사범 직인지 인원 1명당 0.909점 부여	29	정량	산출	
전략목표 III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1)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인권 정책 기본법 제정 추진율(%)	* 부처안 마련(20%) *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10%) * 법제처 심사완료(20%) *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제출(20%) * 국회통과(30%)	100	정량	산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법률복지를 강화한다	법률구조 수혜자 수 (명)(공통)	민사 법률구조실적+ 형사 법률구조실적	217,600	정량	산출	
	법률홈닥터 법률 복지 지원(건)(공통)	법률서류 작성 실적+유관기 관 연계 실적+법교육 실적+ 법률상담 실적 ※ '16년부터 측정산식 변경	56,882	정량	산출	
	여성·아동 등 인권관련 법령·제도 개선 실적 (점수)	○각 산식 합산 -제도개선건수(건당1점) -법률안 의견제시 건수(건당 0.5점) -법령 제·개정 건수(건당 2 점)	30.5	정량	산출	
	사회적약자를 위한 법제 개선 실적(점수)	채권추심법 개정 관련 -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 방문 설명(20점) - 국회대응 및 안전설명회(각 10점) - 국회 법사위 통과(30점) - 국회 본회의 통과(30점) - 대국민 홍보(10점)	100	정량	산출	
전략목표 IV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1) 범죄예방활동 및 준법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구현한다	전자감독 대상자 1인당 대면 지도감독 횟수 (회)	연중 전자감독대상자 대면 지도감독 횟수 / 전자감독 대상자 연도말 현재원	47.0	정량	산출	
	비행예방교육 실시 인원(명)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처분학생, 기소유예대상자 등 각 과정별 교육인원의 합	18,038	정량	산출	
	법교육 참여자 만족도 (점수)	법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설문 에 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흥미, 향후 프로그램 추천 의향 등 7종에 대해 설문 조사	89.5	정성	산출	
(2) 실질적인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교육·교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만족이상 응답자 수/총 응답자수) ×100	76	정성	결과	
	채용면접 수형자 취업실적 (구인·구직만남의 날 등)	채용면접 참여 수형자 취업 실적	274	정량	결과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률(%) (공통)	[안정적 사회정착 인원(누계) / 소년원 출원생(9·10호)인원 (누계)] ×100	88.64	정량	결과	
	피치료감호자 재입소율 (%) (공통)	출소 후 3년 이내 재입소 비율 [('18년 출소인원 중 3년 이내 재입소인원 / '18년 출소인 원)×100]	3.8	정량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당해년도 보호관찰실시인원 중 재범자 수)/당해년도 보호관찰 실 시인원*100	7.2	정량	결과	
	강력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처우 프로그램 실시 인원	강력사범 처우 프로그램 실시 연인원 ※ 강력사범: 살인, 방화, 강도 성폭력 등 7개 사범 기종료·가출소, 치료감호 기간 만료 후 보호관찰 등	8,010	정량	산출	
	취업지원사업 수료자 취업률(%)	-(취업자 수÷수료자 수)×100 -'21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수료자 중 취업자 인원	75.9	정량	산출	
전략목표 V 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1)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 한다.	체류민원 만족도(점수)	설문항목별 평점점수의 합계 / 참여 자수	91.8	정성	결과	
(2)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무정책 추진실적(점수)	A+B+C+D -A: 국제투자분쟁대응단회의 개 최 (각 10점), 기타 국제 투자분쟁대응 회의 개최 (각 10점), 국제투자분쟁 교육·간담회·세미나 개최 건수 (각 10점), 보도자료 등 홍보 건수 (각 5점), 국제투 자분쟁 예방 법률검토 (각 20점),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 개최 (각 20점), 홍보 건수 (각 5점), 국제투자분 쟁 예방 관련 자료 발간 (각 10점),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만족도 (만족도/응답자수) ▷매우만족 50 ▷만족 40 ▷불만족 20 ▷매우불만족 10, 투자협정(FTA·BIT) 관련 법률 지원 건수 (각 10점), 기타 국제분쟁 법률검토 건수(각 10점) -B::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수강 인원개 최 횟수(단, 수료 인원의 경우 1 명 당 2로 계산, 만족도 평균 점수, 홍보 건수(매체별 1건 15점), 소모임 개최건수(1건 10점) -C:직무감사에서 지적 및 시정	1578	정량	산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조치된 공증사무소 1개소 당 2점(징계에 이른 경우 그 수위에 관계없이 1개소 당 0.5점 추가부여), 재외공관 공증사무 지도점검 자체점검표 횡수 1건 당 10점 정기감사 외 특별감사 실시x10점 -D:복수정답인정률 2%이하 달성 $= (\text{복수정답인정 문항수} / \text{전체 문항수}) \times 100\%$ ▷ 점수= $100\text{점} + (2 - \text{인정률}) \times 10\text{점}$				
(3)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한다.	법무정책 뉴미디어 활용 소통 노력도(명)	○SNS 정책 소통 방문자수 증가(각 산식 합산) -블로그 일평균 방문자 수 -페이스북 증가 Fan 수 -트위터 증가 팔로워 수 -유튜브 증가 구독자 수	23,100	정량	산출	
	형사사법포털 온라인 서비스 이용량 (1인당이용횟수)	형사사법포털 이용량[사건진행 사항조회건수+벌과금조회건수 +민원서비스신청건수] / 전체 형사사건 관계인 수(전체 사건 피의자수+고소인수+고발인수)	6	정량	산출	
(4) 법무행정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EA 성숙도)(점)(공통)	(정보자원관리수준 + 단계별 성과관리이행수준 + 중복투자 예방) / 3	4.98	정량	결과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재난안전 매뉴얼 수립 건수	소관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 건수 + 본부 및 소속기관 재 난안전관리 매뉴얼 재·개정 건수	62	정량	산출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 표 종 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I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1)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적폐청산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①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에 대한 실행선고 실적(%)	실행선고된 인원 수/선고 인원 수×100(점)	100	정량	산출	
	②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검찰제도개선 추진 실적(점수)	- 제도별로 추진항목마다 부분 점수를 부여하고, 제도별 점수 를 합산하여 총점 산정 - 추진항목(점수) : 기존 제도 운 영성과 분석(10점), 수사권 조 정에 따른 후속 법령 개정 검 토보고서(20점), 수사메뉴얼 및 지침 제·개정(10점),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개선(10점), 통계시 스템 정비(10점)	180	정량	산출	
	③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국외훈련만족도(점수) (공통)	설문조사 합산 점수 / 훈련인원수	86.0	정량	산출	
		국외훈련자 연구 논문평가(점수)(공통)	논문평가 합산점수 / 평가인원 수	85.4	정량	산출	
(2)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①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선거범죄 예방활동 실질화 실적(점수)	-선거 관련 홍보실적은 건수에 가중치 2점(보도자료 배포, 언론 인터뷰, 홍보 팝업창 설치, 홍보이메일 발송 등 건수×2점) -선거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는 개최 횟수에 가중치 1.5점(개최건수×1.5점) -선거사범수사 관련 전문 교육은 실시 건수에 가중치 2점(실시 건수×2점) -선거사범 기소 시 양형 기준 적용률은 1%에 가중치 0.5점 -선거관련 전국단위 검사회회의(오프라인 및 화상)는 실시 건수에 가중치 5점 (실시건수×5점)	35	정량	산출	
	②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한 부정축재 사범 엄단 등 법집행 공정성 강화	국제형사공조실적 (점수)(공통)	(이행건수/요청건수×100+이행 건수/접수건수×100) / 2 ※ 측정산식은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건수 합계임	82.9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부정 축재 범죄수익 환수 역량강화 실적(점수)	○범죄수익환수 및 형사사법 공조 관련 국제회의 등 참가(50점 상한) -국제회의 1회(×10점) -국제 실무협의 등 1회(×5점) ○범무연수원 교육 -교육 1회(×10점) ○법률안 제정, 개정 등 지원 -법령 제·개정(×5점) -법령 국회 제출(×4점) -법령 발의(×4점) -법령 제·개정 관련 활동(×3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개정안 추진 중 ○범죄수익환수관련 커뮤니티 (TF), 세미나 등 활동수 -커뮤니티, 동호회 등 활동 1회(×6점) -세미나, 워크숍, 공청회 등 1회(×6점) -그 외 선진범죄수익환수기법 해외연수 등 범죄수익환수역량강화 관련 활동 1회(×6점) ※측정산식은 각 점수 합계임	77	정량	산출	
⑤감찰·감사 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 근절 및 예방		상시 암행 감찰 활동 횟수(건)	외근직원인원수×감찰활동 횟수(월)×12개월	1,425	정량	산출	
		비위직원 사전관리를 위한 사전자료 수집 건수(건)	사정활동 결과 수집된 비위정보 및 세평의 감찰전 산망 입력 건수	452	정량	산출	
		반부패·청렴활동 실적(점수)	관련 활동 실적 합산점수 + 제도개선 실적 가점(장관님 보고 기준) + 관련 외부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42.7	정량	산출	
		자체감사실시 횟수 및 감사활동 만족도(점수)	종합감사·복무감사·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실시 1회당 1점으로 산정 ※ 다만 종합감사의 경우 1 수감기관당 1점으로 산정	93.5	정량	산출	
		감사교육원 등 외부기관 교육 참여율(%)	(교육 참여자÷교육 대상자)×100	87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 표 종 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II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							
(1)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실현에 기여한다	①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중대 부패 범죄 기소 실적(점수)	중대 부패 범죄 기소 실적 1명 당 0.032점 (기소 1명 × 0.032점)	17	정량	산출	
	②토착세력과 결탁한 비위 행위 등 지역 토착비리 척결	지역 토착비리 단속 및 부패대응 활동(점수)	-공공기관 단속 실적 1개 기관 단속 당 1.85점 (공공기관 단속 1개 기관 ×1.85점)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1건 당 0.82점 부여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1건×0.82점) -법조비리 단속 실적(1명 단속당 0.094점) -교육 비리 사범 단속 실적(1명 단속당 1.2점) -국가보조금 비리 사범 단속 실적(1명 단속당 0.128점)	98	정량	산출	
	③공익법인의 투명성 지원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 공익법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점수)	-법제처 심사(30점) -행안부 조직 협의(20점) -국무회의(30점) -국회제출(30점) -국회 법안 심사 대응(각 20점) -관계부처 등 외부 전문가,민간 단체 등과의 간담회(각 10점) -대국민 홍보(각 20점)	160	정량	과정	
	④ 부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 방지	국고손실 환수 실적 (점수)	-환수가능 사례 발굴 (건당 20점) -소 제기(건당 15점) -법률 자문·지원(회당 5점) -환수금액(백만원 당 1점) -승소 건수(건당 5점) -환수 건수(건당 5점)	2,600	정량	산출	
		국고손실 환수 역량 강화 활동(점수)	-국고손실 환수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건당 2점) -회의 등 개최(회당 5점) -언론보도 등 홍보(건당 2점) -매뉴얼 개정 및 배포(회당 30점) -매뉴얼 등 교육(회당 10점) -간담회 등 참석 또는 유선, 이메일에 의한 협의(회당 5점) -연구용역 및 자문(회당 5점)	150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 표 종 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⑤ 국가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감독 제도 마련	국민소송제도 도입 추진 실적(점수)	-소관 상임위 위원실 간담회 또는 이메일, 화상회의에 의한 협의(각 10점) -법안 발의 의원실 간담회 또는 이메일, 화상회의에 의한 협의(각 10점) -이해 관계 부처 간담회 또는 유선, 이메일, 화상회의에 의한 협의(각 10점) -소관 상임위에 국민소송제도 관련 법안에 대한 법무부 검토 의견 제출(20점) -법안 통과(20점)	60	정량	산출	
(2)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한다	① 금융·증권·조 세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경제질서 저해 사범에 대한 단속 실적(점수)	-주가조작 단속실적 1명당 0.122점 부여(1명 단속×0.122점) -중견기업 이상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 사익편취행위 단속 1건당 1점 부여(단속1건×1점) -조세포탈 범죄 단속실적 1명당 0.189점 부여(1명 단속× 0.189점) -유관기관 회의 개최횟수 1회당 5점 부여(유관기관회의 1회× 5점)	83	정량	산출	
	②기술유출·지식 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	지식재산침해사범 대응 실적(점수)	①지재권 침해사범 검찰 단속실적 -구속인원×0.2+불구속인원×0.1점 (검찰통계시스템에서 산출) -단속결과 우수사례 보도자료 발표(건당×5점) ②지재권 관련 각종 회의 개최 -지재권 전담검사·수사관 워크숍 및 유관기관 합동워크숍 개최(회당×10점) -유관기관 정보교류 및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회의, 간담회, 세미나, 지재권 관련 출강 등 참여 횟수(회당×3점) ③지식재산권 특사경 교육 횟수(×2점) ④산업재산권 사건 조정 실적(건당×5점)	220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 표 종 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III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1)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①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인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인권 옹호활동(점수)	※ 활동실적×가중치 ○(시민사회간담회) 횡수 x 4 ○(인권모니터링) 횡수 x 4 ○(인권정책의견제시) 횡수= (부내정책의견제시) 횡수 x 1 + (법률안의견제시) 횡수 x 2 + (국제인권규범 의견제시) 횡수 x 2 ○(국제인권회의 참석) 횡수 x 3 ○(국제인권학술대회 등 주최) 횡수 x 5 ○(국내 및 국제 뉴스레터, 카드뉴스 등 발간) 건 x 3	247	정량	산출	
	②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시스 템 강화	실태조사 활동 실적(점수)	(실태조사 기관수×7)+(개선조치 요구 건수×4)+(설문 조사인원×0.2) +(면담인원×1)+(보고서작성×2)	800	정량	산출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실적(건)	인권침해사건 직접조사 건수	2,232	정량	산출	
	③통신 및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법제 정비 준비 실적(점수)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 영장 필수화 등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100점) -국무회의 심의(50%), 법률안 국회제출(70%),법사위 전체회의 통과(80%), 법사위 소위 통과(90%),국회통과(100%)	100	정량	산출	
	④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수용환경 개선 수용자 만족도(%)	· (만족도 조사 중 긍정적 답변자수/총응답자수)×100	91	정성	결과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실적(점수)	-수용환경 개선 점수 합산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증축, 개보수 기관수×2점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수용생활 환경개선 기관수×2점	117	정량	산출	
		수용자 환경개선을 위해 협업을 통한 갈등노력 실적(점수)	-협업관련 점수 합산 · 갈등민원해소(50점) · 관계기관 협의(5점) · 고충민원관련 협의 또는 현장방문(10점) · 국회의원 및 의원실 설명(10점) · 수용기관현장점검(2점)	88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법률복지를 강화한다.	①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 지원 만족도(점수)(공통)	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리서치 업체 선정 조사 실시 - 표본 추출 : 정책수혜자에 대한 전수조사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 조사척도 : 매우불만족~매우만족 5점 척도	90.6	정성	결과	
		스마일센터 만족도 (점수)	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리서치 업체 선정 조사 실시 - 표본 추출 : 정책수혜자에 대한 전수조사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 조사척도 : 매우불만족~매우만족 5점 척도	93.4	정성	결과	
		범죄피해자 종합지원 건수(건)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구조금, 경제지원, 주거지원, 심리치료, 신변보호 등 범죄 피해자 종합지원 실적 총 합산 (간병비+취업지원+구조금+치료비+ 생계비+학자금 등)	4,363	정량	산출	
		찾아가는법률지원 건수(건)	법률홈닥터 및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이동식 법률상담, 화상상담, 법교육, 각종 현장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법률지원 실적 합산	6,310	정량	산출	
	②여성·아동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인원(명)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인원 측정	215	정량	산출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건)(공통)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건수 합산	27,225	정량	산출	
		진술조력인 양성 인원(명)(공통)	진술조력인 양성인원 수	13	정량	산출	
		상근 배치 진술조력인 지원 실적(건)(공통)	상근 진술조력인이 활동한 진술조력 건수 합산	1,406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코로나19에 따른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점수)	○ 법령개정을 위한 T/F - T/F 등 구성(10점) - 회의 개최(1회X 10점) ○ 개정안 마련(25점) ○ 입안보고(15점) ○ 입법예고(15점) ○ 부처협의 등 의견조회(각 10점) ○ 법제처 심사(30점) ○ 국무회의(20점) ○ 국회제출(20점) ○ 국회의원 및 의원실 설명 (1건×10점) ○ 법률안 법안심사소위 상정(1건×10점) ○ 법률안 국회통과 (1건×50점) ○ 관계부처 등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각 10점) ○ 대국민 홍보(각 20점) ※ 홍보방법 : 보도자료 배포, 기고문, 홍보 동영상 제작, 리플릿·책자 등 홍보자료 제작 등)	160	정량	과정	
	④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채권추심법 개정 및 홍보(점수)	<채권추심법 개정> -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 방문 설명(20점) - 국회대응 및 안건설명회(각10점) - 국회 법사위 통과(30점) - 국회 본회의 통과(30점) - 대국민 홍보(10점)	100	정량	결과	
	⑤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률 개정	1인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점수)	○ 1인가구 T/F - T/F 구성(10점) - 회의개최(1회x10점) ○ 개정안 마련(25점) ○ 입안보고(15점) ○ 입법예고(15점) ○ 부처협의 등 의견조회(각 10점) ○ 법제처 심사(30점) ○ 국무회의(20점) ○ 국회제출(20점) ○ 국회의원 및 의원실 설명 (1건×10점)	200	정량	과정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 법률안 법안심사소위 상정(1건×10점) ○ 법률안 국회통과 (1건×50점) ○ 관계부처 등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각 15점) ○ 대국민 홍보(각 20점) ○ 관련 논문 학술지 발행(15점) ○ 공청회(20점) ○ 대국민 홍보(각 20점) ※ 홍보방법 : 보도자료 배포, 홍보자료 제작, 백서 발간, 다큐 제작 등)				
	⑤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실적 (점수)	○ 「집단소송법」 제정 - 법률안 국회통과 (250점) - 법률안 법안소위 상정(1건×75점) - 법률안 전체회의 상정(1건×75점) - 법률안 국회제출(150점) ○ 「상법」 개정 - 법률안 국회통과(150점) - 법률안 법안소위 상정(1건×50점) - 법률안 전체회의 상정(1건×50점) - 법률안 국회제출(50점) ○ 국회의원 및 의원실 설명 (1건×30점) ○ 토론회(1건×20점) ○ 간담회 (1건×30점) ○ 집단소송 제기 건수(1건×10점) ○ 집단소송 판결·결정 건수 (1건×10점)	250	정량	결과	
전략목표 IV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 (1) 범죄예방 활동 및 준법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구현한다.	①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 학대 사범 처벌 강화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전문 수사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간 협업 활동 추진실적(점수)	-젠더폭력,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포럼, 세미나, 실무협의회 등 개최, 매뉴얼 발간(횟수×10점)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간담회, 대책회의 개최(횟수×5점) -전담검사 및 수사관 역량강화 교육(횟수×교육시간×참여인원×1점)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 수강(횟수×수강인원×0.5점) -일선 학교 학생 등 대상 범죄예방 강연(횟수×0.5점)	2,341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전자감독대상자 1인당 심리치료 집행횟수(회)(공통)	연중 전자감독대상자 심리치료 집행횟수 / 전자감독 대상자 연도말 현재원	3.2	정량	산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신속입력률(%)	(30일 이내 등록건수 / 신규등록건수)×100	92.6	정량	산출	
	③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등 실적(건)(공통)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등 실적 - (가점) 위원회 개최(50), 기관 간 간담회 개최(30) ※ 1점=1건 환산	15,578	정량	산출	
		보호외국인 동감프로그램 만족도(점)(공통)	(화성외국인보호소 만족도×40%) +(청주외국인보호소 만족도×28%) +(여수출입국사무소 만족도×24%) +(인천출입국사무소 만족도×8%)	93.4	정성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계도/예고(홍보) 활동 실적(건)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계도/예고(홍보) 활동 실적(건수) - (가점)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대국민 홍보활동 실적 ▶ 불법체류 관련 법령(50), 훈령(30), 지침(15), 개선 (1회당) ▶ 보도자료, 인터뷰, 기고 (1회 5점) ▶ 현수막, 홍보 배너 등 (1회 2점) ▶ SNS(페이스북, 유튜브 등 일반 포스팅 (1회 1점) ※ 1점=1건으로 환산	23,728	정량	산출	
	④학교폭력 등 청소년비행예 방기능 강화	비행예방교육 평가 점수(점)(공통)	교육수료자 교육평가 점수의 합/교육평가 참여 인원	90	정성	산출	
		비행예방교육 운영률(%)	교육과정별 교육실시율{(교육 실시인원 / 교육계획 상의 교육 목표인원)*100}의 평균	102.6	정량	결과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⑤ 참여형·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가자 준법의식 수준(점)	○대표 법교육·법질서 프로그램 6종 참가자의 법의식 수준에 대한 설문 조사 점수 ○측정산식 : 법의식 수준(점) = $\sum(\text{교육과정별 평균 법의식 수준}) \div \text{교육과정 수}$ 【하위산식】 1. 법의식 수준 = 차원별 수준×0.7+종합 수준×0.3 2. 수준(점) = $\{(\text{응답치}-1)/(\text{척도수}-1)\} \times 100$ 3. 모집단 및 측정방법 : 법교육 이수자에 대한 준법의식 온라인 설문조사 4. 측정시기 : 매 교육과정 종료 후 측정 및 최종 실적치는 매년 12. 31. 집계 5. 측정내용 : 인지적 영역(5문항), 정의적 영역(10문항), 행동적 영역(4문항), 종합수준(1문항)	79.75	정성	결과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여인원(명)	대표 법교육·법질서 프로그램 참가 인원수	29,220	정량	산출	
(2) 실질적인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①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집중인성교육 이수인원(명)	집중인성교육 이수인원	7,074	정량	산출	
		교양 등 비치도서 대여 권수(권)	교정시설 비치 도서 대여 권수	86,771	정량	산출	
	②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정역집행률(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참여율)(%)	(당해연도 정역이행자 수/ 당해연도 정역집행 적격자 수) × 100	93.2	정량	결과	
		직업훈련수형자 만족도 (점수)	(만족이상 답변인원 / 총응답자수) × 100	73.7	정성	결과	
	③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가석방 내실화	모범수형자 등 가석방자 인원 증가율(%)	'20년 모범수형자 등 가석방 인원 / 전년도실적 × 100	110	정량	산출	
		가석방 내실화를 위한 노력(점)	법령·지침 개정(각 20점) 제도개선(각 20점) 보도자료 배포·취재요청 등 언론대응(각 5점) 담당자교육 및 워크숍(각 20점) 유관부서 업무협약(각 5점) 가석방 추가신청(각 10점)	180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④성폭력·중독 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성폭력사범 심화교육 수료자의 왜곡된 성의식 점수 감소율(%)	교육전후 왜곡된 성의식 평가, 감소 정도 비교	30.4	정성	결과	
		심리치료프로그램 전문화 실적(점수)	워크숍 등 각종 회의 개최, 직원 전문화 교육 건수×5점+프로그램 개발×30점	255	정량	산출	
	⑤수용자 의료처우 시스템 내실화	수용자 의료처우 실시율(%) (공통)	(진료실적 증감률 / 수용인원 증감률) × 100	98.0	정량	산출	
		원격의료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 중 긍정적 답변자수/총응답자수) x100	68.1	정성	결과	
	⑥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교육과정수료자 1인당 교육목표 달성도(건)(공통)	연간 학과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이수자 교육실적(검정고시 합격, 자격취득, 경시대회 입상, 진학, 학적회복, 전·편입학, 졸업장취득) / 학과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육과정수료자	4.28	정량	결과	
	⑦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치료재활프로그램 만족도(점수)(공통)	-치료재활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점수의 합 / 응답자 수×100 ※매월 출소 예정자 대상 치료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89.5	정성	결과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결원율(%) (공통)	(1-현원/정원)×100 ※의무직에 현원 및 정원 5배, 약무직에 2배 가중함	23.7	정량	산출	
	⑧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	집중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당해년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자 수 / 당해연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 실시 인원)× 100	10.6	정량	산출	
		강력범죄 보호관찰대상자 중 처우 프로그램 실시인원	강력사범 처우 프로그램 실시 연인원 ※ 처우프로그램 :멘토링, 연계상담, 개별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별체험형 프로그램, 집중면담, 집단 상담프로그램 등 ※ 강력사범 :살인, 방화, 강도, 성폭력, 유괴, 마약, 보복 등 7개 사범 가중료 ·가출소, 치료감호 기간 만료 후 보호관찰 형집행정료후 보호관찰	8,010	정량	결과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 표 종 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⑨출소자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한 따뜻한 사회구현	법무보호서비스 이용 건수(공통)	-1년간 각종 법무보호 서비스를 받은 연인원	109,697	정량	산출	
		취업자일자리 품질수준(%)	-('21년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수 ÷ '21년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취업희망인원)×100	25.2	정량	결과	
전략목표V. 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1)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①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출입국 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점수)	(설문항목별 평가점수 합계 / 참여자 수) ※국제공항 및 외항선 운항 항만을 이용하는 승객/ 승무원의 평가지표에 대한 만족도 설문(7점 척도) 조사	91	정성	결과	
		제도개선 실적(점수)	- 법령, 지침, 고시 제·개정 사항 (건당 20점)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채택 실적(건당 20점) - 소속기관 제도개선 건의 채택 등 정책개선 실적(건당 10점) - 현장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건당 5점)	390	정량	산출	
	②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체류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노력(건)	법령, 훈령, 고시, 지침 제·개정 건수	65	정량	산출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이용자만족도(점수)	-설문항목별 평가점수 합계 / 참여자 수 ※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환산 (매우만족 100, 만족 80, 보통 60, 불만족 40, 매우불만족 20)	79	정성	결과	
	③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시스템 보완 및 개선실적(건)	정보화시스템 보완 및 개선 실적 건수	100	정량	산출	
		유관기관 정보연계 실적(건)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확대, 개선, 조정 등 실적건수	14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④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율(%)(공통)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최근 3년간 평균 신규 등록 외국인 수)*100	18	정량	산출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실적(점)	-제도개선안 마련(각 10점) -유관단체 간담회, 회의 등 의견 수렴(각 5점) -권익증진협의회 개최(각 3점)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유튜브, SNS 등 홍보실적(각 3점)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자료발간 (각 3점)	541	정량	산출	
	⑤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건)	○ 법령 개정 - 법령 개정계획(안) 마련(건수) - 공포·시행(건수) ○ 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구축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수립(건수) - 관계부처 담당자 또는 민간인 참석 위원회 개최 및 참석(건수) - 공청회, 간담회, 심포지엄 등 개최(건수) - 전문가 초청 이민정책포럼 개최(건수) - 관계부처와 협업 결과 발표(건수) ○ 외국인정책 동향 파악 및 사례 분석(건수)	39	정량	산출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성과(점수)(공통)	- 기본연구 발간물(건) × 7점 - 현안연구 발간물(건) × 3점	217	정량	산출	
	⑥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국민 정체성 함양 실적(점수)	- 독립유공자 후손 등 특별공로자 국적증서수여식, 지자체 협업 국적증서수여식 (각15점) - 우수인재 유치 (1명당 10점) - 홍보실적(보도자료, 인터뷰 등) (각5점) - 해외사례 발굴 건수(각5점) - (행사참여형)국적증서수여식 및 국민정체성 함양 교육 실시 횟수(1회당 5점) - (비대면)국적증서수여 횟수 (1회당 1점)	493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 표 종 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제도개선 실적(점수)	- 국적법 개정(각30점) -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각20점) - 훈령·예규 등 제·개정(각15점) - 전문가 회의(각10점) - 공청회 등 현장 의견수렴 실시 (각10점) - 제도개선안 마련(건 당10점) - 책자발간 등(각5점) - 홍보실적(보도자료, 인터뷰 등)(각5점)	384	정량	산출	
	⑦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	난민 심사 역량 강화(점수)	- 난민심사관 교육 및 평가(10점) - 워크숍 또는 학술포럼 개최(20점) - 통역인 평가 및 교육(10점) ※ 역량강화 활동별로 실적 집계	108	정량	산출	
		난민 제도 정비(점수)	- 법령 개정(50점) - 훈령 개정(20점) - 지침 개정(15점) - 제도 연구(10점) - 관련 책자* 등 발간(15점) * 난민심사 규정, 법령·조약 등 자료집 - 관계기관 간담회 등 개최(10점) - 대국민홍보(20점) ※제도정비 활동별 실적 집계	181	정량	산출	
	⑧신속하고 공정한 난민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난민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점수)	- 난민위원회 개최(각5점) - 분과위원회 개최(각0.5점) - 주제별 심사 매뉴얼 등 책자 마련(각10점) - 연구용역실시(각10점) - 최신 국가정황 분석자료 마련(각15점) - 직무능력 향상 교육(각5점) - 외부난민전문가강의(각5점) - 전문가회의 등 간담회 개최(각5점) - 국외연수 참여(각10점) - 민간 난민전문가 자문 의뢰(각3점) - 관계기관 국가정황 등 사실조회(각2점)	152	정량	산출	
		이의신청 심의 체계 개선(점수)	- 법령개정(20점) - 훈령개정(10점) - 지침개정(5점) - 부처협의 등 의견조회(각5점) - 제도개선안 마련(각5점) - 외부전문가 등 간담회 개최(각5점) - 대국민홍보(각5점)	54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①법률시장 개방 대비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점수)(공 통)	○국제민·상사규범 성안 -국제회의 참가(각 10점) -준비회의 개최 및 참가(각 2점) -검토의견 제출(각 2점) -세미나 개최(각 10점) -관련 연구실적(각 10점) /결과평가(각 10점)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입법 추진 -T/F 구성(10점) -실무작업반 구성(10점) -회의 개최(각 10점) -관련 연구실적(각 10점) /결과평가(각 10점) ○국제사법 전부개정 추진 -전문가 등 간담회(각 10점) -국회 제출 법안 본회의 통과(40점) -설명회 등 후속조치(각 20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 지원 -민원 응대(각 2점) -지원사건 수(각 10점) -해외 중앙당국과 간담회 개최(각 10점) -INCADAT 판례 업데이트(각 5점) ○국제거래규범 관련 자료 발간 (각 20점) ○보도자료 배포(각 5점)	235	정량	산출	
		법률시장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점수) (공통)	○통상법률 지원 관련 -법률시장 개방 관련 통상협상 참가(각 10점) -대책회의 참가(각 5점) -자문제공(각 5점) -기타 통상법률 지원실적(각5점) -통상법률 발간(각 20점) ○외국법자문사 관련 -외국법자문사 승인 건수(각 5점) -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건수(각 20점) -외국법자문사법 관련 설립인가 및 승인 등 소요시간 1개월 내 처리 건수 (각 5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간담회 개최(각 10점) -외국법자문사법 개정(30점) ○OK아카데미 운영(수료자 수 × 2점) ○법률시장 개방 관련 연구용역 (각 10점)/ 결과평가(각 10점) ○통상 관련 자료 발간 (각 20점) ○보도자료 배포(각 5점)	255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지원(점수) (공통)	○ODA 관련 외국 정부, 해외 기관 초청 세미나 개최 건수(각 40점), 간담회 개최 건수(각 20점) ○개발도상국 전문가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건수(각 30점) ○ODA 관련 국내회의 참가 건수(각 10점)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연구실적(각 30점) /결과평가(각 10점) ○보도자료 배포(각 5점)	145	정량	산출	
	②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실적(점수)	A~D를 합산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수강 인원/개최 횟수(A) (단, 수료 인원의 경우 1명 당 2로 계산) - 만족도 점수(B) (만족이상/응답자수 비율) ▷ 만족이상 80% (100점) ▷ 만족이상 70% (90점) ▷ 만족이상 60% (75점) ▷ 만족이상 50% 미만 (60점) - 홍보 점수(C) (매체별 1건 15점) - 소모임 개최 점수(D) (1건 10점)	262	정량	산출	
		북한법령 연구 및 통일대비 법적쟁점 연구실적(점수)	A~E를 합산 - 학술회의 점수(A) ▷ 국제학술회의 개최(1회 10점) ▷ 국내학술회의 개최(1회 5점) ▷ 주제발표(1회 5점) ▷ 토론(1회 2점) ▷ 학술회의 참석(1회 1점) ※개최·참석·발표·토론이 중복되더라도 별도 항목으로 계산 - 법령 개정 점수(B) ▷ 법률 개정(1건 10점) ▷ 대통령령 개정(1건 5점) ▷ 부령 개정(1건 3점) ※발표 등 활동 내용은 학술회의 점수 준용 - 자료집 점수(C) (1건 10점 단 200쪽 이상 20점)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점수(D) ▷ 위원회 등 연구반 구성(1건 10점) ▷ 위원회 활동(1회 3점) - 연구용역 점수(E)(1건 10점)	339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 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실적(점수)	A~D를 합산 - 법률교육 점수(A)(1회 7점) - 만족도 점수(B) (만족이상/응답자수 비율) ▷ 만족이상 80% (30점) ▷ 만족이상 70% (25점) ▷ 만족이상 60% (20점) ▷ 만족이상 50% 미만 (15점) - 법률교육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교재 제작 점수(C) (1건 20점) - 법률교육 피드백 점수(D) (1건 2점)	128	정량	산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실적(점수)	A와 B를 합산 - 온라인·모바일 등 북한이탈주민 상담 점수(A) (1건 3점) - 소송구조 연계 점수(B)(1건 6점)	576	정량	산출	
	③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형사관계 법령·제도의 정비 위한 연구 및 성과(건)	법령안 제출(건수) +법령안 공포·시행(건수) +학술대회·세미나 참가 및 개최(건수) +공청회 참가 및 개최(건수) +연구용역 발주(건수) +책자발간(건수) +보도자료 배포(건수)	52	정량	산출	
	④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	공증 제도개선 및 신뢰도 제고(점수)(공통)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회의 건수×20점 ○ 법령 제·개정안 마련 -법령안 입안(제·개정 조문 1개당 4점) -입법예고(제·개정 조문 1개당 4점) -관련기관 협의(제·개정 조문 1개당 4점) -법제처 심사(제·개정 조문 1개당 4점) -국무회의 심의(제·개정 조문 1개당 4점) -법률안 국회제출((제·개정 조문 1개당 4점) -국회심의 중 설명회·간담회 등 개최(1회×20점) -공증관계 하위법령안 공포 (제·개정 조문 1개당 5점) -각종 지침 제·개정(제·개정 조문 1개당 5점) ○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지정·고시(고시1회당20점) ○ 간담회, 세미나 참석×20점	1152	정량	산출	

성 과 목 표	관 리 과 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 표 종 류		비고
					정량화	성격	
			○ 유관기관 대상 제도안내· 유권해석·업무협의·의견수렴 등 건수×10점 ○ 공증 홍보 건수×20점 ○ 공증연구용역 건수×30점 ○ 공증인·공증보조자·재외공관 공증담당자 직무교육 건수×20점 ○ 전자공증시스템 개편 - 전자공증시스템 신분증 이용 확대×100점 - 헬프데스크 질의응답건수×0.1점 - 전자공증이용건수×0.5점(화상 공증 이용시 건별 0.5점 가점 부여) - 모바일앱 다운로드건수×0.05점 - 시스템기능개선건수×50점 ○ 법무부·외교부 협의 통한 재외공관 공증제도개선×20점				
		부적정 공증사무 적발(점수)	- 직무감사에서 지적 및 시정 조치된 공증사무소 1개소당 2점 (징계에 이른 경우 그 수위에 관계없이 1개소당 1점 추가부여) - 재외공관 공증사무 지도점검· 자체점검표 횟수(1건X 10점) - 정기감사 외 특별감사 실시x10점	546	정량	산출	
		⑤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개선	변호사시험 시행 및 법조인 선발·양성 연구실적(점수)	- 시험 문제 이의제기 신청률 10%이하 달성 ▷ (신청률)=이의제기 문항수/총문항수×100% ▷ (점수)=25점+(10-신청률)×1점 - 시험관리위원회 개최(건수×20점) - 변호사시험 관련 법령개정 (건수×50점) - 제도개선 실적(건수×30점) - 제도 연구·용역 등(건수×20점) - 해외자료 연구 및 자료 수집 실적(건수×20점) - 법조인양성제도 관련 공청회·토론회·내부회의 참석 및 개최(건수×20점) - '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회의(건수×20점) - 시험문제은행구축(건수×20점) - 장애인 편의제공(명수×10점) - 장애인시험위원회개최(건수×10점) - 시험관련 민원검토(건수×5점) - 보도자료 등 홍보(건수×20점)	867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 표 종 류		비고
					정량화	성격	
		변호사시험 복수 정답 인정률 2% 이하 달성(점수)(공통)	(복수정답인정 문항수 /전체 문항수) ×100% ▷ 점수= 100점+(2-인정률)×10점	100	정량	산출	
	⑥변호사제도의 공공성 제고 및 대 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점수)(공통)	○「변호사법」개정안 정부입법절차 - 규제심사(1회×20점) - 부내심사(1회×10점) - 법제처심사(1회×20점) - 차관회의 제출(1회×20점) - 국무회의 제출(1회×20점) - 법률안 국회제출(1회×50점) - 국회 심의 중 설명회·간담회 등 개최(1회×20점) -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1회×20점) -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1회×20점) - 유관기관과의 회의, 간담회 등 개최(1회×20점) ○「변호사법」시행령 등 하위 법령 마련 및 입법절차 - 개정안 마련(조문별 각 20점) - 입안 보고(1회×15점) - 입법예고(1회×30점) - 사전영향평가(1회×10점) - 관계부처 협의(기관별×5점) - 규제심사(1회×20점) - 부내심사(1회×10점) - 법제처심사(1회×20점) - 차관회의 제출(1회×20점) - 국무회의 제출(1회×20점) - 유관기관과의 회의, 간담회 등 개최(1회×20점) ○「변호사법」개정 관련 홍보 - 웹툰 등 홍보콘텐츠 개발(1편×5점) - 웹툰 등 홍보콘텐츠 게재·배포(1편×5점) - 관련 보도자료 등 배포(1회×10점)	615	정량	산출	
		법치행정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등 법률사무종사 제도 개선(점수)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 유관기관 협의 및 의견 조회(1회×10점)	717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 표 종 류		비고
					정량화	성격	
			- 법률사무증사 변호사 선발 공고(기관별×10점) - 법률사무증사 변호사 선발 서류전형(지원자 1인×0.5점) - 법률사무증사 변호사 선발 면접(면접자 1인×1점) - 법률사무증사 변호사 선발 관련 예산 대응(1회×10점) - 법률사무증사 변호사 관리·감독 및 업무 지원(1회×10점) - 법률사무증사 변호사 대상 의견 조회(1회×10점) ○ 법률사무증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 법률사무증사 제도 실태 조사(1회×20점) - 법률사무증사기관 대상 개선사항명령(1회×20점) - 법률사무증사 제도 관련 간담회·토론회 등 참석(1회×10점) - 법률사무증사제도 관련 연구용역 실시(1회×20점) ○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한변협 연수 지원 - 대한변협 연수 자료 개발 및 제공(1회×10점) - 대한변협 연수 강의 진행(1회×20점) - 대한변협 연수운영위원회 참여(1회×10점) - 대한변협 연수 운영백서 출간 참여(1회×10점)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비위변호사 제재 강화 등(점수)	○ 변호사징계 관련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건수(1회×30점) - 법무부 변호사징계건수(징계 1회×10점) - 변호사 업무정지명령 건수(1회×10점) - 변호사징계 관련 행정소송 심급별 종결 건수(승소시 1회×10점, 패소시 1회×5점) - 변호사징계 관련 집행정지 심급별 건수(가결정시 1회×5점, 인용결정시 1회×25점) - 등록취소명령 건수(1회×3점) ○ 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 유관기관과의 회의, 간담회 등 개최(1회×20점)	910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 변호사제도 관련 토론회·세미나 등 회의 참석(1회x15점) - 변호사제도 관련 시스템 개선(1회x15점) - 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1회x10점) - 개정안 마련(조문별 각 20점) - 입안 보고(1회x15점) - 입법예고(1회x30점) - 사전영향평가(1회x10점) - 관계부처 협의(기관별x5점) - 규제심사(1회x20점) - 부내심사(1회x10점) - 법제처심사(1회x20점) - 차관회의 제출(1회x20점) - 국무회의 제출(1회x20점)				
		비대면 사회에 부합하는 마을변호사 제도 개선(점수)	-지자체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창구 마련(지자체당 50점) -지자체에 화상상담 공간 개설(지자체당 100점) -카카오톡 채널 기능 신설(챗봇 등)(각 100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캐릭터 개발(100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캐릭터 저작권 등록(50점) -마을변호사 상담건수 (1건당 0.5점, 현장/대면 상담시 0.5점 가점) -제5기 마을변호사 관리(1명당 0.5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관리(1명당 0.5점) -설문조사 중 제도 인지 응답자 수 / 총 응답자 수(100점) -모범지자체 운영 사례(매뉴얼) 제작·배포(각 100점) -마을변호사 홍보컨텐츠·물품(이모티콘, 포스터, 달력, 현수막, 상담사례집 등) 제작·배포(각 50점) -마을변호사 활동물품 제작·배포건수(각 50점) -마을변호사 SNS(블로그, 페이스북, 밴드 등) 게시물 업로드 횟수(각 10점) -마을변호사 SNS 채널 신설(각 100점) -마을변호사 제도 관련 실무협의/제도설명/간담회 개최 건수(각 50점) -마을변호사 지역버스·시외버스 터미널 광고(버스 1대당 10점, 옥외광고 한 건당 10점) -마을변호사 제도 관련 건의사항	5900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청취 횟수 (각 20점) -마을번호사 8주년 기념식(100점)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평가 (탁월 100점, 우수 75점, 보통 50점, 미흡 25점) -제도관련 수상실적(건당 100점)				
	⑦국제투자분쟁(ISO SDS) 대응 및 예방 역량 강화	국제투자분쟁대응	- 국제투자분쟁대응단회의 개최 (각 10점) - 기타 국제투자분쟁대응 회의 개최 (각 10점) - 국제투자분쟁 교육·간담회 세미나 개최 건수 (각 10점) - 보도자료 등 홍보 건수 (각 5점)	400	정량	산출	
		국제투자분쟁예방	- 국제투자분쟁 예방 법률검토 (각 20점) -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개최 (각 20점) - 홍보 건수 (각 5점) - 국제투자분쟁 예방 관련 자료 발간 (각 10점) -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만족도 (만족도/응답자수) ▷매우만족 50 ▷만족 40 ▷불만족 20 ▷매우불만족 10	160	정량	산출	
		ISO 제도개선	- 제도개선 국제회의 참여 및 의견서 제출(각 20점) -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령 등 제·개정 (각 20점)	100	정량	산출	
		투자협정(FTA, BIT) 및 기타 국제분쟁 법률지원	- 투자협정(FTA·BIT) 관련 법률 지원 건수 (각 10점) - 기타 국제분쟁 법률검토 건수 (각 10점)	100	정량	산출	
(3)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한다.	①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법무정책 소통 동영상 조회수(회)(공통)	법무정책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조회 수(회)	8,506,547	정량	산출	
		법무정책 소통 페이스북 채널 콘텐츠도달수(회)(공통)	법무정책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수(회)	7,000,000	정량	산출	
		법무정책 소통 트위터 채널 게시물 노출수(회)(공통)	법무정책 소통 트위터 게시물 노출수(명)	5,096,145	정량	산출	
		법무정책 소통동영상 콘텐츠 생산량(건)(공통)	법무정책 소통 영상 콘텐츠 제작 건 수(건)	93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	기관 간 형사사법정보 공동 활용건수 (십만건)(공통)	-형사사법 기관간 정보연계 건수 합	5,090	정량	결과	
		대국민 형사사법포털 이용만족도(점수) (공통)	-($\sum$ (해당점수 × 인원) /총응답인원) ※리커트5점척도(만족 100점, 대체로 만족 75점, 보통 50점, 대체로 불만 25점, 불만 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70.5	정성	결과	
	③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스마트 접견 실시 이용자 만족도(%)	(만족이상 응답자 수 /총 응답자 수)×100	90	정성	결과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실적(건)	수용 및 출소 증명서 인터넷 발급 건수	7,000	정량	산출	
	④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정책홍보활성도(점수)	-보도·설명자료 배포(건당 1점) -월간 「교정」 발간(건당 10점) -홍보기획영상 제작(건당 5점) -포스터 등 기타 홍보물(건당 5점) -홍보행사 참석(건당 10점)	1,191	정량	산출	
		온라인 홍보 실적(점수)	-유튜브 구독자수*4 -페이스북 팔로워수*2 -카카오톡 친구 수*2 -카카오친구 친구수*2	68,877	정량	산출	
	⑤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 강화	정책홍보 활성화 (점수)	-홍보책자, 동영상 제작 (1건당 30점) -보도자료·인터뷰·기고 (1건당 10점) -리플릿·포스터·배너 제작(1건당 10점) ※홍보책자, 동영상 등 모든 홍보물을 외국어로 제작 시 건당 기본 점수에 언어별 추가 50% 가점 -뉴스레터 발송(1건당 5점) -온라인 이벤트 실시 (1건당 30점) -웹툰 등 외부작가 의뢰 제작 정책 홍보물 및 동영상 포스팅(1건당 10점) -정책 포스터 등 홍보물 포스팅(1건당 5점) -기획홍보물 포스팅(1건당 30점) -SNS(페이스북, 유튜브) 일반 포스팅 (1건당 1점) -SNS Fan 수 증가 페이스북 팔로워 수: 1점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 2점 유튜브 구독자 수: 4점	26,291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21년 목표치	지표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홍보 만족도(점수)	- 설문항목별로 리커트 척도 5단계(매우만족 100점, 만족 90점, 보통 80점, 불만 70점, 매우불만 60점)로 측정 후 배점 기준에 따라 환산된 점수의 합계로 측정 ※정책메일 수신자, 하이코리아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인지 경로·제공 자료에 대한 만족도 등 설문을 통해 만족도 조사	90.7	정성	결과	
(4) 법무행정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①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보화 노력도(점)(공통)	=공공데이터 개방수준 + 정보시스템 개선노력도 + 정보보안수준강화 + 정보시스템 응답시간 수준 + 홍보노력도 + 정보화 소통노력도 ※ 측정산식 설명 ○공공데이터 개방수준 [개방건수 × 5점] ○정보시스템개선노력 [(법무샘+홈페이지 등 기능개선 100건당) × 5점] ○정보보안수준강화 [(보안취약점점검+정보보안 교육+실태점검 횟수)×3점 +(보안 소식지 발송+ 뉴스레터 발송 +유해사이트 등록건수100건당)×1점] ○정보시스템응답시간수준 [(전자민원+법무샘 등 각10점) - (시스템응답시간(초)×1.5)] ○홍보노력도 [언론,블로그,홈페이지 등 홍보건수×0.5점] ○정보화소통노력도 [직원간담회, 워크샵,, 유관기관 협의, 대국민 홈페이지 블로그기자단 의견수렴 횟수 등×5점]	137.8	정량	산출	
	②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코로나19 방역상황관리(건)	수용시설 코로나19 대응매뉴얼 제·개정 건수 + 상황관리지표 진단 건수 + 소관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 건수	91	정량	산출	
		재난안전관리 문제점 발굴 및 개선(건)	재난안전점검 후 문제점 발굴 건수 + 본부 및 소속기관 재난관리 매뉴얼 제·개정 건수 + 일일재난안전결산 보고 건수	130	정량	산출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반영된 국정과제 및 업무보고
I. 법 무 부 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1.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적폐청산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①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국정농단의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국정1-1)
		②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국정13-1) 국민을 위한 검찰권 개혁 지속(업무1-2)
		③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국정13-2)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업무1-1) 국민을 위한 검찰권 개혁 지속(업무1-2)
	2.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한다	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업무3-2)
		②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한 부정축재사범 엄단 등 법집행 공정성 강화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등 후속조치 (국정1-2)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업무3-1)
		③ 감찰·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근절 및 예방	국민을 위한 검찰권 개혁 지속(업무1-2)
II.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 사회를 구현 한다	1.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실현에 기여한다	①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 (국정2-3)
		② 토착세력과 결탁한 비위 행위 등 지역 토착비리 척결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국정88-1)
		③ 공익법인의 투명성 지원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 위원회(가칭)’의 설치(국정2-5)
		④ 부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 방지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법적기반 구축 (국정24-1)
		⑤ 국가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감독 제도 마련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의 방지(국정2-2)
	2.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한다	① 금융·증권·조세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불공정 갑질 처벌 및 피해구제 강화(국정23-2)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국정23-4)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법적기반 구축 (국정24-1)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업무3-3)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반영된 국정과제 및 업무보고
		②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	
III.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1. 인권보호체계 및 국제인권 대응체계 강화 등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①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국민 인권 보호 강화(국정6-1)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국정6-3)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제시(업무4-1)
		②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국정6-3)
		③통신 및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국정6-2)
		④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 및 생활안전 분야 역량 강화(국정14-8)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정행정(업무4-3)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법률복지를 강화한다	①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국정6-4)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강화(업무4-2)
		②여성·아동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젠더폭력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국정66-5)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업무2-1)
		③코로나19에 따른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상점가 육성 및 보호(국정28-3)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업무3-1)
		④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대출채권 관리 강화(국정21-4)
		⑤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률 개정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삶에 대응하는 민사법 개정(업무3-4)
		⑦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	집단소송제 등 도입(국정25-4)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업무3-3)
IV.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1. 범죄예방활동 및 준법문화조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구현한다	①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사회적 약자보호 민생치안 확립(국정14-2) 젠더폭력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국정66-5)
		②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범죄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업무2-3)
		③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및 생활안전분야 역량 강화(14-8)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반영된 국정과제 및 업무보고
		④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사회적 약자보호 민생치안 확립(국정14-2) 학생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국정54-4)
		⑤참여형·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	
	2. 실질적인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①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정행정(업무4-3)
		②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③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가석방 내실화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 및 생활안전 분야 역량 강화(국정14-8)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업무2-2)
		④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 강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업무2-1)
		⑤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 내실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업무2-2)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정행정(업무4-3)
		⑥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⑦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⑧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	범죄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업무2-3)
		⑨출소자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한 따뜻한 사회구현	출소자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한 따뜻한 사회 구현 (국무조정실 주요정책과제 62)
V.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1.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①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외국인 출입국 관리체계 효율화로 국민안전 위협 요인 제거(업무2-4)
		②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 (국정10-1)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업무2-2)
		③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체계 효율화로 국민안전 위협 요인 제거(업무2-4)
		④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세게로 나아가는 열린 법무행정(업무4-4)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반영된 국정과제 및 업무보고
		⑤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⑥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세게로 나아가는 열린 법무행정(업무4-4)
		⑦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	세게로 나아가는 열린 법무행정(업무4-4)
		⑧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2.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① 법률시장 개방 대비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업무3-1)
		②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 지원(국정92-4)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강화(업무4-2)
		③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국정6-2)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국정2-3)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업무1-1)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업무2-1)
		④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⑤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선	
		⑥변호사제도의 공공성 제고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업무3-2)
		⑦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예방 역량 강화	
	3. 국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민생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반영된 국정과제 및 업무보고
		②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업무1-1) 국민을 위한 검찰권 개혁 지속(업무1-2)
		③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④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강화(업무4-2)
		⑤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 강화	
	4. 법무행정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①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②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업무2-2)